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18

http://sri.kostat.go.kr

2018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18 2018

http://sri.kostat.go.kr

『한국의 사회동향 2018』을 발간하며

통계청에서는 국민 생활의 수준을 가늠하고, 사회 각 분야별 주요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보고서인 「한국의 사회동향」을 2008년에 이어 열한 번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활용도 높은 보고서로 자리매김 한 「한국의 사회동향」은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의 총 11개 영역의 주요 변화와 시의성 있는 주제(issues)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주제는 우리 사회 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쟁점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주제에 대해 가용한 사회지표와 승인통계를 주로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이야기 방식(story telling)으로 풀이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사회동향」은 우리사회가 각 분야별로 어떤 수준에 와 있으며, 우리 삶의 질적 수준과 이를 높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주요 정책 입안자에게는 우리사회 현황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통계개발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협력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각 영역별 원고 작성을 맡은 집필자 및 편집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8년 12월

통계청장 **강 신 욱**

머 리 말

"이 시대의 어려움은 미래가 더는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이는 프랑스 시인이자 철학자인 폴 발레리가 한 말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매우 힘들지만, 그나마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나온 과정을 알아야 한다.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특징을 알려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또한, 점증하는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가장 취약한 집단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빅데이터의 시대, 정보가 넘쳐난다. 그러나 필요한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동향을 파악하고, 그 안에 담긴 경향성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서술하는 일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동향」이 현재의 형식과 내용으로 발간된 열 한 번째가 되었다. 지난 11년간 「한국의 사회동향」은 그 형식과 내용에서 틀이 잡혔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8」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 등 사회의 주요 영역들을 모두 포함하는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은 해당 영역의 주요 동향을 개관하는 논문 1편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이슈를 설명해 주는 주제 논문을 2편씩 수록하는 방식도 예년과 같다. 주요 동향 논문은 해당 영역에서 일어난 주요 변화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고, 주제 논문은 선정된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은 매년 늘어나는 새로운 독자들에게는 독립된 한 권의 보고서로 읽힐 수 있다. 주요 동향 논문들은 내용을 대대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데 주력했다. 한 해 만에 사회의 주요 동향이 크게 바뀔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주제 논문들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찾아 역동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주제 발굴을 위한 수차례의 전문가 의견 수렴, 제안된 주제들에 대한 영역별 책임자와의 긴밀한 협의, 주제의 시의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자료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쳤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최고의 집필진을 섭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인구 영역에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제로서 '초저출산의 고착화'와 고령화와 관련된 주제로서 '노인부양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다루었다. 가족과 가구 영역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 부족과 삶의 질'의 문제와, 만혼과 독신가구 증가를 고려한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를 다루었다. 건강 영역에서는 '의료인력과 시설의 불균형한 분포'와 '노인 돌봄의

사회화 경향'을, 교육 영역에서는 '학력차별에 대한 인식'과 '중고생의 진로활동과 진로체험 실태'를 다루었다. 노동 영역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육아휴직 활용실태'를 다루었다. 소득과 소비 영역에서는 자영업 가구, 그리고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에 대해 다루었다. 문화와 여가 영역에서는 점증하는 해외여행의 추세와 문화서비스 지출의 경향을 다루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통근통행의 광역화 양상, 청년층의 주거문제 등도 흥미로운 주제다. 올해는 처음으로 해양환경에 대해 다루었고, 폐플라스틱의 발생현황도 소화했다. 안전 영역에서는 미투운동 이후 주목을 받고 있는 젠더 폭력 문제와 사고로 인한 사망의 추세를 다루었으며, 사회통합 영역에서는 사회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 그리고 젠더 불평등을 다루었다.

연례 보고서가 11년차를 맞게 되면서 과거에 다루었던 이슈를 다시 반복해서 다루는 경우도 생겨났지만, 주제를 대하는 시각을 조금 달리하거나, 포괄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새로운 변화의 동향이 관찰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내용상의 중첩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사회동향」이 기존의 통계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객관적인 통계치 제시에 그치지 않고 변화의 이면에 자리 잡은 '사회 동향'을 드러내는 친절한 서술형 보고서라는 점이다. 이러한 데이터 큐레이션은 집필을 직접 담당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평소 데이터에 관한 관심, 보고서의 공공성에 대한 동의와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에서 제기된 연구진과 논평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원고를 완성해 주었다.

「한국의 사회동향」을 차별화하는 또 다른 요인은 통계청이 산출하거나 승인한 자료 혹은 국제기구가 수집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자료 등 가용한 최고 품질의 자료만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국가승인통계를 기본 자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기관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들만 활용하였다. 매년 확인되는 바지만, 경성자료보다는 연성자료가, 경제통계보다는 사회통계가 더 많이 수집되고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 수집과 활용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학계와 정부 모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한국이 처해 있는 사회 상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근거기반 정책'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고도성장과 민주화 이후 '민주화의 역설,' '풍요의 역설'을 겪는다고 이야기된다. 소득수준은 높아졌으나, 다양한 삶의 질 관련 지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펴내는 과정에서 영역별로 주요 동향 논문을 집필하고 주제 논문을 검토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면, 한양대의 김두섭 교수(인구 영역 담당), 서울대의 한경혜 교수(가족과 가구 영역 담당), 서울대의 조병희 교수(건강 영역 담당), 고려대의 김경근 교수(교육 영역 담당), 서울대의 권현지 교수(노동 영역 담당), 서강대의 박정수 교수(소득과 소비 영역 담당), 서울시립대의 서우석 교수(문화와 여가 영역 담당), 서울대의 장수은 교수(주거와 교통 영역 담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종호 연구위원(환경 영역 담당),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강은영 연구위원(안전 영역 담당) 그리고 연세대의 한준 교수(사회통합 영역 담당)이다. 이 보고서의 편집은 서울대의 김석호 교수, 통계개발원의 이주희 사무관과 김성규 주무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정병은 객원연구원, 그리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최문희 실장과 이상운 실장이 하였고, 통계 검증 및 원고 교정은 동 자료원의 고지영, 김혜진, 한아름, 허혜옥 연구원이 하였으며, 동 자료원의 장지영 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홍리안 연구원이 각각 연구 간사직과 연구보조원을 맡았다. 이 외에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주제 논문의 집필을 맡아 주었다. 집필과 편집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고서의 개발 연구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강신욱 통계청장과 최연옥 통계개발원장, 황현식 통계분석실장 그리고 물심양면의 후원을 아끼지 않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박수진 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연구책임자 **이 재 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일러두기

1. 본 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해당 집필진의 견해이며, 통계청 혹은 통계개발원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2. 이 보고서는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3.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목 차

Ⅰ 인구 Population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 한양대학교 24
초저출산의 고착화와 출산간격의 변화 유정균 | 한양대학교, 김두섭 | 한양대학교 37
노년기의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 정경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8

Ⅱ 가족과 가구 Family & Household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한경혜 | 서울대학교 58
유배우 취업자의 시간부족 인식과 삶의 질 차승은 | 수원대학교, 한경혜 | 서울대학교 69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손승영 | 동덕여자대학교 79

Ⅲ 건강 Health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조병희 | 서울대학교 90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분포 조병희 | 서울대학교 100
노인 돌봄의 사회화 동향 이윤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1

Ⅳ 교육 Education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 고려대학교 120
학력차별에 대한 인식 김경근 | 고려대학교 131
중·고생의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 참여 실태 황여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0

Ⅴ 노동 Labor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 서울대학교 150
성평등, 일–가족 균형 요구의 변화와 육아휴직 활용 동향 권현지 | 서울대학교 160
비정규직 고용현황 정흥준 | 한국노동연구원 169

Ⅵ 소득과 소비 Income & Consumption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 서강대학교 180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 박정수 | 서강대학교 190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송헌재 | 서울시립대학교 199

Ⅶ 문화와 여가 Culture & Leisure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 208
해외 여행 경험의 추이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 이주현 | 서울시립대학교 216
문화서비스 지출의 주요 동향 김 진 | 동덕여자대학교 222

Ⅷ 주거와 교통 Housing & Transportation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장수은 | 서울대학교 230
청년의 주거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김준형 | 명지대학교 238
수도권 지역 통근통행의 광역화와 사회 계층별 통근시간의 변화 245
장수은 | 서울대학교, 한상진 | 한국교통연구원

Ⅸ 환경 Environment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54
폐플라스틱의 발생과 재활용 현황 이희선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63
해양환경의 특성과 현황 김성길 | 해양환경공단, 박준건 | 해양환경공단, 박미옥 | 해양환경공단 270

Ⅹ 안전 Safety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두용 | 안전보건공단 278
한국인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특성 탁양주 | 한국교통대학교 289
젠더폭력의 실태와 변화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8

Ⅺ 사회통합 Social Cohesion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 연세대학교 308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의 관계 한 준 | 연세대학교 318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26

부록 용어해설 333

표 목차

표 Ⅰ-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별 인구구성, 1990–2015 25
표 Ⅰ-2 세계 인구와 한국 인구의 사망관련 지표, 2010–2015 30
표 Ⅰ-3 사망원인 순위, 2007–2017 31
표 Ⅰ-4 서울, 수도권 및 도시 인구, 1960–2015 32
표 Ⅰ-5 성별 평균 초혼연령, 1990–2017 39
표 Ⅰ-6 연령별 여자의 유배우율, 1960–2015 40
표 Ⅰ-7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출산간격, 1988, 2006, 2015 41
표 Ⅰ-8 노인의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2008–2017 51
표 Ⅰ-9 노인의 희망 장례방법, 2008–2017 55

표 Ⅱ-1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와 세대구성, 1990–2045 59
표 Ⅱ-2 주요 국가 유배우 취업자의 성별 시간부족인식, 하루 평균 총 노동시간 및 주당 근로시간, 2000년대 77

표 Ⅲ-1 사망원인별 사망률, 1995–2017 94
표 Ⅲ-2 성별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 2005–2016 95
표 Ⅲ-3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 수, 2000–2016 96
표 Ⅲ-4 OECD 주요 국가의 병원서비스에 대한 환자 경험, 2016 99
표 Ⅲ-5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003–2017 101
표 Ⅲ-6 시도별 인구 1만 명당 외과계 전문의 수, 2003–2017 103
표 Ⅲ-7 시도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 2003–2017 104
표 Ⅲ-8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병원 수, 2003–2017 106
표 Ⅲ-9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요양병원 수, 2005–2017 108
표 Ⅲ-10 시도별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2003–2017 109
표 Ⅲ-11 노인의 가구형태별 구성비율, 2008–2017 112
표 Ⅲ-12 베이비부머의 (배우자)부모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의향, 2010 113
표 Ⅲ-1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치매질환자 인정률, 2008–2017 116
표 Ⅲ-14 장기요양인력, 2008–2017 117

표 Ⅳ-1 소득수준별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 2010–2016 125
표 Ⅳ-2 지역규모별 중 ·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012–2017 129
표 Ⅳ-3 중학생의 TIMSS 수학 성취도 분포, 1999–2015 129
표 Ⅳ-4 교육수준별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2014–2017 136
표 Ⅳ-5 소득수준별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2014–2017 136
표 Ⅳ-6 연령대별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2014–2017 137
표 Ⅳ-7 교육수준별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2014–2017 138
표 Ⅳ-8 중 · 고등학생의 학교 소재지 규모별 학교 진로 활동 참여율, 2017 142
표 Ⅳ-9 중 · 고등학생의 학교 소재지 규모별 학교 진로체험 참여율, 2017 145
표 Ⅳ-10 중 ·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체험 체감 효과, 2015–2017 146

표 V-1	성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 2017	151
표 V-2	성 및 연령집단별 실업률, 2017	151
표 V-3	임금근로자의 월간 근로시간, 2010–2017	154
표 V-4	취업시간별 취업자 구성비율, 2010–2017	154
표 V-5	최저임금액, 인상률 및 영향률, 2010–2017	157
표 V-6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2010–2017	157
표 V-7	청년층 10대 직업, 2007, 2017	158
표 V-8	노동조합 조직률, 2010–2016	159
표 V-9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2010–2017	159
표 V-10	과거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와 피해 후 상담경험, 2017	159
표 V-11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 2017	162
표 V-12	OECD 주요국가의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현황, 2016	163
표 V-13	기업규모별 일 · 가정 양립제도 도입 현황, 2017	165
표 V-14	기업규모 및 소득수준별 육아휴직자 분포, 2017	166
표 V-15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별 육아휴직 사용 경험, 2015	167
표 V-16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직장 복귀율 분포, 2015	168
표 V-17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 2012–2015	168
표 V-18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2004–2018	176
표 VI-1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1992–2016	182
표 VI-2	가구 비소비지출 비율, 1992–2016	188
표 VI-3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소득분위 특성, 2016	193
표 VI-4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산업 분포, 2016	193
표 VI-5	자영업 가구주의 성별 산업 분포, 2016	195
표 VI-6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비소비지출구성, 2016	197
표 VI-7	상용근로자 대비 종사상 지위별 순자산 비율, 2017	197
표 VI-8	은퇴가구의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 2013–2016	200
표 VI-9	은퇴가구의 가구경제 상황, 2013–2016	201
표 VI-10	은퇴가구의 주요 소비 비목별 월평균 생활비, 2013–2016	202
표 VI-11	자가 소유 및 비소유 은퇴가구의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 2013–2016	203
표 VI-12	자가 소유 및 비소유 은퇴가구의 주요 소비 비목별 월평균 생활비, 2013–2016	204
표 VI-13	완전은퇴가구와 경제활동가구의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 2016	205
표 VI-14	완전은퇴가구와 경제활동가구의 주요 소비 비목별 월평균 생활비, 2016	206
표 VII-1	문화예술시설 수, 2010–2017	209
표 VII-2	문화산업 분야별 매출액, 2012–2016	209
표 VII-3	인구사회집단별 해외관광 경험률, 2017	219
표 VII-4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지출, 2007–2016	223
표 VIII-1	주택보급률, 2005–2016	231

표 Ⅷ-2	주택유형별 가구 분포, 2006–2017	231
표 Ⅷ-3	주택 만족도, 2014–2017	232
표 Ⅷ-4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2006–2017	233
표 Ⅷ-5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2006–2017	233
표 Ⅷ-6	자동차 등록 대수, 2000–2017	234
표 Ⅷ-7	도로연장, 2000–2017	234
표 Ⅷ-8	버스업체 수, 보유 대수 및 종사자 수, 2000–2017	235
표 Ⅷ-9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235
표 Ⅷ-10	대중교통 만족도, 2012–2016	236
표 Ⅷ-11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0–2017	237
표 Ⅷ-12	주거문제 청년가구의 규모, 2017	242
표 Ⅷ-13	주거문제 청년가구의 지역 분포, 2017	242
표 Ⅷ-14	주거문제 청년가구의 연령 및 가구규모 분포, 2017	243
표 Ⅷ-15	주거문제 청년가구의 가구구성, 2017	243
표 Ⅷ-16	수도권의 인구 및 인구밀도, 2000–2015	246
표 Ⅷ-17	수도권의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2000–2015	246
표 Ⅷ-18	수도권 내 거주지 이동 인구, 2000–2015	247
표 Ⅷ-19	수도권 내 거주지–통근지별 통근자 수, 2000–2015	247
표 Ⅷ-20	수도권 통근자의 연령집단별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249
표 Ⅷ-21	수도권 통근자의 교육수준별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249
표 Ⅷ-22	수도권 통근자의 교통수단별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250
표 Ⅷ-23	수도권 통근자의 주택유형별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251
표 Ⅷ-24	수도권 통근자의 주택점유형태별 평균 통근시간, 2005–2015	251
표 Ⅸ-1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PM_{10}) 환경기준 달성률, 2007–2016	255
표 Ⅸ-2	지역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일수 및 횟수, 2016	256
표 Ⅸ-3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와 횟수, 2005–2016	256
표 Ⅸ-4	하수, 분뇨, 폐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 2007–2015	258
표 Ⅸ-5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2000–2016	259
표 Ⅸ-6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및 포화도, 2011–2016	260
표 Ⅸ-7	환경분쟁 원인별 분쟁조정건수, 1991–2017	260
표 Ⅸ-8	환경분야 예산, 1995–2016	261
표 Ⅸ-9	환경보호지출, 2004–2015	262
표 Ⅸ-10	가연성 폐기물 및 폐플라스틱 연간 발생량, 2011–2015	264
표 Ⅸ-11	국내의 폐플라스틱 수출입, 2011–2018. 2.	266
표 Ⅸ-12	전국 재활용품 판매수입 및 선별비용, 2010–2015	267
표 Ⅸ-13	EPR제도에 의한 폐플라스틱의 종류별 발생 및 재활용, 2011–2015	268
표 Ⅸ-14	국내 폐플라스틱 기술개발 연구 건수 및 연구비, 2001–2018. 2.	268
표 Ⅸ-15	선진국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안	268
표 Ⅸ-16	한국 연안의 수질등급별 조사정점수 분포, 2013–2017	273
표 Ⅸ-17	환경관리해역 지정현황	275

표 Ⅸ-18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현황 275
표 Ⅸ-19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전후 해양환경 변화, 1997–2016 275
표 Ⅸ-20 해양환경 모니터링 현황 및 운영주체 276

표 Ⅹ-1 주요 강력 및 폭력 범죄별 발생건수, 2007–2016 284
표 Ⅹ-2 경찰관 및 소방관 수, 2001–2016 286
표 Ⅹ-3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08–2016 288
표 Ⅹ-4 손상사망 원인별 사망률, 2007–2017 290
표 Ⅹ-5 시도별 손상 사망률, 2007–2017 291
표 Ⅹ-6 손상사망 원인별 사망장소 분포, 2017 293
표 Ⅹ-7 연령집단별 손상사망원인 분포, 2017 294
표 Ⅹ-8 성 및 손상사망 원인별 사망률, 2017 295
표 Ⅹ-9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 2007–2016 300
표 Ⅹ-10 성매매 검거인원 및 발생률, 2012–2017 303
표 Ⅹ-11 성희롱 접수건수 및 발생률, 2013–2017 303
표 Ⅹ-12 스토킹 발생건수 및 발생률, 2013–2016 304
표 Ⅹ-13 디지털성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 2011–2016 304
표 Ⅹ-14 데이트폭력 검거인원 및 발생률, 2012–2017 305

표 Ⅺ-1 OECD 주요 국가의 소득불평등 수준과 사회이동 가능성 평가 결과, 2017 316
표 Ⅺ-2 OECD 주요 국가의 여성 국회의원 및 장관 비율, 2017 328
표 Ⅺ-3 경력단절 여성 규모, 2012, 2017 330
표 Ⅺ-4 성별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 2002, 2016 331

그림 목차

그림 I-1 인구연령구조의 변화추세, 1960, 2018, 2065 26
그림 I-2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90–2017 28
그림 I-3 여성의 연령집단별 출산율, 1993–2017 28
그림 I-4 혼인 및 이혼 건수, 1981–2017 29
그림 I-5 연령집단별 주요 사망원인 구성비, 2017 32
그림 I-6 수도권 순유입 및 순유출 인구의 시도별 분포, 2010–2015 33
그림 I-7 출신국가별 외국인 여자 및 남자 배우자 수, 1990–2017 35
그림 I-8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70–2017 38
그림 I-9 OECD 주요 국가의 합계출산율, 1970, 1995, 2016 38
그림 I-10 출산순위별 어머니의 출산연령, 1993–2017 40
그림 I-11 혼인코호트별 첫 출산간격 41
그림 I-12 여성의 연령집단별 출산율, 1997, 2007, 2017 43
그림 I-13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1976–2015 43
그림 I-14 시도지역별 합계출산율, 2017 44
그림 I-15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1985–2015 44
그림 I-16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 1974–2015 45
그림 I-17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 1976–2015 45
그림 I-18 기혼여성의 평균 이상자녀수, 기대자녀수, 현재자녀수, 1974–2015 46
그림 I-19 노년기 가구형태, 2008–2017 49
그림 I-20 노인의 자녀와 동거 의향 및 희망 거주지, 2005–2017 49
그림 I-21 노인의 거동 불편 시 희망거주 형태, 2017 50
그림 I-22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2015 50
그림 I-23 부모 노후 돌봄주체에 대한 인식, 2008–2018 51
그림 I-24 주요 지출항목별 노인부양 비용 분담, 2017 52
그림 I-25 노인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 선호도, 2017 53
그림 I-26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희망률, 2017 53
그림 I-27 노인의 연령별 활동 참여 희망률, 2017 54
그림 I-28 노인의 상속방법에 대한 태도, 2008–2017 54
그림 I-29 노인의 연명치료 대한 태도, 2014, 2017 55

그림 II-1 청년층, 중년층 및 노년층 1인가구 비율, 2000–2015 59
그림 II-2 청년층, 중년층 및 노년층의 성별 1인가구 비율, 2000–2015 60
그림 II-3 청년층 연령집단별 1인가구 비율, 2000–2015 61
그림 II-4 청년층 성 및 연령집단별 1인가구 비율, 2000–2015 61
그림 II-5 노인의 교육 및 소득 수준별 1인가구 비율, 2004–2017 63
그림 II-6 청년층과 중년층의 성별 미혼율, 2000–2015 64
그림 II-7 결혼형태별 구성비율, 1997–2017 64
그림 II-8 동갑 및 여자연상 초혼부부 비율, 1997–2017 65

그림 Ⅱ-9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비율, 1990–2015 65
그림 Ⅱ-10 청년층, 중년층 및 노년층 1인가구의 사회적 지원망 크기, 2017 66
그림 Ⅱ-11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경제적 · 도구적 지원 교환 빈도, 2006, 2016 68
그림 Ⅱ-12 주당 평균 근무시간, 1999–2014 70
그림 Ⅱ-13 취업자의 시간부족인식, 1999–2014 70
그림 Ⅱ-14 성 및 혼인상태별 항상 시간부족을 느끼는 취업자 비율, 2014 71
그림 Ⅱ-15 유배우 취업자의 시간부족인식과 일상피로도, 2014 71
그림 Ⅱ-16 유배우 취업자의 시간부족인식과 삶에 대한 만족도, 2014 72
그림 Ⅱ-17 유배우 취업자의 시간부족인식과 시간사용 만족도, 2014 72
그림 Ⅱ-18 유배우 취업자의 시간부족인식별 주당 근무시간 분포, 2014 73
그림 Ⅱ-19 유배우 취업자의 출퇴근 시간별 시간부족인식, 2014 73
그림 Ⅱ-20 유배우 취업자의 부부취업상황별 항상 시간부족을 느끼는 비율, 2014 74
그림 Ⅱ-21 맞벌이 가구의 돌봄 필요 가구원 유무별 시간부족인식, 2014 75
그림 Ⅱ-22 소득빈곤, 시간빈곤 및 시간부족 맞벌이 가구 비율, 2014 76
그림 Ⅱ-23 성 및 연령집단별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18 80
그림 Ⅱ-24 성 및 연령집단별 이혼에 대한 태도, 1998–2018 81
그림 Ⅱ-25 성 및 연령집단별 재혼에 대한 태도, 1998–2018 82
그림 Ⅱ-26 성 및 혼인상태별 결혼 및 재혼에 대한 태도, 1998, 2018 83
그림 Ⅱ-27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성 및 연령집단별 결혼 당위성에 대한 태도, 1998, 2018 84
그림 Ⅱ-28 성 및 연령집단별 동거에 대한 태도, 2008–2018 84
그림 Ⅱ-29 성 및 연령집단별 비혼 출산에 대한 태도, 2008–2018 85
그림 Ⅱ-30 주요 국가의 결혼과 행복의 연관성에 대한 태도, 2012 86
그림 Ⅱ-31 주요 국가의 결혼 전제 없는 동거에 대한 태도, 2012 87

그림 Ⅲ-1 기대수명, 1970–2016 90
그림 Ⅲ-2 2주간 유병률, 2006–2018 91
그림 Ⅲ-3 주요 감염성 질환 발생 건수, 2001–2017 92
그림 Ⅲ-4 당뇨병 및 고혈압 유병률, 2001–2016 92
그림 Ⅲ-5 스트레스 인지율, 2007–2016 93
그림 Ⅲ-6 성별 성인 비만율, 2007–2016 95
그림 Ⅲ-7 아침식사, 적정수면 및 규칙적 운동 실천율, 2006–2018 96
그림 Ⅲ-8 종별 병원 수, 2001–2017 97
그림 Ⅲ-9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2001–2016 97
그림 Ⅲ-10 1인당 연간 의료기관방문 횟수, 2001–2017 97
그림 Ⅲ-1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률, 2010–2016 98
그림 Ⅲ-12 한국과 OECD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2000–2017 98
그림 Ⅲ-13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003–2017 101
그림 Ⅲ-14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003–2017 102
그림 Ⅲ-15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인구 1만 명당 외과계 전문의 수, 2003–2017 103
그림 Ⅲ-16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인구 1만 명당 외과계 전문의 수, 2003–2017 103
그림 Ⅲ-17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 2003–2017 105

그림 Ⅲ-18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 2003–2017 105
그림 Ⅲ-19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인구 10만 명당 병원 수, 2003–2017 106
그림 Ⅲ-20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인구 10만 명당 병원 수, 2003–2017 107
그림 Ⅲ-21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인구 10만 명당 요양병원 수, 2005–2017 108
그림 Ⅲ-22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인구 10만 명당 요양병원 수, 2005–2017 108
그림 Ⅲ-23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2003–2017 110
그림 Ⅲ-24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2003–2017 110
그림 Ⅲ-25 노인 인구 및 비율, 1970–2018 112
그림 Ⅲ-26 노인의 자녀동거 필요 비율, 2008–2017 112
그림 Ⅲ-27 노인의 복합만성질환 이환율, 2008–2017 113
그림 Ⅲ-28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율, 2008–2017 114
그림 Ⅲ-29 연령별 치매진료자 수, 2013–2017 114
그림 Ⅲ-30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및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2008–2017 115
그림 Ⅲ-3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인정자 수, 2008–2017 115
그림 Ⅲ-3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유형별 이용자 수, 2008–2017 116
그림 Ⅲ-33 시설 및 재가 급여 장기요양기관 수, 2008–2017 117
그림 Ⅲ-34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익과 비용, 2008–2017 117

그림 Ⅳ-1 학교급별 취학률, 1980–2017 121
그림 Ⅳ-2 교육단계별 진학률, 1980–2017 122
그림 Ⅳ-3 초 · 중 · 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2008–2017 123
그림 Ⅳ-4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2010–2017 124
그림 Ⅳ-5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 2010–2016 124
그림 Ⅳ-6 학교급별 교우관계 만족도, 2008–2016 126
그림 Ⅳ-7 학교급별 교육방법 만족도, 2008–2016 127
그림 Ⅳ-8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2000–2017 127
그림 Ⅳ-9 OECD 주요 국가의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2005, 2015 128
그림 Ⅳ-10 상용근로자의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액, 1995–2017 130
그림 Ⅳ-11 OECD 주요 국가의 교육수준별 상대적 임금지수, 2015 132
그림 Ⅳ-12 연령대별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인식, 2014–2017 133
그림 Ⅳ-13 초 · 중 · 고 학부모와 일반 성인의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인식, 2014, 2017 133
그림 Ⅳ-14 교육수준별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인식, 2014–2017 134
그림 Ⅳ-15 연령대별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2014, 2017 135
그림 Ⅳ-16 초 · 중 · 고 학부모와 일반 성인의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2014, 2017 135
그림 Ⅳ-17 연령대별 기업의 고졸자 채용 할당에 대한 찬성률, 2014–2017 138
그림 Ⅳ-18 교육수준별 기업의 고졸자 채용 할당에 대한 찬성률, 2014–2017 139
그림 Ⅳ-19 중 ·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참여율, 2015–2017 141
그림 Ⅳ-20 중 · 고등학생의 학교 소재지 규모별 학교 진로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015–2017 142
그림 Ⅳ-21 고교 계열별 학교 진로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015–2017 143
그림 Ⅳ-22 중 ·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활동별 만족도, 2015–2017 143
그림 Ⅳ-23 중 ·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참여 희망 비율, 2015–2017 144

그림 Ⅳ-24 중 ·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체험 참여율, 2015–2017 145
그림 Ⅳ-25 고등학생의 학교 계열별 진로체험 활동 체감 효과, 2017 146
그림 Ⅳ-26 중 ·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체험 불만족 이유, 2017 147
그림 Ⅳ-27 중 ·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체험 참여희망비율, 2015–2017 147

그림 Ⅴ-1 성, 연령 및 사업체 규모별 근속연수, 2017 152
그림 Ⅴ-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비율, 2013–2017 153
그림 Ⅴ-3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 분포, 2012–2017 153
그림 Ⅴ-4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비율, 1985–2017 154
그림 Ⅴ-5 OECD 주요 국가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 2015 154
그림 Ⅴ-6 직종별 월임금총액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2017 155
그림 Ⅴ-7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상대임금, 2006–2017 155
그림 Ⅴ-8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 분포, 2004–2017 156
그림 Ⅴ-9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분포, 2013–2017 156
그림 Ⅴ-10 OECD 주요국가의 실질최저임금, 2010–2016 157
그림 Ⅴ-11 일–가족생활 중요도에 대한 인식, 2017 161
그림 Ⅴ-12 청년층의 소득계층별 여성 취업 적정 시기에 대한 인식, 2017 161
그림 Ⅴ-13 성별 육아휴직 이용자 수, 2002–2017 162
그림 Ⅴ-14 OECD 주요국가의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공공지출액, 2013 163
그림 Ⅴ-15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처음 사용자 분포, 2013–2017 164
그림 Ⅴ-16 기업규모별 복리후생비용 대비 보육지원금 비중, 2008–2017 165
그림 Ⅴ-17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율, 2004–2018 169
그림 Ⅴ-18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비율, 2004–2018 170
그림 Ⅴ-19 성별 비정규직 비율, 2004–2018 170
그림 Ⅴ-20 성별 비정규직 비율, 2004–2018 171
그림 Ⅴ-21 연령대별 시간제 비율, 2004–2018 171
그림 Ⅴ-22 OECD 국가의 시간제 노동자 비율, 2017 172
그림 Ⅴ-23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2004–2018 173
그림 Ⅴ-24 교육수준별 비정규직 비율, 2004–2018 173
그림 Ⅴ-25 주요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 2017 174
그림 Ⅴ-26 산업별 비정규직 증감률, 2007, 2017 174
그림 Ⅴ-27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 2004–2018 175
그림 Ⅴ-28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과 비정규직 임금수준, 2004–2018 175
그림 Ⅴ-29 고용형태별 근속기간, 2004–2018 176
그림 Ⅴ-30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선택 비율, 2007–2018 177
그림 Ⅴ-31 고용형태별 교육훈련경험 비율, 2007–2018 177
그림 Ⅴ-32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노조조직률, 2004–2018 178

그림 Ⅵ-1 가구 소득분위별 실질소득 증가율, 1992–2016 181
그림 Ⅵ-2 소득 5분위 배율, 1992–2016 182
그림 Ⅵ-3 OECD 주요 국가의 소득 5분위 배율, 2016 183

그림 Ⅵ-4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비, 1992–2016	183
그림 Ⅵ-5	가구주 직업별 소득비, 2003–2016	184
그림 Ⅵ-6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구성, 1996, 2016	185
그림 Ⅵ-7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1992–2016	186
그림 Ⅵ-8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1992–2016	186
그림 Ⅵ-9	가구의 소비지출구성, 1996–2016	187
그림 Ⅵ-10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비지출구성, 1996, 2016	187
그림 Ⅵ-11	가구 소득분위별 가계흑자비율, 1992–2016	188
그림 Ⅵ-12	한국 및 G–7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 2016	191
그림 Ⅵ-13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연간 가구소득, 2011–2016	192
그림 Ⅵ-14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가구소득 분포, 2016	192
그림 Ⅵ-15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연령 분포, 2016	194
그림 Ⅵ-16	가구주 종사상 지위 및 연령집단별 연간 가구소득, 2016	194
그림 Ⅵ-17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2011–2016	196
그림 Ⅵ-18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소비지출구성, 2016	196
그림 Ⅵ-19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순자산, 2012–2017	198
그림 Ⅵ-20	중고령가구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은퇴가구 비율, 2013–2016	200
그림 Ⅵ-21	은퇴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 2013–2016	202
그림 Ⅵ-22	자가 소유 및 비소유 은퇴가구의 가구경제 상황 비교, 2013–2016	204
그림 Ⅵ-23	완전은퇴가구와 경제활동가구의 가구경제 상황 비교, 2016	205
그림 Ⅶ-1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 2006–2016	209
그림 Ⅶ-2	가구의 오락문화비 주요 항목별 지출액, 2017	210
그림 Ⅶ-3	주로 하는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 2017	211
그림 Ⅶ-4	문화예술 장르별 관람률, 1993–2017	212
그림 Ⅶ-5	문화예술행사, 문화자원봉사 및 문화동호회 참여율과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08–2016	212
그림 Ⅶ-6	국내 및 해외여행자 비율, 2000–2017	213
그림 Ⅶ-7	스포츠관람률, 2000–2017	213
그림 Ⅶ-8	신문 읽는 비율, 2000–2017	214
그림 Ⅶ-9	여가만족도, 1990–2017	215
그림 Ⅶ-10	국민 해외여행객 수, 2008–2017	216
그림 Ⅶ-11	주요 국가의 해외여행객 수, 2008–2016	217
그림 Ⅶ-12	주요 목적지별 해외여행객 수, 2017	217
그림 Ⅶ-13	국내 및 해외 여행 경험률, 2000–2017	217
그림 Ⅶ-14	여행목적별 해외여행 경험률, 2007–2017	218
그림 Ⅶ-15	해외여행 경험자의 여행목적별 평균 경험 횟수, 2007–2017	218
그림 Ⅶ-16	해외관광 경험자의 여행경험횟수별 구성비율, 2007–2017	219
그림 Ⅶ-17	성별 해외관광 경험률, 2007–2017	220
그림 Ⅶ-18	연령집단별 해외관광 경험률, 2007–2017	220
그림 Ⅶ-19	교육수준별 해외관광 경험률, 2007–2017	220
그림 Ⅶ-20	가구소득수준별 해외관광 경험률, 2011–2017	220

그림 Ⅶ-21 해외관광 경험 횟수별 삶의 만족도, 2017 221
그림 Ⅶ-22 가구소득수준별 해외관광 경험 횟수에 따른 삶의 만족도, 2017 221
그림 Ⅶ-23 소득분위별 1인당 문화서비스지출, 2007, 2016 224
그림 Ⅶ-24 가구주 연령집단별 1인당 문화서비스지출, 2007, 2016 225
그림 Ⅶ-25 가구원수별 1인당 문화서비스지출, 2007, 2016 226
그림 Ⅶ-26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가계오락문화지출 비중, 2000–2016 227
그림 Ⅶ-27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일반정부 문화지출 비중, 2000–2016 228

그림 Ⅷ-1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 분포, 2006–2017 231
그림 Ⅷ-2 1인당 평균 주거면적, 2006–2017 232
그림 Ⅷ-3 공공 및 민간 부문 임대주택 재고, 2007–2016 233
그림 Ⅷ-4 철도연장, 2000–2017 234
그림 Ⅷ-5 자전거도로 노선 수와 연장, 2009–2016 235
그림 Ⅷ-6 교통약자 인구, 2010–2017 236
그림 Ⅷ-7 교통복지수준 종합 평가 점수, 2016–2017 237
그림 Ⅷ-8 보유주택 비상속의향 가구의 비중, 2008–2017 239
그림 Ⅷ-9 비정규직의 비중, 2003–2017 239
그림 Ⅷ-10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2016 240
그림 Ⅷ-11 OECD 국가들의 혼외출산율, 2014 240
그림 Ⅷ-12 임차가구의 점유형태 분포, 2010–2017 240
그림 Ⅷ-13 주거문제 청년가구의 소득 분포, 2017 243
그림 Ⅷ-14 주거문제 청년가구의 순자산 분포, 2017 244
그림 Ⅷ-15 수도권 통근자의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247
그림 Ⅷ-16 수도권 통근자의 거주지역별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248
그림 Ⅷ-17 수도권 통근자의 성별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249
그림 Ⅷ-18 수도권 통근자의 가구규모별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250

그림 Ⅸ-1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05–2015 255
그림 Ⅸ-2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15 257
그림 Ⅸ-3 폭염 일수, 1980–2018 257
그림 Ⅸ-4 호우 일수, 1914–2017 257
그림 Ⅸ-5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오염도, 1995–2016 258
그림 Ⅸ-6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구성비율, 2016 259
그림 Ⅸ-7 주요 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밤 소음도, 2000–2016 260
그림 Ⅸ-8 폐플라스틱의 처리방법별 구성비율, 2011–2015 265
그림 Ⅸ-9 서울시의 폐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 물질 흐름도 265
그림 Ⅸ-10 한국 연안의 연평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및 총인(TP) 농도, 2003–2017 272
그림 Ⅸ-11 하계 진해만 저층 용존산소 농도, 2017년 5–8월 274

그림 Ⅹ-1 성별 외인 사망률, 1985–2017 279
그림 Ⅹ-2 주요 외인별 사망률, 1985–2017 279

그림 X-3 연령집단별 외인 사망률, 1985–2017 279
그림 X-4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1997–2017 280
그림 X-5 화재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1987–2017 280
그림 X-6 화재 발생 건수와 재산 피해액, 1987–2017 281
그림 X-7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1998–2017 281
그림 X-8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2015 282
그림 X-9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2007–2017 282
그림 X-10 도시철도 사상사고 건수, 2007–2017 283
그림 X-11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02–2016 283
그림 X-12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건수, 2007–2016 284
그림 X-13 OECD 국가의 살인범죄율, 2014 284
그림 X-14 범죄피해 경험률, 2012–2016 285
그림 X-15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률, 2008–2016 285
그림 X-16 OECD 국가의 범죄피해 경험률, 2010 286
그림 X-17 OECD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 수, 2015 287
그림 X-18 범죄에 대한 두려움, 1997–2017 287
그림 X-19 연령집단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2017 287
그림 X-20 OECD 국가의 야간보행안전도, 2014–2016 평균 288
그림 X-21 손상 사망률, 2007–2017 290
그림 X-22 손상사망 원인별 구성비율, 2007–2017 290
그림 X-23 성별 손상 사망률, 2007–2017 291
그림 X-24 연령집단별 손상 사망률, 2007–2017 292
그림 X-25 손상사망 원인별 발생 시기(계절), 2017 295
그림 X-26 OECD 국가의 손상 사망률, 2000, 2015 296
그림 X-27 OECD 주요 국가의 주요 손상사망원인별 사망률, 2015 297
그림 X-28 살해 발생건수 및 발생률, 2007–2016 299
그림 X-29 OECD 국가의 살인범죄 피해자 성별 구성비, 2015 300
그림 X-30 성폭력 범죄 유형별 구성비, 2007–2016 301
그림 X-31 성폭력범죄 기소율, 2012–2017 301
그림 X-32 OECD 국가의 여성 성폭력 피해 경험률, 2014 302
그림 X-33 가정폭력사범 검거인원과 동종재범률, 2011–2017 302
그림 X-34 성희롱 피해자 연령, 2017 303
그림 X-35 데이트폭력 범죄유형별 구성비, 2017 305
그림 X-36 연령별 인구 1만 명당 데이트폭력 가해자 수, 2017 305
그림 X-37 OECD 국가의 친밀한 파트너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여성 비율, 2014 306

그림 XI-1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투표율, 1992–2018 309
그림 XI-2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 2013, 2017 309
그림 XI-3 사회단체 참여율, 2003–2017 309
그림 XI-4 사회 · 정치 단체 활동의 중요성 인식과 단체 유형별 참여율, 2013, 2017 310
그림 XI-5 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율, 1999–2017 311

그림 XI-6 사회적 관계별 소통 수준, 2013, 2017 311
그림 XI-7 주요 공공기관별 국민과의 소통 수준, 2013, 2017 312
그림 XI-8 가족·친척이나 그 외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 2013, 2017 313
그림 XI-9 어려울 때 도움 요청 상대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 2013, 2017 313
그림 XI-10 세대 내 및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2003–2017 314
그림 XI-11 연령대별 세대 내 및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2009, 2017 315
그림 XI-12 OECD 국가의 저소득가구 평균소득가구로의 이동 소요기간, 2017 315
그림 XI-13 연령대별 삶에 대한 만족도, 2003–2017 316
그림 XI-14 주요 국가의 행복지수, 2015–2017 평균 317
그림 XI-15 정서 경험, 2013, 2017 317
그림 XI-16 주요 분야별 사회 공정성 인식, 1990–2014 319
그림 XI-17 주요 분야별 사회 공정성 인식, 2013–2017 320
그림 XI-18 주요 국가의 사회 공정성 인식, 2003, 2013 320
그림 XI-19 20대와 50대의 주요 분야별 사회 공정성 인식, 2017 321
그림 XI-20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주요 분야별 사회 공정성 인식, 2017 321
그림 XI-21 전체 연령대와 20대의 성별 사회 공정성 인식, 2017 322
그림 XI-22 사회에 대한 신뢰도, 2004–2014 323
그림 XI-23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 2003–2016 323
그림 XI-24 OECD 주요 국가의 사회 공정성 인식과 정부 신뢰 간 관계, 2013 324
그림 XI-25 취업 기회의 공정성 인식별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2005, 2009, 2014 324
그림 XI-26 법 집행의 공정성 인식별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 2005, 2009, 2014 325
그림 XI-27 소득과 재산 분배의 공정성 인식별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 2005, 2009, 2014 325
그림 XI-28 OECD 국가의 성불평등지수(GII), 2017 327
그림 XI-29 유리천장지수(GCI), 2017 327
그림 XI-30 OECD 국가의 성격차지수(GGI), 2017 328
그림 XI-31 OECD 국가의 3세 미만 아동 보육시설 이용률, 2005–2014 330
그림 XI-32 OECD 국가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 비율, 2011 331

Korean Social Trends 2018
한국의 사회동향 2018

2018 Population

Korean Social Trends 2018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인구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 한양대학교 24

초저출산의 고착화와 출산간격의 변화 37

유정균 | 한양대학교, 김두섭 | 한양대학교

노년기의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 정경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8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한양대학교)

- 한국의 출산력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저하를 지속하여 1980년대 중반에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00년대 진입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기대수명이 선진국 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아졌다. 그러나 자살과 아울러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등 퇴행성 질환에 의한 사망이 증가하였다.
- 한국 인구는 2031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5년에는 1990년 인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연령의 인구는 2016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 서울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수도권 인구의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의 이동 목적지는 충청남도,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많았다.
- 결혼이민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규모가 2005년 정점에 도달한 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현상은 해당 사회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하거나 상호작용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동시에 인구 현상은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온다. 최근 범세계적 경제불황은 결혼과 출산력뿐만 아니라 사망력, 인구이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인구는 2031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주로 초저출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금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과 아울러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및 복지제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글은 한국 인구의 성장과 구조의 최근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출산율과 혼인율 및 이혼율의 최근 동향, 사망률의 저하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수도권 인구의 변화, 그리고 체류외국인의 증가 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의 분석은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장래인구추계」 및 UN 인구 DB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인구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지난 20세기 초까지 고출산, 고사망의 전통적인 특성을 지니던 한국의 인구는 1980년 중반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고 제1차 인구변천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출산력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으며, 2000년대 진입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사망력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다. 그 결과, 이제 한국 사회는 인구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하고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의 인구규모는 2015년 현재 5,101만 명으로 세계 27위에 해당되며, 인구증가율은 0.53%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장기추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의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하여 2065년에 이르면 2015년 인구보다 799만 명이 줄어든 4,302만 명이 되어 1990년의 인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인구의 절대규모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령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데 있다. 출산수준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2065년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유소년 인구(0-14세)는 각각 2015년 규모의 55.1%와 58.8%에 불과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2015년의 2.8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2065년 한국 인구의 연령구조가 전형적인 역삼각형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구구조는 성, 연령, 혼인상태에 따른 인구학적 구성과 교육수준, 직업, 수입, 거주지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분해 파악된다. 〈표 I-1〉에는 1990년 이후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혼인상태별 인구구성의 변화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남녀 인구의 구성은 비교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커다란 변화의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보다 약간 많은 상태가 유지되어 왔으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역전되어 남녀 인구가 각각 49.7%와 50.3%, 그리고 2015년에는 각각 49.9%와 50.1%씩을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별 인구구성, 1990-2015

(%)

	1990	2000	2010	2015
성				
남자	50.2	50.2	49.7	49.9
여자	49.8	49.8	50.3	50.1
연령				
0-14세	25.7	21.0	16.2	13.9
15-64세	69.4	71.7	72.5	72.9
65세 이상	5.0	7.3	11.3	13.2
거주지				
시(동)	74.4	79.7	82.0	81.9
읍	8.3	8.1	8.6	9.0
면	17.3	12.2	9.3	9.1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3.4	25.7	20.3	17.1
중학교	18.5	13.6	11.9	10.5
고등학교	34.0	34.6	31.2	30.8
대학 이상	14.1	26.1	36.6	41.7
혼인상태				
미혼	33.0	30.1	30.6	31.3
유배우	59.1	60.6	57.7	55.9
사별	7.2	7.4	7.6	7.6
이혼	0.8	1.9	4.0	5.1

주: 1) 인구는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교육수준별 인구와 혼인상태별 인구는 각각 6세 이상,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함.
2) 1990-2010년은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성, 연령, 거주지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결과임. 2015년 교육수준과 혼인상태는 20% 표본조사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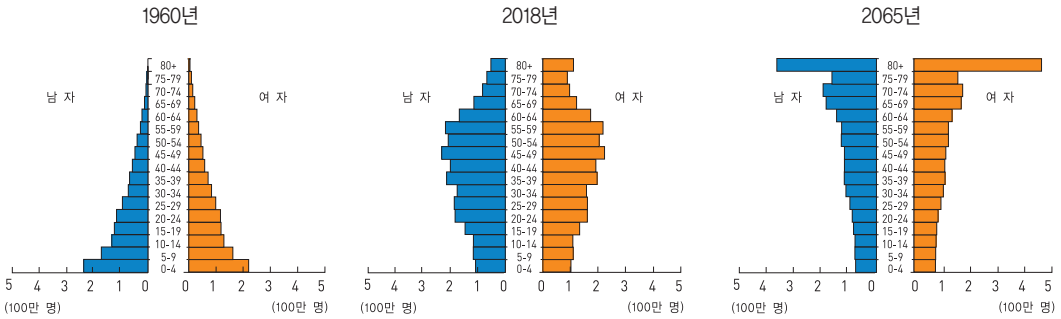
연령구성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1990년 이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 I-1]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인구의 연령구조는 1960년에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였으나 2018년에는 항아리 모양으로 바뀌었고, 2065년에는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표 I-1〉에서 연령집단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0-14세 유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5.7%에서 2000년 21.0% 그리고 2015년 13.9%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한편, 15-64세 인구의 비중은 1990년 69.4%에서 2000년 71.7%, 2015년 72.9%로 약간씩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16년 이후 감소세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전체 인구에 대한 비중은 1990년 비중의 2.7배로 커졌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 1990년에는 도시 인구 비중이 74.4%에 도달하였다. 도시 인구의 비중은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82.0%과 81.9%로 높아졌으며, 여기에 읍 지역의 인구를 포함시키면 그 비중이 두 해 모두 91%에 근접한다. 도시 인구 비중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표 I-1〉에서 보는 것처럼, 읍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은 1990년 이후 8-9%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편, 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촌 인구의 비중은 1990년의 17.3%에서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9.3%와 9.1%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한국 인구의 교육수준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내국인 인구의 비중은 1990년 33.4%이었으나 2000년 25.7%, 2015년 17.1%로 꾸준히 낮아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그 비중이 각각 10.5%와 30.8%로 집계되었다. 한편,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은

[그림 I-1] 인구연령구조의 변화추세, 1960, 2018, 2065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65」, 2016.

1990–2015년의 기간에 14.1%에서 41.7%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리고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30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는 12.0년으로 집계되었다.

내국인 인구(15세 이상)의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유배우자의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 I-1〉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이후 미혼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유배우자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결혼 지연과 독신주의 경향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연령집단에서 미혼자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25–29세와 30–34세 인구의 미혼자 비중이 2015년에 각각 83.9%와 46.9%로 높아졌다. 사별자의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이혼자의 비중은 1990년 0.8%에서 2000년 1.9%, 2010년 4.0%, 2015년 5.1%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연령집단별 이혼자의 비중은 50–54세에서 10.8%로 가장 높으며, 50대 이상 인구의 이혼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출산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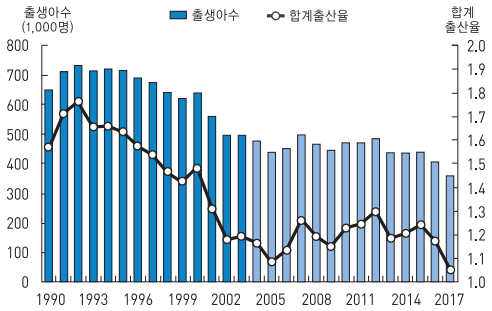
한국 인구의 출산력 변천은 1960–1985년 기간의 제1단계와 198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2단계로 구분된다. 제1차 출산력 변천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변되는 사회경제적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가치관과 사회규범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국가시책으로 강력하게 시행된 가족계획사업은 출산력 변천을 크게 촉진시켰다.

제2차 출산력 변천의 주요 요인으로는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 가족 형성의 지연과 약화, 그리고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제1차 출산력변천에서와는 달리 가족계획사업이 1990년대에 들어와 유명무실해졌고, 출산억제를 위한 대부분의 규제와 보상 제도를 포함하여 인구성장 억제정책이 폐지되었다. 초저출산으로의 제2차 변천에서는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급격한 변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대두, 그리고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등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일어난 급격한 출산력 저하의 주된 원인이다.

한국에서 출산력 저하는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가속화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I-2]를 보면,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1990년대 초에 약간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2005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각각 43.9만 명과 1.09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출산력 저하의 폭과 속도는 인구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 넘는 것이었다. 이 그림에서 2000년에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반짝 증가한 것은 '새천년 베이비붐'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그림 I-2]에서 주목할 것은 출산수준이 2005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약간이나마 반등

[그림 I-2]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90-2017



주: 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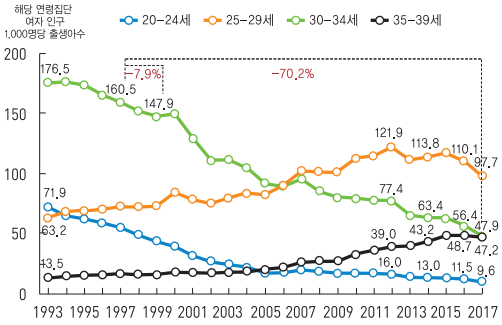
의 조짐을 보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저하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출생아수는 2006년 45.2만 명, 2007년 49.7만 명으로 반등한 후 2009년 44.5만 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2년 48.5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14년 43.5만 명, 2016년 40.6만 명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2017년에는 35.8만 명의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저출산의 덫'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합계출산율은 2007년 1.26, 2010년 1.23, 2012년 1.30, 2015년 1.24, 2016년 1.17, 그리고 2017년에는 역사상 가장 낮은 1.05로 집계되었다. [그림 I-2]에서 2006년과 2007년, 2012년에 출산수준이 오름세를 보인 것은 쌍춘년, 황금돼지띠 및 용띠의 해 등 출산연도 선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인구가 2000년대 진입 이후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게 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게 된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높은 실업률과 빈곤의 증대로 가족이 해체되고 장년층의 출산이 줄어든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통계청의 혼인신고 집계결과에 따르면,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에 24.8세였으며 이후 매년 0.1-0.4세씩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 30.2세에 도달하였다. 여자의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첫째 자녀를 낳은 평균 출산연령과 전체 자녀에 대한 평균 출산연령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 각각 31.6세와 32.6세에 이르렀다. 그리고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도 29.4%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주된 출산연령층이던 20대 여자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그림 I-3]에서 여자 20-24세 및 25-29세 연령집단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추세를 확인

[그림 I-3] 여성의 연령집단별 출산율, 1993-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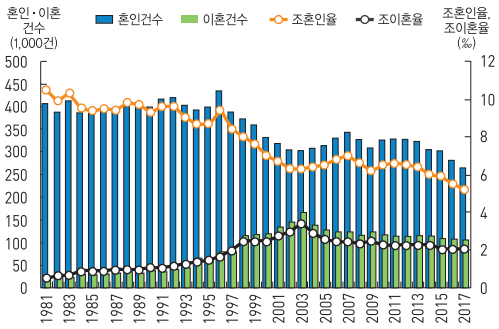
주: 1) 연령집단별 출산율=(산모의 연령집단별 출생아수÷해당 연령집단의 여자 인구)×1,0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5–29세 집단의 출산율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불과 2년 동안 7.9% 그리고 2017년까지 무려 70.2%가 감소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30대 여자의 출산율은 2015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연령층이 25–29세 집단에서 30–34세 집단으로 바뀌었다. 또한 35–39세 집단의 출산율 역시 2005년을 기점으로 20–24세 집단의 출산율보다 높아졌으며,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혼인력의 변화

한국 인구의 출산수준 저하는 혼인 양상의 변화에 기인하는 바 크다. [그림 I-4]에서 보는 것처럼,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은 1996년에 각각 43.5만 건과 1,000명당 9.4건의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03년에 이르기까지 급속하게 감소했다. 조혼인율은 그 후 황금돼지띠의 해였던 2007년에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관찰된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의 저하 속도가 가속화되는 조짐이 발견되며, 2017년에는 각각 26.4만 건과 1,000명당 5.2건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편, 조이혼율은 1981년 1,000명당 0.6건에 불과한 낮은 수준에서 완만한 상승을 지속하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그러나 2003년 1,000명당 3.4건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는 점진적인 감소 추세가 관찰된다.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은 2017년 현재 각각 1,000명당 5.2건과 2.1건이다.

[그림 I-4] 혼인 및 이혼 건수, 1981–2017



주: 1)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과 이혼의 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최근에는 결혼의 지연이나 기피로 인한 미혼율의 증가와 함께 무자녀 가정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30대 연령집단의 미혼율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3.4%로 집계되었으나 2010년 29.2%, 2015년 36.3%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전국출산력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5년 현재 30대 기혼 여자의 10.9%가 출산경험이 없으며 이들의 16.5%는 장래에도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미 확고하게 뿌리내린 소가족 지향의 태도와 규범들이 앞으로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뚜렷한 경제적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젊은 세대가 결혼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경향도 급속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자녀교육

비에 대한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져 출산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앞으로 한국 인구의 출산력이 반등하여 초저출산 상태를 탈피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기침체, 실업률, 노동시장의 불안정 등 경제적 여건의 전개 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률 저하와 사망원인구조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한 사망력은 선진국의 평균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조사망률은 2006–2009년 기간 동안 1,000명당 5.0명의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2017년 1,000명당 5.6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 수 역시 2006년 24.4만 명의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28.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망률과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는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2017년 사망통계에 의하면, 8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사망률이 감소하거나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남녀 인구 모두 60대 및 70대 연령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된다.

한국 인구의 사망력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I-2〉를 보면, 한국 인구의 조사망률은 세계 인구와 개발도상국,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선진국의 평균값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만 0세 어린이의 영아사망률 역시 선진국 평균값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기대수명을 비교해 보아도 선진국의 평균값보다 남녀 각각 2.7년과 2.8년이 더 긴 것으로 확인된다.

〈표 I-2〉 세계 인구와 한국 인구의 사망관련 지표, 2010–2015

	조사망률 (1,000명당)	영아사망률 (1,000명당)	기대수명(세)	
			남자	여자
세계 인구	7.7	35	68.6	73.1
선진국	9.9	5	75.2	81.6
개발도상국	7.2	38	67.2	71.1
아시아	7.0	31	69.9	73.8
한국	5.5	3	77.9	84.4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2017.

일반적으로 사망률은 성, 연령을 비롯한 인구학적 조건에 따라서 편차를 나타낸다. 사망자 수는 2017년 남자 15.4만 명, 여자 13.1만 명이며, 1,000명당 사망자 수는 각각 6.0명과 5.1명으로 남자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높다. 연령에 따라서는 만 0세 영아의 사망률이 월등하게 높다. 연령별 사망률은 1세 이후 10세 정도까지 낮아지며, 그 이후에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또한, 최근에는 남녀 인구의 사망률 격차가 50세를 넘으면서 급격하게 벌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극대화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사망력의 수준은 거주하는 시도에 따라서도 편차를 나타낸다. 사망자가 많은 지역은 2017년에 경기도(5.7만 명), 서울(4.3만 명)의 순이었으며,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사망자가 11.4만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0.0%를 차지하였다. 조사망률(1,000명당)은 전라남도(8.9)와 경상북도(7.9) 및 전라북도(7.7)가 높고, 울산(4.2)과 서울(4.4) 및 세종(4.4)이 낮다. 그러나 각 지역의 연령구조를 2005년 전국 인구 기준으로 표준화한 사망률은 충청북도, 전라남도 및 강원도의 순으로 높고, 서울과 경기도, 대전, 세종의 순으로 낮다.

사망률의 감소는 사망원인구조의 전환을 수반하고, 그 전환은 보건제도의 개혁이나 발전된 의료시설의 도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사회발전 과정에서 전염병이나 기생충 감염에 의한 사망은 줄어든다.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퇴행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아진다.

한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소화기 질환과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이 감소한 반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폐렴에 의한 사망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자살률은 이른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급증한 이래 빠른 속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다. 비록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011년 31.7명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약간씩 감소하여 2017년 24.3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이는 1997년의 13.2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표 I-3〉에서 보는 것처럼, 2007년 이후

〈표 I-3〉 사망원인 순위, 2007–2017

연도	사망원인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2007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운수사고
2009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운수사고
2011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폐렴
2013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폐렴
2015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자살	당뇨병
2017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자살	당뇨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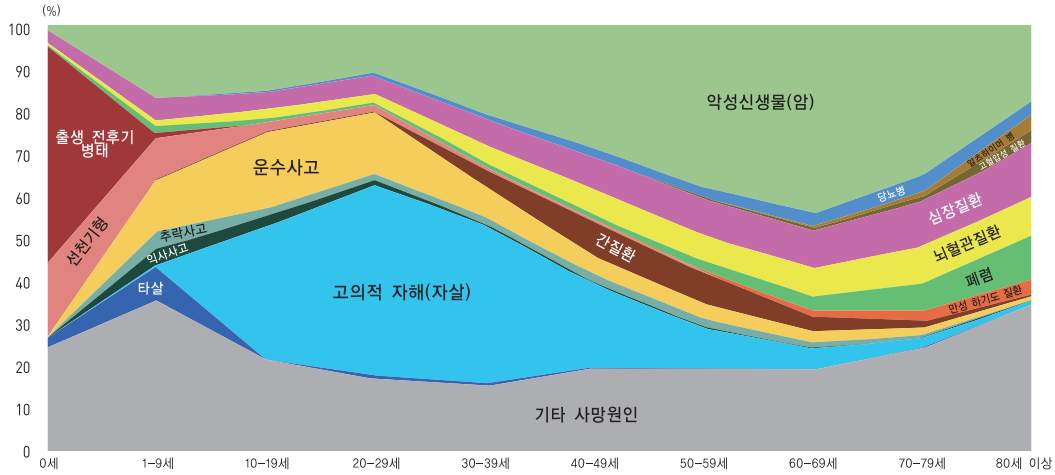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17년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2018. 9. 19.

암은 사망원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2–3위, 그리고 자살과 폐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사망원인의 구조는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전체 인구의 사망원인 변화는 연령구조의 변화를 크게 반영하지만, 동일한 연령집단에서 사망원인구조의 변화는 사회환경의 변화, 음주나 흡연 등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에 기인하는 바 크다.

[그림 I-5]에서 보는 것처럼, 20대와 30대에는 자살과 운수사고가 전체 사망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연령이 높아지면 퇴행성 질환의 비중이 급격하게 커진다. 고령집단에서도 자살의 비중이 높게 관찰되나 암이 40대 이후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사망원인 1위이다. 노인집단에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폐렴, 기관지염, 천식 등 만성하기도 질환에 의한 사망이 두드러진다.

[그림 I-5] 연령집단별 주요 사망원인 구성비, 2017



주: 1) 연령집단별 사망원인 구성비=(해당 연령집단의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해당 연령집단의 총 사망자 수)×10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7.

도시화와 수도권 인구의 변화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경제적 발전과 산업화에 수반하여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의 결과, 2015년 도시 인구의 비중이 81.6%에 도달하였다. 읍 지역 인구를 제외하면 농촌 인구의 비중은 9.3%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시 인구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젊은 연령층의 지속적인 이탈로 절대 인구의 감소와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 도시화의 특징은 도시 인구의 성장이 모든 도시에서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I-4〉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도시화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서울 인구는 1990년 1,061만 명을 기록한 이후 완만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2015년 「인

〈표 I-4〉 서울, 수도권 및 도시 인구, 1960-2015

(1,000명)

연도	서울	서울 대도시권	수도권	시(동)부	군(읍/면)부	전국
1960	2,445	2,938	5,194	6,997	17,992	24,989
1970	5,433	6,327	8,730	12,710	18,173	30,882
1980	8,364	10,744	13,298	21,434	16,002	37,436
1990	10,613	16,508	18,586	32,309	11,102	43,411
2000	9,895	19,441	21,354	36,755	9,381	46,136
2005	9,820	20,960	22,767	38,515	8,764	47,279
2010	9,794	21,875	23,836	39,823	8,758	48,580
2015	9,904	23,132	25,274	41,678	9,392	51,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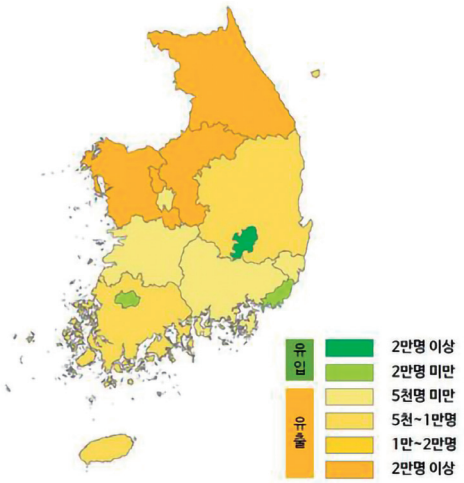
주: 1) 인구는 외국인 인구를 포함함.
2) 서울대도시권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 시(동)부 인구를 포함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인구를 포함함.
4) 1960-2010년은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구주택총조사」에서는 2010년보다 11만 명이 증가한 99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의 면적은 605㎢로 전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서울 인구의 비중은 2015년 19.4%에 달한다. 또한, 서울 인구에 인천과 경기도 인구를 포함하는 수도권 인구는 2015년 현재 전국 인구의 49.5%에 해당하는 2,527만 명에 이른다.

〈표 I-4〉를 보면, 서울과 서울대도시권, 수도권 인구의 증가 추세를 연대별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1960년대에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는 부산과 대구의 인구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서울과 이 두 도시 위주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의 인구성장은 1970년대에 들어와 둔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서울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지가 서울 근교로 확산되고 서울로 유입되었던 인구가 성남, 부천, 안양 등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로 확산되면서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70-1980년 기간에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4%와 4.3%에 달하였다. 포화 상태에 이른 서울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은 그 후에도 지속되며 1990-2015년 기간에 70.9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서울 이탈 현상은 취학 자녀가 없는 30대 부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 산업단지의 조성과 거주지의 교외화로 인한 인구의 확산으로 대도시

[그림 I-6] 수도권 순유입 및 순유출 인구의 시도별 분포, 2010-2015



출처: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이동, 통근·통학, 활동제약」, 보도자료, 2017. 4. 19.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1995년 이후 부산과 2000년 이후 대구에서도 관찰된다.

최근 수도권 인구의 유출이 증가하는 것은 주목할 현상이다. 지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 이후 5년 동안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전입한 인구보다 16.3만 명이 많았다. [그림 I-6]에서 보는 것처럼, 수도권 인구의 이동 목적지는 충청남도, 강원도, 충청북도의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1960-2015년 기간에 네 배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서울대도시권의 인구는 무려 7.9배가 되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의 인구도 같은 기간에 네 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60년 700만 명에 불과하던 시(동)부 인구는 2015년 4,168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도시 인구의 이러한 팽창은 기본적으로 농촌으로부터의 대규모 인구이동에 기인한다. 군(읍·면)부 인구는 같은 기간 1,799만 명에서 939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정부는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이 각종 도시문제와 병리현상의 근원이라는 인식하에 1964년부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1972년 이후에는 다양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하여 지방에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산업의 집중은 지속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다양성

전통적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던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초부터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 국제결혼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통합이 사회정책적 관심의 중요한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관한 통계는 행정기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작성되어 활용된다. 체류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데, 출입국사무소에 의하면 2017년 말 현재 218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주민등록인구 5,177.9만 명의 4.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체류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및 거소 신고 여부에 따라 장기 체류자(158.3만 명)와 단기 체류자(59.7만 명)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규모가 25.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난 5년간 연평균 8.5%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단기체류 관광객 증가,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대상 확대,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6.7%로 가장 많고, 베트남(7.8%), 태국(7.0%), 미국(6.6%), 우즈베키스탄(2.9%), 필리핀(2.7%)의 순이다. 체류목적별로는 재외동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단기방문, 사증면제, 영주, 결혼이민 등으로 나타난다.

결혼이민자는 한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1990–2017년 기간에 외국인 배우자와 이루어진 혼인의 누적 규모는 58.5만 건에 달한다. 이 기간에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이 41.6만 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 국제결혼의 71.2%에 해당된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은 같은 기간 16.9만 건이며, 지난 사반세기 동안 상대적으로 완만한 변화 추세를 보여 왔다.

혼인신고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는 외국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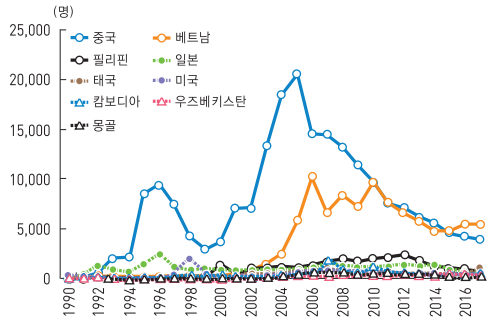
의 결혼이 4,710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진입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5년에 42,356건의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그 후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로 반전되어 2017년 20,835건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해에 신고된 전체 결혼건수에 대한 국제결혼의 비중도 1990년의 1.2%에서 2005년 13.5%로 높아졌으며, 2017년에는 7.9%로 집계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그 동안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중국 조선족 출신 여자 배우자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여자 배우자의 출신국가가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 여러 국가로 다양해졌다. [그림 I-7]에서 중국인 여자 배우자와의 결혼건수가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로 반전된 것은 중국 조선족이 친지 방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함에 따라 한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외국인 여자 배우자의 출신지역은 2017년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베트남 다음으로 중국, 태국, 일본, 필리핀, 미국, 캄보디아 등의 순으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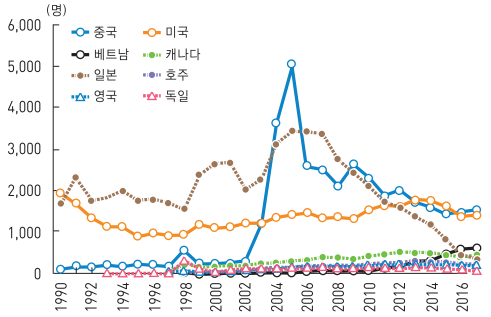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에 비해 현재 그 사례수가 현저하게 작다. 외국인 남자 배우자의 출신국적 역시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 일본 국적 남자와의 결혼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2017년 현재 중국, 미국, 베트남,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의 순으로 많으며, 이들 여섯 국가가 전체의 74.6%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 여자와 베트남 남자의 결혼은 대부분

[그림 I-7] 출신국가별 외국인 여자 및 남자 배우자 수, 1990–2017

1) 여자배우자



2) 남자배우자



출처: 김두섭, 「한국인의 국제결혼과 외국인 배우자의 적응」, 2015.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하고 베트남 남자와 결혼하는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체류외국인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이 고용허가제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노동하며,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의하면 2017년 11월 현재 49.6만 명에 달한다. 이 중 남자와 여자가 각각

78.2%와 21.8%를 구성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의 5개 업종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적용대상 국가는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등 16개 국가로 제한된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며, 이들은 가족 동반이나 초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는 국제이동자 통계를 살펴보면, 외국인의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 입국자의 65.4%를 차지하였다. 외국인 입국자의 체류자격은 단기(38.6%), 취업(26.7%), 유학(12.8%), 재외동포(11.5%)의 순이었다. 최근에는 특히 유학 및 연수 입국자와 재외동포 입국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앞으로 한국 인구의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다양한 유형의 체류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 세대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저출산의 고착화와 출산간격의 변화

유정균 (한양대학교)
김두섭 (한양대학교)

- 한국 사회의 출산수준은 2000년대 진입 이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초저출산의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다.
- 남녀의 평균 초혼연령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초혼연령의 증가는 유배유율의 감소와 출산연령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 연령별로 25–29세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30–34세와 35–39세의 출산율은 증가추세를 보인다.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의 출산수준이 가장 낮고, 나머지 교육수준별 출산수준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 결혼–첫째 자녀 출산간격은 변화가 크지 않으나, 첫째 자녀–둘째 자녀 출산간격, 둘째 자녀–셋째 자녀 출산간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 이상자녀수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기대자녀수와 현재자녀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상자녀수와 현재자녀수의 격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사회의 출산율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1983년에 대체수준(2.1) 이하로 낮아졌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초저출산의 고착화가 진행 중이며, 당분간 '저출산의 덫'에서 탈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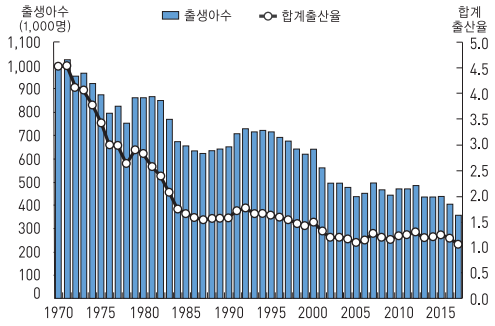
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포함하여 인구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성장과 국가재정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구절벽 상태에 돌입하게 될 시기도 멀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쇠퇴로 심각한 존폐 위험에 처한 지방 도시가 늘어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원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글은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의 고착화 진행 양상과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을 살펴본다. 특히, 결혼과 출산의 지연, 출산간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상자녀수, 기대자녀수, 현재자녀수 등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도 주목한다.

출산수준의 추이와 전망

출생아수의 감소는 출산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림 I–8]을 보면 한국 사회의 출생아수는 1970년대 초까지 100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1980–1990년대에 이르러 60–7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2000년대 진입 이후 40만 명대로 급감했으며, 2017년의 출생아수는 35만 7,771명의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최근의 변화추이를 볼 때 출생아수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I-8]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70-2017



주: 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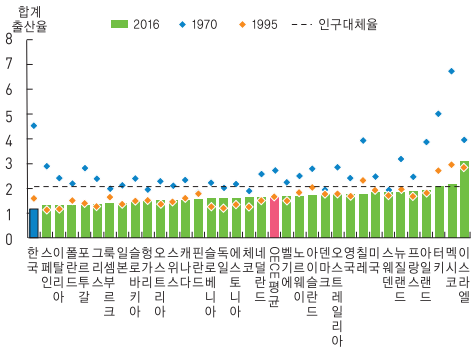
출생아수가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 역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초 4.5에 달했던 합계출산율은 1983년을 기점으로 대체수준(2.1)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후 지속적인 감소를 거듭하였다. 그리고 20여 년간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1.05를 기록하였다.

'저출산의 덫(low fertility trap)'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저출산의 지속은 인구구조의 변화, 출산 관련 인식의 변화,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출생아수가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가임여성의 수가 줄어들고, 다시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상적인 가족 크기의 감소에 따라 출산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아울러 경제적 측면에서 젊은 층의 기대소득과 소비열망과의 격차가 심화되면, 자녀 출산을 꺼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Lutz 외, 2006).

'저출산의 덫' 가설에 따르면, 한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적정 수준 아래로 떨어져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그 이상으로 다시 회복되기 어려워진다. 한국 사회는 1998년 합계출산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약 20년 동안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저출산의 덫'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그림 I-9]는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의 높은 수준이었으나, 1995년 1.6으로 낮아진 이후 2016년 1.2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7보다 현저하게 낮다.

[그림 I-9] OECD 주요 국가의 합계출산율, 1970, 1995, 2016



주: 1) 칠레의 2016년 수치는 2015년 기준임.
2)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임.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2018.

그리고 멕시코, 터키와 칠레를 제외하면 1995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가장 크게 낮아진 국가에 해당된다. 한국보다 더 빠른 감소 추세를 보인 멕시코와 터키의 합계출산율은 약 2.1의 대체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초저출산에 도달하였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한편, OECD 34개 국가 중 절반에 해당되는 17개 국가에서 1995년보다 2016년의 합계출산율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체코(1.3→1.6), 독일(1.2→1.6), 슬로베니아(1.3→1.6) 등이 초저출산 수준을 벗어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I-5〉 성별 평균 초혼연령, 1990-2017

(세)

연도	남자	여자	연도	남자	여자
1990	27.8	24.8	2004	30.5	27.5
1991	27.9	24.8	2005	30.9	27.7
1992	28.0	24.9	2006	31.0	27.8
1993	28.1	25.0	2007	31.1	28.1
1994	28.2	25.1	2008	31.4	28.3
1995	28.4	25.3	2009	31.6	28.7
1996	28.4	25.5	2010	31.8	28.9
1997	28.6	25.7	2011	31.9	29.1
1998	28.8	26.0	2012	32.1	29.4
1999	29.1	26.3	2013	32.2	29.6
2000	29.3	26.5	2014	32.4	29.8
2001	29.6	26.8	2015	32.6	30.0
2002	29.8	27.0	2016	32.8	30.1
2003	30.1	27.3	2017	32.9	30.2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결혼과 출산의 지연

한국은 전체 출산에서 혼외 출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출산의 대부분이 결혼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 시기는 출산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된다. 즉, 초혼연령이 높아지면 첫자녀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가임기간을 단축시키며, 이는 출산수준의 감소로 이어진다.

〈표 I-5〉를 보면,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초혼연령은 1990년 남자 27.8세, 여자 24.8세로 집계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남녀 각각 29.3세와 26.5세, 2010년 31.8세와 28.9세, 그리고 2017년에는 남자 32.9세, 여자 30.2세에 도달하였다.

초혼연령 증가의 원인으로는 교육수준의 향상과 청년층의 취업난,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변화 역시 초혼연령 상승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결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줄어들면서, 결혼을 지연시키거나 기피하는 청년층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감안할 때, 초혼연령의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초혼연령의 증가는 유배우율에 영향을 미치며, 유배우율의 감소는 출산수준의 저하로 이어진다. 특히, 전통적으로 주 된 출산연령층으로 간주되던 25-34세 여자인구의 유배우율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6〉를 보면, 25-29세

〈표 I-6〉 연령별 여자의 유배우율, 1960-2015

(%)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15-19세	2.4	2.8	1.7	0.5	0.8	0.3	0.2
20-24세	49.9	42.3	33.7	19.5	11.1	3.9	2.9
25-29세	91.8	88.4	84.9	77.3	59.6	30.0	22.0
30-34세	92.4	94.6	94.3	92.4	87.2	68.5	60.5
35-39세	89.1	92.0	93.4	92.8	90.9	81.6	76.1
40-44세	83.7	84.8	90.1	90.3	89.1	84.0	79.2
45-49세	76.6	76.8	83.1	86.1	86.3	83.3	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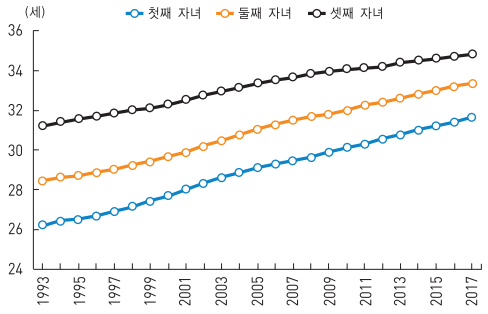
주: 1) 해당 연령집단 여자 인구 중 현재 배우자가 있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2) 1960-2010년은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결과와 20% 표본조사 자료로 산출된 결과임.
3) 인구는 내국인, 만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함(1960년은 만 13세 이상 인구 기준).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여자의 유배우율은 1960년 91.8%에서 2015년 22.0%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또한 30-34세 여자의 경우에도, 2015년 유배우자의 비중은 6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 유배우율은 초혼연령의 상승 이외에도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한 결혼해체의 영향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내 출산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유배우율의 감소가 결국 출산율의 하락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초혼연령의 증가는 출산연령의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림 I-10]은 출산순위별로 어머니의 평균 출산연령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93년 첫째 자녀의 평균 출산연령은 26.2세, 둘째 자녀 28.5세로 30세 이전에 둘째 출산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2017년에는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평균 출산연령이 각각 31.6세와 33.4세로 상승하여 30대 출산에 진입하였다. 결국, 초혼연령의 상승은 유배우율의 감소와 출산연령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출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림 I-10] 출산순위별 어머니의 출산연령, 1993-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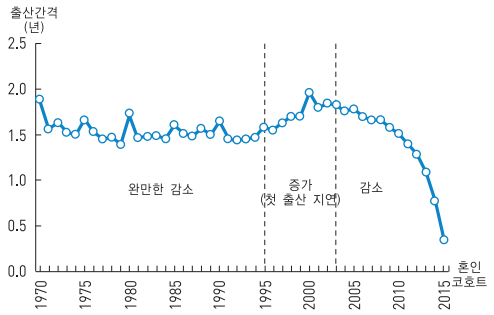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출산간격의 변화

결혼, 출산의 지연과 함께 출산간격은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출산간격이 짧을수록 출산수준은 높아진다.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가 빨라질수록 추가 자녀 출산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림 I-11]은 혼인코호트별로 결혼 후 첫째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첫 출산간격은 1994년 혼인코호트까지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인다. 한편, 1995-2000년대 초반의 혼인코호트에서 첫 출산간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그림 I-11] 혼인코호트별 첫 출산간격



주: 1) 분석대상은 출생아 수 1명 이상인 기혼여성이며, 출산이 결혼보다 이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함.
2) 첫 출산간격은 첫째 출산 시 연령-혼인 시 연령으로 산출함.
출처: 통계청,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출산, 아동보육, 청년층, 경력단절」, 보도자료, 2017. 11. 20.

는데, 이러한 출산 지연이 낮은 출산율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코호트에서 나타나는 출산간격의 감소는 만혼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30세 이후에 결혼하는 여성들이 노산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출산을 앞당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첫 출산간격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높은 주거비용, 경제활동참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7〉을 살펴보면, 출산순위별로 출산간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결혼에서 첫째 자녀 출산의 경우, 1988년 16.4개월, 2006년 16.8개월, 2015년 17.1개월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첫째-둘째 자녀의 출산간격과 둘째-셋째 자녀의 출산간격은 최근으로 올수록 길어지는 추세가 관찰된다. 특히, 둘째-셋째 자녀 출산간격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높다. 여기에는 계획에 의한 늦은 출산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출산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수준에 따른 출산간격의 편차를 살펴보면, 1988년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간격이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2006년에는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의 출산간격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5년 자료에서는 둘째 자녀의 출산간격까지는 교육수준과 출산간격이 정적인 관계를 가지나, 셋째 자녀의 출산에서는

〈표 I-7〉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출산간격, 1988, 2006, 2015

	출산간격(개월)					사례수(명)
	초등 이하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 이상	전체	
1988년						
결혼-첫째 자녀	22.0	18.9	15.8	14.7	16.4	7,212
첫째-둘째 자녀	31.4	30.1	28.6	28.4	29.1	5,821
둘째-셋째 자녀	32.3	33.2	32.2	34.1	33.0	2,966
2006년						
결혼-첫째 자녀	16.2	16.2	16.4	17.6	16.8	6,692
첫째-둘째 자녀	28.8	32.5	34.0	35.6	34.1	5,195
둘째-셋째 자녀	36.2	46.1	50.2	50.9	48.3	869
2015년						
결혼-첫째 자녀	20.8	10.4	15.2	18.6	17.1	9,964
첫째-둘째 자녀	27.2	34.8	35.3	36.5	35.9	7,327
둘째-셋째 자녀	53.1	61.6	53.7	44.9	49.8	1,269

주: 1) 만 15세부터 49세까지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함.
2) 첫 번째 출산간격은 결혼에서 첫 번째 출산까지의 기간(개월)이고, 출산 간의 간격이 180개월(15년)이상인 경우는 전체 평균값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음.
3) 교육수준별로 졸업, 재학, 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2015;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 과정 연구」, 2016.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간격이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기에 따른 출산간격의 변화 양상은 결혼의 지연으로 인한 초혼연령의 상승과 첫 자녀 출산연령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첫째 자녀에서 막내 자녀 출산까지의 소요기간으로 출산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출산수준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혼인코호트로 올수록 출산기간이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1960–1964년 혼인코호트의 출산기간은 8.3년인데 비해 2000–2004년에 혼인한 여성들의 출산기간은 3.9년에 불과하였다. 출산기간이 짧아졌다는 것은 단기간에 출산이 완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출산율의 하락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차별출산력과 지역별 출산수준의 편차

출산수준은 개인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편차를 나타낸다. 이러한 배경요인들에 따른 차별출산력의 분석은 출산력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출산 관련 프로그램의 대상 집단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 개인적 요인 이외에도 거주지역을 들 수 있다.

우선, 여성의 연령에 따른 출산수준의 편차는 주로 혼인연령 및 출산연령의 상승 추세와 관련이 있다. 혼인과 자녀 출산연령이 높아지면, 출산 및 추가 출산에 대한 시간적 압박이나 부담을 높이고, 이는 낮은 출산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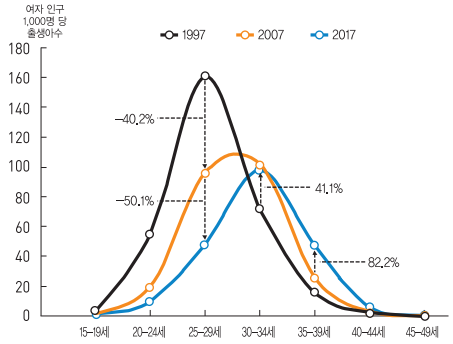
예를 들어, 1993년에는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24세, 그리고 30–34세 여성의 순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25–29세의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그리고 2007년을 기점으로 두 연령집단의 출산율이 역전되어 30–34세 여성이 주요 재생산집단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결혼과 출산의 지연 및 기피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12]는 여성의 연령집단에 따른 출산율의 변화추세를 보여준다. 출산의 주 연령층이 변화를 보인 2007년과 함께 1997년과 2017년의 세 시점을 비교하였다. [그림 I–12]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래프의 형태가 우하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측으로 이동한 것은 산모의 고령화를 의미하며, 아래로 이동함에 따라 그래프의 전체 면적이 줄어든 것은 출산율의 하락을 반영한다.

시기별로 보면, 1997년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160.5명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7년 95.9명으로 10년 동안 40.2%가 줄어들었다. 또한 2007–2017년의 기간 동안에는 95.9명에서 47.9명으로 50.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대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강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30대 여성의 출산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1997년 72.3명에서 2007년

[그림 I-12] 여성의 연령집단별 출산율, 1997, 2007, 2017



주: 1) 연령집단별 출산율: (산모의 해당 연령집단별 출생아수÷해당 연령집단 여자인구)×1,0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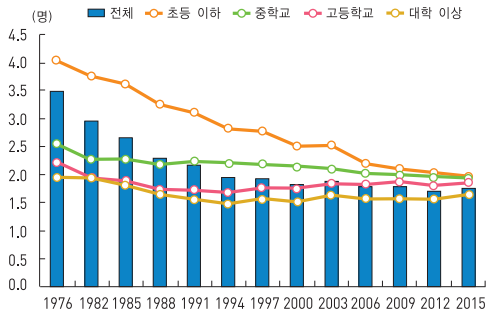
102.0명으로 41.1%가 증가하였으며, 35-39세 여성의 경우, 2007년 25.9명에서 2017년 47.2명으로 82.2%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혼연령의 상승과 첫째 자녀의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이 20대 여성의 출산율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출산수준이 더 낮아지거나 초저출산의 고착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수준은 연령뿐 아니라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편차를 나타낸다. 교육은 출산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 이외에도, 다양한 매개요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출산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달라지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효용성에도 차이가 발견된다.

[그림 I-13]은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출생아수의 편차 및 그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평균 출생아수는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교육수준에 따른 편차를 살펴보면, 교육수준과 출생아수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특히,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의 출생아수가 현저하게 작으며, 높은 초혼연령으로 인한 가임기간의 차이와 경제활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초등학교 이하 학력을 지닌 여성들의 평균 출생아수는 1976년 4.05명으로 중학교 학력 여성의 2.57명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하게 크다.

그런데 교육수준에 따른 출생아수의 편차는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된다. 교육수준의 전반적 향상과 더불어 출산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저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그림 I-13]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출생아 수, 1976-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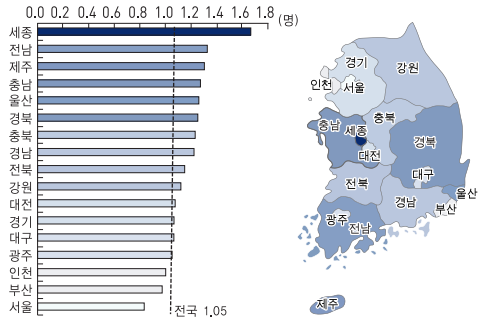
주: 1) 만 15세부터 49세까지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함.
2) 교육수준별로 졸업, 재학, 중퇴를 모두 포함시킴.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2015;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2016.

어, 2015년 자료에 의하면,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을 제외하고는,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편차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산수준은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현격한 차이가 발견된다. [그림 I-14]에서 보는 것처럼, 2017년 세종의 합계출산율이 1.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남 1.33, 제주 1.31, 충남 1.28의 순서이다. 반면, 서울, 부산,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0.84, 0.98, 1.01로 전국 평균인 1.0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을 시군구별로 보면, 2017년 현재 전남 해남군이 2.10로 유일하게 대체수준(2.1)에 근접해 있다. 이어서 강원 인제군과 부산 강서구 1.83, 전북 순창군 1.80의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 이 외에도 상위 10순위에 포함된 지역들은 대부분 농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하위 10순위에는 대부분 특별시/광역시의 구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 종로구가 0.65로 가장 낮고, 이어서 서울 관악구 0.66, 부산 중구 0.69, 서울 강남구가 0.71로 집계되었다.

[그림 I-14] 시도지역별 합계출산율,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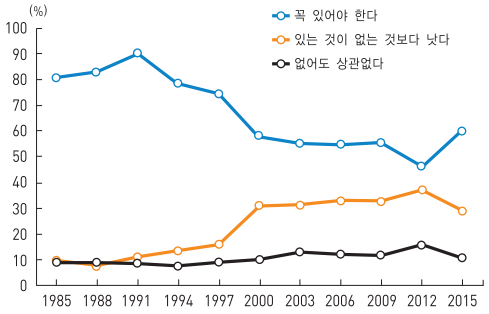


주: 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임.
출처: 통계청, 「2017년 출생통계(확정)」, 보도자료, 2018. 8.22.

자녀 가치관과 자녀수의 변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출산을 계획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 혹은 부부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이상자녀수나 기대자녀수 그리고 실제 출생아수가 달라진다. [그림 I-15]에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기혼여성의 태도를 보면,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1985년 80.9%에서 2015년 60.2%로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9.7%에서

[그림 I-15]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1985-2015



주: 1) 만 15세부터 49세까지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2015;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2016.

29.0%로 증가하였다. 아직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이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지만,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응답도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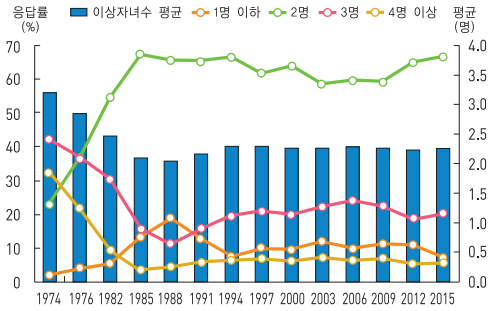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 변화는 이상자녀수에서도 발견된다. [그림 I-16]에서 보는 것처럼, 이상자녀수는 1974년 3.19명에서 2015년 2.25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상자녀수별로 점유율을 보면, 2015년 현재 2명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명 20.2%, 1명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에서 1명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7.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초저출산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이 2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출산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대자녀수는 자녀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에 가까운 개념으로 기혼여성의 실제 출생아수와 계획 자녀수를 합하여 측정하였다. 기대자녀수가 반드시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원하는 자녀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출산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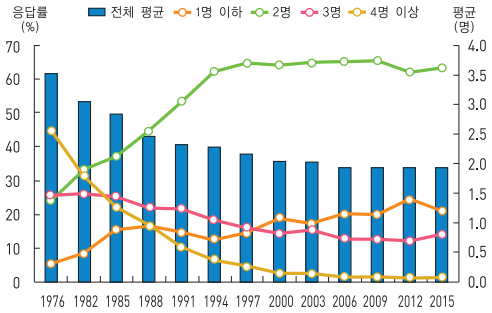
[그림 I-17]에서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 변화추이를 보면, 1976년 4명 이상이 44.8%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후 모든 연도에서 2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기대자녀수 2명의 점유율이 6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명 19.2%, 3명 14.2%의 순서로 나타

[그림 I-16]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 1974-2015



주: 1) 만 15세부터 49세까지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함.
2) 1982년은 만 15-44세의 기혼여성 수치임.
3) 1명 이하에는 0명과 1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2015;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2016.

[그림 I-17]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 1976-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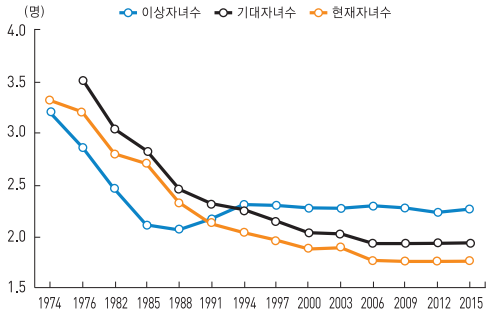


주: 1) 만 15세부터 49세까지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함.
2) 1982년은 만 15-44세의 기혼여성 수치임.
3) 1명 이하에는 0명과 1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2015;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2016.

났다. 그리고 평균 기대자녀수는 1.94명으로 집계되었다.

기대자녀수는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6년에는 초등학교 출신 여성 3.92명, 중학교 출신 2.90명, 고등학교 출신 2.57명, 그리고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 2.38명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대자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수준에 따른 기대자녀수의 편차는 줄어들고 있다. 가령 2015년 기준으로 교육수준별로 보면, 각각 2.10명, 2.08명, 2.01명, 1.89명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닌 여성들의 기대자녀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18] 기혼여성의 평균 이상자녀수, 기대자녀수, 현재자녀수, 1974-2015



주: 1) 만 15세부터 49세까지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함.
2) 1982년은 만 15-44세의 기혼여성 수치임.
3) 1974년 조사는 추가 희망자녀수에 대한 문항이 없어 기대자녀수를 산출하지 않음.
4) 불임수술 등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희망자녀수는 '0'으로 계산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2015;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과정 연구」, 2016.

[그림 I-18]에서 이상자녀수, 기대자녀수와 현재자녀수를 비교해 보면, 1988년까지는 현재자녀수가 이상자녀수보다 더 많았다. 즉,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수보다도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이상자녀수는 현재자녀수와 기대자녀수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현재자녀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며, 2006년 이후 이상자녀수와 약 0.5명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I-18]에서 기대자녀수와 현재자녀수는 매우 유사한 변화양상을 나타낸다.

맺음말

한 사회의 출산수준은 인구구조와 인구규모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이어진다. 한국 사회는 초저출산의 고착화와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앞으로 10여년 후에는 인구의 감소단계로 진입하고, 사회경제적 성장 동력이 전반적으로 저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출산수준의 변화와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출생아수와 가임기 여성의 감소는 출산력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아울러 만혼으로 인한 유배우율 감소와 출산의 지연, 그리고 출산간격의 증가는 초저출산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앞으로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지

고,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경기 침체가 해소되지 않는 한 초저출산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녀의 필요성이나 이상자녀수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살펴보면, 초저출산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이러한 가치관과 의식, 태도 등을 출산행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맞춤형 출산장려정책과 행동프로그램을 입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Lutz, W., Skirbekk, V. & Testa, M. R. (2006) "The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 Forces that may lead to further postponement and fewer births in Europe."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06*(4), 167–192.

노년기의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년기의 주된 거주형태가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로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노인과 자녀 세대에서 모두 자녀동거 규범도 약화되었다.
- 노인 부양규범에 대해서는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 의무는 인식하고 있지만 가족만으로는 부양을 책임질 수 없으므로 공적인 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
- 노인의 취미·여가활동과 종교활동에 대한 선호는 강하지만, 적극적인 참여활동(자원봉사활동과 정치사회활동)에 대한 선호가 매우 낮으며, 연령군별 차이가 매우 크다.
- 노인들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남아 있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두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인이 연명치료에 대하여 반대한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년기의 확대에 따라 노인의 부양에 대한 태도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노년기의 부양관련 가치관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동거 부양에서 별거 부양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노년기의 거주형태를 먼저 살펴본 다음 노인이 선호하는 거주형태 및 부양에 대한 태도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부양을 제공하는 입장에 있는 비노인층의 태도도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대한 노인의 선호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피할 수 없는 생애사건인 상속 및 장례, 연명치료 등 죽음과 관련된 노인의 태도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죽음은 노년기 삶과 부양관계의 정리 방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년기의 부양 관련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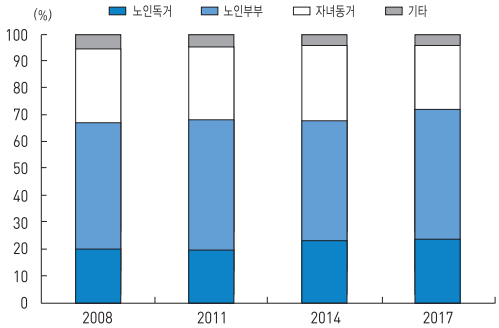
다양한 사회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부양의 대상이 되는 노부모뿐만 아니라 부양 제공자인 성인자녀의 가치관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가치관을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자녀로 대표되는 가족의 부양기능은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작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작동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년기 거주형태의 변화

노년기의 부양과 관련된 태도는 노인들의 거주형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노인단

독가구로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거주하고 있는 독거가구가 23.6%, 노인부부가 48.4%, 자녀동거가 23.7%, 기타가구는 4.4%이다.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약 24%인데 이는 2011년 이후 약 4%p 늘어난 수준이다.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는 각 조사별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40%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자녀동거율은 2008년 27.6%, 2011년 27.3%, 2014년 28.4%로 2008년 이후 27–28%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2017년에는 23.7%로 약 5%p 감소하여 최근 들어와 자녀동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19).

[그림 I-19] 노년기 가구형태, 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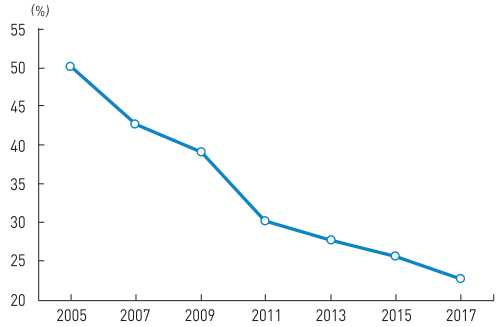
주: 1) 만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I–20]의 노인이 희망하는 거주형태를 살펴보아도 노년기의 자녀동거라는 규범은 약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2005년에는 50.2%가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고 응답했지만 2017년에는 그 비율이 22.6%로 급감하였다. 반면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비율은 2005년 49.8%에서 2017년 77.4%로 급증하여,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향후에도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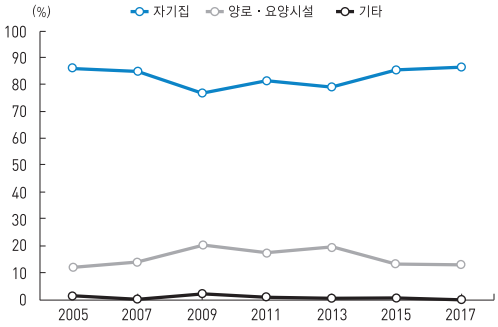
한편, 거주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은 노인이 계속 자기집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2005년 이후에 계속 80%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양로·요양시설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도 15% 내외에

[그림 I-20] 노인의 자녀와 동거 의향 및 희망 거주지, 2005–2017

1)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



2) 향후 자녀와 동거하고 싶지 않을 경우 희망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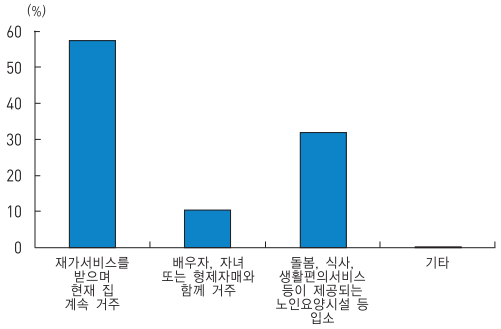


주: 1) 만 65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자녀와의 동거 의향은 조사대상자 중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3) 향후 희망 거주지는 '자녀와 같이 살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 중 희망하는 거주지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서 유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년기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돌봄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점에서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희망하는 거주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현재 노인의 57.6%가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며,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은 31.9%이다. 불편해진 노년기의 삶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편의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시설거주보다는 지역사회거주를 선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인들의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선호가 약화되어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로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오래 거주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림 I-21).

[그림 I-21] 노인의 거동 불편 시 희망거주 형태,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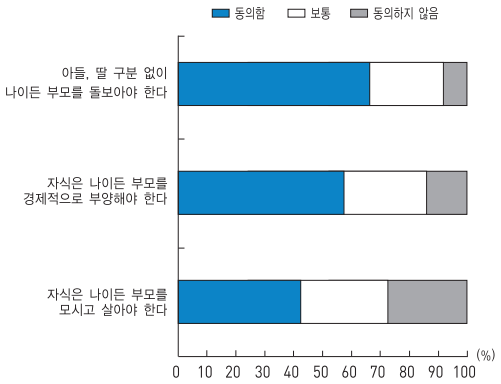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희망거주 형태는 "귀하께서는 만약 거동이 불편해지신다면 어디에서 거주할 생각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17.

노부모 부양관련 가치관

노년기의 거주형태와 선호에 나타난 변화는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가치관에도 이어지고 있다. 12세 이상의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부모 부양과 관련된 가치관을 살펴보면 동거부양에 동의하는 응답은 40%대로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약 60% 정도가 아들, 딸 구분 없이 나이 든 부모를 돌보아야 하며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절반 이상이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지만 그러한 책임은 자녀의 성과 무관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그림 I-22).

[그림 I-22]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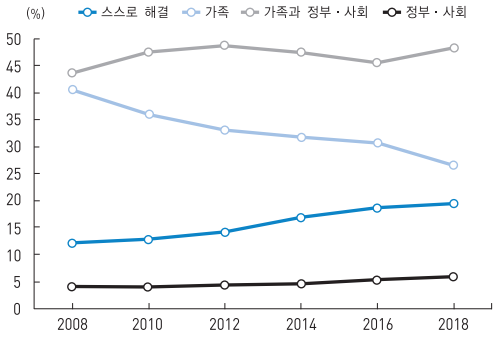


주: 1) 만 12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은 각 항목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을 합하여 '동의함'으로, '보통이다'를 '보통'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을 합하여 '동의하지 않음'으로 재정의 하였음.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한편, 13세 이상의 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부모 스스로'라는 응답은 2018년에 19.4%인데 이는 2008년

의 11.9%에 비하여 7.5%p 상승한 수준이다. 반면 부모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규범에 따른 응답은 2008년 40.7%에서 2018년 26.7%로 약 14%p 낮아졌다. 또한 '가족과 더불어 정부·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여전히 45%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가족이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만으로는 부양을 책임질 수 없으니 공적인 제도 정립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그림 I-23).

[그림 I-23] 부모 노후 돌봄주체에 대한 인식, 2008-2018



주: 1) 전국 만 13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2008, 2010년은 만 15세 이상 가구주임).
2) "부모님의 노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공적이고 제도적인 노인 부양 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노인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질문 방식이 달라져서 직접적인 시계열 비교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변화의 경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표 I-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지난 10년간 노후생활비 마련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스스로'라는 응답은 2008년의 53.0%에서 34.0%로 낮아진 반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사회보장제도라는 응답이 높아져, 2017년 현재 약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I-8〉 노인의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2008-2017

(%)

	2008	2011	2014	2017
본인 스스로	53.0	55.0	31.9	34.0
자녀	11.8	14.2	7.9	7.6
본인과 자녀	-	-	6.9	10.2
사회보장제도	34.9	30.6	18.6	14.2
본인과 사회보장제도	-	-	34.3	33.7
기타	0.4	0.3	0.5	0.4

주: 1) 전국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귀하는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이며, 2008년과 2011년에는 '본인과 자녀', '본인과 사회보장제도'가 응답 보기로 제시되지 않았음.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노인부양 분담 실태

노년기의 주요 지출항목인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의 지불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통하여 노인과 가구원간의 부양교환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노인이면 누구나 지출하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노인의 대부분이 다수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는 의료비, 그리고 기능저하에 따른 간병발생과 관련하여 지불방식을 살펴보았다.

생활비의 경우 43.6%는 대부분 본인(배우자)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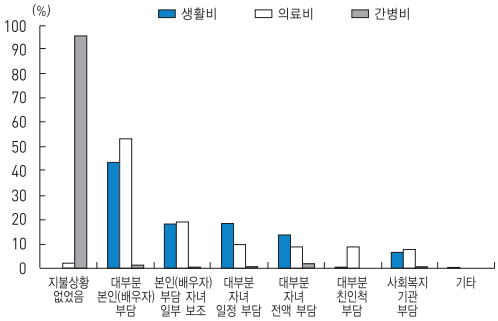
이 대부분 부담하되 자녀가 일부 보조한다는 응답은 18.0%이다. 다음으로 자녀가 일정 부담 18.4%, 자녀가 전액 부담 13.6%로 자녀가 부담하는 비율이 약 32%에 달한다. 대다수 노인들은 생활비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충당하고 있다. 즉 가치관을 통하여 확인된 성인 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약화된 기대가 현실에서도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의료비의 경우도 동일하다. 의료비에 있어서는 전체의 98.1%가 지불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출경험이 있는 노인 중 53.1%는 본인(배우자)이 대부분의 의료비를 지불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8.9%는 본인(배우자)이 대부분 부담하되 자녀가 일부 보조하고 있다. 반면 생활비와 의료비에서 사회복지기관이 부담하는 비율은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어서 공적 부양 시스템의 작동이 미약한 현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간병비는 전체의 4.4%만이 지불경험이 있고, 그 중에서 자녀가 전액 부담이 1.7%, 자녀가 일정 부분 부담이 0.5%로 나타나 자녀의 간병비 부담 비율이 2.2%에 달한다. 반면 본인(배우자) 부담 1.2%, 본인(배우자)이 부담하고 자녀가 일부 보조는 0.4%이다.

생활비와 의료비는 대부분 본인(배우자)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간병비의 경우에는 자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비중이 높다. 즉 일상적인 지출에 있어서는 노인 자신 또는 노인 부부가 지출의 주체이고 자녀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간병비 지출의 경우 발생빈도는 낮지만 노인보다는 자녀의 역할이 높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그림 I-24] 주요 지출항목별 노인부양 비용 분담, 2017



주: 1) 전국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지난 1년간 귀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17.

선호하는 노후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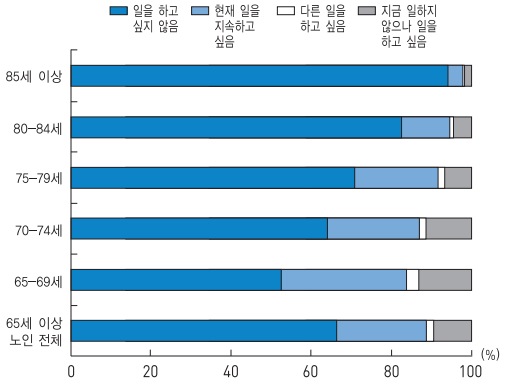
노인의 건강상태와 교육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노인층 내부에서의 다양성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은퇴나 노화의 진전에 따른 부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오랜 기간 동안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것에도 사회적인 관심이 두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들이 희망하는 노후생활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노인의 33.6%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의 22.5%는 현재의 일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며, 지금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1.8%였다. 현재는 일하지 않지만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도 9.4%를 차지한다. 노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를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높다. 즉 65-69세의 노인층은 31.5%가 현재 일을 지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13.2%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을 하고 싶고,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52.5%이다.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70-74세 64.0%, 75-79세 70.8%, 80-84세 82.5%로 증가하다가 85세 이상의 경우는 94.2%가 일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25).

[그림 I-25] 노인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 선호도,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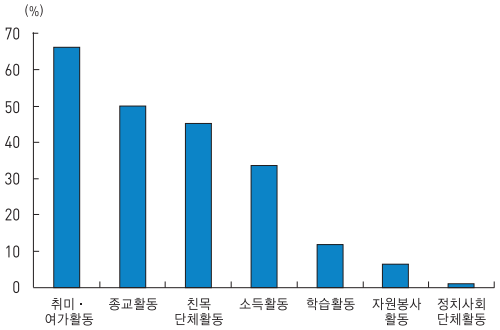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귀하께서는 앞으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17.

한편,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참여희망 실태를 살펴보았다. 사회참여 활동으로는 자원봉사활동, 학습활동, 취미·여가활동, 종교활동, 정치사회단체활동, 친목단체활동을 들 수 있다. 여러 활동 중에서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희망률이 가장 높아 66.4%이며, 다음이 종교활동으로 50.2%, 소득활동이 33.6%이다. 반면 자원봉사활동과 정치사회단체활동에 대한 선호는 각각 6.5%, 1.0%로 미미한 수준이다. 학습활동을 희망한다는 의견 역시 11.8%로 10% 수준에 불과하다. 즉 개인적인 활동인 취미·여가활동과 종교활동에 대한 선호는 강하지만, 적극적인 참여활동으로 판단되는 자원봉사활동과 정치사회활동에 대한 선호가 매우 낮다(그림 I-26).

이러한 노인의 다양한 활동 참여 희망은 연령층별 차이가 크다. 전반적으로 모든 활동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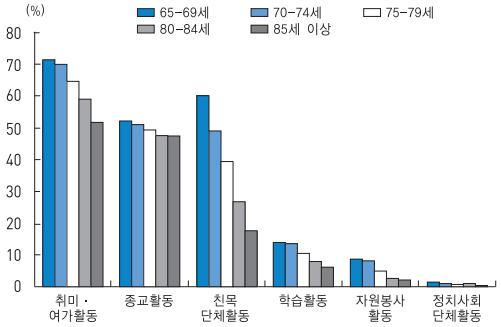
[그림 I-26]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희망률, 2017



주: 1) 전국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활동 희망률은 각 항목에 대하여 '반드시 하고 싶음' 또는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17.

서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하고 싶은 희망률이 낮은 경향이 나타나 신체적인 노화가 소극적인 사회참여 욕구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각 활동을 기준으로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자원봉사활동, 학습활동, 취미·여가활동, 친목단체활동은 70대 후반에서 급격히 낮은 편이다. 신체의 움직임을 요구하는 활동이므로 노인의 신체적 노화에 따라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종교활동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 희망률이 낮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연령별 차이가 적다(그림 I-27).

[그림 I-27] 노인의 연령별 활동 참여 희망률, 2017



주: 1) 전국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활동 희망률은 각 항목에 대하여 '반드시 하고 싶음' 또는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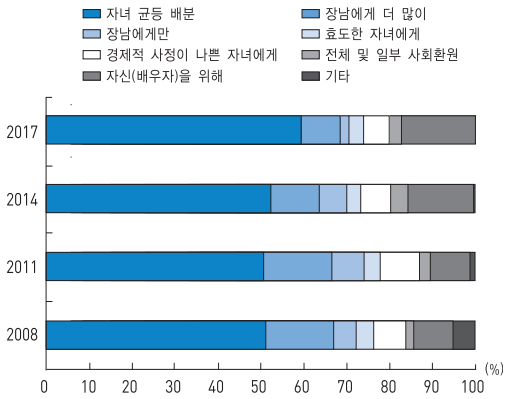
상속, 장례,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해야 하는 것은 노년기의 피할 수 없는 과업이다. 이러한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구현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죽음에 대한 준비의 하나가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이다. [그림 I-28]의 선호하는 상속방법을 보면, 2017년 현재 노인의 59.5%가 자녀 균등 배분을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이 자신(배우자)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17.3%이다. 그 밖에 장남에게 더 많이 물려주겠다 9.0%, 경제적 사정이 나쁜 자녀 6.1%, 효도한 자녀 3.5% 등이며, 전통적인 장남 단독 상속은 2.0%에 불과하다.

자녀 균등 분배의 경우 2008년의 51.1%에서 8.4%p 높아진 것으로 이젠 가장 보편적인 경제적 자원 정리방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볼 수 있다. 장남에게만 주거나 장남에게 더 많이 준다는 응답은 2008년 21.3%에서 2017년 11.0%

[그림 I-28] 노인의 상속방법에 대한 태도, 2008-2017



주: 1) 전국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상속방법은 "귀하께서 재산 처리 방식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로 10.3%p나 감소하였다. 더불어 자신(또는 배우자)을 위해 다 쓰겠다는 응답도 2008년 9.2%에 불과하였으나 10년 사이에 급등하여 2017년 현재 17.3%에 달하고 있다. 반면 사회 환원이라는 응답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표 I-9〉에서 희망하는 장례방법을 살펴보면, 화장 후 산골이 30.3%, 화장 후 납골당이 26.4%이며, 화장 후 자연장이 14.8%로 화장을 희망하는 노인이 전체의 70% 수준이다. 반면 매장을 희망하는 노인은 17.5%를 차지한다. 8.9%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으며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응답은 2.0%이다. 과거 10년과 비교해보면 화장이 보편화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2008년 45.6%에서 2011년 60.2%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70%를 넘었다. 반면 매장은 2008년 32.3%에서 2017년 17.5%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장례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노인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2008년에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22.1%였지만 2017년에는 8.9%에 불과하다. 이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남아 있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노인의 대다수인 91.8%가 연명치료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의 88.9%에 비해서도 높아진 것으로 연명치료 반대가 노인에게서는 보편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I-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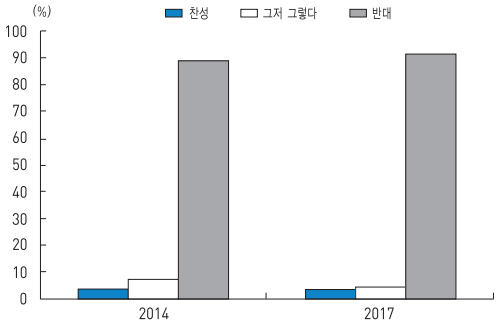
〈표 I-9〉 노인의 희망 장례방법, 2008-2017

(%)

	화장				매장	시신 기증	기타	생각해 보지 않음
	전체	납골당	자연장	산골				
2008	45.6	-	-	-	32.3	-	-	22.1
2011	60.2	-	-	-	25.6	1.0	-	13.1
2014	63.7	19.7	9.6	34.4	22.9	2.2	0.0	11.3
2017	71.5	26.4	14.8	30.3	17.5	2.0	0.1	8.9

주: 1) 전국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장례방법은 "귀하께서는 본인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임.
3) 자연장은 화장 후 유골을 나무나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장례법이며, 산골은 화장 후 강 또는 산 중 허용된 산골 장소에 뿌리는 방법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I-29] 노인의 연명치료 대한 태도, 2014, 2017



주: 1) 전국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는 "귀하께서는 의식불명이거나 살기 어려운데도 살리려고 의료 행위(연명치료)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찬성한다'와 '찬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을 합하여 '찬성'으로 '매우 반대한다'와 '반대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을 합하여 '반대'로 재정의 하였음.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2014, 2017.

맺음말

노인부양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되었다. 첫째, 노년기의 거주형태가 노인단독가구 또는 노인부부

가구로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노인과 자녀 세대 모두에서 자녀동거라는 규범도 약화되었다. 가족의 노부모 부양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담이 커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책임을 나누어 갖고 싶어 한다. 이는 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노인이 희망하는 노후생활과 관련해서는 취미·여가활동과 종교활동에 대한 선호는 강하지만, 적극적인 참여활동(자원봉사활동과 정치사회활동)에 대한 선호가 매우 낮으며, 종교활동을 제외하고 연령군별 차이가 매우 크다. 이는 우리사회의 압축적인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노인층 내부의 다양성이 커졌고, 이러한 다양성에 대응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노인에게서 자신의 죽음까지도 남아 있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두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인이 연명치료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죽음까지도 염두에 둔 노후준비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2018 Family & Household

Korean Social Trends 2018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Ⅱ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한경혜 | 서울대학교 58

유배우 취업자의 시간부족 인식과 삶의 질 69

차승은 | 수원대학교, 한경혜 | 서울대학교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손승영 | 동덕여자대학교 79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한경혜 (서울대학교)

-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이 줄어들고 1인가구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평균 가구원수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1인가구의 비율은 노인층이 월등히 높지만, 그 증가세는 청년층에서 가장 가파르다. 청년층은 남성이, 노년층은 여성이 1인가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망의 크기로 살펴 볼 때 청년층 1인가구는 도구적, 경제적, 정서적 지원 모든 영역에서 비교적 양호한 반면, 노인층은 가용한 돌봄 지원망이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층의 미혼율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년층에서도 미혼율 증가현상이 관찰된다.
- 초혼과 재혼, 재혼과 재혼의 조합 증가 및 여자연상 부부의 증가 등 결혼행동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 여성이 세대주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생계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197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2006년과 2016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10년 동안 노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경제적 지원제공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국 가족의 급격하고 광범위한 변화는 개개인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 내용 및 영향의 크기는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결혼, 출산 등 가족전이가 주로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시기인 청년기(20–39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크고 직접적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년층의 선택과 행동이 미혼율, 결혼연령 증가와 같은 가족관련 거시지표상의 변화를 주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에서는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구조, 가족형성 및 가족기능의 세 영역에 있어서의 주요 변화 추이와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청년층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중년층, 노년층과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연령집단 비교와 함께 청년층 내에 존재하는 이질성에도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족구조 영역에서는 지속적이고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로 지적되는 가구규모의 축소와 1인가구의 증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가족형성 영역에서는 연령별 미혼율 분석을 통하여 결혼지연 추세를 살펴보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결혼행동 변화의 한 측면인 결혼형태(연상연하 결혼, 초혼+재혼의 조합)의 다양성 증가 추세에 대해 살펴본다. 가족기능 영역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가족구성원들의 삶의 질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세대간 지원교환 양상과 1인가구의 돌봄 지원망이 충분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족구조의 변화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가족구조의 변화로는 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가구의 소규모화와 1인 가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가구규모의 축소와 1인가구의 증가

가구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990년 3.8명에서 2015년 2.5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통계청은 2017년 「장래가구추계」에서 2045년에는 평균 가구원 수가 2.1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가구규모의 축소는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이 줄어들고 1세대가구나 1인가구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과 관련된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3세대 이상 가구는 1990년 12.5%에서 2015년 5.4%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1인가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45년에는 전체 가구 중 36.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Ⅱ-1). 1인가구의 증가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청년층과 노년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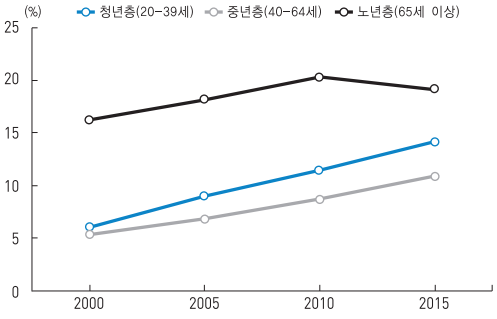
1인가구 증가추세를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1인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Ⅱ-1). 그러나 증가세는 청년층에서 가장 크다. 2000년과 2015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15년 동안 청년층에선 8.0%p, 중년층에선 5.4%p, 노년층에선 2.9%p만큼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증가폭은 청년층이 가장 크지만, 2015년 현재 비율은 노년층의 약 19%가 1인

〈표 Ⅱ-1〉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와 세대구성, 1990-2045

연도	평균 가구원수 (명)	세대별 구성비율(%)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비혈연 가구
1990	3.8	9.0	10.7	66.3	12.5	1.5
1995	3.4	12.7	12.7	63.3	10.0	1.4
2000	3.1	15.5	14.2	60.8	8.4	1.1
2005	2.9	20.0	16.2	55.4	7.0	1.4
2010	2.7	23.9	17.5	51.3	6.2	1.2
2015	2.5	27.2	17.4	48.8	5.4	1.1
2017	2.5	28.5	17.9	47.4	5.1	1.2
2025	2.3	31.9	20.2	42.5	4.1	1.3
2035	2.2	34.6	22.6	38.3	3.4	1.2
2045	2.1	36.3	23.1	36.4	2.9	1.3

주: 1) 1세대 가구는 부부, 부부+기타 친인척 등 동일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2) 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 등 2개의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3) 3세대 이상 가구는 부부+미혼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4) 「인구주택총조사」의 1990-2010년 자료는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 결과임.
5) 2017년 이후 자료는 장래가구추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2015; 「장래가구추계」, 2017.

[그림 Ⅱ-1] 청년층, 중년층 및 노년층 1인가구 비율,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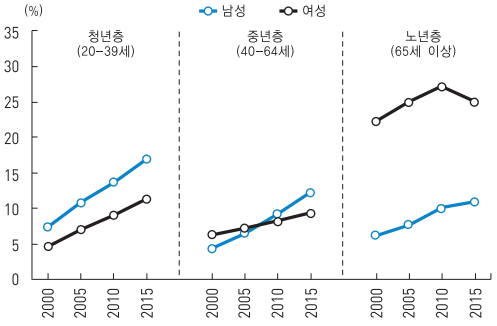


주: 1) 연령집단별 1인가구 비율=(해당 연령집단 1인가구 수÷해당 연령집단 일반가구원 수)×100. 일반가구 기준.
2) 「인구주택총조사」의 2000-2010년 자료는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가구에 속하여 그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젊은 연령층에서는 미혼율의 증가와 함께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거하여 1인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며, 노년층에서는 수명연장과 가족규범의 약화에 따른 노인독거 가구의 증가 때문이다.

1인가구의 증가가 젠더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1인가구 비율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아래 [그림Ⅱ-2]와 같다. 청년층은 남성이, 노년층은 여성이 1인가구 증가를 주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층의 경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일관되게 1인가구의 비율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2015년에는 청년 남성의 16.8%, 청년 여성의 11.4%가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경우 여성 노인의 1인가구 비율이 일관되게 남성 노인보다 높다. 수명의 성별 격차가 반영된 것으로 2015년 현재 여성 노인의 25.1%, 남성 노인의 10.9%가 1인가구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압도적으로 비율이 더 높다. 중년층의 경우 남성의 1인가구 비율이 여성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중년 남성의 4.5%가 1인가구로 중년 여성의 1인가구 비율 6.4%에 비해 낮았는데, 2015년에는 중년 남성의 12.3%가 1인가구로 중년 여성 9.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이혼의 증가와 이혼 후 자녀를 여성이 양육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 중년 남녀 간 1인가구 비율의 역전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노인의 1인가구 증가는 수명의 젠더 차이와 연결되어 비자발적 성격이 크고 특정 젠더와 강하게 연결된 반면, 청년층 1인가구 증가는 선택의 결과이자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청년층의 '선택'이 얼마나 자발적인가 하는 점이다. 개인주의적 삶이나 사회적 성취를 중시하는 가치관의 연장선상에서 라이프스타일로 1인가구를 선택한 청년이 있기도 하지만,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결혼을 유예하거나 포기한 1인가구, 아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자들이 형성한 1인가구, 학업 때문에 형성된 일시적, 과도기적 1인가구 등도 혼재되어 있다. 청년층 1인가구 내의 이러한 이질성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림Ⅱ-2] 청년층, 중년층 및 노년층의 성별 1인가구 비율,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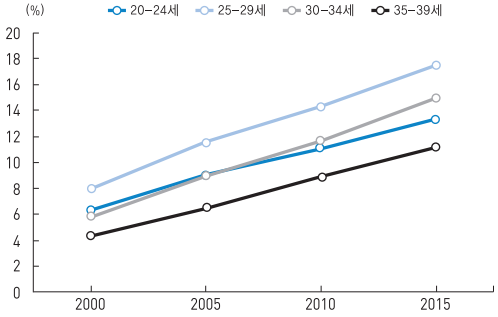
주: 1) 성 및 연령집단별 1인가구 비율=(해당 성 및 연령집단 1인가구÷해당 성 및 연령집단 일반가구원 수)×100. 일반가구 기준.
2) 「인구주택총조사」의 2000-2010년 자료는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청년 1인가구

다음은 청년층의 1인가구 증가 양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청년층(20-39세)을 4개의 연령대로 세분화하여, 각 연령대에

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연도별 변화 추세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그림 Ⅱ-3). 4개 집단 모두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집단 간 차이도 관찰된다.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대는 25-29세였고 증가세도 9.5%p로 30-34세 연령대와 더불어 가장 컸다. 25-29세 연령대의 경우 2015년에 1인가구의 비중이 17.5%에 달해, 약 6명에 1명꼴로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의 미혼율의 증가와 연동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이 연령대의 1인가구의 비율 증가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2000-2015년 사이에 6.8%p 증가한 35-39세의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30대 후반에는 점차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서 2인 가구를 형성하게 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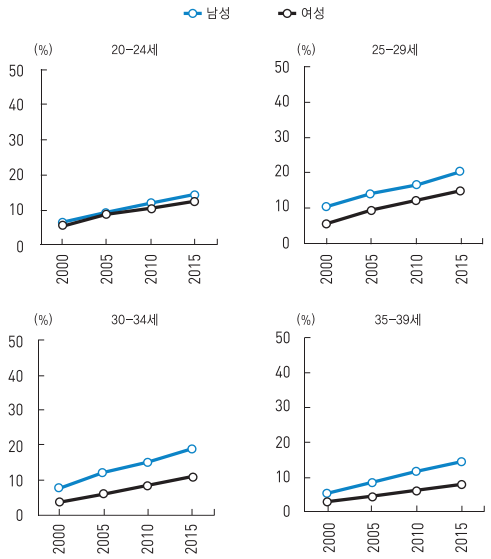
[그림 Ⅱ-3] 청년층 연령집단별 1인가구 비율, 2000-2015



주: 1) 연령집단별 1인가구 비율=(해당 연령집단 1인가구÷해당 연령집단 일반가구원 수)×100. 일반가구 기준.
2) 「인구주택총조사」의 2000-2010년 자료는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청년층 1인가구의 비율을 연령대와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Ⅱ-4]와 같다. 과거에 비하여 미혼여성의 1인가구 형성에 대해 허용적이 되고 독립주거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성이 증가한 것이 여성의 1인가구 증가현상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4세 연령대에선 남성과 여성의 1인가구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고, 그 외 연령대에선 남성의 1인가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15년으로 오면서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기울기를 성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남성의 1인가구 비율이 좀 더 가파

[그림Ⅱ-4] 청년층 성 및 연령집단별 1인가구 비율, 2000-2015



주: 1) 성 및 연령집단별 1인가구 비율=(해당 성 및 연령집단 1인가구÷해당 성 및 연령집단 일반가구원 수)×100. 일반가구 기준.
2) 「인구주택총조사」의 2000-2010년 자료는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르게 증가하였다. 1인가구가 증가하는 기울기의 젠더 간 차이는 35-39세 연령대에서 두드러졌다. 30대 후반에서 여성의 미혼율이 남성보다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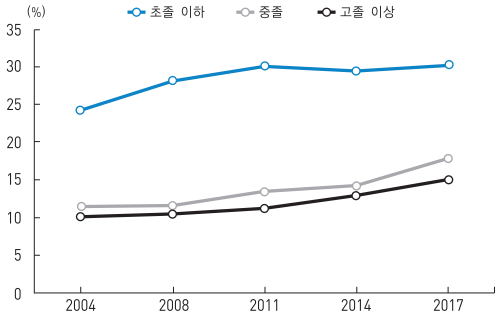
노인 1인가구

65세 이상 노인층의 1인가구 증가양상은 청년층과 매우 다르다. 청년층 1인가구의 증가는 선택의 결과라는 측면이 강하다면 노인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 규범의 약화로 인하여 3세대 가구 비율이 감소하면서 비자발적으로 형성된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1세대가구를 구성하고 살던 노인층이 배우자 사별 후에도 혼자 거주하기 때문에 노인독거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노인 1인가구 중 여성 가구주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남성보다 수명이 긴 여성 노인의 독거와 관련이 있다. 노인 1인가구는 삶의 질의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집단으로 사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그런가하면 건강하고 소득이 높은 신노년층의 독립주거 선택이 노인 1인가구의 증가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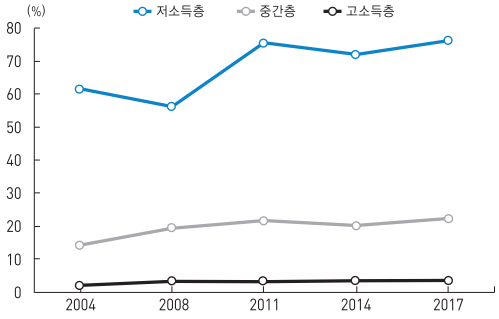
그렇다면 최근 노인 1인가구의 증가 현상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동하였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과 교육으로 나누어 노인 1인가구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Ⅱ-5-1]에서는 교육수준별로 노인의 1인가구 비율을 살펴보았다. 2017년의 경우 초졸 이하 집단의 30.2%, 중졸 집단의 17.9%, 고졸 이상 집단의 15.0%가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1인가구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노인집단 내의 교육수준 비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교육수준별 1인가구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약간 다른 경향이 보인다.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10년 동안 중졸, 고졸 이상 집단에서 1인가구 증가세가 초졸 이하 집단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원이 있는 노인일수록 자발적으로 독립주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과 그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소득집단별 비교를 한 [그림Ⅱ-5-2]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상이한 추세를 보인다. 2017년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노인의 76.1%, 중간층의 22.3%, 고소득층의 3.5%가 1인가구이다. 그리고 모든 소득수준 집단에서 1인가구 비율이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에서 1인가구 비율의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게 나타났다. 독립 주거에 필요한 자원을 가지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 1인가구는 삶의 질이 열악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 혼자 생활하는 경우 생기는 어려움으로는 아플 때의 간병 문제(34.6%)와 심리적 불안감·외로움(21.4%)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소득층에 비하여 증가세가 완만하긴 하지만 중간층과 고소득층에서도 1인가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노인 1인가구 집단 내부의 이질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Ⅱ-5] 노인의 교육 및 소득 수준별 1인가구 비율, 2004-2017

1) 교육수준별



2) 소득수준별



주: 1) 소득수준은 각 연도의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저소득층, 중위소득의 50-150%를 중간층, 중위소득의 150%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분류.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족형성

가족형성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추세는 미혼율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만혼화 현상이다. 한편, 결혼에 있어 규범적으로 여겨지던 결혼형태인 초혼남성과 초혼여성의 결합 비율이 감소하고 다양한 조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연상 남성과 연하 여성과의 결혼 비율이 감소하고 동갑이나 여성이 연상인 연상연하 커플의 증가도 눈에 띄는 최근 추세이다. 가족형성과 관련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것도 청년층일 가능성이 크다.

미혼율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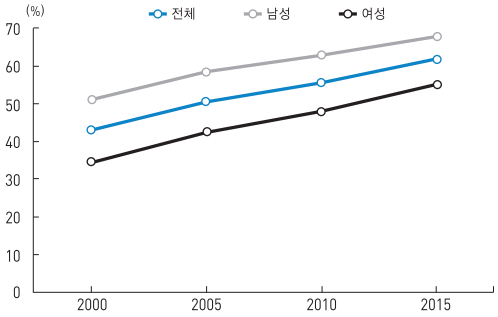
[그림Ⅱ-6]은 미혼율의 변화 추이를 연령대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청년층의 미혼율은 2000년 43.1%에서 2015년 61.9%까지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청년층뿐 만 아니라 중년층에서도 미혼율 증가현상이 관찰되는데 2000년 2.0%에서 2015년 8.3%까지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2015년에는 청년층의 10명 중 6명꼴로, 중년층의 10명 중 1명꼴로 미혼이다. 중년층의 미혼율 증가는 현재 중년층이 과거 젊은 시절에 선택했던 가족형성 관련 결정 및 행동이 현재 지표상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미혼율 변화 추세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청년층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미혼율이 높지만 그 증가패턴에 있어 남성과 여성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중년층의 경우 청년층과 유사하게 중년 남성의 미혼율이 중년 여성의 미혼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00년에서 2015년으로 오면서 중년 남성과 중년 여성의 미혼율은 모두 증가했지만, 남성 미혼율의 증가세가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젠더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에 대한 압박이 적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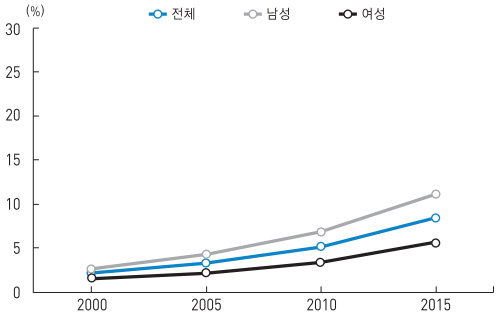
혹은 결혼시장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남성이 비자발적 미혼으로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림 Ⅱ-6] 청년층과 중년층의 성별 미혼율, 2000-2015

1) 청년층(20-39세)



2) 중년층(40-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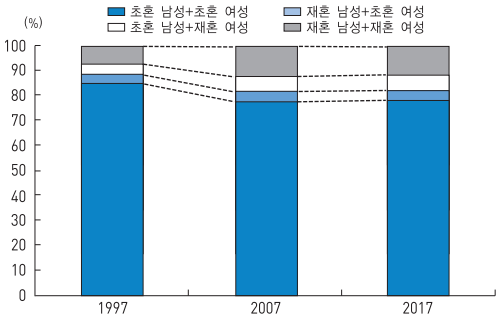


주: 1) 인구는 만 15세 이상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함.
2) 2000-2010년은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은 20% 표본조사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다양한 결혼조합의 증가

결혼행동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개인 선택의 다양화가 눈에 띈다. 지난 20년 동안 결혼형태별 비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결혼조합이 증가하였다(그림Ⅱ-7). 여전히 초혼 남성과 초혼 여성의 결합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그 비율은 1997년 84.9% 에서 2017년 77.9%으로 20년 동안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초혼과 재혼, 재혼과 재혼의 조합은 1997년 14.7%에서 2017년 21.9%까지 증가하였다. 남녀 모두 재혼인 커플의 증가는 이혼의 증가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재혼 남성과 초혼 여성 간 결혼 비율이 1997년 3.4%에서 2017년 4.0%로 0.6%p 증가한 데 반해 초혼 남성과 재혼 여성 간 결혼 비율은 같은 기간 4.0%에서 6.1%로 2.1%p 증가했다는 점이다. 20년 동안 결혼행동에서 젠더와 관련된 전통적 규범의 구속력이 약화되고 개인화와 함께 개인 선택의 다양성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Ⅱ-7] 결혼형태별 구성비율, 199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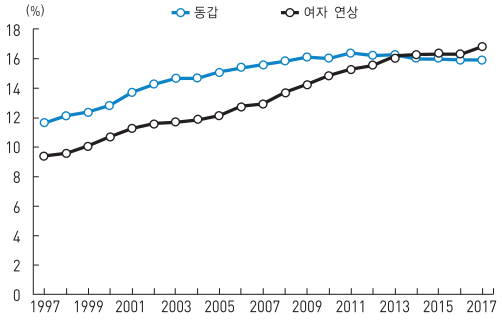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결혼행동에 있어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또 다른 변화는 동갑 남녀의 결혼이나 여자가 연상

인 결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Ⅱ-8]은 초혼부부 중 동갑끼리의 결혼과 연상녀와 연하남 간의 결혼의 증가세를 보여준다. 여자연상부부의 구성비는 2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 9.4%에서 2017년 16.9%까지 증가하였다. 동갑부부의 구성비도 1997년 11.7%에서 2017년 15.9%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 또한 청년층의 결혼 행동에 규범이나 가족의 개입력이 약해지고 개인의 선택이 중요해지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그림Ⅱ-8] 동갑 및 여자연상 초혼부부 비율, 199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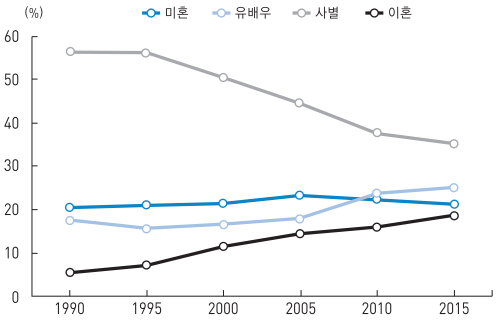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해당 연도 전체 초혼부부 중 해당 유형 초혼부부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여성가구주 증가

주민등록상에 여성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가족의 생계 책임을 여성이 맡고 있는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총 가구 중 여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20%를 넘은 후 2015년 현재 27.9%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5년 전인 2010년의 25.9%보다 2%p 증가한 것이다. 여성 가구주 비율의 상승은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중요한 요인으로는 1990년 이후 높아진 이혼율의 증가를 우선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비율의 변화를 살펴본 [그림Ⅱ-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0년 이후 남편이 부양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유배우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높은 실업률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사별한 여성가구주의 구성비가 여전히 가장 높지만, 이렇게 여성가구주 형성 이유가 다변화되면서, 사별로 인한 여성 가구주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가구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여성가구주 비율은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

[그림Ⅱ-9]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비율, 1990-2015



주: 1) 인구는 만 15세 이상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함.
2) 1990-2010년은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은 20% 표본조사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로 전망되는데, 여성가구주는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므로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가구빈곤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고용 및 소득보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족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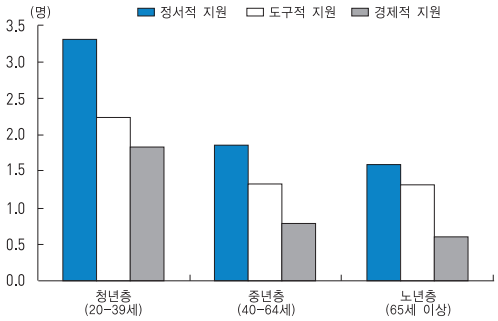
1인가구의 증가와 가족규모 축소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 및 가족불안정성의 증가로 인하여 단위로서의 가족이 개인의 삶의 질에 지원군으로서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1인가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지원망의 크기를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노인이 성인자녀와 주고받는 세대간 지원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인가구의 가용 지원망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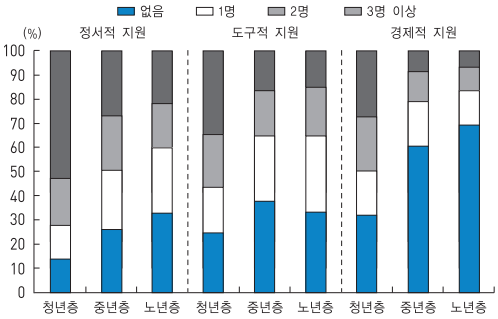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지원망 보유 실태를 살펴보았다. 1인가구를 형성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용지원망 크기를 청년, 중년, 노년층으로 나누어 연령집단별로 다른지 살펴본 결과는 [그림Ⅱ-10]과 같다. 사회조사에서 사회적 지원망은 도구적 지원,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원망의 크기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정서적, 도구적, 경제적 지원망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원망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 지원망 크기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정서적 지원 영역이

[그림Ⅱ-10] 청년층, 중년층 및 노년층 1인가구의 사회적 지원망 크기, 2017

1) 지원망 크기(평균)



2) 지원망 크기별 구성비율



주: 1) 사회적 지원망의 크기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몇 명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음. 도구적 지원은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경제적 지원은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 정서적 지원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로 살펴보았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7.

었다. 노년 1인가구는 청년 1인가구에 비해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약 1.7명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도구적 지원을 받을만한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중년 1인가구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 노인 1인가구의 69.5%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의 1인가구에 비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정서적 지원 또한 노인 1인가구의 32.6%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층이 전반적으로 가용 돌봄 지원망이 빈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원망의 크기로 살펴 볼 때 청년층은 도구적, 경제적, 정서적 지원 모든 영역에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다. 지원을 요청할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응답 비율에 있어서도 청년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주거를 하고 있지만 지원이 필요할 때는 부모가 지원 원천으로 작동하며 여전히 부모 의존성이 남아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세대 간 지원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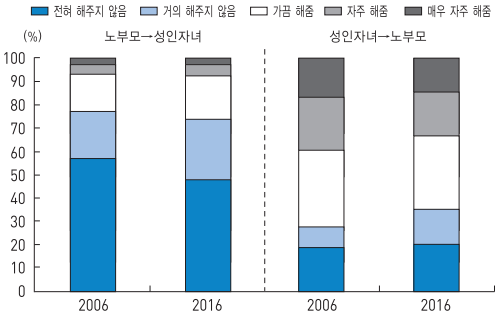
그렇다면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노인층은 자녀세대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가? 노부모가 자녀세대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없는가? 세대 간 지원교환 양상에 있어 변화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노부모와 자녀세대 간의 경제적, 도구적 지원 교환양상을 2006년과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2016년 경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한 비율('자주 해줌'+'매우 자주 해줌')은 부모의 경우 7.6%, 성인자녀의 경우 33.2%로 나타나서 아래 세대로부터 부모에 대한 지원 제공이 더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도구적 지원 제공은 부모 21.3%, 성인자녀 22.9%로 도구적 지원 또한 자녀가 부모보다 좀 더 빈번히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의 경우 경제적 지원에 비해 도구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노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런가하면 부모의 48.1%가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성인자녀의 19.9%가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가 충분한 경제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원제공의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부모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006년과 2016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10년 동안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했다는 비율은 2006년 39.7%에서 33.2%로 감소하였다. 도구적 지원의 경우에도 2006년에 비해 부모와 성인 자녀 간에 지원 교환 비율이 감소하였다. 도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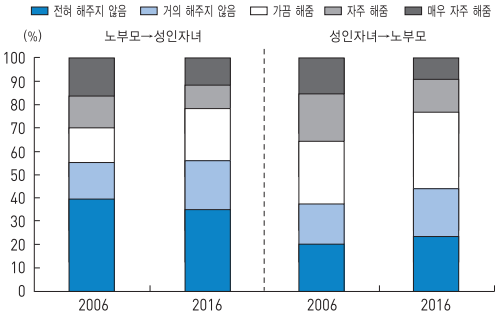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했다는 비율은 부모의 경우 29.7%에서 21.3%로, 성인자녀의 경우 35.5%에서 22.9%로 감소하였다.

[그림 Ⅱ-11]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경제적·도구적 지원 교환 빈도, 2006, 2016

1) 경제적 지원



2) 도구적 지원(가사 혹은 건강 돌봐주기)



주: 1) 65세 이상 노인 중 성인 자녀가 있는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경제적 지원(혹은 도구적 지원) 교환 빈도는 지난 1년 간 본인이 성인 자녀에게(혹은 성인 자녀가 본인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혹은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건강 돌봐주기)하기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전혀 해주지 않았다'부터 '매우 자주 해주었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한 문항을 이용하였음.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맺음말

미혼율의 지속적 증가, 1인가구의 급증, 그리고 결혼조합의 다양화 등 위에서 살펴본 가족관련 변화는 전체적으로 규범의 힘이 약화되고 개인화되는 한국가족의 추세를 보여준다. 특히 청년층의 자발적 선택행동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중·노년 세대와 차이가 나는 삶의 궤적이 그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의 선택이 진정한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경제상황 때문이라는 점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1인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고 가용 지원망이 부족한 노년층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노부모에 대한 자녀로부터의 지원이 10년 사이에 감소하였다는 분석 결과는 가족의 노인 부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1인가구 비율의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는 점은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함을 알려준다.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여성 가구주의 지속적 증가 또한 삶의 질이 열악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고용 및 소득보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유배우 취업자의 시간부족 인식과 삶의 질

차승은 (수원대학교)
한경혜 (서울대학교)

- 우리 사회의 취업자가 경험하는 시간부족감은 주 5일제 실시,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을 통해 지난 15년 동안 점차 해소되는 양상이다.
- 시간부족감을 자주 경험할 경우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피곤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고, 생활 만족 수준도 낮아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낮다.
- 유배우 취업자 가운데 맞벌이 부부 특히 분거한 맞벌이 남편이나 여성 홀벌이 부부의 아내는 일상생활에서 만성적인 시간부족을 겪고 있다.
- 어린 자녀나 노인/장애 가구원을 돌보는 맞벌이 가족의 경우, 돌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족에 비해 만성적인 시간부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 맞벌이 가족에 대한 분석에서 소득이 많을 경우 시간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기회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소득빈곤층은 휴식과 재충전에 활용하는 재량시간의 양도 적으면서, 시간부족감도 자주 느낄 가능성이 높다.
- 다른 국가의 유배우 취업자와 비교해서 한국의 유배우 취업자들은 시간부족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며, 주당 근무시간 및 하루 평균 총 노동시간도 여전히 길어 이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것은 우리가 돈(재화)의 부족만큼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이다. 한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이 성공한 현대인의 상징이자 규범으로 간주됐던 시절도 있었다(Gershuny, 2001).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현대인을 지치게 하고, 종국에는 그러한 만성적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의가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다. 시간부족을 자주 지각하는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으며, 우리 사회에서 결혼한 취업자, 그중에서도 일하는 부모들이 만성적인 시간부족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평소에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족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과 가족 역할을 병행하는 유배우 취업자, 특히 맞벌이 가족들이 경험하는 시간부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1].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각 연도 자료[2]와 영국 시간연구소(Center for Time Use Research)의 「다국

1) 분석한 일지 수는 20–54세의 21,040개로 이 중 여성이 작성한 일지는 전체의 44.2% 수준이며, 취업자에서 휴가 및 일시 휴직자와 학교 재학자는 제외하였다.
2) 시간부족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여유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항상 부족하다고 느낌', '가끔 부족하다고 느낌', '약간 여유있다고 느낌', '항상 여유있다고 느낌' 등 4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낌'이라고 응답한 집단을 시간부족집단으로 정의하고, 나머지 '가끔 부족하다고 느낌'이라고 응답한 집단, '약간' 또는 '항상' 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하 시간여유집단)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가시간연구(Multinational Time Use Study, MTUS)」 자료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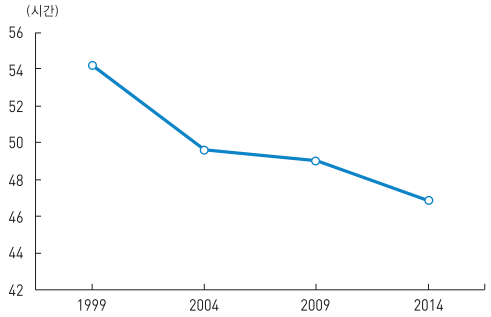
취업자의 시간부족 인식의 변화 추이

취업자들이 평소에 얼마나 시간부족감을 느끼는지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자의 78.8%가 '항상' 또는 '가끔' 시간부족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평소 시간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취업자는 21.2%에 불과하였다. 우리 사회 대부분 취업자가 평소에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만성적 시간부족감을 느끼는 취업자의 비율은 약 36% 수준이다.

장시간 근로 사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0년 이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해 왔다. 근무시간 조정/시간 융통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나 주 5일제 근무 등이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Ⅱ-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000년 이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꾸준히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취업자들이 인식하는 시간부족인식에서도 작은 변화가 포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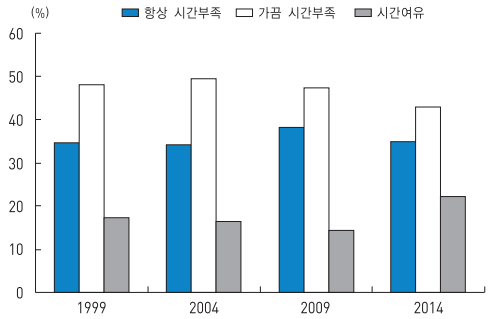
[그림Ⅱ-13]에서 '가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1999년 이후 그 비율이 줄어드는 양상이다. 이에 비해, 시간여유가 있다고 느끼는 집단의 비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고 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집단은 1999-2009년까지 늘어나다가 2014년에는 그 비중이 약간 줄었다. 전체적으로 시간부족을 느끼는 집단의 비율이 감소하는 긍정적 변화를 볼 때, 취업자들이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긴박함이 앞으로는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

[그림Ⅱ-12] 주당 평균 근무시간, 1999-2014



주: 1) 분석대상자는 20-54세 취업자로, 휴가 및 일시 휴직자와 학교 재학자는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Ⅱ-13] 취업자의 시간부족인식, 1999-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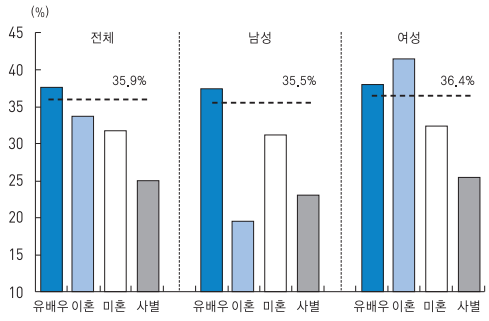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각 연도.

구결과에 따르면, 2004,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시간부족을 덜 느끼는 집단은 교육수준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높은 취업자들이다(Cha & Suh, 2017).

취업자의 혼인상태와 시간부족인식

취업자 중에서도 직장일과 집안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 더욱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미혼, 유배우자(사실혼 포함), 사별자, 그리고 이혼자로 나누어 시간부족감을 살펴보면, 예상대로 유배우 집단에서 '항상' 시간부족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런가 하면, 이혼한 여성 역시 만성적인 시간부족에 시달리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혼한 여성에서 나타나는 '항상 시간이 부족한 집단'의 분포는 전체 취업 여성 평균인 36.4%보다도 그 비율이 높다. 이에 비해 이혼한 남성의 경우 항상 시간부족을 경험한다고 느끼는 비율은 전체 남성에 비하여 오히려 낮아서, 이혼자 집단 내에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Ⅱ-14] 성 및 혼인상태별 항상 시간부족을 느끼는 취업자 비율,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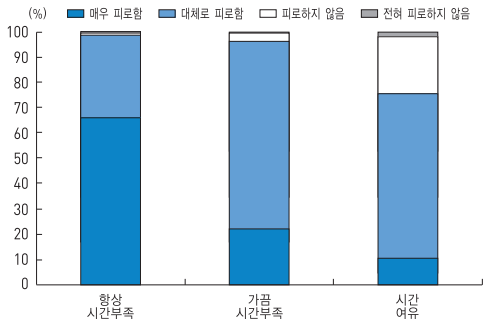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14.

유배우 취업자의 시간부족감과 삶의 질

그렇다면, 항상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유배우 취업자의 삶의 질은 어떠할까? [그림Ⅱ-15]와 [그림Ⅱ-16]은 시간부족감과 주요 삶의 질 지표 간 관련성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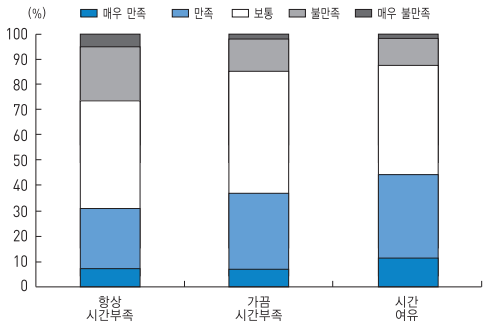
먼저 시간부족인식과 피로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시간부족을 '항상' 또는 '가끔' 지각하는 사람들은 일과가 끝난 후에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비해, 평소에 여유롭거나 바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그림Ⅱ-15).

[그림Ⅱ-15] 유배우 취업자의 시간부족인식과 일상피로도, 2014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14.

[그림Ⅱ-16] 유배우 취업자의 시간부족인식과 삶에 대한 만족도,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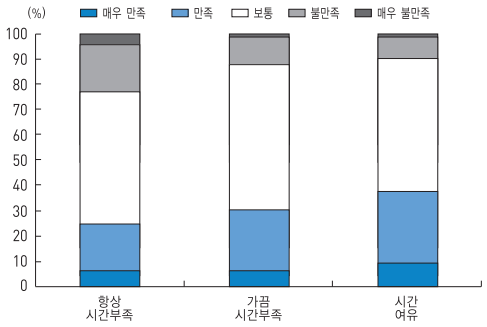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14.

시간부족인식과 생활만족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낮고,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그림 Ⅱ-16). 시간부족감을 자주 느끼면, 육체적인 고단함도 많이 느끼고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31.1%나 관찰된다는 점이다. 또한, 시간 여유가 많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도 삶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사람들이 12.2%가량 존재한다. 시간부족감에서 해방된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때로는 여유시간이 너무 많은 것도 무력감과 우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루를 돌아보며 개인이 느끼는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 수준과 시간부족감의 관련성을 알아본 것이 [그림Ⅱ-17]이다.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시간 여유가 있다'고 말한 사람에 비해 그날 하루 시간을 보낸 방식에 대해 불만족을 표현하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 시간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두 시간부족 집단에 비해 본인의 하루 시간 활용방식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다. 그런데, 세 집단에서 자신의 하루 동안 시간사용 방식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예상외로 큰 차이가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것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바쁘게 살아감으로써 얻는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Ⅱ-17] 유배우 취업자의 시간부족인식과 시간사용 만족도,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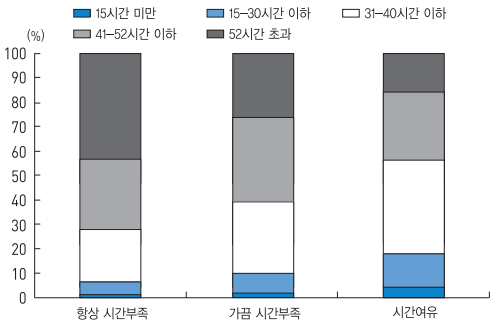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14.

유배우 취업자의 시간부족감에서의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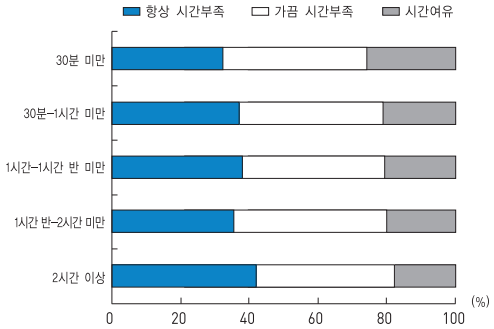
유배우 취업자가 시간부족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피로한 배경에는 직업역할 즉, 일터의 상황이 관련이 있다. 직장환경 중에서도 특히

[그림Ⅱ-18] 유배우 취업자의 시간부족인식별 주당 근무 시간 분포, 2014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14.

[그림Ⅱ-19] 유배우 취업자의 출퇴근 시간별 시간부족인식, 2014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14.

총 근무시간이 시간부족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림Ⅱ-18]에서 드러나듯이 평소에 시간부족을 항상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평균 52시간 넘게 일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 시간여유가 있다고 인지하는 사람들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 혹은 30시간 이하의 시간제 근로를 하는 비중이 크다. 한편, 가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근무시간으로 볼 때 고르게 분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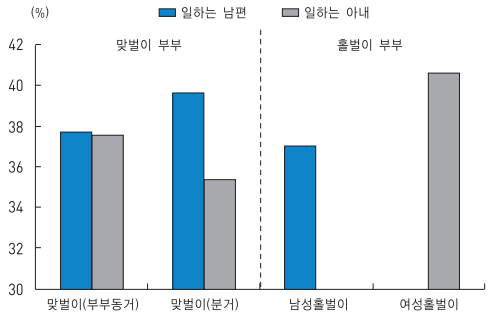
얼마나 긴 시간을 근무하는지 외에 일터와 집을 오가는 출퇴근 시간도 일상생활에서 시간부족감을 초래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근무시간도 길지만, 출퇴근 시간도 매우 긴 편에 속한다.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과 시간부족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출근 시간이 2시간 이상 긴 직장인들이 평소에 시간부족을 느끼고, 반면에, 출퇴근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 시간부족을 경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다(그림Ⅱ-19). 근무시간의 조정 그리고 출퇴근 시간의 감소가 유배우 취업자의 만성적인 시간부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준다.

결혼한 취업자의 경우, 가족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시간부족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가족의 남편과 아내는 직장일이 끝난 후 가족일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2교대 근무를 하게 된다. 즉, 직장일과 집안일 두 가지 노동을 모두 해내야 하는 맞벌이 부부는 홀벌이 부부보다 만성적인 시간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맞벌이 부부 중에서도 특히 아내가 남편보다 2교대 근무의 부담을 더 많이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Ⅱ-20]에서 제시한 부부의 취업상황별로 '항상' 시간이 부족한 집단의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 홀벌이 부부의 아내가 시간부족을 가장 많이 느낀다. 그다음 순으로 비율이 높은 경우가

[그림Ⅱ-20] 유배우 취업자의 부부취업상황별 항상 시간 부족을 느끼는 비율, 2014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14.

분거한 맞벌이 부부의 남편이다. 유배우 취업자 중에서 특별히 이 두 집단이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족 역할을 병행하는데 있어 다른 집단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을 말해준다.

동거하는 맞벌이 부부가 그다음으로 '항상' 시간부족에 시달리는 비율이 높은데, 흥미롭게도 이 경우 남편-아내의 격차는 크지 않다. 즉, 함께 일상을 공유하는 맞벌이 부부는 아내뿐 아니라 남편도 시간부족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분거한 맞벌이 부부의 아내, 혹은 남성 홑벌이 부부의 남편은 상대적으로 시간부족을 '항상' 느끼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맞벌이 가족의 돌봄 상황과 시간부족

일반적으로 맞벌이 가족이 시간부족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 상황으로 요약된다. 첫째, 직장 일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 집안일과 가족을 돌봐야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 혹은 휴식/여가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둘째,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구성원끼리 시간을 조율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간부족을 경험하기도 한다. 셋째, 자녀나 가족을 더 잘 돌보고 싶지만 돌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서 시간부족을 느끼게 된다. 즉, 가족을 돌보는 일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일상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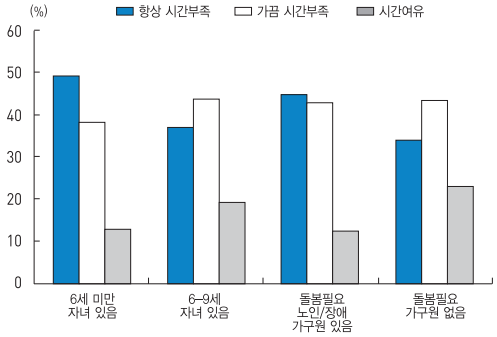
[그림Ⅱ-21]에서는 다양한 돌봄 상황 속에 있는 맞벌이 가구의 시간부족인식을 제시하였다[3].

사례 수로 보면,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나 노인/장애 가구원이 없다고 응답한 맞벌이 가구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없을 때 비로소 유배우 여성이 취업하여 맞벌이가 가능하다는 돌봄 현실을 대변한다. [그림Ⅱ-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맞벌이 가구에 비해 '가족 내 돌봄 수요가 없는' 맞벌이 가구에서 시간 여유가 있다고 인식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런데, 6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 '항상' 시간부족을 느끼는 비율이 매우 높아서, 6세 미만의 어린 자녀의 존재가 맞벌이 부부의 시간부족감을 초래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6-9

3) 참고로, 여기서는 맞벌이 가구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례는 돌봄 필요 가구원이 없는 경우(68%)에 속하며, 이중돌봄, 즉, 어린 자녀와 노인 혹은 장애가 있는 가구원을 함께 돌보는 상황(0.3%)은 돌봄필요 노인/장애가족원을 돌보는 사례에 포함하였다.

[그림Ⅱ-21] 맞벌이 가구의 돌봄 필요 가구원 유무별 시간부족인식, 2014



주: 1) 돌봄 필요 가구원 중 '노인 또는 장애 가구원'은 돌봄 필요 사유가 있는 치매, 중풍, 장애 또는 기타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말함.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14.

세 자녀가 있는 경우,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비해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다소 적고, 대신에 '가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다소 높다.

주목할 부분은 6-9세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교해 볼 때 돌봄이 필요한 노인 또는 장애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도 '항상'과 '가끔' 시간부족 집단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점이다. 이제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가족뿐 아니라 고령자를 돌보는 가족 특히 맞벌이 가족의 시간부족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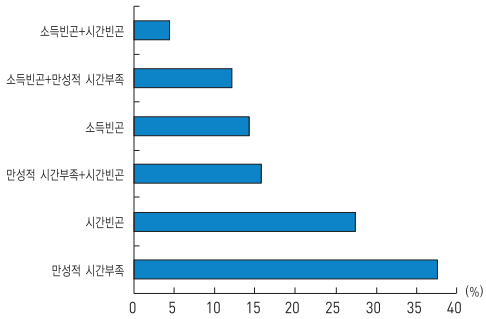
시간부족과 시간빈곤 그리고 소득빈곤

시간부족과 함께 시간빈곤(time poverty)이라는 용어도 최근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한다. 시간빈곤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부족감(perceived time pressure)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하루 24시간 가운데 일하거나 계약된 시간이 아닌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의 부족, 즉 여가시간 혹은 재충전 시간이 결여된 경우를 뜻한다. 최근 들어 시간부족 혹은 시간빈곤에 대한 학문적 혹은 대중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시간부족이 미래에 대한 시간투자를 제약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것은 휴식을 통한 재충전, 건강관리, 그리고 교육과 학습 등에 시간을 쓰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활동에 쓸 시간의 양이 남들보다 매우 부족한 상황이 바로 '시간빈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득빈곤 못지않게 실제로 누가, 얼마나 시간빈곤을 겪고 있는지, 이러한 시간부족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맞벌이 가구에서 소득빈곤, 시간빈곤, 그리고 시간부족감의 수준을 [그림Ⅱ-22]에서 알아보았다. 맞벌이 가구 남녀의 27.5%는 깨어있는 동안 비노동시간이 매우 부족한 시간빈곤층(하루 평균 비노동시간 340분 이하)으로 파악된다. 재량시간에서 시간빈곤층에 실제로 속하면서 주관적으로도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맞벌이 가구의 15.7%이다. 그런가 하면, 가계소득이 부족한 소득빈곤(300만 원 이하 소득)의 경우는 그 비율이 맞벌이 가구의 14.3% 수준인데, 소득빈곤층이면서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림 Ⅱ-22] 소득빈곤, 시간빈곤 및 시간부족 맞벌이 가구 비율, 2014



주: 1) 시간빈곤층은 맞벌이 가구에서 유배우 취업자가 깨어 있는 동안에 비노동시간(혹은 재량시간)이 하위 25%(340분 이하)인 경우를 말함. 비노동시간(재량시간)은 수면을 제외한 개인유지시간(식사, 간식, 위생, 치료 처치, 자기 돌봄, 아파서 쉼), 여가시간(교제(관혼상제 포함), TV 및 미디어 활용(읽기와 듣기 활동 포함), 종교 활동 시간, 문화 활동 시간, 운동 및 스포츠 관련 시간, 취미 활동 관련 시간, 컴퓨터/인터넷 활용 시간, 유흥, 흡연, 음주, 아무것도 안하고 쉼), 출퇴근 이동을 제외한 이동시간, 생활시간조사 조사표 기록시간 등의 합으로 구성하였음.
2) 소득빈곤층은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맞벌이 가구의 중위 가계소득의 50% 이하(월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분류하였음.
3) 만성적 시간부족은 '항상 시간부족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경우로 분류하였음.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14.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12.2% 수준이고, 소득빈곤층이면서 재량시간의 빈곤을 동시에 겪는 경우는 4.4%이다. 이는 맞벌이 가구이더라도 소득빈곤계층의 경우 재충전할 여유시간이 매우 부족하거나, 평소에 바쁘고 시간에 쫓기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뜻한다.

국제비교

한국의 유배우 취업자가 지각하는 시간부족감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어떠한 수준인지 파악한 것이 〈표Ⅱ-2〉이다. 자료의 시기가 서로 다르기는 하나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유배우 취업자(전일제, 0-12세 자녀가 있는 경우)들이 평소에 얼마나 시간부족감을 느끼는지 살펴볼 수 있다[4].

유배우 취업자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취업자들은 '간혹' 시간이 부족하거나 '자주'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집단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은 '자주'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중이 남성은 41.0%, 여성은 53.0%로 다른 국가에 비해 유독 높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각국의 전일제 유배우 취업자만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유배우 취업자는 거의 절반가량이 시간여유가 있다고 응답했고, 스페인 유배우 남성 취업자의 경우 46.0%가 시간 여유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자주'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모든 국가에서 유배우 취업 여성이 유배우 취업 남성에 비해 높다. 유배우 취업자이면서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간부족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점은 여러 국가에서 동일하다. 그렇다면, 개별 국가 간 시간부족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의 비중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루 직장일 관련 시간, 집안일 관련 시간, 그리고 직장일과 집안일의 합인 하루 평균 총 노동시간으로 보면, 흥미롭게도 한국의 유배우 취업

4) MTUS는 여러 국가의 시간일지 자료를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호환한 자료(harmonized data)이다. 이 자료에서는 시간 압박을 3개 범주('자주 느낀다', '간혹 느낀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로 축약해 사용하고 있어서, 앞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4점 척도 단일 문항으로 측정된 결과와는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표 Ⅱ-2〉 주요 국가 유배우 취업자의 성별 시간부족인식, 하루 평균 총 노동시간 및 주당 근로시간, 2000년대

	프랑스 (1998-1999)		네덜란드 (2000-2005)		스페인 (2000-2005)		영국 (2009-2011)		한국 (2009)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시간부족인식(%)										
시간여유	22.8	8.2	55.3	48.1	46.0	29.0	12.7	6.5	10.7	4.4
간혹 시간부족	59.5	60.5	38.2	37.2	41.9	49.6	55.4	40.4	48.3	42.6
자주 시간부족	17.7	31.3	6.5	14.7	12.1	21.4	31.9	53.1	41.0	53.0
하루 평균 총 노동시간(분)	487	567	555	486	522	600	511	533	499	597
직장일 관련 시간	378	295	402	108	395	293	339	250	421	344
집안일 관련 시간	109	272	153	379	127	307	172	283	78	253
주당 근로시간(시간)	38	37	45	45	35	31	39	36	54	49

주: 1) 0-12세 자녀가 있는 유배우 전일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2) 직장일 관련 시간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휴식시간, 출장시간, 부업시간,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합쳐진 시간임.
3) 집안일 관련 시간은 가사노동, 쇼핑, 자녀·아동·가족원돌봄, 집안일 관련 이동시간의 합으로 구성하였음.
출처: Center for Time Use Research, Multinational Time Use Study(MTUS), 1998-2011.

자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직장일과 집안일을 하는 시간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더 길지 않다. 네덜란드 유배우 취업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총 노동시간이 555분에 이르지만,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전체 유배우 취업 남성의 6.5%에 불과하다. 영국 남성들도 하루 평균 총 노동시간이 511분으로 한국의 유배우 취업 남성(499분)보다 길지만, '자주' 시간부족을 호소하는 비율은 31.9%에 불과하다. 그런데, 영국과 네덜란드 유배우 취업 남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한국 남성에 비해 10시간이나 짧다. 즉, 네덜란드나 영국은 하루 평균 총 노동시간은 길지만, 일주일로 보면 주당 총 노동시간이 우리보다 짧다. 이것은 이들 나라의 일상생활의 리듬이 한국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취업 여성의 경우 스페인 유배우 취업 여성이 총 노동시간 면에서는 가장 길지만, 직장일보다는 집안일에 쓰는 시간의 비중이 높다. 총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네덜란드 유배우 취업 여성의 경우도 직장일보다는 집안일에 쓰는 시간의 비중이 더 높다. 반면 '자주' 시간부족을 느끼는 집단의 비율이 높은 한국의 유배우 취업 여성은 집안일에 비해 직장일에 쏟는 시간이 더 길며, 그 비중 또한 다른 국가 여성에 비해 더 높다. 전일제 취업자는 직장일에 투여하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사회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맺음말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다고 느끼는 것은 급격한 기술발달과 사회변화의 속도에 발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 공통의 경험일 수 있다. 그런데, 현대인이 공통으로 처한 상황이라고 보기에

는 한국의 유배우 취업자들의 삶의 질은 특히 더 열악해 보인다. 지금 우리 사회의 유배우 취업자들이 경험하는 시간부족은 개개인이 시간을 아껴 쓰지 않았거나 시간관리가 부족한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볼 때, 현재 우리의 유배우 취업자들이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고 지치는 현상은 가족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일주일을 어떠한 리듬을 가지고 운용할지, 하루 24시간 중에서 직장일과 집안일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지 하는 사항은 개별 가족마다 그리고 사회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합의하고 조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하루 24시간의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왔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과 시간을 쓰는 방식을 고려하는 시간인지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Gershuny. 2001.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ha, S. E. & Suh, J.. 2017. "Social Acceleration vs. Slowdown: Who Became Less Busy in Korea? And Why?." Development and Society, 46(1), 131–156.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손승영 (동덕여자대학교)

- 전반적으로 결혼을 당위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나 재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약화되고 있으며, 이혼에 대한 견해는 유연해지는 경향이 있다.
- 결혼 당위성에 대한 태도는 미혼 여성에게서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결혼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강한 반면, 동거나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의 결혼 가치관과 태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부계혈통주의에 기초한 한국의 가족주의는 '개인화'의 증대와 더불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유교적 전통 하에서는 나이가 차면 반드시 결혼해서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태어나는 성비 불균형 현상이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우리 사회가 초저출산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성비 불균형과 남아선호 현상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또한 전통 사회에서는 이혼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그 수가 적었다. 자녀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혼인관계는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었으나, 오늘날에는 이혼하는 부부 중 다수가 자녀를 둔 상태이다. 여성이 제기하는 이혼이 늘어난 점과 아울러 여성도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의 전환도 큰 변화이다. 젊은 층이나 이혼한 '돌싱'의 동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즉,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재혼 및 동거 등 가족 가치관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일고 있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처음으로 결혼 관련 태도 변인을 포함했던 1998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결혼과 이혼, 재혼, 동거에 관련된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성별과 연령대별로 태도 변화에 있어서의 차이를 비교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통계를 활용하여 동거와 결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태도

한국인의 평균 초혼연령은 1988년에는 여성 24.6세와 남성 27.5세로 나타났으나, 2017년에는 여성 30.2세와 남성 32.9세로 남녀 모두 평균 초혼연령이 5세 이상 증가하였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여성이 연상인 초혼부부의 비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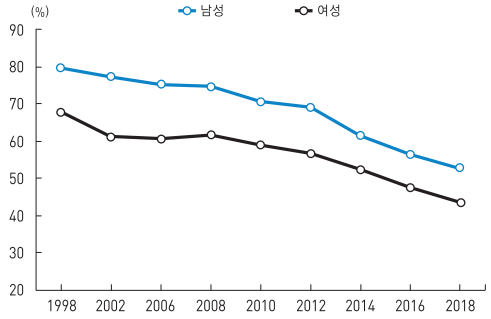
1990년의 8.8%에서 2017년에는 16.9%로 2배가량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매년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여성에 비해 2세 이상 높은 점은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다. 이는 남성이 연상인 커플의 경우 연령 격차가 커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에서는 결혼을 성인이 되는 관문으로 여겨 '통과의례'로 간주하는 사회였으나, 미혼율의 증가와 만혼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결혼을 당위적인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 크게 낮아졌다. 1998년에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3.6%였고 '하는 것이 좋다'가 39.9%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전체의 73.5%로 다수였다. 반면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3%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20년이 지난 2018년 조사에서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비율이 11.1%로 대폭 줄어들었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유동적 입장은 23.8%에서 46.6%로 늘어났다.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결혼에 대해서는 해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1998년에는 남성의 79.5%와 여성의 67.9%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2018년에는 남성의 52.8%와 여성의 43.5%로 감소하였다. 특히 2010년 이후의 태도 변화가 커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그림Ⅱ-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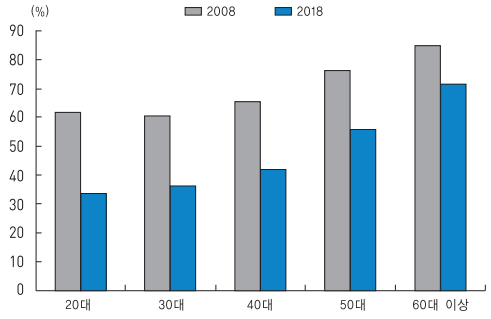
결혼에 대한 응답은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전 연령층에서 결혼에 대한 당위성이 약화되는 추세이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결혼관을 보여주었다. 결혼에 찬성하는 입장은 2018년 현재 60세 이상(71.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 이하에서는 낮은 편이었다. 또한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연령층에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긍정적인 인식이 25.5%p가량 하락하였으나, 50대는 20.8%p, 60대는 13.4%p 하락함으로써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Ⅱ-23-2).

[그림Ⅱ-23] 성 및 연령집단별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18

1) 성별



2) 연령집단별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1998-2010년은 만 15세 이상 인구임).
2) 통계치는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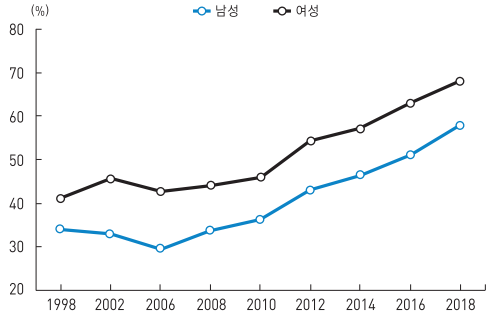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증가는 결혼이 평생 지속되리라는 믿음이 약화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이혼율 상승으로 인해 결혼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이혼 건수는 1990년에 4만 5,694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10만 6,03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평균 혼인지속기간에 있어서도 뚜렷한 변화가 보이는데, 1986년에는 이혼 전 평균 결혼기간은 7.4년이었으나 2017년에는 15.0년으로 늘어났다. 또한 1986년에는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31.2%로 7배가량 증가하였다.

이혼율 상승세를 반영하듯이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감소하는 반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유동적 입장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1998년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또는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 응답이 60.3%에 달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33.2%에 그쳤고 '이혼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 46.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혼이 불행한 결혼에서 벗어나는 선택일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혼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남녀 모두에게서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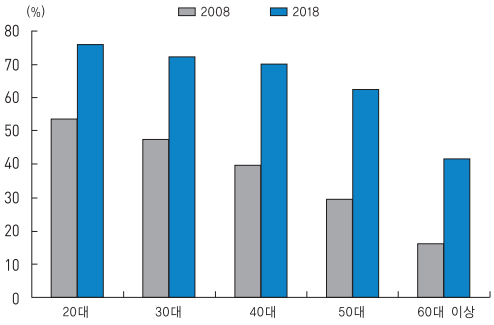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입장이다. 1998년에 남성은 34.0%가 이혼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2018년에는 과반이 넘는 57.8%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41.1%에서 68.1%로 동의 비율이 늘어났다(그림Ⅱ-24-1). 또한 모든 연령층에서 이혼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연령별로는 차이가 뚜렷하여, 2018년 현재 20대의 75.9%가 이혼에 동의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60대 이상에서는

[그림Ⅱ-24] 성 및 연령집단별 이혼에 대한 태도, 1998-2018

1) 성별



2) 연령집단별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1998-2010년은 만 15세 이상 인구임).
2) 통계치는 이혼에 대해 '이유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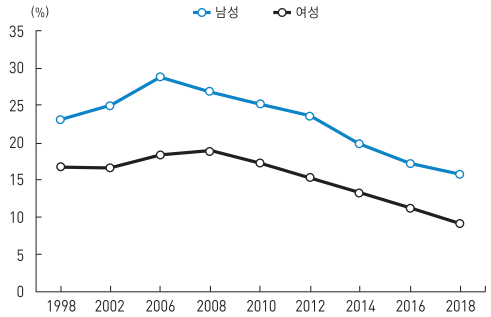
41.5%에 그쳐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Ⅱ-24-2).

이혼율의 상승은 재혼가족의 증가와도 연결되어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전체 혼인 중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에는 여성 17.9%와 남성 15.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0년의 여성 4.1%와 남성 6.3%에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증가 현상이다. 지난 37년 동안 여성의 재혼은 4배 이상 늘어났고, 남성은 2배 이상 증가해서 재혼에 있어서는 여성의 변화가 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혼인형태별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1980년 전체 혼인형태 중에서 재혼 커플은 '남성-재혼과 여성-초혼' 비율이 3.5%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2017년에는 '남녀 모두 재혼'이 1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여성-재혼과 남성-초혼'이 6.1%로 '여성-초혼과 남성-재혼' 4.0%를 능가하였다. 이로써 여성의 재혼을 터부시하던 한국의 재혼문화가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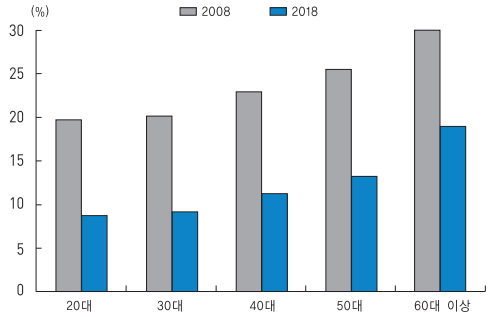
하지만 재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재혼에 대한 견해는 결혼 가치관과 유사하게 긍정적인 입장이 줄어들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유동적인 입장이 늘어났다. 2008년에는 재혼에 대한 동의비율이 22.7%이었으나, 2018년에는 12.4%에 그쳐서 재혼에 찬성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남녀 모두에게서 그리고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재혼에 대한 동의도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재혼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그림Ⅱ-25).

[그림Ⅱ-25] 성 및 연령집단별 재혼에 대한 태도, 1998-2018

1) 성별



2) 연령집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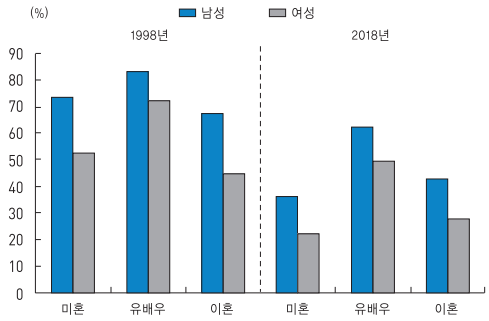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1998-2010년은 만 15세 이상 인구임).
2) 통계치는 재혼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다음으로는 결혼과 재혼에 대한 태도를 성별, 혼인상태별로 세분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Ⅱ-2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18년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는 태도는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1998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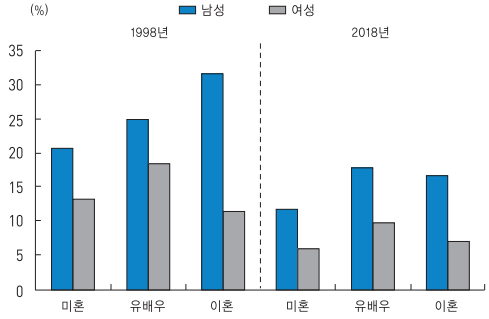
료와 비교해보면 미혼 남녀 모두에게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감소되고 있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1998년에는 미혼 남성의 73.4%와 미혼 여성의 52.5%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2018년에는 미혼 남성의 36.3%와 미혼 여성의 22.4%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1998년 경우에는 이혼 여성이 미혼 여성에 비해 결혼에 대해 더 부정적이었으나, 2018년에는 이혼 여성보다 미혼 여성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 화자 되는 '일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얘기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미혼 여성들은 한국 가족이 드러내는 성불평등성과 독박육아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해서 결혼에 대해서도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림Ⅱ-26] 성 및 혼인상태별 결혼 및 재혼에 대한 태도, 1998, 2018

1) 결혼에 대한 태도



2) 재혼에 대한 태도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1998년은 만 15세 이상 인구임).
2) 통계치는 결혼의 경우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응답률이고, 재혼의 경우 재혼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1998,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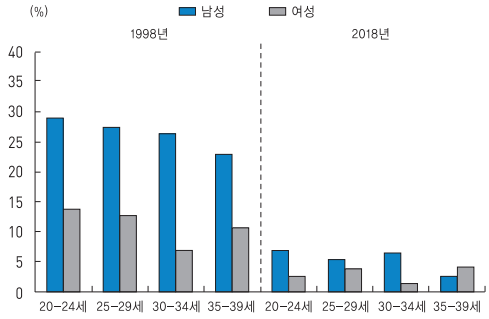
[그림Ⅱ-27]을 통해서는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조사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미혼자 중에서는 남녀 모두 20대가 30대에 비해 결혼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미혼의 경우 연령이 젊을수록 결혼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였으나, 30대는 결혼에 대한 현실적 측면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결혼이 필수라는 생각이 감소하고 있다. 1998년에는 각 연령 그룹에서 모두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에 비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8년에는 미혼 남녀 간의 결혼당위성에 대한 응답 비율 격차가 줄어들었다.

결혼과 관련된 태도 중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견해의 증가이다. 2018년의 경우 한국인의 72.6%가 국제결혼에 대해 동의하였는데, 이 비율은 젊은 세대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20대와 30대의 국제결혼에 대한 동의는 82% 이상으로 높았으나,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58.1%에 그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 국제결혼에 대한 반대 의견은 조금씩 줄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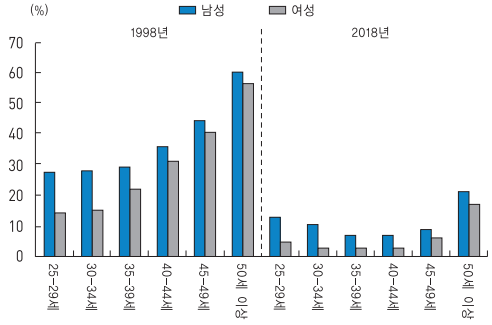
고 있는 반면, 찬성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결혼에 대한 견해는 남녀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Ⅱ-27]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성 및 연령집단별 결혼 당위성에 대한 태도, 1998, 2018

1) 미혼



2) 유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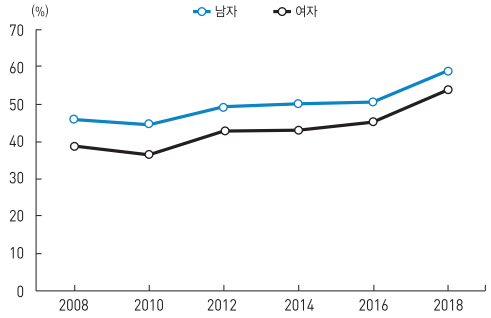
주: 1) 만 20세 이상 미혼자와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1998, 2018.

동거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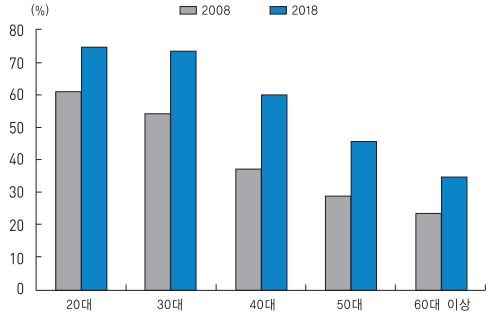
동거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의 42.3%에서 2018년에는 56.4%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반대 의견이 43.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동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은 여전히 12.9%로 낮다. 동거에 대한 견해는 성별로 차이가 있어서 2018년에 남성은 58.9%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림 Ⅱ-28] 성 및 연령집단별 동거에 대한 태도, 2008-2018

1) 성별



2) 연령집단별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2008년과 2010년은 만 15세 이상 인구임).
2) 통계치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는 '약간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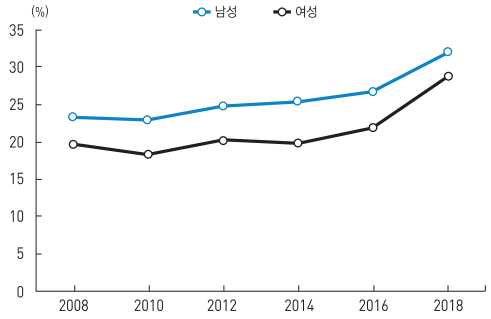
반면, 여성은 53.9%가 동거에 찬성하여 남성에 비해 더 부정적이다(그림Ⅱ-28-1). 하지만 해가 갈수록 여성들의 동거에 대한 찬성 입장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집단에서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아서, 2018년에도 34.8%만이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20대에서는 74.4%가 동거에 찬성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동거에 대해 훨씬 더 개방적이다(그림Ⅱ-28-2).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2018년 현재 69.7%가 비혼 출산에 대해 반대함으로써, 동거에 비해 반대 의견이 많다.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남성(68.1%)보다 여성(71.4%)의 반대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이는 동거로 인한 불이익이나 윤리적 비난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자녀 출산 시 여성이 거의 전적으로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찬성이 36%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22% 선에 머무르고 있다(그림Ⅱ-29). 이와 같은 세대 간 차이는 향후 우리 사회에서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개방적 태도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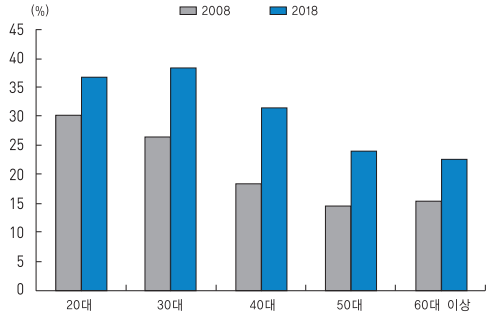
한국 사회에서 비혼 출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인 것과 달리, 양육미혼모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혼모 중 연령이 높은 20대 후반과 30대 미혼모를 중심으로 자녀양육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에는 미혼모 당사자 단체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가 설립되어 미혼모들을 향한 반편견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동거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점은 젊은 세대의 혼전 성경험이나 섹슈얼리티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결혼에서는 당사자보다 가

[그림Ⅱ-29] 성 및 연령집단별 비혼 출산에 대한 태도, 2008-2018

1) 성별



2) 연령집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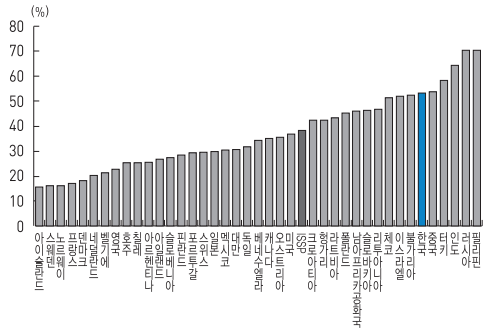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2008년과 2010년은 만 15세 이상 인구임).
2) 통계치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는 '약간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족과의 관계가 중시되지만, 동거 하에서는 상대방 가족과 관계 맺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젊은이들이 편하게 여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혼인 비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동거를 선택하기도 한다.

결혼과 동거 태도의 국제비교

결혼과 동거 태도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의 가족모듈조사인 「가족과 성역할 변화(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에 포함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35개 국가가 참여한 2002년도 ISSP 자료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한국인은 58.4%으로 필리핀, 불가리아, 러시아의 뒤를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결혼 찬성률을 보였다. 하지만 40개 국가가 포함된 2012년도 자료에서는 한국인의 동의는 53.2%로 2002년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다. 2012년 한국인이 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은 필리핀(70.3%), 러시아(70.3%), 인도(64.2%), 터키(58.2%), 중국(53.5%)의 뒤를 이어 여섯 번째로 높은 순이었다. 유럽이나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결혼이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결혼과 행복을 연결시켜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그림Ⅱ-30). 한국인이 결혼을 행복으로 여기

[그림Ⅱ-30] 주요 국가의 결혼과 행복의 연관성에 대한 태도, 2012



주: 1) 각국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매우 동의' 또는 '동의'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 Data version 4,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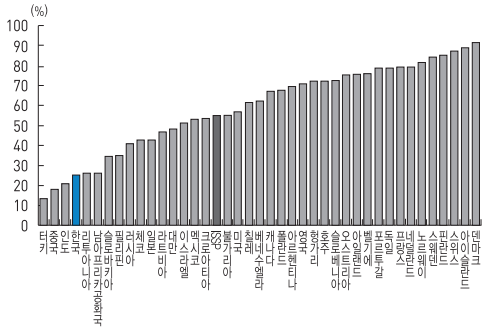
는 비율이 2012년에는 다소 낮아졌지만, 10%대에 머무르는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덴마크 등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인들은 여전히 결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도 ISSP 조사에서 동거 관련 질문은 두 개로 '결혼 의사가 있을 경우의 동거'와 '결혼 의사가 없을 경우의 동거'로 구분된다. 2002년 조사에서 질문한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은 찬성비율이 낮아서 일본(31.5%), 필리핀(35.5%), 대만(37.4%), 한국(37.8%)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유럽 국가들에서는 8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여서 동거에 대한 국가 및 지역별 태도 차이가 컸다. 또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에 대해서도 북유럽 국

가들은 80% 이상의 찬성률을 보여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동거에 찬성하는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과 필리핀의 경우는 결혼과 무관한 동거에 대해서는 20%만 찬성함으로써,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비해 훨씬 더 부정적이었다.

[그림Ⅱ-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도 ISSP 조사에서는 "결혼의사 없이 함께 살아보는 것"에 대한 태도만을 조사하였다. 결혼의사 없는 동거에 대한 한국 응답자의 찬성 비율은 25.2%로 2002년도의 20.2%에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2년에 한국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동거에 대해서 터키(13.5%), 중국(18.0%), 인도(20.7%)에 이어 네 번째로 부정적이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결혼의사가 없는 동거에 대해서도 매우 개방적이어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아이슬란드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하였고, 덴마크는 91.8%로 대부분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림Ⅱ-31] 주요 국가의 결혼 전제 없는 동거에 대한 태도, 2012



주: 1) 각국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결혼할 의사 없이 함께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에 대해 '매우 동의' 또는 '동의'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 Data version 4, 2016.

결혼을 당위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인의 태도가 줄어들고 이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추세는 한국 가족이 다양화되고 비정형화된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한편 동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여전히 정상가족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제비교 통계를 살펴보면, 유럽에 비해 한국에서는 결혼을 당위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동거나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훨씬 더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세대 간 가족 가치관 차이가 크며, 2010년 이후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혼이나 동거 및 비혼 출산과 같은 비전형적 가족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PACS(시민연대계약)'나 스웨덴의 'Sambo' 제도와 같이 동거인 관계를 합법화하는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동거나 비혼 출산도 결혼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인정되고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차이가 크다. 한국 젊은이들의 결혼 가치관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나, 정상가족 규범을 따라야 하는 사회적 압력과 비전형적 가족에 대한 법적 보장이나 제도적 지원의 미비로 인해 한국에서는 법률혼 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Korean Social Trends 2018
한국의 사회동향 2018

2018 Health

Korean Social Trends 2018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Ⅲ 건 강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조병희 | 서울대학교 90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분포 조병희 | 서울대학교 100

노인 돌봄의 사회화 동향 이윤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1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조병희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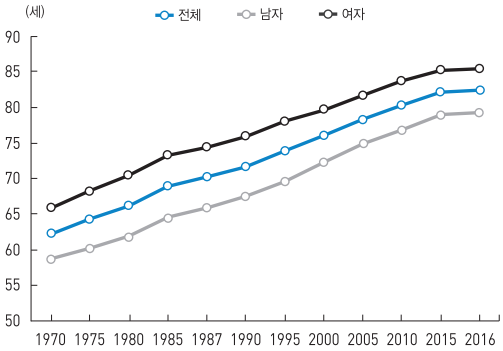
-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국민들의 평균 수준에 비해 길다.
-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성 질환의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 고혈압과 당뇨병의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암과 자살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 흡연율과 음주율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며, 비만율은 상승하고 있다.
- 국민의 의료이용 빈도가 높고 경상의료비 증가 속도도 빠르다.
- 의료서비스 대기시간, 의료의 질, 치료비 등에 대한 불만이 많다.

건강 영역의 주요 변화는 국민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그리고 보건의료체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건강상태 영역에서는 기대수명이나 주관적 건강상태와 같은 지표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건강행태 영역에서는 음주율이나 흡연율과 같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체계 영역에서는 의료인력과 의료시설, 의료비 지출 규모, 의료서비스 만족도 등 건강관리와 질병 치료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소들을 다룰 것이다.

건강과 질병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기본적 지표로 기대수명 또는 '0세에서의 기대여명'을 들 수 있다. 건강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이라고 할 때, 기대수명이 길고 짧음은 사회적 역능성(social empowerment)의 기본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7년 70세를 넘어섰고 2016년에는 82.4세가 되었다(그림 Ⅲ-1). OECD 국가들의 기대수명은 미국 78.6세, 영국 81.2세, 네덜란드 81.6세, 프랑스 82.4세, 독일 81.1세, 이탈리아 83.3세 등의 분포를 보인다. OECD 국가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80.8세로 우리나라가 1.6년 더 길다.

[그림 Ⅲ-1] 기대수명, 1970-2016



출처: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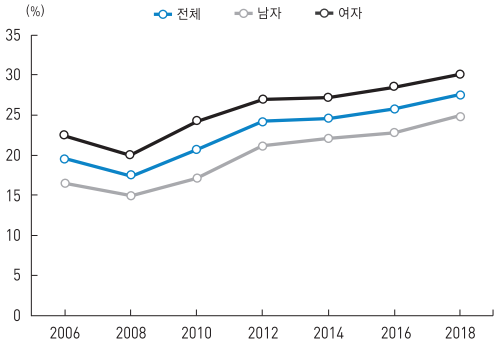
기대수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길다. 1970년에 남자 58.7세, 여자 65.8세로 7.1세 차이가 났고 이후 남녀 모두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에는 남자 79.3세, 여자 85.4세로 남녀 간 수명 차이가 6.1세로 줄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남녀 간 수명 차이는 2016년 기준 독일 4.9세, 스웨덴 3.5세, 아이슬란드 3.7세, 덴마크 3.8세, 영국 3.6세, 미국 5.0세 등으로 남녀가 사회적으로 평등할수록 수명의 차이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 노년기의 삶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시기에 만성퇴행성 질환에 걸린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즉, 수명은 길어졌지만 질병으로 인해 와병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를 고려하여 기대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을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하는 World Health Statistics의 2017년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3.0세(남자 70.7세, 여자 75.1세)로 기대수명(WHO 기준 82.7세)과 약 9.7세 차이가 난다. 같은 해 일본의 경우 기대수명은 84.2세이고 건강수명은 74.8세로 약 9.4세 차이가 난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독일 71.6세, 프랑스 73.4세, 영국 71.9세, 미국 68.5세 등의 건강수명을 보였다. 건강수명의 측면에서도 한국인의 건강상태는 다른 선진국 국민들과 비교해서 대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삶의 질 측정에서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건강 영역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가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OECD 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15세 이상 국민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2008년 43.7%, 2010년 37.6%, 2012년 33.3%, 2014년 32.5%, 2016년 32.5%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16년에 OECD 국가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은 68.3%인데 한국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다. 이것은 기대수명이나 건강수명 측면에서 한국인이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상당한 건강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계청 「사회조사」의 주관적 건강 평가에서는 2014년 48.7%, 2016년 47.2%, 2018년에 48.7%가 '좋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역시 과반에는 미달한다.

질병상태의 총괄적 지표는 유병률이다. 유병률 측정에는 통상 조사시점 이전 2주 동안 질병

[그림 Ⅲ-2] 2주간 유병률, 2006-2018



주: 1) 유병률은 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2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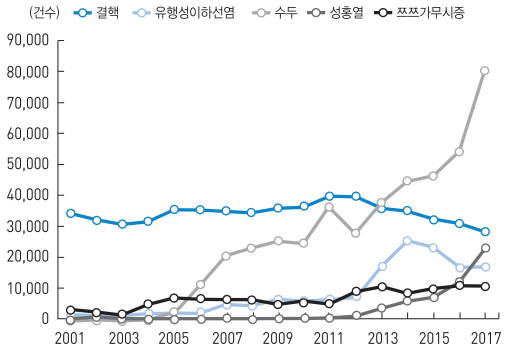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2주간 유병률이 사용된다. 지난 12년간 2주간 유병률은 10% 후반대에서 20% 후반대까지 상승하였다. 2018년의 2주간 유병률 27.5%, 와병일수 0.5일이었다. 여자의 유병률이 남자보다 일관되게 높다(그림 Ⅲ-2). 사망률은 남자가 높지만 유병률은 여자가 높은 것이 선진 산업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 중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즉 활동제한율은 2016년 기준 6.0%이다.

주요 감염성 질환의 발생건수(신고건수)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높은 발생율을 보이던 결핵이 최근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 쯔쯔가무시증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수두는 호흡기 분비물에 의한 공기 전파로 집단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그림 Ⅲ-3).

다음으로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살펴보자. 한국인은 만성질환 중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30세 이상 인구의 당뇨병 유병률은 2001년 8.5%, 2005년 9.1%, 2013년 11.0%로 높아졌다가 2015년 9.5%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6년 11.3%로 다시 높아졌다(그림 Ⅲ-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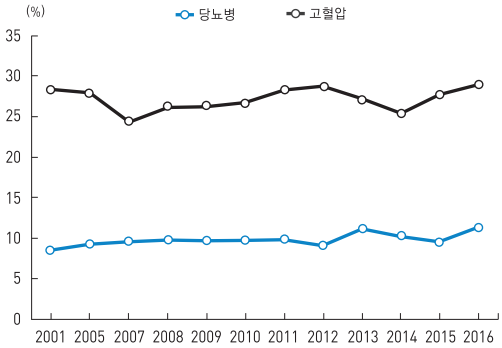
3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유병률은 2001년 28.5%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인데, 2012년 28.9%까지 높아진 후 2013년 27.2%, 2014년 25.4%로 낮아졌다가 2015년 27.8%, 2016년 29.1%로 다시 높아졌다. 30세 이상 성인의 1/3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Ⅲ-3] 주요 감염성 질환 발생 건수, 2001-2017



주: 1) 국가감염병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된 감염병환자 발생신고를 기초로 집계됨.
출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연보」, 각 연도;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각 연도.

[그림 Ⅲ-4] 당뇨병 및 고혈압 유병률, 2001-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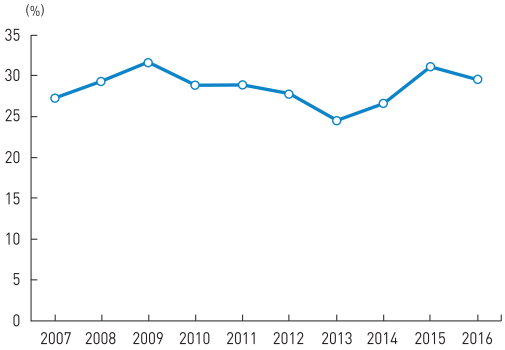
주: 1) 당뇨병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 인구 중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 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2) 고혈압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 인구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이상 또는 고혈압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3) 각 유병률은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당뇨병 유병률의 증가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15년 기준 20–79세 성인 인구의 당뇨병 유병률은 한국이 7.2%로 OECD 국가 평균 7.0%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간주된다. 식이조절과 운동 및 기본적인 의학적 관리를 통하여 당뇨병이 충분히 조절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당뇨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암 발생은 계속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립암센터의 「2015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새로 보고된 암 환자 수, 즉 암 조발생률은 2001년 232.3명에서 2005년 302.1명, 2010년 416.5명, 2012년 451.7명으로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5년에 421.4명이 되었다. 한 시점에서의 인구 대비 암 환자 수를 의미하는 암 유병률은 2015년 기준 3.2%(남자 2.8%, 여자 3.5%)이다. 국제적으로 연령표준화 암 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2015년 기준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53.8명(남자 286.5명, 여자 236.3명)으로 OECD 국가 평균 270.3명(남자 306.0명, 여자 244.2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령층일수록 암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정신건강 지표로 스트레스 인지율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스트레스 인지율은 2007년 27.1%에서 2009년 31.5%로 높아진 후 2013년 24.4%, 2015년 31.0%, 2016년 29.4%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그림 Ⅲ–5).

[그림 Ⅲ–5] 스트레스 인지율, 2007–2016



주: 1) 스트레스 인지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일관되게 높다. 통계청 2018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가정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자가 40.8%, 직장 스트레스 경험자 71.8%, 일상생활 스트레스 경험자 54.4%로 다수의 한국인이 생활현장 곳곳에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과거 2주간 슬픔과 절망 경험을 측정하였던 우울감 경험률 지표는 2014년부터 우울장애유병률로 바뀌었고,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도구(PHQ–9)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인 분율로 측정되었다. 우울장애유병률은 2014년 6.6%에서 2016년 5.6%로 감소하였다. 2016년 기준 성별 유병률을 보면, 남자 4.1%, 여자 7.0%로 여성이 매우 높았다.

유병과 함께 사망은 건강상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다. 〈표 Ⅲ–1〉은 사망원인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보여준다. 총 사망률

은 1995년 532.1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0년대 후반 500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7년 557.3명을 기록하였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사망은 증가하지만 신생아 출산이 감소하면서 인구의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사망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1.2배 높다.

사망원인으로는 암이 1위이고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같은 순환기계 질환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암에 의한 사망은 1995년 인구 10만 명당 110.5명에서 2017년 153.9명으로 증가하였다. 암 사망률은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등의 순으로 높다.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은 1995년 138.9명에서 2009년 109.2명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7년에는 119.6명이 되었다. 한편, 사고와 손상에 의한 외인사망 중에서 운수사고 사망은 1995년 38.7명에서 2017년 9.8명으로 감소하였다. 교통안전 인식 제고와 교통시설 개선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살은 1995년 10.8명에서 2011년 31.7명까지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7년 24.3명이 되었다.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이 대개 10% 초반대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아직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음 순위의 외인사는 낙상(추락)에 의한 사망인데 2003년 인구 10만 명당 7.3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여 2012년 4.2명까지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여 2017년에 5.2명이 되었다.

〈표 Ⅲ-1〉 사망원인별 사망률, 1995-2017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전체	532.1	523.3	505.1	512	541.5	557.3
악성신생물(암)	110.5	122.4	134.6	144.4	150.8	153.9
내분비질환	18.8	25.0	25.6	22.3	22.9	20.6
순환기질환	138.9	123.8	116.5	112.5	116.9	119.6
호흡기질환	24.4	34.0	29.4	37.1	54.6	63.7
소화기질환	39.2	31.5	23.2	22.2	23.0	23.7
운수사고	38.7	25.5	16.4	13.7	10.9	9.8
자살	10.8	13.7	24.8	31.2	26.5	24.3
낙상(추락)	5.3	5.8	6.5	4.3	4.6	5.2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건강행태

만성질환은 흔히 '생활습관 병'이라고 할 만큼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생활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국 성인의 흡연율은 2016년 23.9%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표 Ⅲ-2). 여기에서 흡연율은 '매일 흡연자'와 '가끔 흡연자'를 합한 수치이다. 2016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흡연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흡연자) 비율은 평균 18.5%인데,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한국의 흡연인구 비율은 18.4%이다. 한국은 남녀 간 흡연율 차이가 크다. OECD 국가들의 남녀 흡연율은 각각 23.0%와 14.5%인데, 한국의 남녀 흡연율은 각각 32.9%와 4.1%이다. OECD 국가들은 흡연율 자체가 낮고 남녀 간 차이도 작은 반면, 한국은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녀 간 차이도 크다.

성인 음주율은 큰 변화 없이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2016년 기준 남자 87.1%,

여자 71.6%로 흡연과 달리 음주는 여자들도 하는 경우가 많다(표 Ⅲ-2). 음주로 인한 건강위험은 음주 횟수와 음주량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남자의 경우 1회 음주량이 7잔(소주 1병 분량)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를 고위험 음주로 규정한다. 이 기준으로 측정한 고위험 음주율은 2016년 남자 21.2%, 여자 6.3%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는 알코올 섭취량으로 음주 수준을 측정한다. 2016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8.7L인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8.8L와 비슷한 수준이다.

비만은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은 보통 키와 몸무게의 비인 체질량지수(BMI)로 측정하는데, 한국에서는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한다. 한국인의 비만율은 1998년 26.0%에서 계속 상승하여 2007년 31.7%가 되었고 2016년에는 34.8%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기준 비만율은 남자 42.3%, 여자 26.4%로 남자가 더 높다(그림 Ⅲ-6). 국제 통계에서는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규정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비만율은 2016년 5.5%로 OECD 국가 평균 23.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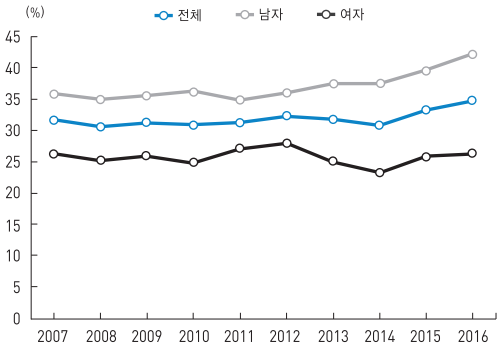
〈표 Ⅲ-2〉 성별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 2005-2016

(%)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흡연율											
전체	28.8	25.3	27.8	27.3	27.5	27.1	25.8	24.1	24.2	22.6	23.9
남자	51.7	45.1	47.8	47.0	48.3	47.3	43.7	42.2	43.2	39.4	40.7
여자	5.7	5.3	7.4	7.1	6.3	6.8	7.9	6.2	5.7	5.5	6.4
음주율											
전체	78.5	74.9	76.5	77.0	79.1	79.3	77.2	77.0	78.2	78.5	79.2
남자	86.5	85.1	85.7	86.1	88.1	88.1	85.8	85.9	86.3	86.6	87.1
여자	70.9	65.2	67.7	68.5	70.5	71.1	69.2	68.8	70.6	70.9	71.6

주: 1) 흡연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2) 음주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술을 1회 이상 마신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그림 Ⅲ-6] 성별 성인 비만율, 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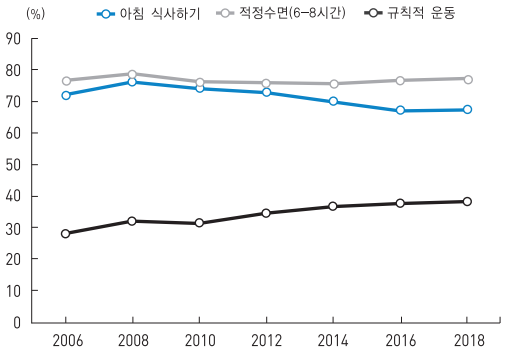


주: 1) 비만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 25kg/㎡ 이상인 인구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6 국민건강통계」, 2017.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증진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건강실천의 방법으로 아침식사 여부, 적정수면 여부, 규칙적 운동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아침식사 실천율은 2008년 76.2%로 가장 높았다가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8년에는 67.3%로 낮아졌다. 하루 6-8시간의

적정수면 실천율은 큰 변화 없이 77%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2006년 28.3%이던 것이 계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38.3%로 높아졌다(그림 Ⅲ-7).

[그림 Ⅲ-7] 아침식사, 적정수면 및 규칙적 운동 실천율, 2006-2018



주: 1) 각 실천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해당 건강관리행동을 평소 실천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06-2016년은 15세 이상이며, 2018년은 13세 이상 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비로 구성된다. 보건의료인력의 지표는 의사 수와 간호사 수로 측정할 수 있다. 인구 10만 명당 전체 의료인 수는 2000년 578명에서 2016년 1,044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000년 154명에서 2016년 230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간호사 수도 341명에서 694명으로 증가하였다(표 Ⅲ-3).

의사인력이 증가하였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실제 환자진료에 임하는 활동의사(practising physicians)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활동의사 수는 229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40명보다 훨씬 적다. 간호사는 의사보다 더 부족하다. 2016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인구 10만 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평균 901명인데, 한국은 680명에 불과하다. 의료인력의 부족은 인력분포의 지역적 불균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과부담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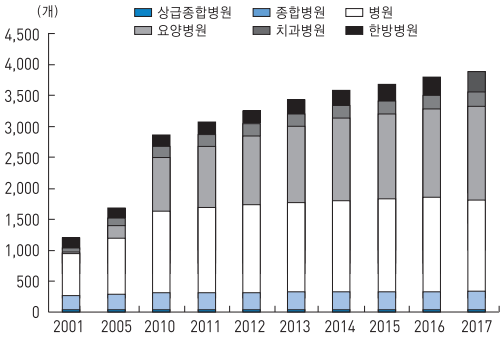
〈표 Ⅲ-3〉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 수, 2000-2016

	2000	2005	2010	2015	2016
면허 의료인					
전체	578	715	857	1,010	1,044
의사	154	177	205	227	230
간호사	341	443	545	664	694
활동 의료인					
의사	130	163	198	224	229
간호사	298	384	461	594	680

주: 1) 전체 면허 의료인 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을 포함함.
2) 활동의사 수와 활동간호사 수는 OECD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8*,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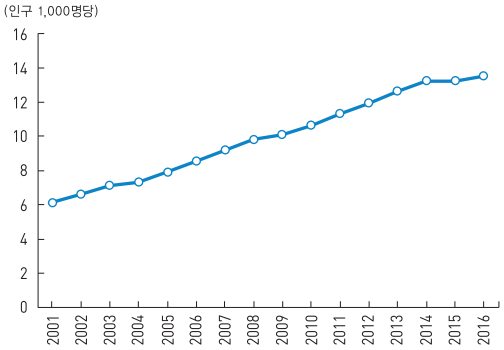
의료시설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의료기관 수와 병상 수가 있다. 병원은 30병상 이상의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규모로는 수천 병상의 상급종합병원도 있고, 기능적으로는 일반병원 이외에 정신병원이나 결핵병원, 요양병원도 있

[그림 Ⅲ-8] 종별 병원 수, 2001-2017



주: 1) 병원은 3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시설규모와 기능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으로 구분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Ⅲ-9]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2001-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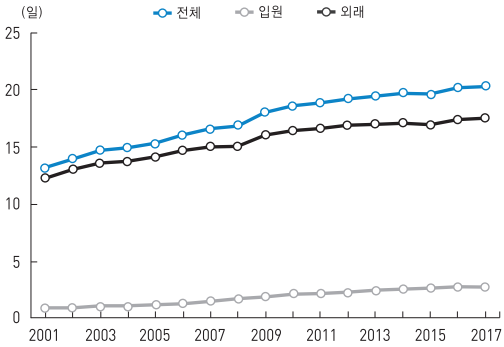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다. 2001년에 1,194개이던 병원 수가 2010년 2,859개, 2017년 3,882개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인구 100만 명당 병원 수는 같은 기간에 25.2개에서 75.5개로 3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림 Ⅲ-8]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처럼 비교적 큰 규모의 병원 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비교적 작은 규모의 병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상 수의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2001년 6.1개에서 2016년 13.5개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그림 Ⅲ-9).

의료서비스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은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 횟수로 파악할 수 있는데, 1990년 7.9일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1년 13.2일, 2010년 18.6일, 2017년 20.3일이 되었다. 국민 1인당 연 2.8일 입원하고 17.5일 외래진료를 받는 셈이다(그림 Ⅲ-10).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의사 진료(상담) 횟수도 가장 많은 편인데, 2016년 기준 한국은 17.0회로 OECD 국가 평균 6.9회의 약 2.5배나 된다.

[그림 Ⅲ-10] 1인당 연간 의료기관방문 횟수, 2001-2017



주: 1) 1인당 연간 의료기관방문 횟수=연간 내원일수÷연평균 건강보험 적용인구.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통계」, 각 연도.

예방보건서비스 이용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건강보험 제도에 따라 모든 국민은 2년마다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을 받는 비율은 아직 높은 편이 아니어서 2016년 기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과 암검진 수검률은 각각 77.7%와 49.2%에 그친다. 2010년에 비해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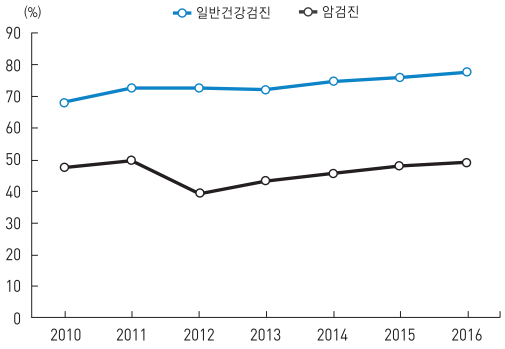
건강검진 수검률은 약 9.5%p 상승하였으나 암검진 수검률은 정체 상태에 있다(그림 Ⅲ-11).

의료공급과 의료이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경상의료비는 1990년 7조 3,000억 원에서 2017년 131조 원이 되었다. 한국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의료비 지출 규모 면에서는 적은 편이지만 증가 속도 면에서는 매우 빠른 편이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17년 기준 한국이 7.6%로 OECD 국가 평균 8.9%보다 낮다. 그렇지만 [그림 Ⅲ-1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빠른 속도로 근접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 1990년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 및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공적 부담의 비율이 40.1%에 불과했으나 이후 계속 확대되어 2017년 기준 58.2%에 달한다. OECD 국가들의 공공의료비 비율이 평균 73.5%와 비교하면 한국은 공공 부담의 비중이 작은 편이다. 결과적으로 병원 이용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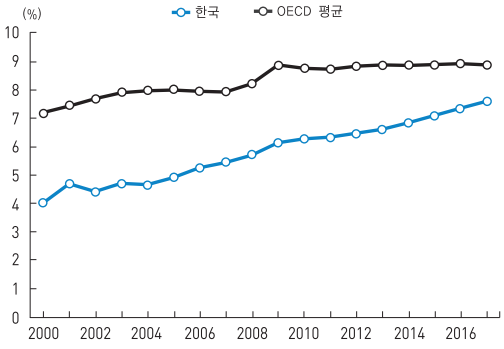
끝으로 의료제도의 성과에 대하여 알아보자. 과거에는 의사나 병원의 수가 많으면 의료체계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 최근에는 치료 결과 건강이 향상되었는지, 의료이용에 만족하는지 등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10-2014년 기간 동안 한국의 유방암 환자 5년 생존율은 85.0%로 같은 시기 OECD 국가 평균 84.7%보다 높다. 같은 기간 대장암 환자 5년 생존율도 한국이 71.6%로 OECD 국가 평균 62.5%에 비해 크게 높다. 불필요한 입원율은 1차 보건의료가 취약하여 만성적 증상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지 않아도 될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입원자 수는 2015년 기준 한국이 308.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236.5명보다 훨씬 많고, 같은 시기 당뇨병

[그림 Ⅲ-1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률, 2010-2016



주: 1) 수검률=수검인원÷대상인원×100.
2)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의 경우 1차 검진 기준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Ⅲ-12] 한국과 OECD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2000-2017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8*, 2018.

입원자 수도 한국이 281.0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37.2명보다 약 두 배나 많다. 즉 의료기술의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는 분야도 있지만 의료제도의 문제로 국민의 건강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제도의 성과는 의료이용자의 평가 또는 서비스 만족도로 측정될 수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 만족도는 1999년 24.5%에서 2008년 54.1%로 상승하였고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8년에는 만족 57.8%, 보통 31.6%, 불만족 10.6%로 나타난다.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로 파악된 의료기관 불만족 사유를 보면, 긴 대기시간(51.5%), 비싼 의료비(49.1%), 치료 결과 미흡(45.9%), 과잉진료(35.8%), 진료 불성실(27.4%) 등이 주요 불만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전문의료인력 부족(15.4%)이나 의료시설 낙후(10.3%) 등에 대해서는 불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진료를 받는 데 오래 기다려야 하고, 진료가 불성실하거나, 의료비 부담은 큰데 치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다수의 환자들이 갖는 불만 요인인 것이다.

환자들의 진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그 자체로 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 대안으로 최근 OECD는 '환자경험조사'를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경험하였는지를 묻는다. OECD 몇몇 국가들이 보고한 최근의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은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환자경험으로 측정한 만족도가 뒤처지는 편이다. 예를 들어 의사와 충분한 진료(상담)시간을 가졌는가에 대하여 유럽 국가들은 모두 우리보다 만족도가 10% 이상 높다. 의사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는가에 대해서도 비교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의사에게 질문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그리고 치료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표 Ⅲ-4).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표 Ⅲ-4〉 OECD 주요 국가의 병원서비스에 대한 환자경험, 2016

(%)

	충분한 진료시간	의사설명 이해용이	의사에게 질문기회	치료방법 결정참여
한국	77.9	87.1	81.7	81.8
일본	39.0	93.4	92.3	-
이스라엘	85.4	89.4	88.0	82.2
에스토니아	86.7	85.8	86.8	79.5
포르투갈	89.6	96.3	91.8	90.9
호주	90.1	-	-	-
뉴질랜드	92.6	89.9	-	86.6
룩셈부르크	95.5	97.4	95.3	95.6
체코	97.2	96.2	94.0	81.8
벨기에	97.5	97.8	97.7	95.1

주: 1) 각 국 만 16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조사대상자 중 진료 시 해당 항목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환자들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8*, 2018.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분포

조병희 (서울대학교)

-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은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 의사, 외과계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서울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외과계 전문의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 병원 수, 요양병원 수, 병상 수는 비수도권과 농어촌에 더 많이 분포되는 경향이 있다.
- 최근 대도시의 병원 수가 증가하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병원 수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이제 의식주 못지않게 삶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생활자원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의료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의하여 관리되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은 대부분 민간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장원리의 영향을 받아서 불균등하게 분포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의 지역별 불균등 분포의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본적 의료인력으로 의사 수와 간호사 수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전문의 중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적은 외과계 전문의의 분포를 살펴볼 것이다. 의료시설로는 병원 수와 병상 수 분포를 살펴보고, 노령화 시대에 긴요한 요양병원의 분포도 살펴볼 것이다. 지역의 구분은 시도별,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의사 수

의사는 의료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력이다. 전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03년에 1.25명에서 2017년 1.94명으로 증가하였다. 의사 수를 시도별로 나누어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표 Ⅲ-5〉와 같다. 의사 수는 모든 시도에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03년의 시도별 의사 수 분포는 상당히 불균등하였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은 1.76명이었고, 광주 1.66명, 대전 1.57명, 부산 1.44명의 분포를 보였으나 9개 도 중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1.0명에 미달하였고, 경북이 0.89명으로 가장 적었다. 세종시의 의사 수가 명목적으로 가장 적지만 이는 도시 형성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생각된다.

2017년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2.92명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 2.39명, 대전 2.36명, 대구 2.24명의 분포를 보였다. 반면

모든 도 지역은 2.0명에 미달하였고, 특히 경북은 1.33명으로 가장 적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비는 2003년 100:50이던 것이 2017년에는 100:46이 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약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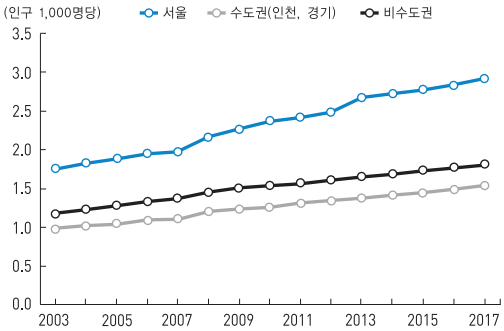
〈표 Ⅲ-5〉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003-2017

	2003	2006	2009	2012	2015	2017
전국	1.25	1.39	1.59	1.70	1.85	1.94
서울	1.76	1.95	2.27	2.48	2.77	2.92
부산	1.44	1.54	1.75	1.96	2.15	2.23
대구	1.42	1.57	1.88	2.00	2.14	2.24
인천	1.02	1.12	1.24	1.31	1.49	1.59
광주	1.66	1.77	1.86	2.06	2.24	2.39
대전	1.57	1.78	1.98	2.09	2.24	2.36
울산	0.95	1.07	1.19	1.26	1.39	1.48
세종	-	-	-	0.76	0.75	0.85
경기	0.98	1.08	1.25	1.35	1.45	1.53
강원	1.13	1.34	1.47	1.53	1.63	1.70
충북	1.06	1.19	1.30	1.35	1.46	1.52
충남	1.04	1.14	1.26	1.32	1.40	1.46
전북	1.26	1.47	1.64	1.68	1.86	1.94
전남	0.92	1.13	1.37	1.46	1.54	1.63
경북	0.89	1.01	1.13	1.20	1.27	1.33
경남	0.93	1.07	1.27	1.35	1.46	1.58
제주	0.95	1.12	1.35	1.48	1.64	1.69

주: 1)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활동의사 수÷주민등록인구)×1,000.
2) 연말 기준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사회경제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통상적 인식이 의료자원에도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 수 분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림 Ⅲ-13]을 보면 2003년에서 2017년까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수도권,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 가장 적었다.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의 비는 2003년 100:56:67이던 것이 2017년에는 100:53:62가 되었다. 지난 14년 동안 의사인력은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지역보다 서울에 집중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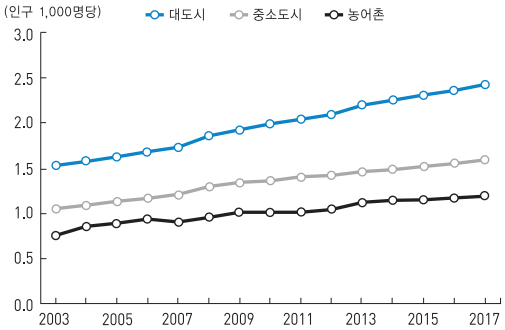
[그림 Ⅲ-13]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003-2017



주: 1)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활동의사 수÷주민등록인구)×1,000.
2) 연말 기준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서울과 다른 광역시를 묶어서 대도시로 하고, 도의 시 지역을 중소도시로, 군 지역을 농어촌으로 분류해 의사 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Ⅲ-14]]와 같다. 2003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비가 100:69:50이던 것이 2017년에는 100:66:49로 변화하였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비하여 대도시로 의사가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4]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003-2017



주: 1)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활동의사 수÷주민등록인구)×1,000.
2) 연말 기준임.
3) 대도시는 서울 및 6개 광역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 지역, 농어촌은 '도'의 '군' 지역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이상을 종합하면 의사 수는 모든 지역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보다 서울에 더욱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이란 표현이 정확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서울을 제외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의사 수는 비수도권보다 적었다. 다만 이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울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지역별 의료불균형 분포가 초래하는 의료공급 부족에 개인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외과계 전문의 수

의사들은 의과대학 졸업 후에 일반의로 활동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다. 그런데 최근 의사들 사이에는 전문과목별로 인기도가 다르고, 특히 외과나 산부인과 계열 전문과에 지원자가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외과의사는 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의학 중에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외과의사의 공급이 부족하여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면 일부지역은 심각한 필수의료의 공백 사태에 처할 수도 있다.

외과계열 의사들의 시도별 분포는 〈표 Ⅲ-6〉과 같다. 2003년에 인구 1만 명당 외과계 전문의 수는 광주가 2.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2.54명, 서울 2.51명, 대구 2.36명 등이었다. 도 지역은 대개 2.25명 이하인데 경기도가 1.81명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2008년에 3.18명으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고 이후 계속 1위를 유지하여 2017년에는 4.64명이 되었다. 2017년에는 광역시 중에서 부산, 대구, 광주 등이 4.0명 이상이었고, 반면 인천과 울산은 각각 2.98명 2.84명으로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였다. 도 지역에서는 강원 3.04명, 전북 3.43명, 전남 3.24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충남과 경기가 각각 2.69명, 2.64명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2003년에는 인구 1만 명당 외과계 전문의 수 최고지역과 최저지역의 비가 100:70이던 것이 2017년에는 100:57이 되었다. 즉, 2003년에 비하여 2017년에는 외과계 전문의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가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외과계 전문의 수의 분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것이 [그림 Ⅲ-15]이다. 서울, 서울 제외 수도권, 비수도권의 인구 1만 명당

〈표 Ⅲ-6〉 시도별 인구 1만 명당 외과계 전문의 수, 2003-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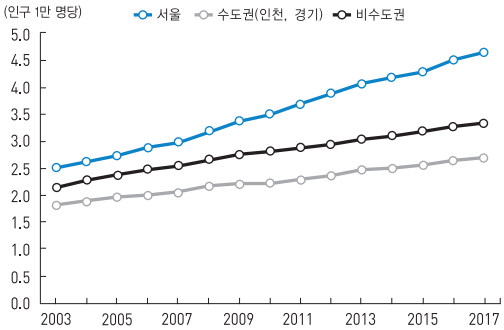
	2003	2006	2009	2012	2015	2017
전국	2.14	2.43	2.72	2.96	3.21	3.38
서울	2.51	2.88	3.36	3.88	4.28	4.64
부산	2.34	2.68	2.99	3.50	3.84	4.03
대구	2.36	2.73	3.29	3.62	3.89	4.06
인천	1.92	2.08	2.42	2.43	2.72	2.98
광주	2.58	2.81	2.87	3.48	3.90	4.09
대전	2.54	2.96	3.20	3.31	3.64	3.89
울산	1.91	2.11	2.31	2.35	2.56	2.84
세종	-	-	-	1.77	1.52	1.57
경기	1.81	1.99	2.18	2.35	2.52	2.64
강원	2.23	2.53	2.68	2.87	2.94	3.04
충북	1.88	2.23	2.51	2.59	2.79	2.87
충남	1.93	2.22	2.39	2.47	2.58	2.69
전북	2.25	2.62	2.80	2.87	3.24	3.43
전남	1.89	2.39	2.75	2.92	3.24	3.24
경북	2.00	2.26	2.53	2.62	2.73	2.80
경남	1.87	2.24	2.41	2.52	2.71	2.94
제주	1.99	2.36	2.65	2.76	3.16	3.18

주: 1) 인구 1만 명당 외과계 전문의 수=(외과계 활동전문의 수÷주민등록 인구)×10,000.
2) 외과계 전문의에는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포함되었음.
3) 연말 기준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외과계 전문의 수의 비는 2003년 100:73:85에서 2017년 100:58:72가 되었다. 서울과 여타지역간의 불균형 분포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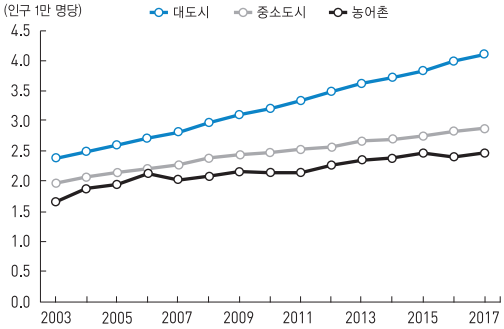
외과계 전문의 수의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분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Ⅲ-16). 2003년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인구 1만 명당 외과계 전문의 수 비가 100:83:70이던 것이 2017년에 100:70:60이 되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보다 서울에 외과계 전문의가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5]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인구 1만 명당 외과계 전문의 수, 2003-2017



주: 1) 인구 1만 명당 외과계 전문의 수=(외과계 활동전문의 수÷주민등록 인구)×10,000.
2) 외과계 전문의에는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포함되었음.
3) 연말 기준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그림 Ⅲ-16]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인구 1만 명당 외과계 전문의 수, 2003-2017



주: 1) 인구 1만 명당 외과계 전문의 수=(외과계 활동전문의 수÷주민등록 인구)×10,000.
2) 외과계 전문의에는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포함되었음.
3) 연말 기준임.
4) 대도시는 서울 및 6개 광역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 지역, 농어촌은 '도'의 '군' 지역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간호사 수

최근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의 감염관리가 강화되고, 간호와 간병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증가하는 간호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2003년에 1.80명이던 것이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3.59명이 되어 약 2.0배가 증가하였다. 간호사가 의사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간호사의 시도별 분포 추세를 나타낸 것이 〈표 Ⅲ-7〉이다. 2003년에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광주로 2.61명이었고 그 다음이 경북 2.42명, 서울 2.20명 순이었다. 광역시의 경우,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은 1.5명-2.0명 수준이었으며, 경북을 제외한 도 지역은 1.3-2.2명 수준의 분포를 보였다. 의사 수 분포와 달리 간호사는 광역시와 도별 분포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대부분의 시도에서 간호사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광주는 줄곧 간호사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광주가 5.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67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여타 광역시들은 3.2-4.6명 수준이었고, 도 지역은 2.4-4.0명 수준이었다. 간호사 수가 가장 많은 시도와 가장 적은 시도의 비는 2003년에 100:50이던 것이 2017년에는 100:47로 지역불균형이 약간 심화되었다.

〈표 Ⅲ-7〉 시도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 2003-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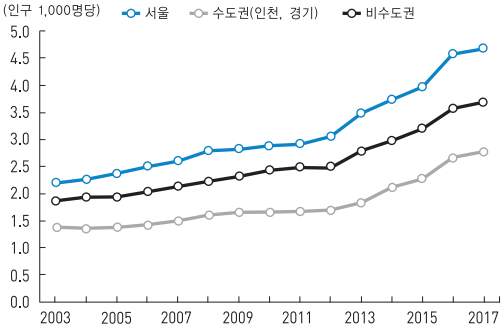
	2003	2006	2009	2012	2015	2017
전국	1.80	1.96	2.23	2.36	3.07	3.59
서울	2.20	2.50	2.82	3.06	3.97	4.67
부산	1.72	1.99	2.30	2.89	3.92	4.60
대구	2.00	2.26	2.54	2.58	3.62	4.07
인천	1.41	1.46	1.67	1.69	2.55	3.22
광주	2.61	2.80	3.15	3.49	4.54	5.16
대전	1.90	2.17	2.54	2.71	3.31	4.01
울산	1.57	1.75	2.05	2.10	2.86	3.40
세종	-	-	-	0.68	0.63	0.51
경기	1.38	1.43	1.65	1.69	2.21	2.67
강원	2.14	2.38	2.47	2.59	3.10	3.41
충북	1.36	1.57	1.71	1.77	2.35	2.57
충남	1.32	1.49	1.58	1.64	2.13	2.41
전북	1.72	2.06	2.39	2.51	3.13	3.70
전남	1.94	2.32	2.86	2.90	3.66	3.98
경북	2.42	1.91	2.19	2.30	2.77	3.22
경남	1.54	1.79	2.01	2.27	2.91	3.61
제주	2.16	2.33	3.08	2.78	3.57	3.75

주: 1)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활동간호사 수÷주민등록인구)×1,000.
2) 연말 기준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간호사의 수도권 집중 여부를 나타낸 것이 [그림 Ⅲ-17]이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간호사 수 분포는 줄곧 서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비수도권, 서울 제외 수도권이 가장 적었다.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의 비는 2003년에 100:63:84이던 것이 2017년에는 100:59:79로 변화하였다. 서울에 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간호사 수 분포가 상대적으로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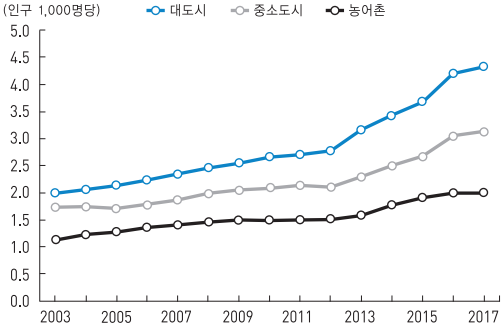
간호사 수의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분포

[그림 Ⅲ-17]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 2003-2017



주: 1)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활동간호사 수÷주민등록인구)×1,000.
2) 연말 기준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그림 Ⅲ-18]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 2003-2017



주: 1)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활동간호사 수÷주민등록인구)×1,000.
2) 연말 기준임.
3) 대도시는 서울 및 6개 광역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지역, 농어촌은 '도'의 '군'지역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를 나타낸 것이 [그림 Ⅲ-18]이다. 간호사 수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대도시가 가장 많고, 중소도시, 농어촌의 순으로 분포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의 비는 2003년 100:88:56에서 2017년 100:73:46이 되어 대도시에 비하여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간호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해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병원 수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인의원은 의사 1-2명이 외래환자 진료에 주력한다. 반면 병원은 원내 입원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시설과 보조 인력을 갖춘 비교적 큰 규모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30병상 이상을 갖추고, 입원실,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신생아실, 격리병실 등 기능적으로 특화된 치료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00병상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경우 종합병원이라 한다. 비교적 중증의 질환이나 사고를 치료하려면 입원설비를 갖춘 병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병원의 존재는 지역주민의 중요한 생활기반 요소가 된다.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병원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2003년에 2.38개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 3.59개가 되었다가 2017년에는 3.50개로 약간 감소되었다.

병원 수의 시도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 〈표 Ⅲ-8〉이다. 2003년에 인구 10만 명당 병원 수는 광주가 3.58개로 가장 많았고, 울산 2.89개, 부산 2.76개였다. 도 지역에서는 전남 3.47개, 경남 3.44개로 비교적 많았고 제주가 1.45개로 가장 적었다. 서울은 1.82개로 시도별 순위로는 중간 정도였다. 광역시와 도 지역 간 병원 수의 차

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강원, 전남, 경남 등은 광역시보다도 더 많은 병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광주가 6.56개로 월등하게 많았고, 전남 5.11개, 대구 5.01개, 전북 4.96개, 부산 4.81개의 순이었으며, 서울은 2.82개였고 제주가 1.98개로 가장 적었다. 인구 10만 명당 병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비는 2003년 100:40이던 것이 2017년에는 100:30이 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시도별 병원 수의 불균형 분포는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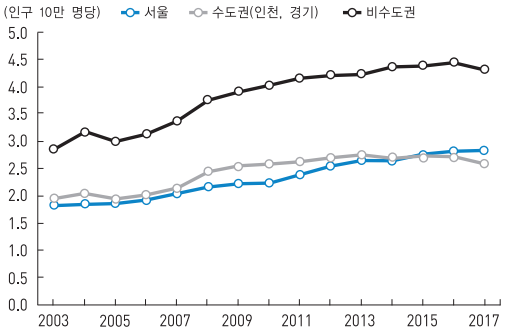
〈표 Ⅲ-8〉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병원 수, 2003-2017

	2003	2006	2009	2012	2015	2017
전국	2.38	2.57	3.16	3.42	3.56	3.50
서울	1.82	1.93	2.21	2.53	2.73	2.82
부산	2.76	2.99	3.64	4.13	4.50	4.81
대구	2.81	3.49	4.38	4.83	5.06	5.01
인천	1.87	1.83	2.36	2.36	2.53	2.68
광주	3.58	3.55	4.74	6.13	6.59	6.56
대전	2.58	2.39	2.83	3.02	3.16	3.66
울산	2.89	3.11	3.59	4.10	4.00	4.29
세종	-	-	-	0.88	0.47	0.36
경기	1.97	2.05	2.59	2.78	2.76	2.57
강원	3.14	3.12	3.70	4.16	4.13	4.06
충북	2.08	2.34	3.14	3.13	3.28	3.20
충남	2.40	2.43	2.90	3.06	3.08	2.74
전북	2.71	3.21	4.26	4.54	4.97	4.96
전남	3.47	4.01	4.91	5.24	5.55	5.11
경북	2.39	2.83	3.41	3.52	3.81	3.64
경남	3.44	3.81	4.98	4.94	4.93	4.64
제주	1.45	1.61	1.95	2.06	2.24	1.98

주: 1) 인구 10만 명당 병원 수=(병원 수÷주민등록인구)×100,000.
2) 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이 포함되었음. 단, 2003년 자료의 경우 요양병원이 병원에 포함되어 집계되었음.
3) 연말 기준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병원의 수도권-비수도권 분포를 살펴보면, 2003-2017년 기간 동안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 수가 계속해서 월등하게 많은 분포를 보였고, 서울과 서울 제외 수도권은 비슷하게 분포되는 양상을 보였다. 비수도권, 수도권, 서울의 병원 수 비는 2003년에 100:69:64이던 것이 2017년에는 100:60:66이 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병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Ⅲ-19).

[그림 Ⅲ-19]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인구 10만 명당 병원 수, 2003-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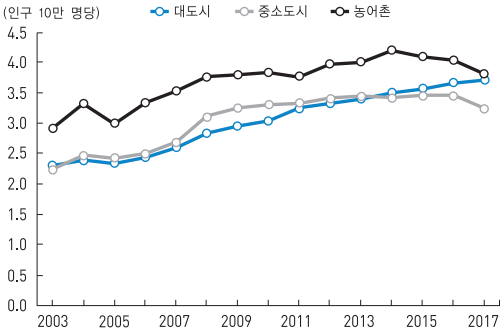


주: 1) 인구 10만 명당 병원 수=(병원 수÷주민등록인구)×100,000.
2) 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이 포함되었음. 단, 2003년, 2004년 자료의 경우 요양병원이 병원에 포함되어 집계되었음.
3) 연말 기준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할 경우 병원의 분포는 농어촌 지역이 가장 많고,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비슷한 분포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대도시의 병원 수가 증가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병원의 절대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

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병원 수 비는 2003년에 100:98:127이던 것이 2017년에는 100:88:102가 되어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지역불균형은 심화되었다(그림 Ⅲ-20).

[그림 Ⅲ-20]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인구 10만 명당 병원 수, 2003-2017



주: 1) 인구 10만 명당 병원 수=(병원 수÷주민등록인구)×100,000.
2) 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이 포함되었음. 단, 2003년, 2004년 자료의 경우 요양병원이 병원에 포함되어 집계되었음.
3) 연말 기준임.
4) 대도시는 서울 및 6개 광역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 지역, 농어촌은 '도'의 '군' 지역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면적은 작지만 대형병원들이 많고 병원까지의 이동시간도 짧기 때문에 병원 수가 많지 않아도 접근성의 문제가 크지 않다. 반면 농어촌은 면적은 넓고, 병원까지의 이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병원이 많이 설립되어야 의료기관 접근성이 보장된다. 최근 일부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이 지역 병원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어 향후 지역별 병원 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양병원 수

인구의 노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노령화에 따른 치매노인의 증가나 신체기능 저하에 의한 노인수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장기요양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많은 요양시설이 설립되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요양병원 수는 2005년에 0.42개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2.95개가 되어 12년 사이에 약 7배나 증가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요양병원 수의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서울이 0.11개로 가장 적었고, 전북이 0.85개로 가장 많았다. 2017년의 경우에 서울은 1.17개로 여전히 가장 적고, 부산이 5.68개로 가장 많다. 광역시는 광주 4.17개, 대전 3.46개, 대구 2.50개, 인천 2.44개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도 지역은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이 모두 4개 이상의 분포를 보여 광역시보다는 도 지역에 더 많은 요양병원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도 지역의 노령화 지수가 더 높아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서울 등 대도시에는 기존의 의료기관들이 포화되어 새로운 의료기관이 진입하기 어려운 사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 수가 가장 많은 시도와 가장 적은 시도의 비는 2005년 100:13이던 것이 2017년 100:21이 되었다(표 Ⅲ-9).

〈표 Ⅲ-9〉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요양병원 수, 2005-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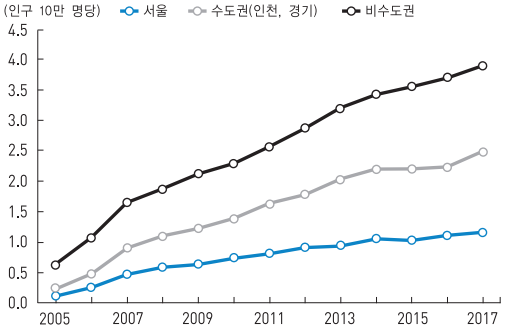
	2005	2009	2013	2017
전국	0.42	1.56	2.41	2.95
서울	0.11	0.64	0.95	1.17
부산	0.77	2.74	4.88	5.68
대구	0.44	1.53	2.36	2.50
인천	0.19	1.29	1.94	2.44
광주	0.36	1.19	2.44	4.17
대전	0.69	2.29	3.13	3.46
울산	0.83	2.51	3.55	3.69
세종	-	-	4.91	2.50
경기	0.28	1.21	2.06	2.50
강원	0.33	1.19	1.69	1.94
충북	0.60	1.64	2.48	2.95
충남	0.71	2.21	3.08	4.25
전북	0.85	3.18	4.27	4.42
전남	0.46	1.93	3.09	4.27
경북	0.74	2.73	3.67	4.46
경남	0.60	1.88	2.79	4.08
제주	0.36	1.07	1.18	1.52

주: 1) 인구 10만 명당 요양병원 수=(요양병원 수÷주민등록인구)×100,000.
2) 연말 기준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요양병원의 수도권-비수도권 분포를 살펴보면 비수도권에 요양병원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다음으로 수도권, 서울의 순으로 분포되는 양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05년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의 요양병원 분포 비가 100:243:573이던 것이 2017년에는 100:213:335가 되었다(그림 Ⅲ-21). 비수도권에 요양병원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요양병원 증가속도는 서울과 수도권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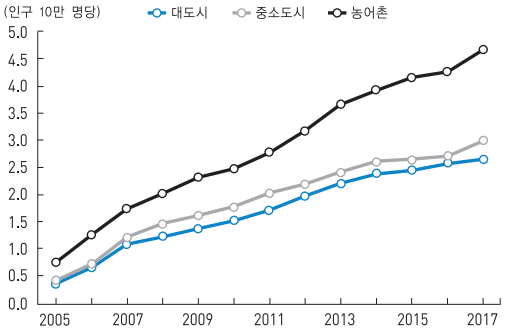
요양병원의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분포를 살펴보면 농어촌에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소도시, 대도시 순이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요양병원 분포의 비를 계산하면 2005년 100:120:214이던 것이 2017년 100:114:177이 되어 지역별 불균형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그림 Ⅲ-22).

[그림 Ⅲ-21]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인구 10만 명당 요양병원 수, 2005-2017



주: 1) 인구 10만 명당 요양병원 수=(요양병원 수÷주민등록인구)×100,000.
2) 연말 기준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그림 Ⅲ-22]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인구 10만 명당 요양병원 수, 2005-2017



주: 1) 인구 10만 명당 요양병원 수=(요양병원 수÷주민등록인구)×100,000.
2) 연말 기준임.
3) 대도시는 서울 및 6개 광역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 지역, 농어촌은 '도'의 '군' 지역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병상 수

병원 수는 병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별로 의료기관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지표이다. 반면 병상 수는 의료기관이 총체적으로 몇 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지표이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전국적으로 2003년 7.12개이던 것이 2017년에는 13.55개가 되었다. 이것은 OECD 국가 평균 4.7개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그만큼 병상이 과다하게 분포되어 있고, 입원을 자주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한다는 의미이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의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3년에 광주가 9.80개로 가장 많았고, 강원 9.65개, 전남 9.17개, 경남 8.94개, 대전 8.85개, 전북 8.52개의 순이었으며, 서울은 6.05개로 하위권이었다. 제주는 4.48개로 가장 적었다. 2017년의 지역별 병상 분포를 보면 광주가 28.19개로 가장 많고, 전북 21.56개, 전남 21.52개, 부산 20.39개, 경남 18.33개, 경북 16.66개, 대전 15.98개의 분포를 보였다. 서울은 8.82개로 하위권이었다. 제주는 7.40개로 가장 적었다. 시도별로 병상 수가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비는 2003년에 100:46에서 2017년 100:26이 되었다. 해당 기간 시도별 병상 분포의 불균형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표 Ⅲ-10).

수도권-비수도권의 병상 분포를 살펴보면 비수도권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이 분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Ⅲ-23).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의 병상 분포의 비는 2003년 100:103:132이던 것이 2017년에 100:118:196가 되어 비수도권으로의 병상 분포 불균형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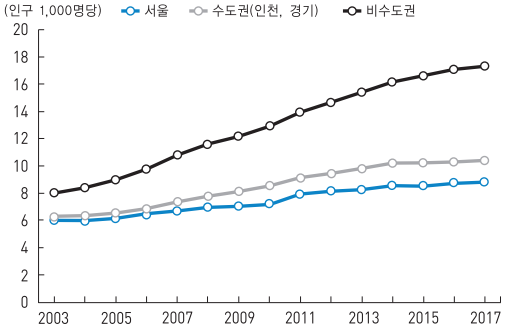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병상 분포를 보면 농어촌으로의 병상 과다분포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그림 Ⅲ-24).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병상 분포 비가 2003년에 100:105:103이던 것이 2017년에는 100:99:115가 되어 농어촌에 더 많은 병상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표 Ⅲ-10〉 시도별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2003-2017

	2003	2006	2009	2012	2015	2017
전국	7.12	8.28	9.96	11.81	13.09	13.55
서울	6.05	6.49	7.03	8.14	8.47	8.82
부산	7.81	9.79	12.78	16.72	19.54	20.39
대구	6.75	8.45	10.84	12.85	14.59	14.70
인천	7.04	7.32	8.84	10.06	10.76	11.33
광주	9.80	10.58	13.51	19.15	25.45	28.19
대전	8.85	10.21	12.16	14.13	15.49	15.98
울산	6.23	8.03	9.64	11.37	12.22	13.30
세종	-	-	-	9.09	5.83	4.79
경기	6.02	6.79	8.00	9.30	10.14	10.19
강원	9.65	10.21	10.73	11.87	12.07	11.59
충북	7.66	8.94	10.38	12.17	12.81	13.54
충남	7.06	8.12	10.22	11.93	13.17	13.64
전북	8.52	10.76	13.78	17.48	20.48	21.56
전남	9.17	11.24	14.95	18.03	21.00	21.52
경북	7.00	9.53	11.68	13.66	15.88	16.66
경남	8.94	11.35	14.04	15.83	16.99	18.33
제주	4.48	5.06	7.02	7.26	7.77	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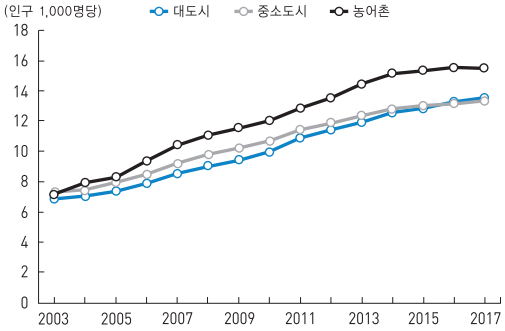
주: 1)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병상 수÷주민등록인구)×1,000.
2) 연말 기준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그림 Ⅲ-23]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2003-2017



주: 1)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병상 수÷주민등록인구)×1000.
2) 연말 기준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그림 Ⅲ-24]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2003-2017



주: 1)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병상 수÷주민등록인구)×1000.
2) 연말 기준임.
3) 대도시는 서울 및 6개 광역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 지역, 농어촌은 '도'의 '군' 지역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서울은 인구 당 의사 수, 외과계 전문의 수 및 간호사 수가 시도 지역 중 가장 많았고, 인구 당 의료기관수는 중간 정도였으며, 인구 당 병상 수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이나 중소도시, 농어촌에는 병원이 수적으로는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의료인력은 상대적으로 적어 병상의 상당 부분이 비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역별 의료이용통계」를 활용하여 병상 수별로 내원일수(의료이용 횟수)와 진료비를 계산해보면, 2017년 인구 당 병상 수가 가장 높았던 광주는 병상 당 내원일수가 816일, 진료비가 5,671만 원으로 나타나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서울은 병상 당 내원일수가 2,238일, 진료비는 1억 5,602만 원으로 광주보다 약 2.8배 많았다. 서울은 병상 수는 적은 반면, 병상 당 의료인력은 많고 진료비는 높아서 의료의 치료난이도가 높음을 시사해준다.

의료자원의 지역별 분포를 종합하면, 의사 등 의료인력은 서울과 대도시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고, 병원이나 병상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의료인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시설만 많이 늘어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휴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병원이 생존을 위하여 과잉진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자원의 지역별 적정 분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돌봄의 사회화 동향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돌봄이 필요한 80세 이상 노인의 증가, 혼자 살거나 노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가구의 증가, 그리고 노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는 향후 사회적 노인 돌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비율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노인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치매질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도입된 이래 등급 인정자는 21만여 명에서 2017년 약 59만 명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도 8,300여 개소에서 2만 여 개소로 증가하였다.
- 노인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노인 돌봄 서비스는 지난 10여 년간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기대된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경제 발전으로 인한 풍족한 영양공급, 위생적 환경 개선은 인간에게 장수의 꿈을 달성하게 하였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대 62.3세에서 2000년 76.0세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82.1세로 장수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기대수명의 증가는 노인인구 규모를 증가시켜 2018년 현재 738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5년에는 1,0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대수명과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과 정신적 기능 저하를 갖게 되는 인구의 규모를 증가시키고, 이들에 대한 돌봄[1] 필요성은 높아졌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졌으며, 과거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하던 노인 돌봄은 점차 사회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노인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노인의 건강과 기능상태의 변화, 그리고 지난 10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이용자 규모, 서비스의 공급 확대, 그리고 재정 확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의 역할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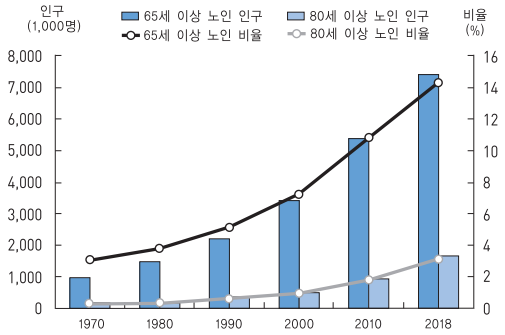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규모가 증가한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 노인 가구형태와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서 시작된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70년 3.1%에서 2000년 7.2%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14.3%까지 급격히 높아졌다. 65세

1) '돌봄'은 영어의 케어(care)를 의미하는 용어로 건강이나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의 도움을 의미하며, 보호, 요양 또는 수발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상 노인인구의 규모는 1970년 99만 명에서 2018년 738만 명으로 약 7배 이상 증가하였다. 80세 이상의 노인은 동일 기간 전체 인구의 0.3%에서 3.2%로 높아졌으며, 규모는 10만 명에서 164만 명으로 약 16배가 증가하였다. 80세 이상 노인의 증가는 돌봄이 필요한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그림 Ⅲ-25).

[그림 Ⅲ-25] 노인 인구 및 비율, 1970-2018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노부모 돌봄은 자녀의 의무이자 역할로서 생각되며, 최근에도 상당부분 자녀가 노부모를 보살피고 있다. 하지만 핵가족화로 인한 가구 구조의 변화는 과거 자녀가 노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직접적으로 수발하는 돌봄 형태를 줄어들게 하였다. 점차적으로 노인 혼자서 살거나 노부부가 같이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감소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에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19.7%였으나 2017년에는 23.6%로 증가하였으며,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 비율은 동일 기간 3.9%p 감소하였다(표 Ⅲ-11).

〈표 Ⅲ-11〉 노인의 가구형태별 구성비율, 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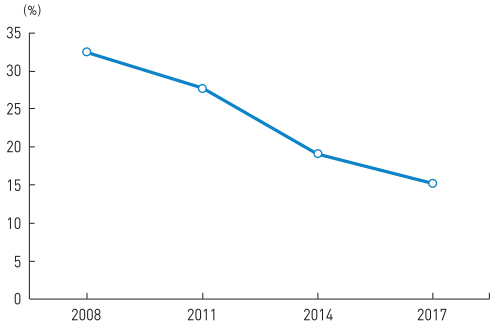
	2008	2011	2014	2017
노인독거가구	19.7	19.6	23.0	23.6
노인부부가구	47.1	48.5	44.5	48.4
자녀동거가구	27.6	27.3	28.4	23.7
기타 가구	5.6	4.6	4.0	4.4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노인 가구형태의 변화는 노인의 자발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노인 중 자녀동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 32.5%였으나, 2017년에는 15.2%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그림 Ⅲ-26). 이는 과거에는 노년기에 경제, 건강, 정서적 수발을 받기 위해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였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자녀로부터의 직접적 수발 가능성 감소, 노인의 경제력 증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제도의 확대 등으로 인해 노인의 가치관이 변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가족 내 노인 돌봄은 며느리, 딸, 아내 등 여

[그림 Ⅲ-26] 노인의 자녀동거 필요 비율, 2008-2017



주: 1)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성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여성의 경제 및 사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내 노인 돌봄은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전적으로 가족이 담당해오던 노인 돌봄은 점차적으로 사회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노인 돌봄에서 사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은 현 베이비부머 세대가 생각하는 노부모 돌봄 형태에서도 나타난다. 1955–1963년 출생한 베이비부머는 노부모가 돌봄을 필요로 할 경우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요양병원을 적극 활용할 의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2%로 매우 적다(표 Ⅲ–12). 이는 부모를 직접 수발하지 않고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던 과거 인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결과이다.

〈표 Ⅲ–12〉 베이비부머의 (배우자)부모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의향, 20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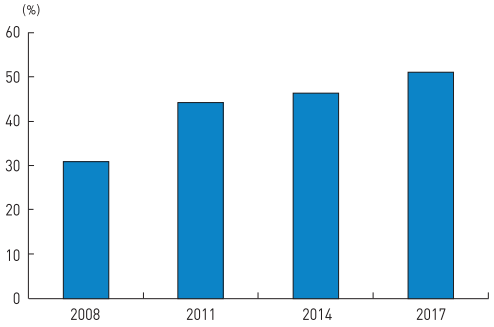
	시설 서비스	재가 서비스	요양 병원	미이용	계
전체	49.2	22.4	22.2	6.2	100.0
1955-1959년생	49.8	24.0	19.9	6.3	100.0
1960-1963년생	48.6	20.7	24.6	6.1	100.0

주: 1)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2,41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2010.

노인의 건강과 기능상태 변화

노인의 건강과 기능상태 악화는 돌봄을 필요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장수노인이 증가하면서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오랜 기간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노인이 증가해 이른바 '유병장수시대'가 되었다.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2008년에 65세 이상 노인의 30.7%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51.0%로 증가하였다(그림 Ⅲ–27).

[그림 Ⅲ–27] 노인의 복합만성질환 이환율, 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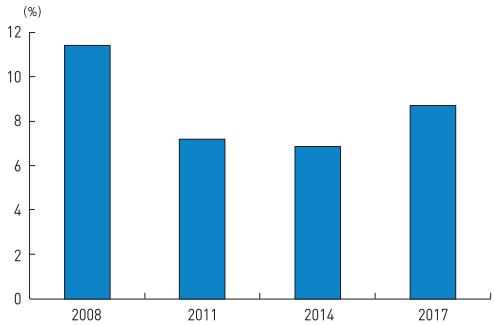
주: 1)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복합만성질환이환율은 조사대상자 중 3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스스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게 된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활동으로 옷 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식사하기, 누웠다가 일어나 방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출입, 대소변 조절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노인실태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 중 1개 이상 제한을 갖는 노

인의 비율은 2008년 11.4%에서 2014년 6.9%까지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8.7%로 증가하였다(그림 Ⅲ-28).

[그림 Ⅲ-28]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율, 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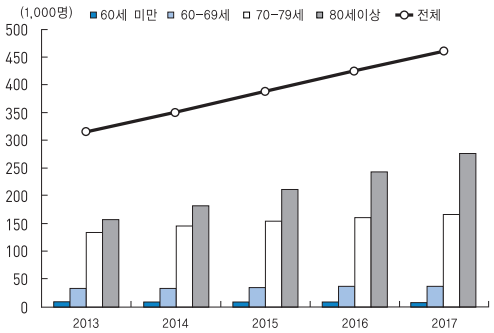


주: 1)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율은 조사대상 노인 중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 중 1개 이상 제한이 있는 노인의 비율임.
3)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옷 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놓은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대소변 조절하기'의 항목으로 구성됨.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치매는 질환의 특성상 치료 이외의 상당 수준의 돌봄을 요한다. 과거에는 노화로 인해 발생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인식되어 병의원의 진료조차 받지 않았으나, 최근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치매진료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치매진료자 수는 31만 5,219명이었으나 2017년 45만 9,421명으로 1.5배 증가하였다. 80세 이상 치매진료자는 동일 기간 동안 1.8배 증가하였다(그림 Ⅲ-29).

치매진료자 수는 지난 5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5년 추정된 치매환자 수 예측 결과(64만 8,223명)와 비교할 때 59.6% 수준으로 향후 치매진료자 수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중앙치매센터 발표에 따르면 치매환자 수는 2020년 84만 명, 2030년 127만 명, 2040년 196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Ⅲ-29] 연령별 치매진료자 수, 2013-2017



주: 1) 국민관심질병 중 연령별 치매질환 환자 수임.
2) 연령별 환자는 진료비 명세서에 기재된 수진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나이이며, 진료시점에 따라 중복 집계되어 연령별 환자 수 합계와 전체 환자 수가 차이 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 2018.10.18.

노인 돌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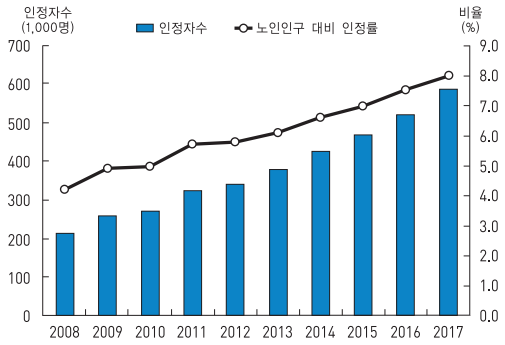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 독일 등 이미 높은 수준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은 국가차원의 노인 돌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동안 가족이 전담하던 노인 돌봄을 사회보험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가입 대

상인 사회보험이며,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권한은 제도 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인정조사(장기요양욕구 상태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인정자로 판정되어야 급여이용자격이 부여된다. 인정자는 1-5등급[2]으로 구분되는데 1등급이 가장 요양필요도가 높은 등급이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등급으로 운영되다가 2014년부터 5등급으로 확대·전환되었다.

지난 10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자격자(인정자)는 2008년 21만여 명에서 2017년 약 59만 명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인정자 비율이 4.2%에서 8.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그림 Ⅲ-30).

[그림 Ⅲ-30]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및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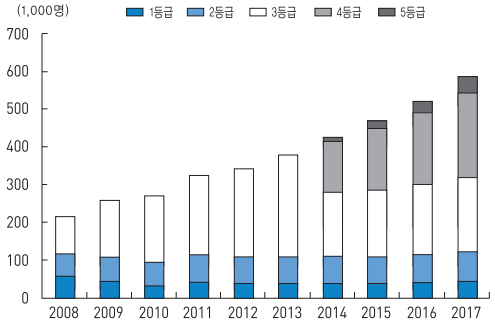
주: 1) 인정자 수는 등급 내 인정자를 기준으로 함.
2) 해당 연도 말 현재 인정자격 유지자 기준임(사망 건 제외).
3) 인정률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인정자 수 비율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8.

2)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8년 1월부터 장기요양 1-5등급은 아니지만,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장기요양인정자의 등급분포를 살펴보면 요양필요도가 높은 1-2등급의 규모는 2008년 11만 5,783명 이후 다소 증감은 있지만 11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요양필요도가 낮은 3-5등급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3등급의 규모는 2008년 9만 8,000여 명에서 2013년 26만 9,000여 명까지 확대되었다(그림 Ⅲ-31).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과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이다. 2014년 등급체계를 5등급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꾸준히 대상자 규모가 증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5의 사회보험으로서 노인돌봄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있었다. 가족이 전적으로 치매노인을 돌보는 데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사회적 제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자

[그림 Ⅲ-3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인정자 수, 2008-2017



주: 1)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3등급으로 구분되었다가 2014년부터 4, 5등급이 추가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각 연도.

중 치매노인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도 초기인 2008년에는 전체 인정자 중 치매질환자 비중이 31.3%였으나 2017년에는 42.9%로 증가하였다(표 Ⅲ-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주요 돌봄 제도로 확대되고 있다.

〈표 Ⅲ-1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치매질환자 인정률, 2008-20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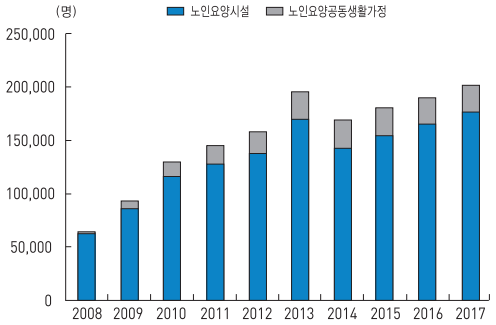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전체	31.3	28.6	31.9	35.8	39.9	42.9
1등급	40.0	34.3	35.5	38.0	43.5	48.3
2등급	38.6	36.2	36.4	37.8	42.0	45.3
3등급	21.9	24.8	29.9	34.6	38.2	40.9
4등급	-	-	-	32.1	33.4	35.2
5등급	-	-	-	83.9	81.8	83.2

주: 1) 인정률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중 '치매'와 '치매 및 중풍'에 해당하는 등급별 인정자의 비율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각 연도.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인정자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시설급여는 시설규모에 따라 10인 이상은 노인요양시설, 5-9인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로 구분되며, 서비스로는 노인이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서비스, 일정기간 이내에 한시적으로 입소하여 생활하는 단기보호서비스가 있다. 재가급여는 인정자의 집을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가 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시설급여 이용자 규모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6만 4,000여 명에서 2017년 20만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Ⅲ-32).

[그림 Ⅲ-3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유형별 이용자 수, 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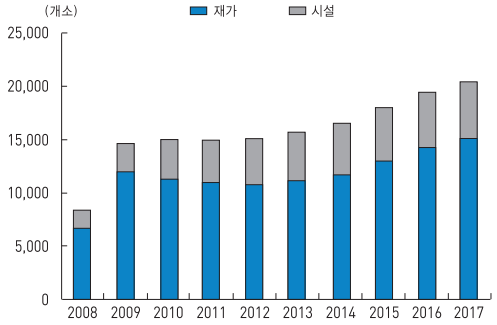
주: 1) 2008-2013년 노인요양시설에는 현행법, 구법, 단기보호전환,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등이 포함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각 연도.

노인 돌봄 제공 기관 및 인력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자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공기관과 인력이 크게 증가했다. 2008년 장기요양기관은 8,318개소였으나 2017년 2만 377개소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동일 기간 1,700개소에서 5,304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6,618개소에서 15,073개소로 증가하였다(그림 Ⅲ-33).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요양보호사 인력이 2008년 11만 3,756명에서 2017년 34만 624명으로 약 3배 증가하였으며, 동일 기

[그림 Ⅲ-33] 시설 및 재가 급여 장기요양기관 수, 2008-2017



주: 1) 급여유형별 중복이 제거된 값임.
2) 해당 연도 말 기준 지정 운영되고 있는 기관 수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각 연도.

간 사회복지사는 4,195명에서 1만 8,535명으로, 간호조무사는 2,373명에서 9,84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Ⅲ-14). 반면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증가 규모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돌봄에서 의료전문서비스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표 Ⅲ-14〉 장기요양인력, 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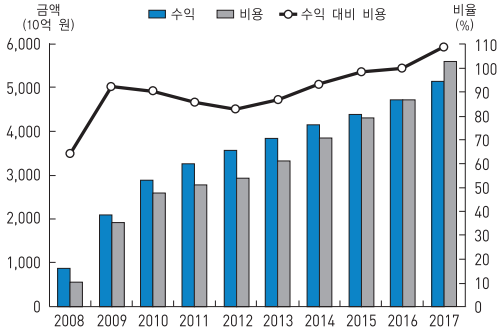
(명)

	2008	2011	2014	2017
전체	125,311	491,790	292,884	377,177
사회복지사	4,195	7,347	11,298	18,535
의사(촉탁의포함)	1,034	1,488	1,324	2,198
간호사	2,951	3,106	2,683	2,791
간호조무사	2,373	6,303	8,241	9,845
물리(작업)치료사	1,002	1,608	1,813	2,024
요양보호사	113,756	471,938	266,538	340,624
영양사	-	-	987	1,160

주: 1) 연도 말 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종사인력임.
2)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조무사가 포함된 통계임.
3) 영양사는 2013년부터 종사인력 직종에 포함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각 연도.

장기요양보험의 연간 지출비용[3]은 2009년 1조 9,085억 원에서 2017년 5조 5,891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수익 대비 비용 비중은 2009년 91.5%에서 2012년 82.5%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 108.7%로 증가하였다(그림 Ⅲ-34). 이는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제도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Ⅲ-34]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익과 비용, 2008-2017



주: 1) 수익은 보험료, 국고지원금, 의료급여부담금(국고,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합계임.
2) 비용은 보험급여비(재가급여비, 시설급여비, 가족요양비,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 관리운영비, 기타의 합계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각 연도.

사회적 노인 돌봄의 필요성은 인구구성의 변화, 노후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인 돌봄의 사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도입되어 해당연도 지출액은 7-12월에 해당되어 타 연도와 직접적 비교가 부적합하다.

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노인 돌봄 서비스가 양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면 향후에는 서비스의 질적 성장이 요구된다.

2018 Education

Korean Social Trends 2018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Ⅳ 교 육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I 고려대학교 120

학력차별에 대한 인식 김경근 I 고려대학교 131

중·고생의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 참여 실태 황여정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0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고려대학교)

-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완만하나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유치원 취원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하락세를 보이던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고, 계층 간 사교육 참여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확대되고 있다.
- 학급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에 다다라 있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 모두에서 도농 간 학력격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 교육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교육은 많은 사람들을 무지와 문맹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 또한 교육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데도 매우 성공적이었다.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경제성장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층상승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도 성장기에 계층상승의 사다리로 작용했던 교육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세습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계층 간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게 주된 배경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수저계급론이 등장하고 자녀의 미래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토로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한국 교육에 어떠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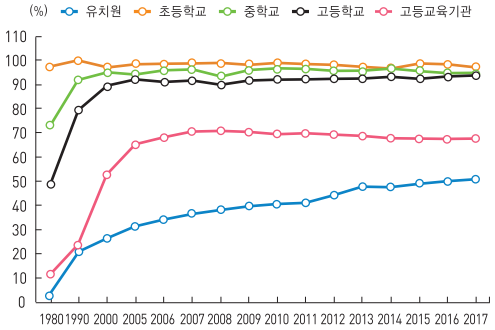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한국 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변화를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효과라는 세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하도록 하겠다. 먼저 교육기회와 관련해서 교육단계별 취학률과 진학률 추이를 살펴보고 학교급 및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을 분석하겠다. 아울러 대학생의 등록금 마련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에서는 학교급별 교우관계 만족도, 교육방법 만족도, 학급당 학생수 변화 추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끝으로 교육효과와 관련해서는 중등교육 단계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연구(TIMSS)에서 드러난 성취도 분포 변화,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액 변화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교육기회

교육기회 영역의 지표들은 국민들이 교육기회를 향유하는 정도를 계량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로는 취학률과 진학률이 있다. 최근 사교육이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교육 참여율도 교육기회 영역에서 빠짐없이 다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고등교육의 경우 비싼 등록금이 학부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 때문에 대학생이 등록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교육단계별 취학률, 진학률, 사교육 참여율 및 대학생의 등록금 마련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기회의 변화 추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교육기회 향유 정도를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인 취학률은 각 교육단계별로 취학 적령 인구 중 실제 해당 교육단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로 측정한다. [그림 Ⅳ-1]에는 1980년 이후의 교육단계별 취학률이 나타나 있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1980년에 97.7%로 완전 취학과 다름없는 수준에 도달한 후 1990년에는 100.5%를 나타내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취학률은 97.3%로 보고되고 있다. 1990년에 일시적으로 초등학교 취학률이 100%를 상회한 것은 취학 적령기(6-11세) 이전이나 이후에 학교에 다닌 학생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Ⅳ-1] 학교급별 취학률, 1980-2017



주: 1) 취학률=(취학 적령의 재적 학생수÷취학 적령 인구)×100.
2) 취학 적령은 유치원의 경우 만 3-5세, 초등학교는 만 6-11세, 중학교는 만 12-14세, 고등학교는 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은 만 18-21세임.
3) 취학 적령 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12.31)를 기준으로 하였음(2015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6년 이후는 잠정추계로 다음 인구추계시 변동될 수 있음).
4)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이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중학교 취학률은 1980년에 73.3%였다. 하지만 1980년대에 취학률이 급속하게 상승하면서 1990년에는 91.6%가 되었고, 2011년에는 96.7%로까지 높아졌다. 최근 취학률이 다소 낮아져 2017년 현재는 94.2%로 보고되었다. 고등학교 취학률은 1980년에 48.8%에 불과했지만 1990년에는 79.4%로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상승세는 그 후로도 꾸준히 이어져 2017년 현재 고등학교 취학률은 93.7%가 되었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1980년에 11.4%로 매우 낮았다. 하지만 1980년대 초반에 졸업정원제가 실시되고 1995년에는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급속한 상승세를 보여 2000년에는 52.5%까지 높아졌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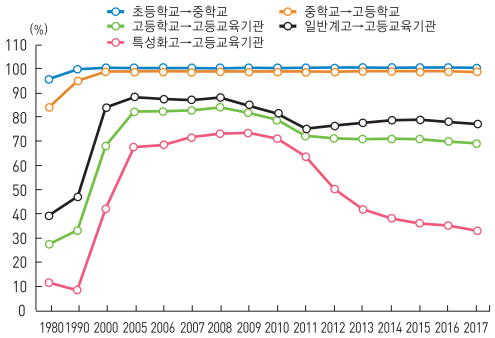
뒤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70.6%로 정점에 도달한 후 미미하나마 하락세로 돌아서 2017년 현재 67.6%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다른 교육단계에 비하면 유치원 취원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유치원 취원율은 1980년에 2.8%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 30%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40%를 상회하게 된다. 그리고 2017년 처음으로 50%의 벽을 돌파해 50.7%까지 상승했다. 한국에서는 미취학 아동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린이집에 다닌다. 따라서 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것을 많은 아동들이 조기교육에서 소외된 증표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만 3-4세 아동 취학률(94.9%)은 OECD 국가 평균(77.8%)보다 높다.

진학률도 취학률과 함께 국민이 교육기회를 향유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간주된다. 진학률은 각 교육단계별로 전체 졸업생 중에서 상급 학교에 진학한 학생의 비율을 가리킨다. 따라서 취학률에 비해 진학률은 입시제도 변경이나 노동시장 상황 등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양상은 고등교육 단계에서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Ⅳ-2]는 각 교육단계별 진학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2000년 이후 줄곧 99.9%를 나타내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에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 역시 99.6-99.8%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1980년에 27.2%에 불과했던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그림 Ⅳ-2] 교육단계별 진학률, 1980-2017



주: 1) 진학률=(당해 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당해 연도 졸업자)×100.
2) 중학교 과정은 중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3) 고등학교 과정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4)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포함됨(2005년부터 국외진학자 포함).
5) 일반계·전문계고 진학자는 2011년 이후는 대학 등록자 기준, 2011년 이전은 대학 합격자 기준임(전체 고등학교 진학률은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보정한 수치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크게 높아져 2008년에 83.8%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 후로는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조금씩 하향세를 보여 2017년 현재는 68.9%까지 낮아졌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의 경우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특히 하락폭이 큰 편이다. 여기에는 진학률을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조사기준을 4월 1일 현재 대학등록자로 조정한 것이 영향을 많이 끼쳤다. 2011년 이전에는 매년 2월 졸업 당시 대학 합격자를 기준으로 진학률을 산출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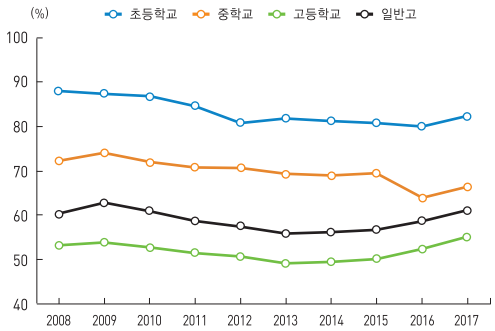
최근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추세적 하향세를 보인 데는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졸업자의 진학률 감소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일반계

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에 75.2%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다시 조금씩 상승하여 2017년 현재 77.3%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09년 73.5%로 정점에 다다른 후 점차 하락하기 시작해 2017년 현재 32.8%까지 낮아졌다. 학생들이 대학에 좀 더 쉽게 진학하기 위한 통로로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일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학생들의 교육결과가 사교육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나 활용 정도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교육에 비해 사교육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 편이다. 이 때문에 사교육이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사교육 참여율은 낮을수록 바람직하며, 사교육 참여율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정책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먼저 교육단계별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본 후에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 참여 실태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그림 Ⅳ-3]에는 연도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완만하나마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단계별로 보면 2017년 현재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2.3%로 가장 높고 이어 중학생(66.4%), 고등학생(55.0%) 순으로 높다. 고등학생 가운데는 일반고 학생(61.2%)이 고등학생 전체보다는 6.2%p 정도 높은 사교육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일반고 학생에 비해 사교육 참여율이 훨씬 더 낮기 때문이다.

[그림 Ⅳ-3]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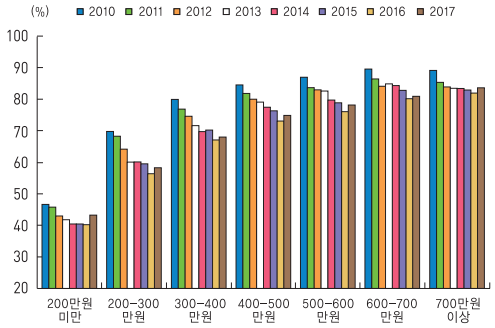


주: 1) 사교육 참여율은 해당 학교급별 조사대상 학생 중 지난 3개월 동안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각 연도.

앞서 밝혔듯이 사교육 참여율은 가구 소득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림 Ⅳ-4]는 이와 관련된 실태를 보여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교육 참여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층화되어 있다. 특히 이 같은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격차는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집단들 간에 좀 더 두드러진 반면,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인 집단들 간에는 참여율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어떤 소득수준에서든 사교육 참여율은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낮아지다가 2017년에 다시 상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 하락 정도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더욱 뚜렷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수준 200-300만원 집단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2010년에

[그림 Ⅳ-4]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2010-2017



주: 1)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조사대상 학생 중 지난 3개월 동안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2)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임.
출처: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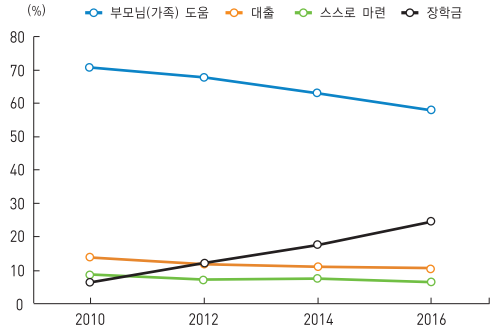
69.8%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58.3%로 7년 사이에 11.5%p 하락했다. 소득수준 300-400만원 미만 집단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에 사교육 참여율이 11.9%p 낮아졌다. 반면 소득수준 600-700만원 미만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0-2017년 사이에 8.8%p 하락했고, 700만원 이상 집단은 5.5%p만 낮아졌다.

이 같은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 간 사교육 참여 격차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양극화 심화의 악영향을 저소득층이 훨씬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정의 경제여건에 따라 교육기회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문제가 더욱 심화되면 저소득층의 계층상승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등록금 마련 방법도 교육기회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교육기회를 얻는 데 가정형편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조달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을수록 가정형편이 고등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공산이 크다.

[그림 Ⅳ-5]는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님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조달하는 학생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즉 2010년에는 전체 대학생의 70.5%가 부모님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했지만 2016년에는 그 비율이 58.0%까지 낮아졌다. 절대적인 비율 자체는 높지 않지만 대출을 받거나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학생의 비율도 계속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Ⅳ-5]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 2010-2016



주: 1)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은 각 연도 1학기 대학교 등록금 총액을 부모님(가족)의 도움, 대출(학자금 대출, 일반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스스로 벌어서 마련, 장학금, 기타의 방법으로 마련한 비율로 각 항목에 대한 응답값을 합산하면 100%가 됨.
2) 그림에서는 '기타' 항목을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반면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학생의 비율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6.5%의 학생만이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조달했지만 2016년에는 24.7%의 학생이 등록금을 장학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등록금 마련 방법으로 장학금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것은 이명박 정부 이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교육부가 2018년 2월 발표한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재학생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 받은 학생 비율이 24%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의 3%에 비하면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한편 등록금이 교육기회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도는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 조달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은 계층별 고등교육 기회 향유 정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표 Ⅳ-1〉은 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 마련 방법을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이나 가족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장학금이나 대출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2010년에는 장학금보다는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2016년에는 대출 대신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표 Ⅳ-1〉 소득수준별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 2010–20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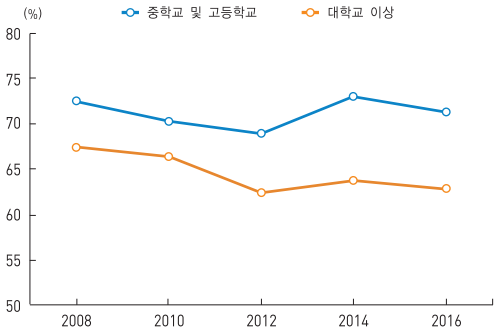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부모님(가족) 도움							
2010	66.2	56.6	70.0	74.0	77.9	87.7	84.7
2012	63.7	57.0	65.4	72.5	76.3	72.7	82.7
2014	59.3	48.5	55.6	64.8	67.9	70.9	84.1
2016	52.9	36.7	50.6	57.8	64.7	70.2	72.6
대출							
2010	18.9	22.7	14.3	13.0	5.6	4.3	5.8
2012	17.1	16.5	12.8	8.9	7.2	9.9	3.2
2014	12.2	17.0	14.0	9.7	11.3	7.0	2.9
2016	9.5	18.9	10.8	8.6	13.3	9.2	6.1
스스로 마련							
2010	5.0	12.3	10.0	8.1	9.6	4.7	4.3
2012	5.7	11.3	8.2	7.3	6.7	3.0	3.1
2014	7.1	8.1	8.9	9.2	8.2	6.1	4.0
2016	6.0	6.5	6.3	7.8	3.8	5.5	8.5
장학금							
2010	9.6	8.3	5.7	4.7	6.6	3.3	5.1
2012	13.0	14.4	12.0	10.7	9.5	11.4	10.7
2014	20.7	25.8	21.5	15.3	12.4	15.7	8.5
2016	31.7	37.4	31.9	25.8	18.2	14.8	12.5

주: 1)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은 각 연도 1학기 대학교 등록금 총액을 부모님(가족)의 도움, 대출(학자금 대출, 일반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스스로 벌어서 마련, 장학금, 기타의 방법으로 마련한 비율로 각 항목에 대한 응답값을 합산하면 100%가 됨.
2) 표에서는 '기타' 항목을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다양한 등록금 마련 방법 가운데 소득수준별 편차가 가장 작은 것은 스스로 등록금을 조달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스스로 등록금을 조달하는 비율은 400–500만원 미만 소득수준 집단이 가장 낮아 3.8%에 불과했고,

600만원 이상 소득수준 집단이 가장 높아 8.5%를 보였다.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학생의 비율은 2012년까지는 소득수준별 편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이러한 양상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해 저소득층 집단이 장학금 수혜를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소득수준이 600만원 이상인 집단의 경우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조달한 비율이 2010년 5.1%에서 2016년 12.5%로 늘어났다. 반면 소득수준이 100-200만원인 집단의 경우에는 장학금 의존 비율이 2010년에는 8.3%에 그쳤으나 2016년에는 37.4%로 크게 높아졌다.

[그림 Ⅳ-6] 학교급별 교우관계 만족도, 2008-2016



주: 1) 교우관계 만족도는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교우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2) 2012년도부터 조사대상이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만 15세 이상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 관련 지표들은 크게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으로 나뉘는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학생수준 지표에는 학습시간, 학교만족도, 교우관계 만족도 등이 있고, 학교수준 지표에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학교급별로 교우관계 만족도, 교육방법 만족도, 학급당 학생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Ⅳ-6]에는 학교급별 교우관계 만족도가 제시되어 있다. 교우관계는 학교에서 맺는 인간관계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정의적 특성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으로 친구들과 만족스럽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학생생활에도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Ⅳ-6]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교우관계 만족도가 일관되게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에 중·고등학생 가운데 교우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72.2%인 반면, 대학생 가운데 교우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67.9%로 양자 간 차이는 4.3%p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6년에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가운데 교우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각각 71.4%, 62.9%로 집단 간 만족도 차이가 8.5%p로 확대됐다. 취업을 위해 친구들과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현실이 대학생의 교우관계 만족도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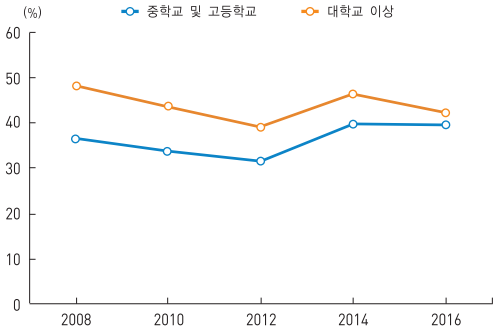
한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모두에서 교우관계 만족도는 2012년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2014년에 반등한다. 하지만 2016년에는 두 집단에서 교우관계 만족도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교우관계 만족도의 상승 반전이 일시적 현상이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림 Ⅳ-7]은 학교급별 교육방법 만족도를 보여준다. 교육방법 만족도는 학생들이 교사 또는 교수의 수업이나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교육방법 만족도는 개별 교사 또는 교수가 어떤 노력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큰 편이다. 앞서 살펴본 교우관계 만족도와 달리 교육방법 만족도는 대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만족도가 일관되게 낮았다. 다만 이러한 학교급 간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2008년에 대학생의 교육방법 만족도는 48.4%인 반면, 중·고등학생의 만족도는 36.6%로 양자 간 차이는 11.8%p에 달했다. 하지만 2016년에는 두 집단의 교육방법 만족도가 각각 42.4%, 39.5%로 만족도 차이가 2.9%p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교육방법 만족도 역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모두에서 2012년까지 계속 낮아지다가 2014년에 큰 폭으로 반등한다. 하지만 2016년에는 두 집단에서 교육방법 만족도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방법 만족도의 반등이 추세적인지 알기 위해서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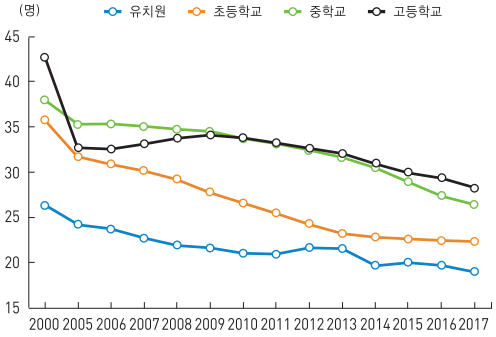
[그림 Ⅳ-8]에는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가 제시되어 있다. 학급당 학생수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수준, 교육환경의 쾌적함, 수업지도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모든 학교급에

[그림 Ⅳ-7] 학교급별 교육방법 만족도, 2008–2016



주: 1) 교육방법 만족도는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의 교육방법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2) 2012년도부터 조사대상이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만 15세 이상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Ⅳ-8]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200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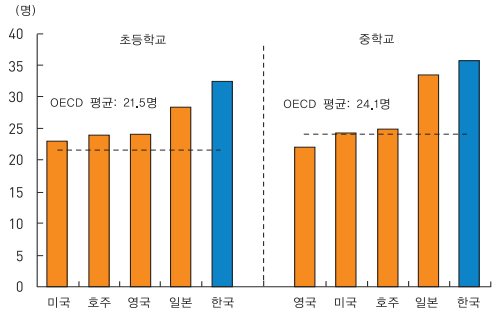
주: 1) 학급당 학생수=재적 학생수÷학급 수.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2013년까지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나 이후에는 중학교에서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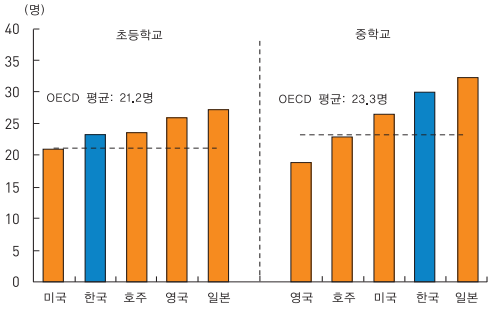
2010년까지는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유치원은 가장 낮은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했다. 2017년 현재 각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 19.0명, 초등학교 22.3명, 중학교 26.4명, 고등학교 28.2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9] OECD 주요 국가의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2005, 2015

1) 2005년



2) 2015년



주: 1) 학급당 학생수=재적 학생수÷학급 수.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7, 2017.

[그림 Ⅳ-9]에는 2014년 현재 한국과 OECD 주요 국가의 학급당 학생수가 제시되어 있다. 2005년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모두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가 더 많았다. 하지만 2015년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가 23.4명으로 미국(21.1명)보다는 많지만 일본(27.3명), 영국(26.0명), 호주(23.8명)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21.2명)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 사정이 좀 더 열악해 일본(32.4명)을 제외하면 한국(30.0명)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나라를 찾기 힘들다. 한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23.3명)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실정이다.

교육효과

교육효과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측정된다.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정도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통해 측정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수준과 관련이 있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과 TIMSS 수학 성취도 점수분포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후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액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Ⅳ-2〉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된 중·고등학생 비율이 정리되어 있다. 기초학력 미달은 다음 단계의 학

교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별도로 보충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수준의 학력을 가리킨다. 따라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한다면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취도가 낮아지고 집단 간 교육격차도 심화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표 Ⅳ-2〉 지역규모별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012–2017

(%)

연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2학년)		
	전체	대도시	읍면지역	전체	대도시	읍면지역
2012	2.2	2.0	2.4	3.0	2.8	3.0
2013	3.3	3.0	3.3	3.4	3.2	3.4
2014	3.7	3.5	3.9	4.2	4.0	4.4
2015	3.5	3.3	4.0	4.2	4.1	4.3
2016	3.6	3.3	4.4	4.5	4.3	4.9
2017	4.2	4.0	4.8	5.9	5.6	8.1

주: 1)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 영어, 수학 등 세 과목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2) 교육부는 지역규모별 성취수준 분석 결과 발표에서 중소도시를 제외하고 대도시 및 읍면지역 통계만 제시하고 있음.
3) 2017년도 평가 결과는 3% 표본 대상 평가 결과임.
출처: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도자료, 2014, 2017.

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4년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잠시 조정을 거친 후 2017년에 다시 크게 높아졌다. 기본적으로 이 같은 양상은 대도시 지역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읍면지역에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중학교 단계의 도농 간 학력격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차이가 2012년 0.4%p에서 2016년에 1.1%p까지 확대되었다가 2017년에는 0.8%p로 약간 줄어든 상태이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2012년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아도 양상은 거의 비슷하다. 고등학교 단계의 도농 간 학력격차는 2012년 0.2%p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2.5%p까지 크게 확대된 상태이다.

다음으로 〈표 Ⅳ-3〉은 한국 학생들의 TIMSS 수학 성취도 분포가 1999년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한국 학생들이 국제 성취도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이는 TIMSS에도 해당된다. 다만 최근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함에 따라 학생들의 평균적인 성취도 자체는 높지만 분포

〈표 Ⅳ-3〉 중학생의 TIMSS 수학 성취도 분포, 1999–2015

(점)

	1999	2003	2007	2011	2015
최고점	826.1	846.4	837.2	850.6	838.1
3사분위	639.1	646.6	662.3	677.1	662.3
중앙값	593.9	597.6	605.4	619.5	614.9
1사분위	540.1	537.5	537.8	555.5	552.1
최저점	280.1	281.0	247.7	281.3	340.7
평균	587.2	589.1	597.3	612.8	605.7
표준편차	75.2	81.2	89.0	86.8	82.3
사분편차	49.5	54.6	62.2	60.8	55.1
국가순위	2	2	2	1	2

주: 1)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함.
2) TIMSS점수는 평균이 500점이며, 표준편차가 100인 척도점수임.
3) 3사분위는 상위 25퍼센타일, 중앙값은 50퍼센타일, 1사분위는 75퍼센타일에 해당함.
4) 사분편차=(3사분위−1사분위)÷2
출처: IEA, TIMSS dataset, 1999, 2003, 2007, 2011,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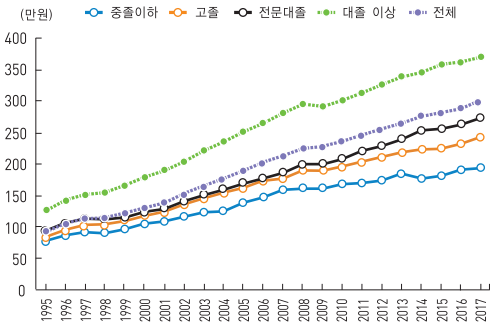
의 산포도가 더 커졌을 개연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교육결과의 평등 측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성취도의 절대 수준과는 별개로 그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성취도 분포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간편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사분편차를 구하여 그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사분편차는 어떤 분포의 3사분위 값과 1사분위 값 간 차이의 1/2인데, 표준편차와 비교하면 극단적인 관측치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이 값이 클수록 분포의 산포도 또한 크다.

한국 학생들의 TIMSS 수학 성취도 사분편차는 1999년 49.5, 2003년 54.6, 2007년 62.2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1년 60.8, 2015년 55.1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IMSS 수학 성취도 표준편차도 같은 기간 75.2, 81.2, 89.0, 86.8, 82.3으로 사분편차와 거의 동일한 변화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적어도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그림 Ⅳ-10]에는 교육효과를 보여주는 지표인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액이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이 보여주듯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중졸 이하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95년 78만원에서 2017년 194만원으로 이 기간에 약 148%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에 고졸자는 183%, 전문대졸업자는 191%, 그리고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는 193%의 임금 상승을 경험하였다. 그 결과 1995년에 4년제 대졸 이상 근로자는 중졸 이하 근로자에 비해 약 62% 높은 임금을 받았지만 2017년에는 그 임금 프리미엄이 약 91%로 증가하였다.

[그림 Ⅳ-10] 상용근로자의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액, 1995-2017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 및 비정규근로자를 표본으로 함.
2) 임금은 월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이며, 상여금(보너스) 등은 제외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한국 사회에서 이처럼 지속적으로 확대된 학력 간 임금격차는 학력주의의 극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대졸자의 취업이 무척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이 매우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보상이나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을 무시한 채 대학 진학에만 매달리는 행태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력차별에 대한 인식

김경근 (고려대학교)

- 젊은 세대에 비해 40대 이상 세대에서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존재 가능성을 더 심각하게 인식했다. 또한 일반 성인에 비해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가 대학 졸업장의 사회적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했다.
- 학력차별에 대한 피해의식은 고졸 집단이 가장 강했고 중졸 이하 집단이 가장 약했다.
-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학 서열화가 앞으로 더 심화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러한 전망은 최근 좀 더 뚜렷해졌다. 전체적으로는 대학 서열화가 약화되기보다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 기업의 고졸자 채용 할당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정적이었고, 고졸 집단은 크게 반겼지만 중졸 이하 집단은 가장 낮은 지지를 보였다.

한국 사회에는 학력주의가 만연해 있다. 무엇보다 학력은 사람들의 면면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 기능한다. 이 때문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일군 이들 중에도 미진했던 학업에 대해 큰 아쉬움이나 회한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낮은 학력으로 인해 자신의 성취에 상응한 존경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학력은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구직 및 승진 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배우자 선택이나 인간관계 형성에서도 핵심적인 고려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력주의 관행 때문에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차별을 경험하는 일이 허다하다. 학력에 따른 차별은 공공연하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른 유형의 차별과 마찬가지로 학력차별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실력주의의 정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개연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학력차별 철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선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학력차별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는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의견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파악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온라인 조사로 수행되고 있다. 표본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층화 후 인구구성비에 따라 할당 추출된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남녀 2,000명으로 구성된다.

먼저 학력차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본격적으로 고찰하기 전에, OECD가 제시한 교육수준별 상대적 임금지수 국제비교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같은 논의는 학력차별에 대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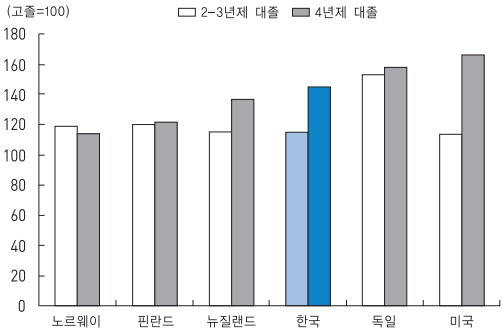
민의 인식이 얼마나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배경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연령대, 초·중·고 학부모 여부,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다르고 그런 전망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는 어떠한지 고찰하도록 하겠다. 비슷한 맥락에서 연령대, 교육수준에 따른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과 그 변화 추이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령대와 교육수준에 따라 기업의 고졸자 채용 할당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다르고 그것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

교육수준별 상대적 임금지수 국제비교

어떤 사회에서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보다 낮은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자는 그렇지 못한 근로자보다 인적자본도 더 많이 축적하여 노동생산성 또한 더 높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이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반영하는 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금도 높아지는 현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림 Ⅳ-11]에는 OECD 주요 국가의 교육수준별 상대적 임금지수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한국은 노르웨이, 핀란드, 뉴질랜드보다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지수가 더 높다. 하지만 독일이나 미국에 비하면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지수가 결코 높지 않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이 한국은 145인 반면, 독일은 158이고 미국은 166으로 한국보다 훨씬 더 높다. 한 가지 특이점은 직업교육이 발달한 독일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2-3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이 각각 153, 158로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2-3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이 각각 114, 166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별 국가

[그림 Ⅳ-11] OECD 주요 국가의 교육수준별 상대적 임금지수, 2015



주: 1) 각국 25-64세 취업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상대적 임금지수는 고등학교 졸업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교육집단 평균 임금임.
3) 핀란드는 2014년 자료임.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7.

에서 교육수준별 상대적 임금지수는 그 국가 고유의 교육제도 및 노동시장 구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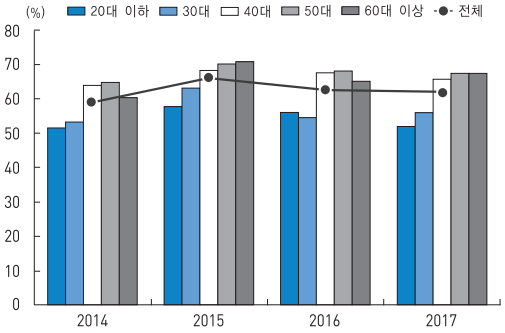
한국 사회에서 학력차별은 일차적으로 대학 졸업 여부에 따라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를 마친 사람에 비하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한 보상과 혜택을 누린다. 대다수 학생들이 일단 어떻게든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Ⅳ-12]에는 연령대별로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 대체로 젊은 세대에 비해 40대 이상 세대가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시기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할 때 2017년에는 30대 이후 연령대에서 대학 졸업 여부에 따라 심각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미미하나마 좀 더 강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졸업 여부가 심각한 차별 유발 요인이라고 인식한 비율이 2014년에는 20대 이하 51.3%, 30대 53.2%, 40대 63.9%, 50대 64.9%, 60대 이상 60.2%였다. 반면 2017년에는 동일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20대 이하 51.9%, 30대 55.9%, 40대 65.7%, 50대 67.4%, 60대 이상 67.4%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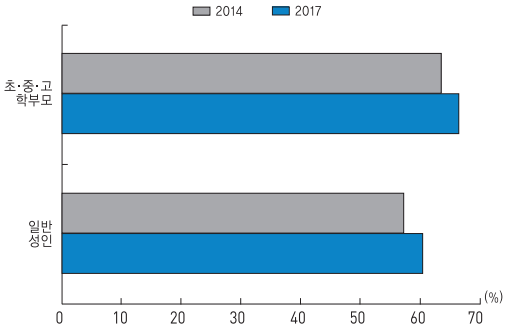
[그림 Ⅳ-13]은 초·중·고 학부모와 일반 성인 사이에 대학 졸업 여부가 심각한 차별을 유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림 Ⅳ-12] 연령대별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인식, 2014-2017



주: 1) 전국 만 19-75세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하여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그림 Ⅳ-13] 초·중·고 학부모와 일반 성인의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인식, 2014, 2017



주: 1) 전국 만 19-75세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하여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14,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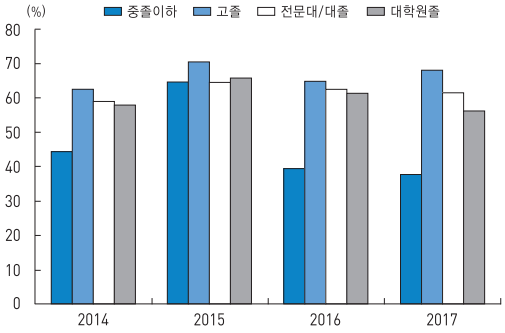
보여준다. 대체로 일반 성인에 비해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가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심각한 차별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인식의 간극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2014년과 2017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다.

예컨대 2014년에는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심각한 차별 가능성에 대해 초·중·고 학부모의 63.3%와 일반 성인의 57.3%가 수긍해 양자 간 차이가 6.0%p였다. 2017년에는 초·중·고 학부모 가운데 66.6%가 대학 졸업 여부가 심각한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본 반면, 같은 인식을 가진 일반 성인의 비율은 60.5%여서 양자 간 차이가 6.1%p로 나타났다.

대학 졸업장이 없을 때 심각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은 교육수준별로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가 [그림 Ⅳ-14]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교육수준별로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심각한 차별 존재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다소 달랐다.

대체로 고졸 집단의 학력차별에 대한 피해의식이 가장 강하고 중졸 이하 집단의 피해의식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집단의 학력차별 체감도가 가장 강한 것은 대졸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교육년수의 차이는 작은 반면, 낮은 학력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은 상당히 크기 때문일 것이다. 중졸 이하 집단이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을 가장 약하게 인식하는 것은 기대수준 자체가 낮거나 일정 정도 그러한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2017년 현재 중졸 이하 집단의 경우 37.5%만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심각한 차별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인식을 가진 비율이 고등학교 졸업자는 67.8%,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 61.6%, 대학원 졸업자는 56.0%로 나타났다.

[그림 Ⅳ-14] 교육수준별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인식, 2014-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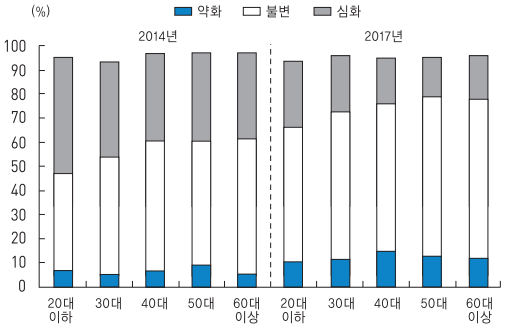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9-75세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하여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한국 사회에서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보다 어떤 대학에 다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유수 대학들은 입학생의 성적을 바탕으로 설정된 경직된 서열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비판에 자

주 직면하곤 했다. 아울러 단 한 차례의 입시로 인생의 등급이 결정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중등교육은 입시 위주 교육에만 매달리는 양상을 탈피하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견고한 대학 서열체계는 한국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비판받고 있다. [그림 Ⅳ-15]에는 연령대별로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이 정리되어 있다.

[그림 Ⅳ-15] 연령대별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2014,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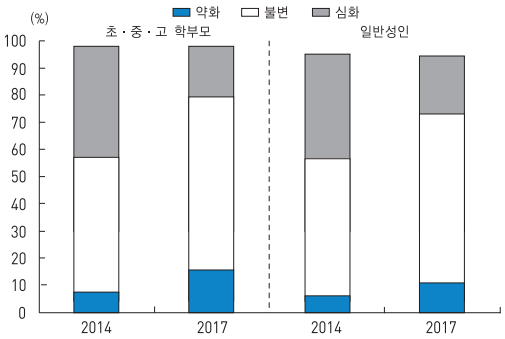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9-75세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흔히 대학을 일류대학, 이류대학 등으로 분류하는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3) '잘 모르겠다'의 응답 비율을 제외한 까닭에 각 응답 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14, 2017.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학 서열화가 심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학 서열화의 심화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인식은 2014년에 비해 2017년에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대학 서열화의 약화 전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예컨대 2014년에 전체 응답자의 39.1%는 대학 서열화의 심화 가능성을 전망한 반면, 6.4%는 약화할 것으로 생각했고 50.5%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17년에는 '심화' 20.8%, '약화' 12.1%, '불변' 62.5%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 사회에서 대학 서열화가 더 심화하지는 않겠지만 현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6]에는 초·중·고 학부모와 일반 성인의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2017년에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일반 성인에 비해 대학 서열화의 약화 및 불변 전망이 높은 반면, 심화 전망은 약간 낮았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2014년에 비해 2017년에 대학 서열화의 심화 전망은 크게 낮아지고 약화 및 불변 전망은

[그림 Ⅳ-16] 초·중·고 학부모와 일반 성인의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2014, 2017



주: 1) 전국 만 19-75세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흔히 대학을 일류대학, 이류대학 등으로 분류하는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3) '잘 모르겠다'의 응답 비율을 제외한 까닭에 각 응답 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14, 2017.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2017년 현재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심화' 18.5%, '약화' 15.8%, '불변' 63.7%의 견해를 보였다. 반면 일반 성인은 '심화' 21.5%, '약화' 11.0%, '불변' 62.1%의 전망을 내놓았다.

〈표 Ⅳ-4〉에는 교육수준별로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을 정리했다. 여기에서도 앞서 보았던 일부 경향성이 거듭 확인된다. 즉 어떤 집단에서건 대학 서열화 심화 가능성은 점차 낮게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경향성이 아주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대학 서열화가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높아지는 추이를 보였지만, 2017년에는 모든 집단에서 이러한 대학 서열화 약화 전망이 다시 낮아졌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Ⅳ-5〉는 소득수준별로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다. 어떤 집단에서건 대학 서열화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현재 앞으로 대학 서열화가 심화하거나 유지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소득수준 400-600만 원 집단

〈표 Ⅳ-4〉 교육수준별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2014-2017

(%)

	2014	2015	2016	2017
중졸 이하				
약화	3.0	17.6	26.1	15.0
불변	51.5	52.9	41.3	40.0
심화	42.4	20.6	15.2	17.5
고졸				
약화	6.0	8.1	17.8	12.7
불변	49.4	61.3	54.6	60.0
심화	38.6	26.9	20.3	20.6
전문대졸/대졸				
약화	6.6	11.3	14.7	11.8
불변	50.6	60.9	56.9	64.2
심화	39.0	26.0	24.8	20.2
대학원졸				
약화	8.2	16.0	13.9	12.4
불변	51.6	55.9	54.7	61.5
심화	38.5	25.8	27.4	24.8

주: 1) 전국 만 19-75세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흔히 대학을 일류대학, 이류대학 등으로 분류하는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3) '잘 모르겠다'의 응답 비율을 제외한 까닭에 각 응답 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표 Ⅳ-5〉 소득수준별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2014-2017

(%)

	2014	2015	2016	2017
200만원 미만				
약화	5.7	11.2	15.5	10.3
불변	46.5	56.2	43.1	53.4
심화	38.3	25.4	30.5	23.9
200-400만원 미만				
약화	5.6	10.5	16.3	11.8
불변	50.3	60.0	54.1	60.4
심화	40.6	27.2	24.6	22.9
400-600만원 미만				
약화	7.1	11.4	16.6	12.6
불변	53.1	61.8	57.6	65.3
심화	37.6	25.6	23.0	19.3
600만원 이상				
약화	7.6	11.6	13.1	12.7
불변	49.9	61.2	63.1	65.9
심화	38.6	25.5	19.6	18.0

주: 1) 전국 만 19-75세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흔히 대학을 일류대학, 이류대학 등으로 분류하는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화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3) '잘 모르겠다'의 응답 비율을 제외한 까닭에 각 응답 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84.6%), 600만 원 이상 집단(83.9%), 200–400만 원 집단(83.3%), 200만 원 미만 집단(77.3%) 순으로 높았다.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학벌은 출신 학교의 사회적 지위, 등급이나 명성을 가리키는데, 학벌주의는 이 같은 학벌을 중시하는 입장이나 태도라 할 수 있다. 학벌주의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과는 무관하게 단지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 차별을 받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학벌주의는 학력주의보다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Ⅳ-6〉에는 연령대별로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이 정리되어 있다. 대체로 모든 연령대에서 최근 시점으로 올수록 학벌주의가 심화할 것으로 보는 견해는 크게 줄었다. 대신 학벌주의가 약화하거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증가했다. 2017년 기준으로 학벌주의가 심화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50대(80.9%), 30대(80.2%), 40대(80.0%), 20대 이하(79.4%), 60대 이상(77.8%) 순으로 높았는데, 실질적으로 집단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이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학벌주의가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Ⅳ-6〉 연령대별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2014–2017

(%)

	2014	2015	2016	2017
20대 이하				
약화	6.7	5.9	10.4	12.3
불변	45.5	53.7	46.0	54.3
심화	44.9	36.6	36.1	25.1
30대				
약화	9.2	9.5	11.4	14.7
불변	50.2	59.7	51.9	61.2
심화	35.9	27.9	31.8	19.0
40대				
약화	9.7	12.3	11.7	15.0
불변	55.2	56.9	53.7	65.5
심화	32.3	28.8	29.4	14.5
50대				
약화	12.3	12.3	14.0	15.2
불변	51.8	60.3	57.0	64.1
심화	32.9	25.4	25.8	16.8
60대 이상				
약화	10.6	16.2	15.1	17.8
불변	51.0	57.8	60.7	63.7
심화	36.3	25.1	20.7	14.1

주: 1) 전국 만 19–75세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3) '잘 모르겠다'의 응답 비율을 제외한 까닭에 각 응답 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표 Ⅳ-7〉은 교육수준별로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거의 모든 교육수준에서 학벌주의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중졸 이하 집단에서 매우 두드러졌다. 중졸 이하 집단의 경우 2014년에는 48.5%가 학벌주의의 심화를 전망했지만 2017년에는 그 비율이 5.0%로 크게 낮아졌다. 다만 2017년에 중졸 이하 집단 가운데 30.0%는 학벌주의의 전망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임

으로써 학벌주의가 약화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2017년 기준으로 학벌주의가 장차 약화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대학원졸 집단(18.3%) 사이에서 가장 강했고, 고졸 집단(15.1%), 전문대졸/대졸 집단(14.6%), 중졸 이하 집단(10.0%)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학벌주의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고졸 집단(19.3%) 사이에서 가장 강했고, 전문대졸/대졸 집단(17.7%), 대학원졸 집단(17.0%), 중졸 이하 집단(5.0%)이 차례대로 뒤를 따랐다.

〈표 Ⅳ-7〉 교육수준별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2014–2017

(%)

	2014	2015	2016	2017
중졸 이하				
약화	10.1	14.7	17.4	10.0
불변	38.4	52.9	47.8	55.0
심화	48.5	23.5	19.6	5.0
고졸				
약화	9.3	8.5	14.2	15.1
불변	49.2	56.1	52.5	58.9
심화	37.1	31.1	26.6	19.3
전문대졸/대졸				
약화	9.6	10.8	11.6	14.6
불변	52.8	59.1	54.4	63.1
심화	34.7	28.7	30.2	17.7
대학원졸				
약화	12.1	19.2	12.4	18.3
불변	48.9	54.9	54.2	62.8
심화	37.9	23.9	29.4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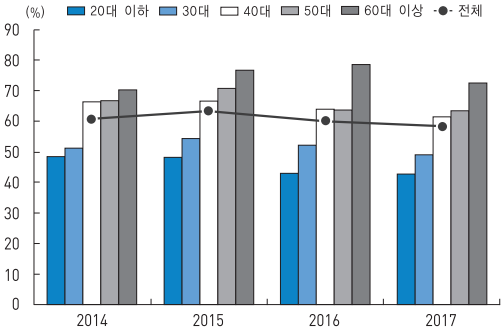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9–75세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3) '잘 모르겠다'의 응답 비율을 제외한 까닭에 각 응답 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기업의 고졸자 채용 할당에 대한 의견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 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졸자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도 대학 진학률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청년실업 문제도 날로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를 중심으로 '선 취업 후 학습'을 유도하는 정책이 강구되었고, 그 일환으로 기업의 고졸자 채용 할당이 고려되고 있다.

[그림 Ⅳ-17]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고졸자 채용 할당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이 뚜렷하게 감지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좀 더 심화되었다. 이는 나이가 젊을수록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고졸자 채용 할당이 자신의 취업 기회를 앗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림 Ⅳ-17] 연령대별 기업의 고졸자 채용 할당에 대한 찬성률, 2014–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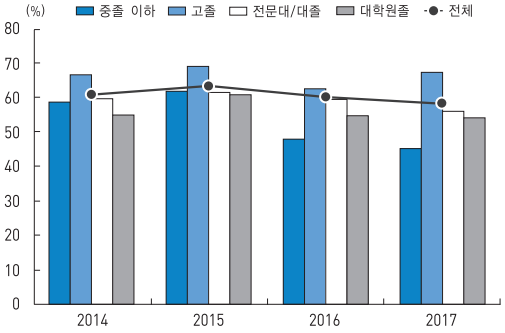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9–75세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자에게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하여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연령대별 기업의 고졸자 채용 할당에 대한 찬성 의견은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상당히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다. 2017년 현재 연령대별로 고졸자 채용 할당 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대 이하 42.8%, 30대 48.9%, 40대 61.6%, 50대 63.4%, 60대 이상 72.6%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58.2%였다.

[그림 Ⅳ-18]은 교육수준별로 기업의 고졸자 채용 할당에 대한 찬성 실태를 보여준다.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고졸자 채용 할당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집단은 고졸자이다. 2015년까지는 대학원졸 집단이 고졸자 채용 할당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소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2016년부터는 중졸 이하 집단이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졸 이하 집단이 이처럼 고졸자 채용 할당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으로 추정된다. 2017년 현재 교육수준별로 고졸자 채용 할당에 대한 찬성률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45.0%, 고졸 67.2%, 전문대/대졸 56.1%, 대학원졸 54.1%로 나타났다.

[그림 Ⅳ-18] 교육수준별 기업의 고졸자 채용 할당에 대한 찬성률, 2014-2017



주: 1) 전국 만 19-75세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자에게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하여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맺음말

최근 국내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졌던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채용비리는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블라인드 채용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좀 더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꾸준히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일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 같은 그릇된 관행을 혁파하지 않고는 심각한 사교육 경쟁 및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특단의 각오로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없는 실력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이다.

중 · 고생의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 참여 실태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학교 진로활동은 「진로와 직업」 수업이고, 가장 많이 참여한 체험활동 유형은 직업인 특강·멘토 활동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만족도와 향후 참여 의사는 낮게 나타난다.
- 학생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학교 진로활동은 진로체험이며, 가장 선호하는 체험활동 유형은 현장직업체험과 현장견학이다.
- 학교 진로활동과 진로체험에 대한 만족도는 고등학교 계열별로 차이가 있어서, 과학고·외고·국제고 및 마이스터고에서 높게 나타나고, 일반계고, 특성화고에서 낮게 나타난다.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18세 청소년은 직업에 대한 고민(43.0%)을 친구, 외모 문제에 대한 고민(41.6%)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과 직업 등 진로 문제가 청소년들의 주된 관심거리임을 알 수 있다.

진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진로활동과 진로체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진로활동과 진로체험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증가한 것은 교육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2013년 시범 도입된 자유학기제가 2016년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이 시행되면서, 진로체험활동과 같은 다양한 비교과활동을 대학 입시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게 된 것도 이러한 변화를 이끈 요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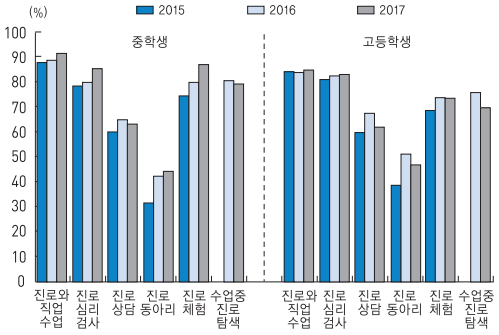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집한 「학교 진로교육 현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등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진로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진로교육에 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여기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먼저 학교 진로활동 참여 실태와 만족도, 수요를 살펴보겠다. 그런 다음, 다양한 진로활동의 세부 유형 가운데 진로체험을 중심으로 참여 실태와 만족도, 향후 수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 진로활동 유형별 참여율

학교에서의 진로활동은 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동아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림 Ⅳ–19]는 중·고등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참여율을 유형별로 제시한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의 학교 진로활동 가운데 가장 많이 경험하는 진로활동 유형은 「진로와 직업」 수업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기준, 중학생의 91.4%, 고등학생의 84.6%가 「진로와 직업」 수업을 들었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진로심리검사 참여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19] 중·고등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참여율, 2015-2017



주: 1) 제시된 수치는 "학생은 학교에서 다음 진로활동을 해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임.
2) 수업 중 진로탐색은 2016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졌음.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현황조사」, 각 연도.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진로활동 참여율은 증가세를 나타낸다. 이는 중·고등학교에서 이전보다 진로활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부 항목별로는 중학교에서 진로동아리와 진로체험 참여율이 비교적 많이 증가하였다. 진로동아리 참여율은 2015년 31.6%에서 2017년 44.3%로 12.7%p 증가하였고, 진로체험 참여율은 74.2%에서 87.0%로 12.8%p 증가하였다.

중학교에서 진로동아리와 진로체험 참여율이 상승한 것은 자유학기제의 확대와 관련이 깊다.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유학기제는 2013년 42개 학교에 시범 도입된 이후, 2014년 811개교, 2015년 2,551개교로 급속히 확대되었고, 2016년에는 전국의 3,213개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되었다.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진로활동 참여율의 증가폭이 크지는 않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진로동아리와 진로체험 참여율의 상승폭이 여타 유형에 비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진로동아리 참여율은 2015년 38.7%에서 2017년 46.9%로 8.2%p 증가하였고, 진로체험 참여율은 68.4%에서 73.5%로 5.1%p 증가하였다. 그에 비해서 교과 수업 중 진로를 탐색했다는 응답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표 Ⅳ-8〉에는 학교 진로활동 참여율이 학교 소재지 규모별로 제시되어 있다. 중학생의 경우, 「진로와 직업」 수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도서벽지 학생들이 낮은 참여율을 보인다. 진로심리검사는 여타 지역에서의 참여율이 85-86%이지만 도서벽지는 76.6%에 머물렀고, 진로상담의 경우에도 여타 지역은 60%대의 참여율을 보이지만 도서벽지 중학생들은 55.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격차는 진로동아리 참여율에서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타 지역 중학생들의 진로동아리 참여율은 43-48% 수준을 나타낸 반면, 도서벽지 중학생의 참여율은 25.9%에 그쳤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도서벽지 학생들이 학교 진로활동 참여 기회에서 소외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표 Ⅳ-8〉 중·고등학생의 학교 소재지 규모별 학교 진로활동 참여율, 2017

(%)

	학교 소재지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중학생				
진로와 직업 수업	91.6	91.4	90.8	94.1
진로심리검사	84.8	85.8	85.7	76.6
진로상담	61.6	63.0	69.4	55.3
진로동아리	43.2	44.2	48.2	25.9
진로체험	87.3	87.0	86.3	82.1
수업 중 진로탐색	76.9	82.4	79.4	67.3
고등학생				
진로와 직업 수업	85.5	83.0	85.9	91.5
진로심리검사	84.2	80.9	85.6	89.4
진로상담	60.7	62.0	65.6	65.9
진로동아리	45.7	44.7	56.4	55.1
진로체험	76.7	68.5	77.2	92.3
수업 중 진로탐색	70.2	67.9	72.9	67.2

주: 1) 제시된 수치는 "학생은 학교에서 다음 진로활동을 해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임.
2) 도서벽지는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역, 낙도, 수복지구, 접적지구, 광산지구 등임.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현황조사」, 2017.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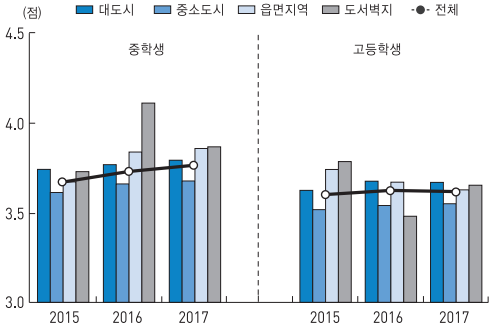
다음으로 학교 진로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는 학교 진로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세부 항목별 만족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림 Ⅳ-20]에는 학교 진로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제시되어 있다. 꿈, 희망 직업, 흥미·적성 알기, 미래 계획 활동 등 학교 진로활동 전반에 대해 중학생은 5점 만점에 2015년 3.67점, 2016년 3.73점, 2017년 3.76점을 나타냈다. 고등학생은 2015년 3.60점, 2016년 3.62점, 2017년 3.61점으로,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 진로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입시 또는 취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고등학생들의 진로 수요가 학교 진로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계열별로 비교해보면 중학생은 미세하게나마 만족도가 증가세를 보인다. 그에 비해 고등학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

[그림 Ⅳ-20] 중·고등학생의 학교 소재지 규모별 학교 진로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015-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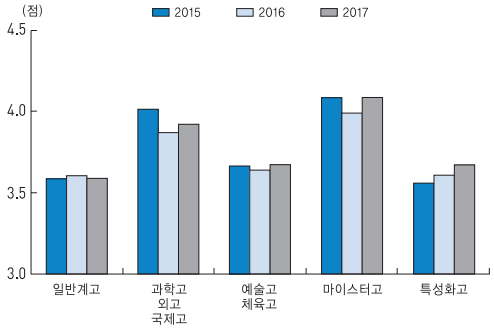


주: 1) 제시된 수치는 "학교 진로활동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나요?" 질문에 대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2) 도서벽지는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역, 낙도, 수복지구, 접적지구, 광산지구 등임.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현황조사」, 각 연도.

다. 학교 소재지 규모별 비교에서는 여타 지역에 비해 중소도시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의 차이는 학교 계열에 따른 비교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림 Ⅳ-21]에는 고등학교 계열별로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과학고·외고·국제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가 여타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그림 Ⅳ-21] 고교 계열별 학교 진로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015-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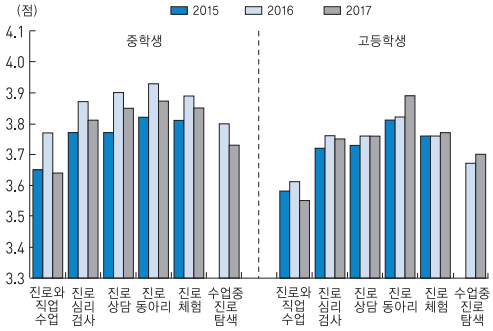
주: 1) 제시된 수치는 "학교 진로활동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나요?" 질문에 대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현황조사」, 각 연도.

이러한 결과는 고교 계열에 따라 진로활동에 질적 격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과학고·외고와 같은 특목고와 자율고에서는 자부담을 포함해 더 많은 예산이 다양한 활동에 투입되고, 교사나 학생들의 동기도 충만할 가능성이 있다. 그로 인해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에도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 같은 학교 환경의 차이가 학교 진로활동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Ⅳ-22]는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를 세부 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이다. 각 유형별 만족도는 진로동아리 활동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참여율에서는 진로동아리 참여율이 가장 낮게 파악된 바 있다. 이는 양적 측면에서 진로동아리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던 「진로와 직업」 수업의 만족도는 가장 낮다. 이는 학생들이 교과 수업 중심의 진로활동보다는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처럼 직접 경험해보는 진로활동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Ⅳ-22] 중·고등학생의 학교 진로활동별 만족도, 2015-2017



주: 1) 제시된 수치는 해당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활동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응답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2) 학교 진로활동 유형 중, '수업 중 진로탐색'은 2016년부터 조사에 포함되었음.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현황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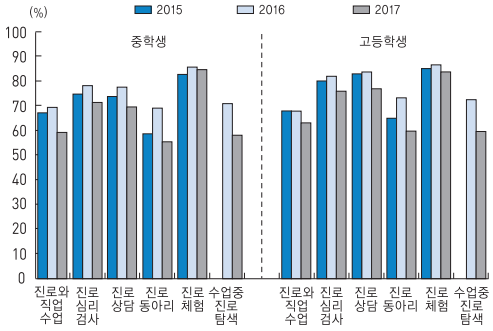
학교 진로활동에 대한 수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교의 진로활동은 무엇일까? [그림 Ⅳ-23]에는 학교에서 해보고 싶은 진로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진로체험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관찰된다. 중학생은 진로체험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2015년 82.5%, 2016년 85.5%, 2017년 84.4%로 일관되게 높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진로체험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2015년 85.0%, 2016년 86.5%, 2017년 83.6%로 나타났다.

최근 대학입시, 나아가 취업에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진로와 직업」 수업이나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처럼 다수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진로활동보다는, 진로체험처럼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진로체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 수준을 나타냈던 「진로와 직업」 수업, 그리고 수업 중 진로탐색 활동은 향후 참여 의사를 묻는 문항에서도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수업 중심의 진로활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선호도와 수요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Ⅳ-23] 중·고등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참여 희망 비율, 2015-2017



주: 1) 제시된 수치는 세부 유형별로 "학생은 앞으로 학교에서 다음 진로활동을 하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임.
2) 학교 진로활동 유형 중, '수업 중 진로탐색'은 2016년부터 조사에 포함되었음.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현황조사」, 각 연도.

학교 진로체험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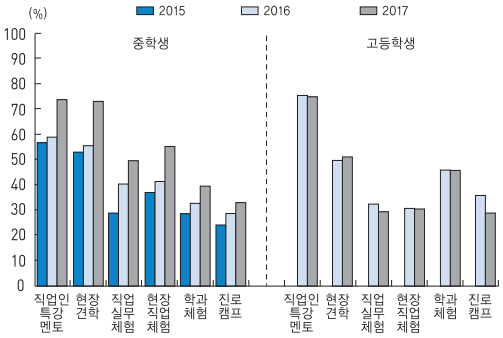
학교 진로활동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진로체험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으므로 진로체험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Ⅳ-24]에는 학생들이 연간 참여한 학교 진로체험 참여율을 학교급과 세부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최근 3년간 학교 진로체험 참여율 추이를 살펴보면, 중학생은 모든 유형의 진로체험에서 참여율이 상승한 반면, 고등학생은 정체 상태이다. 이는 고등학생은 입시와 취업으로 인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여유가 없지만, 중학생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진로체험 세부 항목별로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모두 직업인 특강·멘토(강연형·대화형)를 경험해 보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현장견학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진로체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전에 비해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직업인의 강연이나 특강이 여전

히 가장 일반화 된 형태의 진로체험 활동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직업인 특강·멘토에 대한 집중 현상이 중학생보다 심했다.

한편, 고등학교에서는 학과체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도 특징적이다(2017년 기준, 중학생 39.3%, 고등학생 45.6%).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이 학과선택에 대한 관심이 더 높기 때문에, 학과체험 수요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Ⅳ-24] 중·고등학생의 학교 진로체험 참여율, 2015-2017



주: 1) 제시된 수치는 세부 유형별로 "학생은 지난 1년 간(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진로체험에 참여해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임.
2) 고등학생은 2015년에 해당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현황조사」, 각 연도.

진로체험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증대되고 이전보다 진로체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양한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도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에 접근 기회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가능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표 Ⅳ-9〉에서는 학교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율을 학교 소재지 규모별로 구분해서 제시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읍면지역이나 도서벽지 학생들이 도시 지역 학생들에 비해 참여율이 낮은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에 비해 중학생의 경우에는 도서벽지 학생들이 현장견학, 직업실무체험, 현장직업체험, 학과체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여주었다. 반면 진로캠프는 도서벽지 중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Ⅳ-9〉 중·고등학생의 학교 소재지 규모별 학교 진로체험 참여율, 2017

(%)

구분	학교 소재지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중학생				
직업인 특강·멘토	71.9	73.7	78.7	79.1
현장견학	72.5	73.8	73.3	52.8
직업실무체험	47.9	49.3	52.5	42.7
현장직업체험	52.7	56.8	56.1	42.5
학과체험	36.6	40.2	45.8	30.0
진로캠프	30.6	31.1	42.4	75.6
고등학생				
직업인 특강·멘토	76.7	72.4	75.4	81.1
현장견학	55.8	43.4	56.0	76.7
직업실무체험	32.9	23.6	33.3	37.2
현장직업체험	35.2	23.8	33.5	43.7
학과체험	48.5	41.3	48.9	56.7
진로캠프	28.0	26.2	37.4	32.0

주: 1) 제시된 수치는 세부 유형별로 "학생은 지난 1년 간(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진로체험에 참여해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임.
2) 도서벽지는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역, 낙도, 수복지구, 접적지구, 광산지구 등임.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현황조사」, 2017.

학교 진로체험의 체감 효과 및 불만족 이유

〈표 Ⅳ-10〉은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이 실제로 자신의 진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었다. 중학생은 2015-2016년에는 직업실무체험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 모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2016-2017년에는 모든 항목에서 체감 효과가 저하되었다. 고등학생은 2016-2017년에 체감 효과가 저하 또는 답보 상태를 보였다.

〈표 Ⅳ-10〉 중·고등학생의 학교 진로체험 체감 효과, 2015-2017

(점)

	2015	2016	2017
중학생			
직업인 특강 · 멘토	3.68	3.75	3.55
현장견학	3.77	3.84	3.70
직업실무체험	3.89	3.87	3.75
현장직업체험	3.83	3.92	3.77
학과체험	3.83	3.92	3.77
진로캠프	3.88	3.95	3.82
고등학생			
직업인 특강 · 멘토	-	3.70	3.63
현장견학	-	3.80	3.77
직업실무체험	-	3.82	3.84
현장직업체험	-	3.89	3.90
학과체험	-	3.85	3.82
진로캠프	-	3.83	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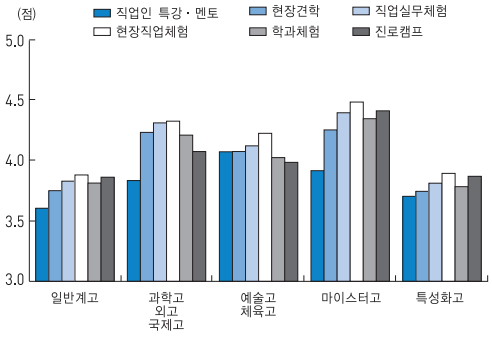
주: 1) 제시된 수치는 각각의 체험활동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해 본 활동이 진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도움 안 됨',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2) 고등학생은 2015년에 해당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현황조사」, 각 연도.

진로체험 세부 항목별로는 현장직업체험과 진로캠프에 대한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진로캠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서, 2017년 기준 3.82점을 나타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현장직업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파악되었다.

세부 항목별 비교에서 눈에 띄는 점은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던 직업인 특강·멘토에 대한 체감 효과가 6가지 세부 항목 중에서 가장 낮다는 점이다. 일방적인 특강이나 강연식 진로체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다.

[그림 Ⅳ-25]에는 학교 진로체험에 대한 주관적 효과를 학교 계열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일반계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이 느끼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고, 과학고·외고·국제고 및 마이스터고, 예술고·체육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그림 Ⅳ-25] 고등학생의 학교 계열별 진로체험 활동 체감 효과,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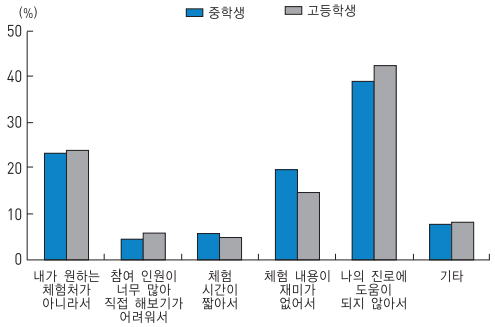
주: 1) 제시된 수치는 각각의 체험활동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해 본 활동이 진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도움 안 됨',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현황조사」, 2017.

현장직업체험의 경우, 2017년 기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느끼는 도움 정도는 4.48점으로 무척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마이스터고가 본래 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인을 양성하는 직업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마이스터고에서 현장직업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여타 계열에 비해 높게 도출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그 밖에 과학고·외고·국제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현장직업체험의 효과는 4.32점, 예술고·체육고 학생들은 4.22점을 나타낸 데 비해, 일반계고(3.88점), 특성화고(3.89점)는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학교 진로체험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림 Ⅳ-26]의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중학생 38.8%, 고등학생 42.5%), '내가 원하는 체험처가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중학생 23.4%, 고등학생 23.9%). 그 다음으로는 '체험 내용이 재미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다(중학생 19.6%, 고등학생 14.7%). 이러한 결과는 학교 진로체험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진로계획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수를 대상으로 한 천편일률적인 진로체험에 머무는 현실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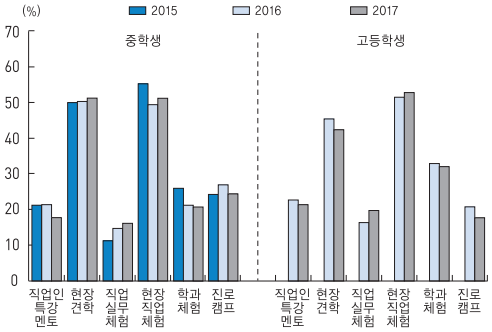
[그림 Ⅳ-27]에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체험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진로체험 활동 가운데 현장직업체험과 현장견학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진로캠프가 3위로 나타난 데 비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과체험이 3위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이 학과체험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 현실을 반영한다.

[그림 Ⅳ-26] 중·고등학생의 학교 진로체험 불만족 이유, 2017



주: 1) 제시된 수치는 학교에서 경험한 진로체험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활동에 만족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현황조사」, 2017.

[그림 Ⅳ-27] 중·고등학생의 학교 진로체험 참여희망비율, 2015-2017



주: 1) 제시된 수치는 "학생이 앞으로 더 경험해보고 싶은 학교 진로체험 활동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이며, 2개까지 중복 응답이 허용되었음.
2) 고등학생은 2015년에 해당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출처: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현황조사」, 각 연도.

반면, 가장 많은 중·고생들이 경험해본 직업인 특강·멘토는 선호도가 낮게 파악되었다. 또한 모의체험에 해당하는 직업실무체험은 선호도가 낮은 반면, 실제로 직장에 방문해서 직업체험을 해보는 현장직업체험은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맺음말

최근 수년간 중·고등학생의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은 중학생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중학교에 도입된 자유학기제 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양적 측면에서 참여율이 확대된 데 비해, 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학생들이 주로 경험한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의 유형과, 학생들이 가장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의 유형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들은 강의·강연이나 모의체험과 같은 간접 체험보다는, 실제 직업 세계를 경험해볼 수 있는 직접 체험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그 동안 진로활동과 진로체험의 양적 확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질적 개선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강연 중심의 활동보다는,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진로활동과 진로체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18 Labor

Korean Social Trends 2018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V 노 동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 서울대학교 150

성평등, 일-가족 균형 요구의 변화와 육아휴직 활용 동향 158
권현지 |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고용현황 정흥준 | 한국노동연구원 167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서울대학교)

- 최근 노동시장은 고용률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대 청년층의 고용 악화가 두드러진다.
-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화 경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최근 큰 폭의 최저임금인상 등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저임금 노동자 특히 여성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 지난 10년간 기술 변화, 탈산업화, 소비사회의 변화 등으로 젊은 층의 직업 구조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발견된다. 전통적인 제조분야 기능, 기술 직업이 퇴조하고 문화, 복지 관련 직업이 부상했다.
- 노사관계에 있어 지표상의 큰 변화는 없지만 일터의 비인권적 노동 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노동 관련 쟁점들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온 한 해였다. 다수의 이슈가 사회적 우려와 논쟁, 그리고 갈등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청년 고용을 진작시키려는 정부의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10%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첨예한 논란과 진통 끝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2019년에는 10.9% 올리는 데 최종 합의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은 2020년 10,000원 목표를 수정한 결과지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상한제 역시 2018년 논쟁의 한 축이 되었다. 시행 초 혼란 속에서 단속·처벌을 유예하는 6개월 계도 기간을 두자는 경영계의 속도 조절 요구가 관철되었다.

문제는 노동시장과 근로조건에 국한되지 않았다. 2016–2017년 촛불의 경험은 인권 및 사회권 운동으로 전환되어 갖가지 일터 문제가 터져 나왔다. 한 대기업 및 그 협력사 직원들의 '갑질' 고발과 전국적 운동으로 전개된 '#미투' 물결이 대표적 예다. '갑질' 고발과 '미투'는 주로 기본권 침해, 성폭력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인권 문제로 이슈화되었지만, 이들 문제가 불거진 장은 대개 일터였고 따라서 노동권 회복을 위한 요청이기도 하다. 이처럼 개개인 혹은 자발적인 사회운동의 양상으로 일터 및 노사관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저임금 및 불평등의 확산과 함께 다양한 주체에 의한 '갑질'의 만연으로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대표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사관계와 노동운동 영역에서 정치 환경의 변화 혹은 새로운 사회운동이 촉발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동향과 함께 위에 제기한 몇 가지 이슈와 변화의 양상을 노동 통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근 고용률과 실업률 및 직장안정성

우선 노동시장 성과부터 살펴보자. 기본 노동시장 성과 지표인 고용률과 실업률은 그동안의 추세가 달라지지 않았다.

고용률부터 살펴보면, 남성은 71.2%로 거의 변화가 없다. 여성 고용률의 경우 50.8%로 전년대비 1%p에 못 미치게 소폭 증가했다. 출산율 저하를 타개하기 위해 일-생활 양립을 위한 많은 정책이 시행된 것을 고려하면 매우 느린 증가다. 같은 맥락에서 경력 형성의 궤도에 오르는 시기라 할 수 있는 30대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다(표Ⅴ-1).

한편 20대 청년층의 고용률 저하는 전체 고용률 정체를 주도하는 양상이다. 청년층의 고용률 저하는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 감소 간 상호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개인과 사회경제의 중장기적 활력과 지속가능성에 보내는 경고로 읽을 만하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이제까지 공급 위주 정책에 치중했던 일자리 증진책에 변화를 촉구하는 지표다.

다음으로 〈표Ⅴ-2〉에 제시된 실업률을 살펴보자. 유동성이 심한 15-19세 연령집단을 제외하면 전년과 비교할 때 실업률에 현저한 변화는 없다. 특히 노동시장 경력이 안정되는 30대 이후 인구의 실업률은 2-3%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20대는 고용측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 남성의 실업률은 11.5%로 그 자체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년 대비 상승률 역시 0.6%p로 가장 높다. 여성의 경우에도 20대 실업률이 8.4%로

〈표Ⅴ-1〉 성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 2017

	고용률(%)			전년 대비 증감(%p)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60.8	71.2	50.8	0.2	0.0	0.5
15-19세	8.4	7.6	9.3	0.4	0.4	0.5
20-29세	57.6	55.6	59.4	-0.6	-1.1	-0.2
30-39세	75.3	90.2	59.4	0.6	0.0	1.2
40-49세	79.4	92.6	66.0	0.1	0.2	0.2
50-59세	75.3	87.7	62.9	1.0	0.8	1.2
60세 이상	39.9	51.5	30.6	0.4	0.2	0.6

주: 1) 고용률은 만 15세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2017.

〈표Ⅴ-2〉 성 및 연령집단별 실업률, 2017

	실업률(%)			전년 대비 증감(%p)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3.7	3.8	3.5	0.0	0.0	-0.1
15-19세	8.7	9.8	7.7	-1.3	-1.1	-1.5
20-29세	9.9	11.5	8.4	0.1	0.6	-0.4
30-39세	3.3	3.3	3.3	0.2	0.0	0.3
40-49세	2.1	2.0	2.3	0.0	0.1	-0.1
50-59세	2.2	2.3	2.0	-0.1	-0.2	0.0
60세 이상	2.9	3.4	2.2	0.2	0.2	0.3

주: 1) 실업률은 만 15세 인구 및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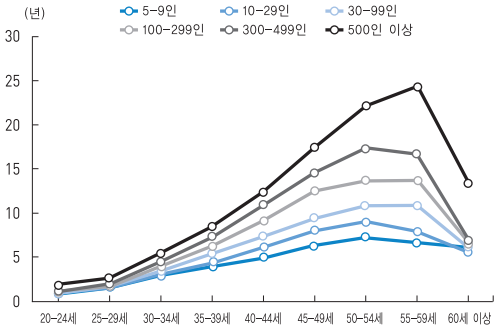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지만 그나마 전년에 비해서는 0.4%p 개선되었다.

한편, 고용률 저하와 실업률의 증가는 어려운 구직 상황과 연결된다. 통계청의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보면,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전년 동월 대비 0.1개월 늘어난 10.7개월로 장기화되고 있다. 여기에 학력별 격차도 작용한다. 대졸 이상은 2018년 7.7개월로 전년에 비해 약 0.3개월 줄어든 반면, 고졸 이하는 이보다 훨씬 긴 1년 4개월로 2017년에 비해 오히려 0.5개월 늘었다. 2017년과 2018년 공히 미취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약 44%에 이른다. 3년 이상인 경우도 약 15%이다. 청년 미취업자 중 그냥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청년 니트(NEET)가 약 20%를 차지하지만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도 15%에 이른다. 노동시장에서 알맞은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포기했거나 구직활동을 장기화하는 청년이 1/3을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이 13.1%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전년에 비해 1.2%p 감소했다는 점에서는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의 원인으로 자주 지목되는 이른바 '눈 높은 취준생' 문제가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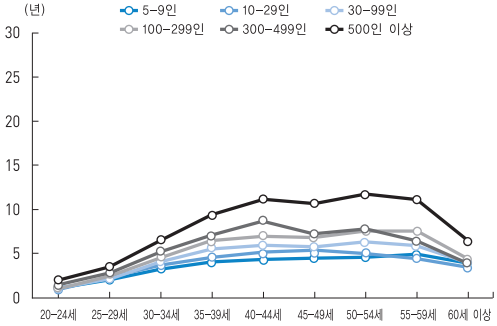
이제 일자리의 안정성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암시하는 근속연수 추이를 살펴보자(그림Ⅴ-1). 대체로 사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근속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지만, 300인 미만은 규모별 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 300인 이상 특히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속이 단연 길다. 평균에 가깝다 할 30-99인 사업체에서 근속의 정점이 8.9년 정도인데 반해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속의 정점은 22년에 이르고 연령대별 근속 증가도 가파르다. 이 경향을 주도하는 것은 남성이다. 여성에게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근속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지만 연령과 근속 간 관계의 패턴이 남성과 달리 일관되지 않고 규모에 따른 근속 증가도 크지 않다. 적어도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남성의 경우는 여전히 장기근속 관행의 영향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그림Ⅴ-1] 성, 연령 및 사업체 규모별 근속연수, 2017

1) 남성



2) 여성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7.

일자리 안정성은 규모에 따라, 성별에 따라 그 차이가 확연하다고 할 수 있다.

취업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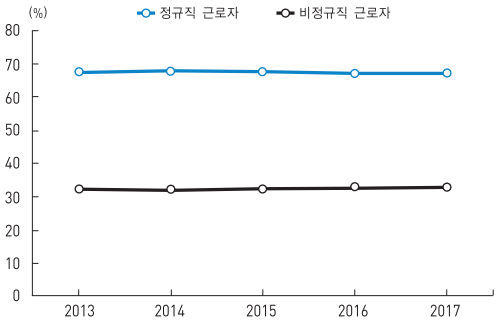
먼저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비중을 살펴보자.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결과로만 보면 2017년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은 각각 67.1%와 32.9%로 전년 동월 대비 이렇다 할 변화는 없다(그림Ⅴ-2-1)[1].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의 변화에서 가장 특기할 것은 시간제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2013년 비정규직 중 31.5%를 차지하던 시간제 고용은 2014년 33.2%, 2015년 35.4%, 2016년 38.4%, 2017년 40.5%로 최근 몇 년 사이에도 급격히 증가했다(그림Ⅴ-2-2).

다음으로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자. [그림Ⅴ-3]에 제시된 5인 이상 사업체의 규모별 임금근로자 분포를 보면, 지난 6년간 큰 변화 없이 100인 미만 사업체에 임금근로자의 약 65%가 집중되어 있다.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까지 고려하면 이 비중은 더 커진다. 반면 일자리 안정성이 높은 500인 이상 대기업에 취업해 있는 근로자는 15% 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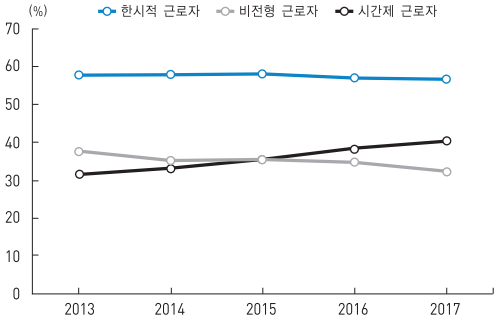
1) 2017년 출범한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부문 내, 그리고 민간부문 확산 효과는 경과기간이 너무 짧아 2017년 8월 자료로는 실증하기 어렵다.

[그림Ⅴ-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비율, 2013-2017

1)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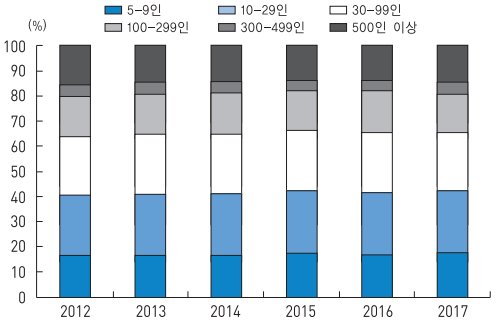


2) 비정규직 내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 비율



주: 1) 비정규직의 경우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정규직 하위 유형 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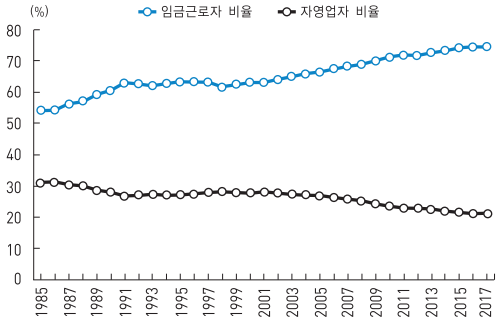
[그림Ⅴ-3]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 분포, 2012-2017



주: 1)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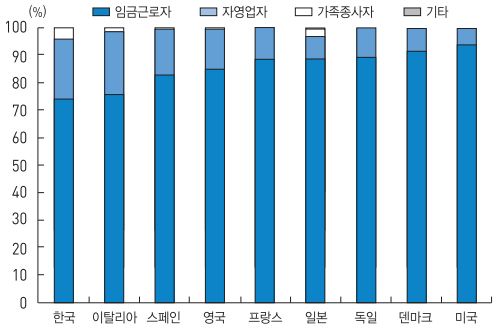
한편 [그림Ⅴ-4]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중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지난 30여 년간 추세를 보여준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여전히 20% 이상으로 높지만 그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왔다. 수적으로도 2002년 621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완만한 감소 추세다. 반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1985년 54.1%에서 2017년 74.6%로 현격히 늘어 취업자 구성면에서는 여타 산업국가와 비슷해지는 현상을 보인다(그림Ⅴ-5).

[그림Ⅴ-4]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비율, 1985-2017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Ⅴ-5] OECD 주요 국가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 2015



주: 1) 자영업자에 '고용주'를 포함시켜 구성하였음.
출처: ILO, ILOSTAT(http://laborsta.ilo.org).

노동시간

노동시간은 지난 몇 년간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표Ⅴ-3). 월간 총 노동시간은 2016년에 비해 2시간 36분 줄었으며, 초과 노동시간도 감소 추세다. 2017년의 월평균 초과 노동시간은 9.2시간으로, 주당 평균 초과 노동시간은 약 2시간 남짓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Ⅴ-4〉에 제시된 취업시간별 취업자 비중의 추이를 보면 1-17시간의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2010년 4.4%에서 2017년 5.1%로 소량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54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노

〈표Ⅴ-3〉 임금근로자의 월간 근로시간, 2010-2017

(시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근로시간	187.0	180.8	173.7	167.9	165.5	173.5	171.1	168.5
소정실근로시간	176.2	169.5	162.1	156.2	154.6	167.0	161.6	159.4
초과근로시간	10.8	11.3	11.6	11.6	10.8	6.5	9.5	9.2

주: 1)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특수형태 제외).
2) 소정실근로시간이란, 사업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에서 정규적인 업무개시 시각과 종료시각과의 사이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말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표Ⅴ-4〉 취업시간별 취업자 구성비율, 2010-2017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17시간	4.4	4.8	4.4	4.6	4.5	4.7	4.8	5.1
18-35시간	10.7	13.9	10.2	14.1	10.9	10.7	12.2	11.4
36-44시간	30.3	29.8	32.7	34.5	34.9	35.2	35.8	37.3
45-53시간	25.7	24.7	25.9	23.6	25.3	26.0	25.3	25.4
54시간 이상	27.3	25.1	25.1	21.6	22.8	21.9	20.3	19.4
일시휴직자	1.6	1.7	1.7	1.6	1.6	1.6	1.6	1.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동자 비중은 같은 기간 27.3%에서 19.4%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초장시간 노동자의 비중 감소가 확연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주당 52시간 근로 상한제도의 직접적 영향 하에 놓인 노동자는 약 20%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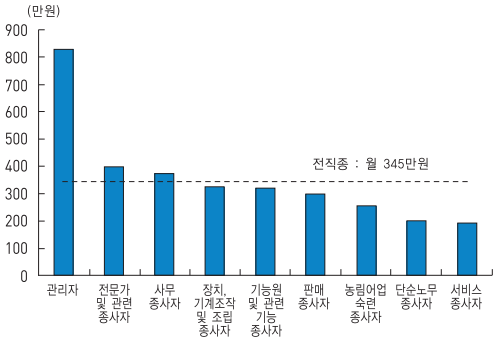
임금과 불평등

다음으로 2017년 임금현황과 불평등의 추이를 살펴보자. 우선 2017년 월평균임금 총액은 345만 원으로 남성은 398만 원이며 여성은 남성의 약 64% 수준인 254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Ⅴ-6]은 직종별 월임금총액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을 나타낸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관리직 임금이 가장 높고 서비스종사자 임금이 가장 낮다. 남성이 집중된 관리직 고임금과 여성이 집중된 서비스직 저임금은 OECD 최저인 한국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64%가 지속되는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직종 외에도 성별 직종분리나 숙련격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고려되는 직종에서도(예: 단순노무직) 남녀 격차는 25% 이상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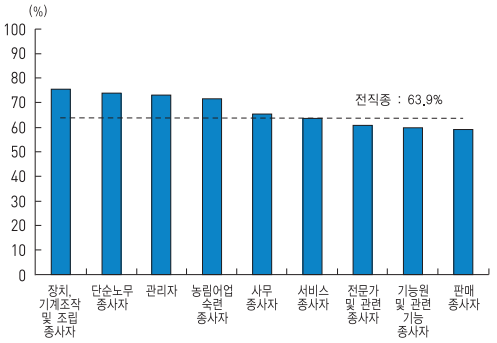
임금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임금노동자 특성별 상대임금을 통해 살펴보자. [그림Ⅴ-7]은 고용형태별, 사업체 규모별로 본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2017년 다소 좁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대적 취약계층 노동자군의 임금이 그렇지 않은 노동자군의 60%를 넘어서지 못하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성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규모별

[그림Ⅴ-6] 직종별 월임금총액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2017

1) 월임금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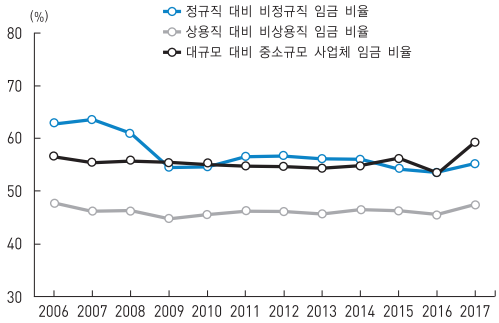


2)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주: 1)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7.

[그림Ⅴ-7]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상대임금, 2006-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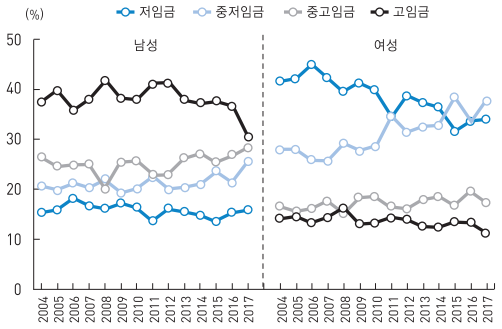
주: 1) 대규모 사업체는 300인 이상, 중소규모 사업체는 5-299인임.
2) 임금을 받기로 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상용직, 1년 미만인 경우 비상용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임시직, 1개월 미만은 일용직) 근로자로 분류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임금 격차는 눈에 띄게 완화되고 있다.

[그림Ⅴ-8]은 그 한 요인이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분포가 축소된 데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여성 저임금 노동자의 분포가 크게 줄었는데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에 적용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그림Ⅴ-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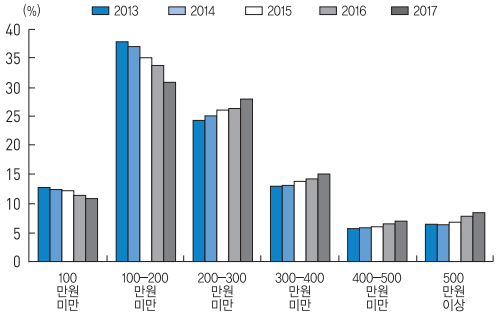
[그림Ⅴ-8]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 분포, 2004-2017



주: 1)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2/3 미만, '중저임금'은 저임금 이상 중위임금 미만, '중고임금'은 중위임금 이상 중위임금의 3/2 미만, '고임금'은 중고임금 이상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이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의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분포에서도 드러난다. 추세적으로 20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의 분포가 줄고 200-300만 원대 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다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의 빠른 상승에 힘입은 변화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를 상회하는 노동자가 월 200만 원 미만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다(그림Ⅴ-9). 한

[그림Ⅴ-9]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분포, 2013-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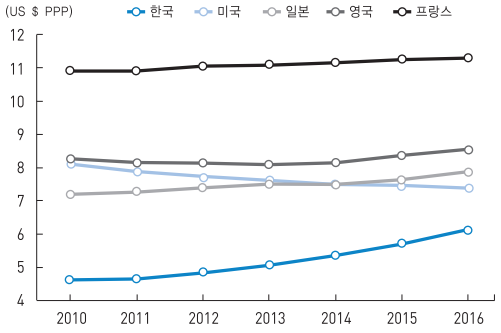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하반기.

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7년 OECD 기준 22.3%로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대체로 10%대인 OECD 여타 회원국에 비해 여전히 크게 높다.

[그림Ⅴ-10]과 〈표Ⅴ-5〉는 각각 주요 OECD 국가들의 최근 실질 최저임금의 추이와 최근 한국의 최저임금 현황을 보여준다. [그림Ⅴ-10]을 보면 2010년만 해도 여타 국가에 비해 다소 낮았던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 수준이 최근 미국과 일본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연간 6-7%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데 따른 것이다. 〈표Ⅴ-5〉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2018년의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면 한층 더 국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의 제도적 영향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결과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수혜 근로자 수 및 영향률 역시 늘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띈다. 단 주의할 것은 이 높은 영향률이 다른 한편으로는 저임금 부문의 근로자 증가에도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그림 Ⅴ-10] OECD 주요국가의 실질최저임금, 2010-2016



주: 1) 실질최저임금은 각 국가의 2017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구매력평가지수로 환산한 미국 달러임.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표 Ⅴ-5〉 최저임금액, 인상률 및 영향률, 2010-2017

	2010	2014	2016	2017
시간당 최저임금(원)	4,110	5,210	6,030	6,470
전년 대비 인상률(%)	2.75	7.2	8.1	7.3
영향률(%)	15.9	14.5	18.2	17.4
적용대상 노동자수(명)	16,103	17,734	18,776	19,312
수혜 노동자수(명)	2,566	2,565	3,420	3,366

주: 1) 영향률=(수혜노동자 수÷적용 대상 노동자 수)×100.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

〈표 Ⅴ-6〉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2010-2017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86.0	85.1	87.5	88.6	88.5	89.3	90.7	89.1
정규직	95.7	94.9	95.4	95.6	95.4	95.4	95.7	94.7
비정규직	52.1	53.5	57.8	60.9	63.0	66.7	72.1	68.7
재택/가내	15.9	16.2	21.3	54.5	49.6	67.2	58.9	62.8
파견/용역	88.0	87.1	89.4	90.0	93.8	93.5	93.8	93.1
일일근로	38.6	44.6	45.7	44.6	44.2	46.0	57.4	50.2
단시간	27.4	28.9	33.8	50.5	58.4	65.0	69.0	67.5
기간제	82.2	83.1	82.2	85.3	83.7	87.0	86.9	85.7
한시적	25.7	25.5	32.8	34.7	40.6	38.0	45.1	41.1

주: 1) 전체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의 경우 특수형태 제외.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저임금 부문의 축소를 위한 노동시장 체질 개선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저임금 노동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임금소득 불평등이 유지되는 데는 고임금 부문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노동 관련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국내 노동시장 불평등 요인은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5-9인 사업체 노동자에 비해 5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가 2010년에 임금을 59% 더 받았다면, 2017년에는 69% 더 받았다. 이렇게 지난 8년간 규모별 임금 격차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예년의 4-6%에서 2% 정도로 조정되면서 2014년 74%에서 조금씩 줄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앞으로 몇 년간 그 추이가 주목된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시장소득뿐 아니라 비시장 소득의 격차에도 기인한다. 특히 사회안전망 가입 여부는 생애위험과 직결되어 중요하다. 〈표 Ⅴ-6〉에서 제시하는 고용보험 현황을 보면 2010년과 비교할 때 거의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이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취약근로자군이라 할 수 있는 일일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한시적 근로자의 가입률이 낮다. 특히 한시적 근로자 가입률은 2016년에 비해 더 낮아져 주의를 요한다. 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군에 산입되지 않지만 최

근 크게 늘고 있는 종속적 자영자(dependent contractors)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책 노력의 지속이 요구된다.

한국인의 주요 직업

최근 급격한 기술 변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직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특히 기술의존성 및 기술적응도가 높은 한국사회에서 기술에 의한 일자리 대체 우려가 크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숙련 만들기에 대한 강조보다 단기적인 비용 논리가 사회에 만연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 노동시장에 들어간 청년층에 우세한 직업의 분포를 1위부터 10위까지 열거해보면 기술 변화가 주도하는 단절적(disruptive) 변화를 주장하기는 아직 이르다. 일반 사무직이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의 직업군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판매직, 음식료 관련 서비스직의 분포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다만 2007년에 비해 제조 관련 기능·기술 직업군이 줄어들고 문화·예술 분야, 보건·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및 기술직 직업군의 등장은 눈에 띄는 변화다(표Ⅴ-7). 기계 조작 등의 기능·기술직 퇴조와 창의 및 사회서비스, IT 전문직의 등장은 기술 변화의 간접효과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회분화 및 고도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변화로 볼 수 있다.

〈표Ⅴ-7〉 청년층 10대 직업, 2007, 2017

	2007		2017	
	15-29세	30-39세	15-29세	30-39세
1위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2위	도소매 판매 종사자	도소매 판매 종사자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3위	교육 전문가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4위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교육 전문가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5위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6위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7위	교육 준전문가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8위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9위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영업직
10위	보건의료 전문가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주: 1) 2017년 자료의 경우 상반기 조사결과이며,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2018년) 기준임.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7, 2017.

노사관계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동향을 살펴보면, 노조 조직률로 대표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큰 부침은 발견되지 않는다. 노조조직률은 최근 5-6년간 10.3%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표Ⅴ-8). 노조 조직 대상 노동자 100명 중 10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표Ⅴ-8〉 노동조합 조직률, 2010-201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조합원수(1,000명)	1,643	1,720	1,781	1,848	1,905	1,939	1,967
남자	1,285	1,328	1,359	1,405	1,453	1,456	1,525
여자	361	392	423	443	453	482	442
조직률(%)	9.8	10.1	10.3	10.3	10.3	10.2	10.3

주: 1) 노동조합 조직률=(조합원수÷임금근로자수)×100.
출처: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각 연도.

여전히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이 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표Ⅴ-9〉를 보면 한국의 노동조합이 분규를 자주 일으키지 않는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4-5년 조금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2017년 분규건수는 101건, 그로 인한 손실일수는 2016년에 비해 대폭 줄어 862일을 기록했다.

〈표Ⅴ-9〉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2010-201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노사분규(건)	86	65	105	72	111	105	120	101
근로손실일(1,000일)	511	429	933	638	651	447	2,035	862

출처: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각 연도.

최근 보다 중요한 노사관계 이슈는 위와 같은 전통적인 집단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일터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찾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대표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7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표Ⅴ-10〉을 보면 조사 응답자 중 최근 5년간 피해의 경험을 보고한 비중은 2/3에 달한다. 간접 피해 경험자도 80%에 이른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피해 경험이 약간 더 많다. 괴롭힘의 유형은 정신적 공격(25%), 업무상 과도한 요구(21%) 또는 과소한 요구(11%), 인간관계에서의 분리(16%), 개인에 대한 침해(15%), 성적 공격(3%), 신체적 공격(2%)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괴롭힘 피해 후 상담 등 후속 조치는 매우 부족했다.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경우가 2/3에 이른다. 상담 경험은 오히려 여성이 약간 더 적다. 고충상담창구가 사내(일터)에 설치된 경우도 30%가 채 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지만, 제도적 조치의 필요성은 간과되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Ⅴ-10〉 과거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와 피해 후 상담경험, 2017

	과거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			과거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후 상담 경험(%)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경험 없음	33.7	31.8	35.7	66.7	65.4	68.1
한 번 경험	28.9	30.6	27.2	16.1	16.2	16.0
가끔 경험	30.4	30.9	29.8	14.6	15.8	13.4
반복 경험	7.0	6.8	7.2	2.6	2.6	2.5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제도적 규율 방안」, 2017.

성평등, 일-가족 균형 요구의 변화와 육아휴직 활용 동향

권현지 (서울대학교)

- 여성 경력단절의 주 연령층이었던 20대, 30대 여성의 취업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30대 후반 경제활동 참여의 성별 격차는 30%p 중반에 육박하며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젊은 여성의 취업 상태 유지에 커다란 걸림돌 중 하나는 양육 부담이며,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한다.
- 육아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여성 취업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사용빈도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도와 사용빈도 모두에 있어 남녀간 격차가 발견된다. 또한 일-생활 병행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변화,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에 따른 활용빈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광범해 육아휴직제도는 아직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부문 간 격차 역시 눈에 띈다. 특히 임금 등 제반 노동조건에 있어 불평등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는 종사상 지위별, 기업규모별 격차가 육아휴직 사용에도 발견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3년 55.6%에서 2017년 59.0%로 3.4%p 증가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참여의 남녀 차이는 여전히 20%p 대에 달하며, 특히 30대 후반의 남녀 차이(2017년 기준 35.3%p)는 터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에서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격차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될 수 있지만, 여성에게 대부분의 육아 부담이 전가되는 현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주는데, 육아부담을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30대 남성과 여성 각각 52.5%, 64.3%에 달한다. 이 결과는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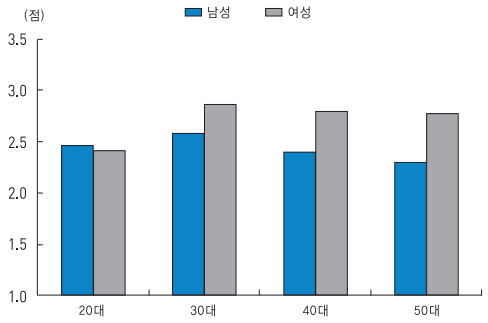
이 글은 젊은 가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의 활용 실태에 대해 살펴본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함으로써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고용노동부 2015). 젊은 세대의 일과 가족 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제도는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와 실행에 있어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체 노동력 대상 자

료도 아직 미비하다. 이 글은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휴직 활용 및 휴직 후 실태를 20대와 30대 여성과 남성에 초점을 두어 기술한다.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한국의 육아휴직제도

한국인의 성역할 태도가 변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가정생활에 비해 일을 우선시하는 인식을 보준다(그림Ⅴ-11).

[그림Ⅴ-11] 일-가족생활 중요도에 대한 인식,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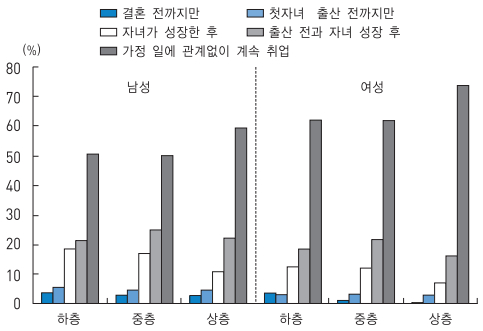


주: 1) 19세 이상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장일과 가정생활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는지에 대해 '일을 우선시'에 1점, '일을 우선시 하는 편'에 2점, '둘 다 비슷하게 생각함'에 3점, '가정생활을 우선시 하는 편'에 4점, '가정생활을 우선시'에 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7.

20대와 3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도 생애 전(全)주기에 걸쳐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첫아이 출산 이전까지만 일하는 게 좋다는 전통적 인식은 5% 내외로 남녀 모두에서 매우 낮다. 이는 전(全) 생애적 노동시장 참여가 이제 젊은 세대에게 보편적 규범이 되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한편 가정 일에 관계없이 여성이 계속 취업해야 한다는 인식은 남성보다 여성 응답자들 사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 남성과 여성 간 인식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그림Ⅴ-12).

소득수준에 따른 인식차이도 발견된다. 소득수준이 높은 여성의 계속 취업의사가 눈에 띄게 높다(그림Ⅴ-12). 이들 고소득자들의 경우 노동조건 및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된 직장에 다닐 개연성이 높고, 개인적으로도 경력과 높은 소득을 포기하는데 따른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계속 취업의사가 강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림Ⅴ-12] 청년층의 소득계층별 여성 취업 적정 시기에 대한 인식, 2017



주: 1) 만 20-39세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소득수준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하층',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은 '중층', 600만 원 이상은 '상층'으로 분류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7.

육아기 단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경력단절에 따른 기회비

〈표 V-11〉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 2017

(%)

	20대		30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출산(전후)휴가제	73.2	79.8	84.5	91.1
배우자 출산휴가제	64.9	63.9	77.7	80.8
육아휴직제	70.5	81.1	82.5	90.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35.2	39.6	42.7	61.2
직장보육지원	47.9	51.7	57.7	70.0

주: 1)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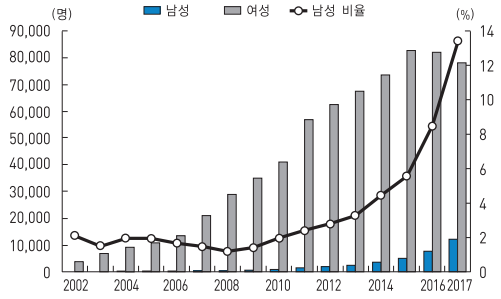
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 소득집단이다. 육아로 인한 취업 단절과 지속의 선택이 계층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성역할 및 일-생활 인식의 변화는 육아 휴직 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표 V-11〉은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성별 및 연령별로 보여주는데, 20대와 30대 여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지도가 같은 연령대 남성의 인지도보다 월등히 높다. 육아휴직의 대안적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의 인지도가 같은 연령대 남성의 인지도보다 상당히 높다. 대체로 20대와 30대는 남녀 구분 없이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나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육아휴직 제도 활용

[그림 V-13]은 지난 15년간 남녀 육아휴직자 빈도와 성비를 추세적으로 보여준다. 제도변화의 직접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그림 V-13]은 도입 초기 약 10년 동안 미미했던 육아휴직자 확대의 실질적인 모멘텀이 2006년 만들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함께 휴직급여를 정액 50만 원으로, 대상아동 연령을 3년 미만으로 확대한 변화가 그 동인이었을 것이다. 이로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간 여성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2011년에는 급여가 정률로, 상한액이 2배 상향 조정되면서 휴직자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림 V-13] 성별 육아휴직 이용자 수, 2002-2017



주: 1) 육아휴직자 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 수를 의미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각 연도.

한편, 2014년 이래 남성 휴직자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육아휴직수급자 확대에 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2003년 1.5%, 2013년 3.3%로 10여 년간 휴직자수와 증가세 모두 미미했으나 2014년 '아빠의 달' 인센티브 도입 및 확대와 함께 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2014년 4.5%에서 2017년

13.4%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육아휴직제도의 이러한 진화를 국제비교의 맥락에서 보면 한국의 제도 수준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부성휴가 기간은 1주가 채 못되어 2주가 넘는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영국 등에 비해 짧지만 아빠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기간은 52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휴직기간의 소득 대체율은 여성의 경우 28.5% 남성의 경우 32.0%로 아직 높지 않은 수준이다(표Ⅴ-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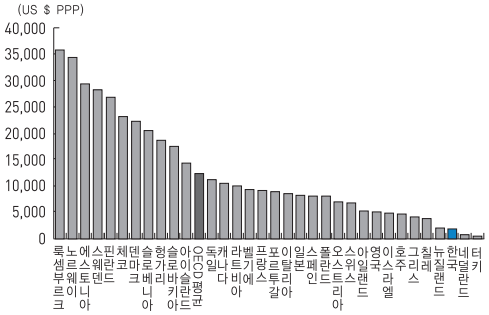
〈표Ⅴ-12〉 OECD 주요국가의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현황, 2016

	남성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주)	소득 대체율(%)	기간(주)	소득 대체율(%)	기간(주)	소득 대체율(%)	기간(주)	소득 대체율(%)
덴마크	2.0	53.6	0.0	0.0	18.0	53.6	32.0	53.6
프랑스	2.0	92.8	26.0	14.5	16.0	94.2	26.0	14.5
독일	0.0	0.0	8.7	65.0	14.0	100.0	44.0	65.0
이탈리아	0.4	100.0	0.0	0.0	21.7	80.0	26.0	30.0
일본	0.0	0.0	52.0	58.4	14.0	67.0	44.0	59.9
한국	0.6	100.0	52.0	32.0	12.9	79.5	52.0	28.5
스페인	2.1	100.0	0.0	0.0	16.0	100.0	0.0	0.0
영국	2.0	20.2	0.0	0.0	39.0	30.9	0.0	0.0
미국	0.0	0.0	0.0	0.0	0.0	0.0	0.0	0.0

주: 1) 소득 대체율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전 급여 대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의 비율.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그림Ⅴ-14]는 2013년 현재 자녀 한 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소요된 공공지출액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인데, 한국의 낮은 지출 수준을 보여준다. 유급 휴직기간이 긴 한국에서 공공

[그림Ⅴ-14] OECD 주요국가의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공공지출액, 2013



주: 1) 공공지출액은 자녀 1명당 지출되는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총급여액임.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지출이 적다는 것은 휴직자 수나 급여율이 국제 평균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상자 대비 휴직급여 수급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사각지대

육아휴직 활용 혹은 활용능력이 각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면 이는 육아휴직의 이용이 삶의 기회에 있어 불평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더불어 휴직 활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면 육아휴직제도는 일-가족 균형의 실질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주어지므로 육아휴직의 제도적 사각지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겹친다. 특수고용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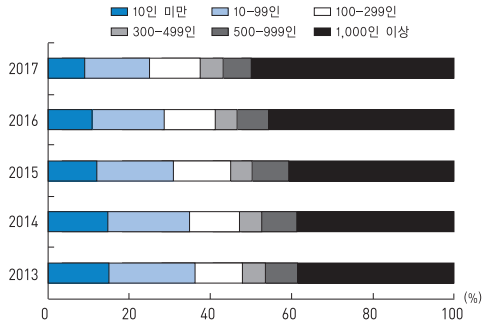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와 가사서비스 및 초단시간 근로자, 6개월 미만 단기근속자는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이거나 혹은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근로자다. 적용대상 중에서도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중에 보험 미가입으로 사각지대에 머무는 근로자가 많다.

현행 고용보험으로부터의 재원조달 유지를 고려하면, 정책적으로 우선 개입할 사각지대는 주로 영세사업장 혹은 비정규고용형태에 집중된 저임금 근로자층에 분포한다. [그림Ⅴ-15]는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육아휴직 처음 사용자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를 보여준다. 분포상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육아휴직 활용이 1,000인 이상 사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우 전체 휴직자의 33.8%가 이들 대규모 사업체에 분포하며, 대기업을 500인 이상으로 확대해 보면 40.9%, 즉 해마다 영아별 최초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여성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가 대규모 사업체에 분포한다. 한편, 2017년 「고용보험 DB」를 살펴보면 육아휴직 사용자 전원이 상용직인 것으로 나타나 종사상 지위상 임시직의 육아휴직 사용은 현재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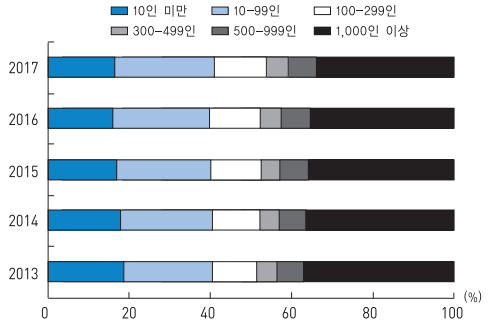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자 분포를 생각할 때 놀랄만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을 참조하면, 2016년 현재 총 195만 여 사업체와 1,736만 여명(여성 721만 여명)의 임금근로자 중 1,0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총 7.3%이다. 여성의 경우 1,000인 이상에 5.5%, 500인 이상에 9% 분포하며, 남성의 경우 13.1%가 500인 이상 사업체, 8.5%가 1,0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 총 여성 근로자 중 10인 미만 사업체에 분포하는 여성은 40%(5인 미만 21.7%)에 육박한다. 육아휴직 기회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평등이 육아휴직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남성 휴직자의

[그림Ⅴ-15]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처음 사용자 분포, 2013-2017

1) 남성



2) 여성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원자료, 각 연도.

경우 규모 간 편의가 더욱 심하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대기업 편중성이 더 심화되고 있다.

〈표Ⅴ-13〉의 사업체 규모별 일가족양립에 관한 각종 제도의 도입 현황을 보면 이러한 격차에 대해 어느 정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 비중을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의 경우 93%인데 반해 5-9인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33.8%에 불과하다. 실제 이 행률은 이보다 더 격차가 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휴직자의 사업체 규모별 편중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사업체의 제도 준수 정도에 의해 상당히 설명될 수 있다.

〈표Ⅴ-13〉 기업규모별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현황,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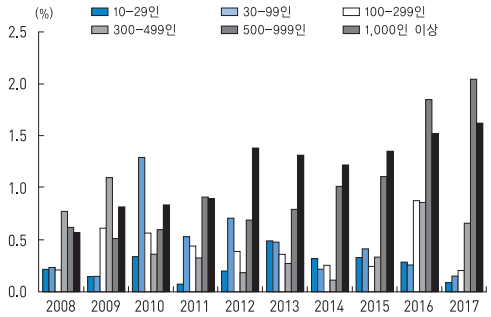
(%)

	출산(전후) 휴가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 휴직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
전체	81.1	60.9	59.1	38.5
5-9인	63.4	39.1	33.8	14.1
10-29인	77.9	53.9	46.1	35.4
30-99인	92.8	73.2	76.1	45.5
100-299인	94.1	80.0	86.7	59.3
300인 이상	98.0	90.1	93.1	73.3

출처 :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2017.

[그림Ⅴ-16]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사업체가 보육지원에 할애하는 노동비용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 그래프는 규모별 지출비중의 10년간 추이를 잘 드러낸다. 5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약 10년간 복리후생비용 중 보육지원금의 비중이 약 3배에 가깝게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반면 100-499인은 약간의 출렁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변화가 없고, 100인 이하의 경우 2008년에 비해 보육지원금의 비중이 30-99인 35.9%, 10-29인 66.1%로 오히려 축소되었다.

[그림Ⅴ-16] 기업규모별 복리후생비용 대비 보육지원금 비중, 2008-2017



주: 1)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회사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출처: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각 연도.

〈표Ⅴ-14〉는 개인의 소득수준별 육아휴직 분포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된 것이다. 2017년 규모별, 통상임금 수준별 육아휴직자 분포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시장 내 위치와 소득수준에 따라 육아휴직 기회(혹은 선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300만 원 이상의 상대적 고임금군이 휴직자의 약 20%를, 21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중간 정도의 임금을 버는 근로자가 휴직자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135만 원 미만의 저임금군 중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경우는 6%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규모의 기업에 고용되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소득 안정권에 있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현재 육아휴직제도의 과제는 소규모

〈표 Ⅴ-14〉 기업규모 및 소득수준별 육아휴직자 분포, 2017

(%)

	135만 원 미만	135-210 만 원	210-300 만 원	300만 원 이상
전체	6.2	39.8	34.0	20.0
5인 미만	1.7	4.5	1.7	0.3
5-9인	0.9	3.7	2.0	0.4
10-29인	0.8	6.0	3.9	1.0
30-99인	0.4	5.1	4.5	1.6
100-299인	0.3	5.3	4.8	2.5
300-999인	0.4	4.7	4.2	3.1
1,000인 이상	1.6	10.5	12.8	11.0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원자료, 2017.

사업체, 불안정근로자, 저임금근로자들이 휴직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별로도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 DB」를 살펴보면, 여성 밀집도가 높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같은 여초 산업이지만 교육서비스업의 휴직자가 전체 휴직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산업 중분류로 보면 2017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보건산업 육아휴직자의 비중이 10.8%에 달하며,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 휴직자 비중이 각각 7.2%, 4.2%이다.

제도화 정도가 높고 노조 설립 비중이 높은 제조업에서도 휴직자 비중이 높다. 금융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 간 휴직자 비중에 있어 격차가 커 같은 산업 내에서도 기업 규모와 노조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300인 미만 사업장 휴직자 중 2.9%가 금융업에 속하는 반면, 300인 이상의 경우 12.7%가 금융업에 속한다.

한편, 출산전후 휴가 급여 수급자 대비 육아휴직 급여수급자 비율이 낮은 산업은 농림수산업 및 광업을 비롯해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71.6%), 건설업(74.0%), 도소매업(76.8%),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8.4%) 등이다. 대체로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 산업, 노조조직화 정도가 높은 산업에서 육아휴직자 비중이 높다[1].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해 여성이 일과 가족생활을 공히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휴직과 관련된 해고 및 배치 상의 불이익은 법으로도 금지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최근 들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문제는 이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할 것인가에 있다.

조사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문제가 있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는 개개인의 장기노동(생애) 이력을 추적함으로써 제도의 효과, 여기서는 육아휴직의 효과를 유

1) 2015년 「고용보험 DB」를 분석한 한 연구는 출산전후 6개월간 기혼여성 임금 근로자의 육아휴직활용을 직장 유형별로 살펴보았는데, 해당 여성 중 공무원 및 국공립 여성 교사의 75%,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종사자의 67%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데 반해 일반 회사 종사자 중에서는 35% 정도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종서, 2016).

추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선 약 15년간의 노동시장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1998–2002년 대졸 여성 코호트의 주요 고용상태별 육아휴직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자. 이들 여성의 졸업 후 노동시장 참여 경험을 배열하면 고용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지속형', 진입–퇴장–진입을 반복하는 '단속형', 그리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노동시장을 퇴장한 '퇴장형' 등의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된다. 휴직제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지속형의 경우 약 71%가 사용 가능했다고 응답했으며, 단속형은 약 37%, 퇴장형은 약 28%가 사용 가능했다고 응답해, 휴직제도 사용 가능 여부와 노동시장 참여의 지속 여부 간에 강한 상관성을 보여준다.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유형간 차이가 크다. 지속형 24.9%, 단속형 6.9%, 퇴장형 2.3%가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유형이든 육아휴직 사용이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특히 단속형과 퇴장형 등 고용이 유지되지 않은 집단의 휴직 경험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교적 최근 코호트라고 할 수 있는 2003–2005년 대졸여성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일경험의 배열 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별해 보았다. 아래 〈표 V–15〉에 제시된 유형별로 육아휴직 관련 경험을 살펴보면,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 정규직 지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었다. 반면 졸업 후 상당기간 지연 후에 중소기업에 진입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서의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비중이 상당했으며(약 27–41%), 중소기업 정규직을 유지하다가 중간에 퇴장했거나 비정규직을 주로 경험한 유형의 경우 60% 정도는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한편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해도 실제 육아휴직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중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낮았고, 불안정한 유형일수록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대기업 정규직을 유지한 경우에 비해 중소기업 정규직을 유지한 경우 사용 경험 비중이 높고, 평균 사용일수가 길었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휴직 사용이 가능하나 경력을 추구하는 경우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더 강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제도가 누구나 사용하는 당연한 관행으로 정착하지 못한 경우, 소위 휴직의 낙인(flexibility stigma) 효과로 인해 육아휴직은 일과 조직에 대한 낮은 몰입으로 해석되고 경력 불이익(motherhood penalty)으

〈표 V–15〉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유형별 육아휴직 사용 경험, 2015

	육아휴직 사용불가 (%)	육아휴직 사용가능	
		사용하지 않음 (%)	사용한 경우 평균휴직기간 (일)
전체	30.1	78.2	63.1
대기업 정규직형	0.0	75.1	62.9
중소기업 정규직형	0.0	60.7	99.6
중소기업 정규직 단기 지연 진입형	27.3	80.7	71.2
중소기업 정규직 장기 지연 진입형	40.5	88.0	43.3
중소기업 정규직 중반 퇴장형	60.9	80.8	35.2
비정규직 및 자영업형	57.9	86.6	49.4

주: 1) 2003–2005년 대학 졸업 여성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직업력자료」, 원자료, 2015.

〈표 Ⅴ-16〉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직장 복귀율 분포, 2015

(%)

직장 복귀율 구간	1-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복귀 안함	86.4	36.3	78.4	26.3	51.7	9.6	33.0	2.7
1-20%	2.0	2.1	0.5	1.5	4.3	1.8	1.8	0.9
21-40%	0.0	1.4	1.0	3.5	0.5	11.4	2.0	11.3
41-60%	0.5	6.2	7.6	14.1	5.1	17.6	15.0	31.0
61-80%	0.5	12.8	2.3	16.8	16.4	33.0	29.3	32.0
81-100%	10.7	41.2	10.3	37.7	22.0	26.6	19.0	22.1

출처: 여성가족부,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조사」, 2015.

로 이어지기 쉽다. 한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지불능력이 낮지만, 육아휴직 등 일-가족 균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양질의 여성 인력을 유지, 안정화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암시한다.

여성가족부의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자료를 통해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직장 복귀율 분포를 보면, 여기서도 확연한 규모별 차이가 발견된다(표Ⅴ-16).

중소규모 사업체일수록 복귀율이 낮은데 반해 300인 이상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이탈하기보다는 직장에 머무는 휴직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는 여성에 비해 휴직 후 복귀비율이 크게 낮은데 이는 아직 아버지 휴직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이직 준비기간 혹은 과도기간으로 활용하는 경향으로 추정된다. 한편 남성 역시 정책순응성이 높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직장복귀율이 높고,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이직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표Ⅴ-17〉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 2012-2015

	육아휴직자 고용유지율 (%)	육아휴직 후 복직자 (명)	복직 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 근무 근로자 (명)
2012	71.2	46,262	32,933
2013	74.6	53,688	40,053
2014	76.4	58,694	44,817
2015	75.5	68,383	51,619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원자료, 각 연도.

〈표Ⅴ-17〉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이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육아휴직 후 복직자 중 복직 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머문 근로자의 비중이 2012년 71.2%에서 2015년 75.5%로 4.3%p가량 높아졌다. 육아휴직자 전체를 놓고 보면 종료 1년 후 복귀율은 50%에 미치지 못한다. 휴직자의 임금수준별로는 125만 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 중 1년 유지 비율이 약 32%인데 반해, 400만 원 이상의 상대적 고소득자의 경우 약 59%로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유지율이 높다. 육아휴직 이후 고용유지율을 높이는 문제, 특히 저소득근로자의 고용유지율 제고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박종서. 2016.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제236권, p. 18-36.

비정규직 고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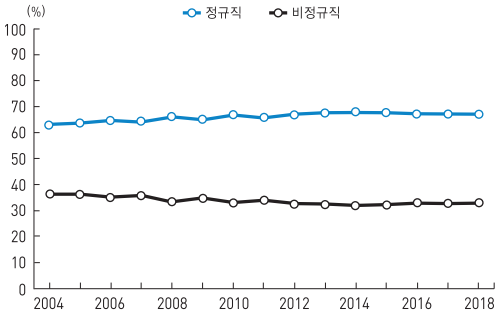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 지난 10여 년간 비정규직 비율은 큰 변화 없이 32.2–37.0% 수준을 유지해 왔다. 같은 기간 시간제 노동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 중 13.5%까지 늘어났다.
- 남성 비정규직 비율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여성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청년층과 5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학력자를 제외하고 초졸 이하, 중졸, 고졸 학력자들 내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50%를 넘고 있으며, 2007년과 2017년 주요 산업을 비교해 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정규직이 크게 늘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에서는 비정규직이 크게 줄었다.
- 전반적으로 임금노동자의 근속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현재 근속기간은 정규직이 93.1개월, 비정규직은 30.9개월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이 2–3년을 주기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 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6–17%를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률은 2004년 5.2%에서 2018년 3.1%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고용불안, 저임금 등 개선이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대변 수준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비정규직 동향

2004년 이후 전체 한국의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최저 32.2%(2014년)에서 최고 37.0%(2004년)를 유지해 왔다(그림 Ⅴ–17).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정규직의 비율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3년 이후 비정규직의 비율은 32%대를 유지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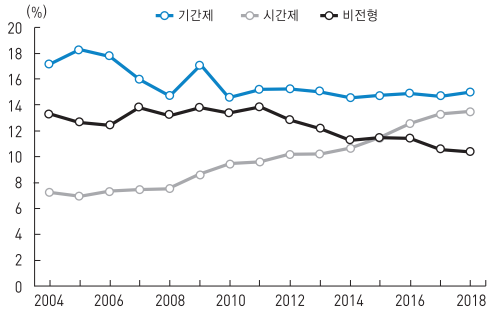
[그림 Ⅴ–17]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율, 2004–2018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Ⅴ–18]처럼 비정규직을 기간제, 시간제, 비전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기간제 노동자의 비중은 2010년 이후 14–15%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용역 등 간접고용이 포함된 비전형 노동자의 비율이 꾸

[그림 Ⅴ-18]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비율, 2004-2018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중 해당 고용형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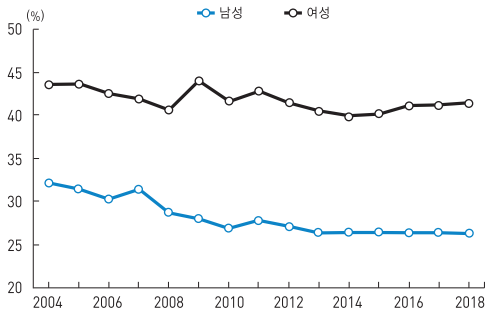
준히 줄어들어 2018년 전체 임금노동자의 10.3%가 되었으나 반대로 시간제 노동자의 비중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노동자는 2004년 전체 임금노동자의 7.3%였으나 2018년 13.5%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간제 노동자의 규모가 2007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기간제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2년의 기간제한 때문으로 해석되며,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간접고용인 비전형 노동자의 비중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가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간접고용 노동자의 규모는 줄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파트타임 등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은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단절 여성 등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공급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해고가 용이하며 정부의 입장에서도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노동 분야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시간제의 급증

성별 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04년 43.7%에서 2018년 41.5%로 크게 늘거나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남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04년 32.2%에서 2018년 26.3%로 5.9%p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의 감소가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Ⅴ-19).

[그림 Ⅴ-19] 성별 비정규직 비율, 2004-2018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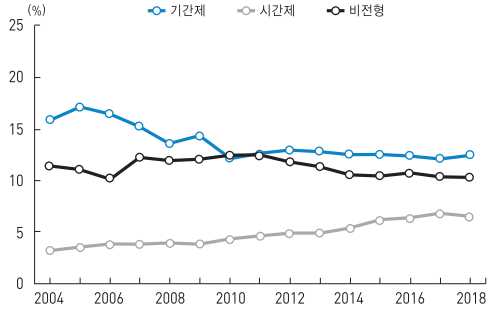
성별 비정규직 비율을 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남성은 기간제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비전형이었으며 시간제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기간제와 비전형은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시간제노동이 꾸준히 늘어 2004년 3.3%에서 2018년 6.6%로 증가했다(그림Ⅴ-20-1).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3년까지 기간제가 가장 많았으나 이후 시간제가 가장 많았으며 비전형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여성 비정규직 중에서 시간제노동이 급증했는데 2018년 22.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비정규직의 주된 유형으로 기간제가 안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여성 비정규직의 주된 유형은 시간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Ⅴ-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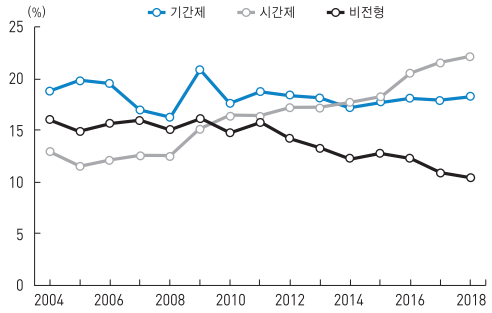
[그림Ⅴ-21]은 각 연령대 내에서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60대 이상의 시간제 노동자는 2004년 17.2%에서 2018년 36.3%로 2배가량 늘어났다. 10대의 경우도 같은 기간 34.6%에서 62.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서도 시간제가 크게 늘었는데, 2004년 5.6%에 불과한 시간제 일자리가 2018년 15.4%로 거의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제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과 고령층에서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림Ⅴ-20] 성별 비정규직 비율, 2004-2018

1)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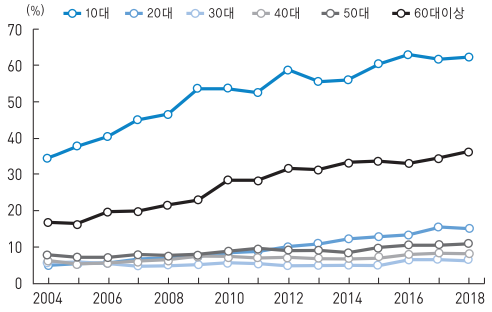


2) 여성



주: 1) 성별 임금근로자 중 해당 고용형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Ⅴ-21] 연령대별 시간제 비율, 200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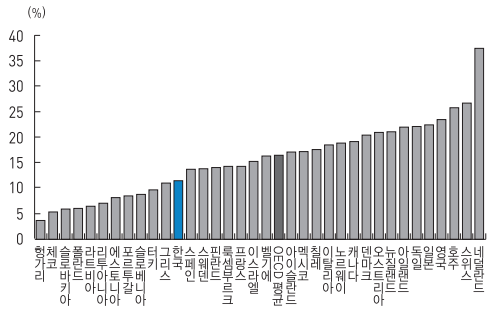
주: 1) 해당 연령대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시간제의 국제비교

[그림Ⅴ-22]에서와 같이 주 30시간 미만인 시간제 노동자 비중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시간제 비율은 OECD 평균인 16.5%보다 약간 낮은 11.4%로 나타났다. 한국의 시간제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OECD가 시간제 근로 기준을 30시간 미만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30시간 이상의 시간제 노동자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30시간 이상의 근로를 포함하는 전체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13.3%였다.

영국,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은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는 비자발적 시간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비자발적 시간제 비율은 2017년 49.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진국의 시간제 비율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전일제와의 차별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는 시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특이한 경우로 네덜란드는 일하는 여성의 과반수가 시간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네덜란드에서는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각종 수당과 복지혜택을 일반 직원과 똑같이 누릴 수 있고, 본인이 원할 경우 전일제로 근무할 수 있다.

[그림Ⅴ-22] OECD 국가의 시간제 노동자 비율, 2017



출처: OECD, OECD.Stat(https://stats.oecd.org).

고령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 증가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보았다. 2018년을 기준으로 60대 이상, 50대, 40대, 20대, 30대, 10대 순으로 비정규직이 많았다. 임금노동자의 8.2%가 60대 이상의 비정규직이었으며 10대는 가장 적은 0.8%로 나타났다. 시계열로 살펴보면 30대와 4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나 2012년 이후 20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50대와 60대 이상에서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Ⅴ-23-1). 이러한 결과는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20대 청년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적지 않은 이들이 50세 이후에도 비정규직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기간제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고령노동자들이 은퇴 후에도 촉탁직 등으로 2-3년을 기간제로 일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령대 내에서의 비정규직 비율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0대와 60대 이상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2018년을 기준으로 10대 내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74.0%였으며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67.8%로 높았다. 연령대 내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로 21.0%였다. 20대 내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2012년 이후 증가하였다(그림Ⅴ-23-2).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과 50대, 60대 이상 노동자의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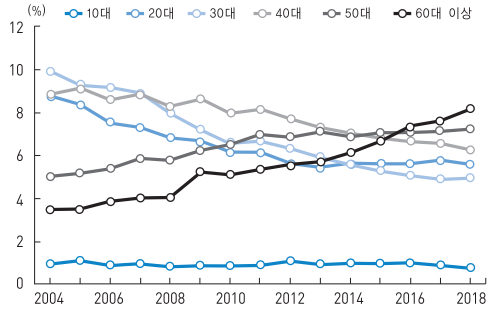
교육수준별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중 교육수준별로 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교육수준과 비정규직 비율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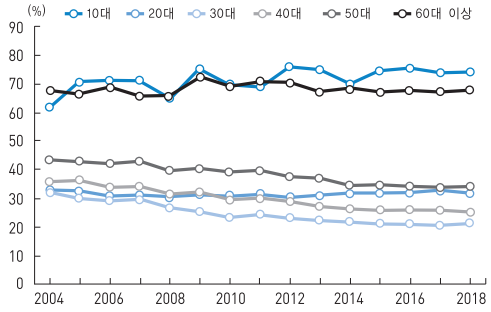
2018년 기준으로 임금노동자 중 고졸 학력을 가진 비정규직의 비율이 1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정규직 비율이 10.9%로 나타났다. 초졸 이하와 중졸 학력을 가진 비정규직의 비율은 각각 3.9%, 3.7%였다(그림Ⅴ-24-1).

[그림Ⅴ-23]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2004-2018

1)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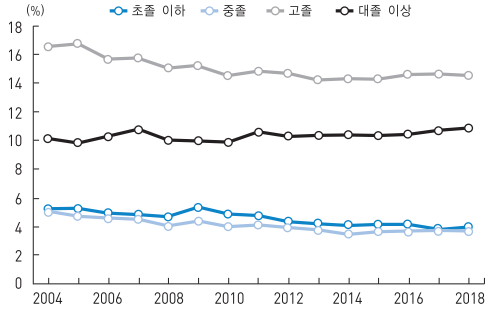
2) 연령대 내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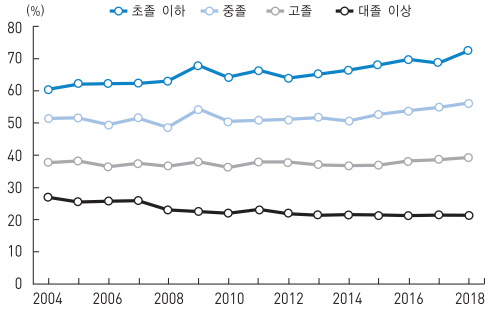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Ⅴ-24] 교육수준별 비정규직 비율, 2004-2018

1)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2) 학력 내 비정규직 비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학력 내에서의 비정규직 비율도 살펴보았다. [그림Ⅴ-24-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8년 기준으로 초졸 이하의 비정규직 비율은 72.3%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졸 학력의 비정규직 비율은 56.1%이며, 고졸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39.4%로 떨어진다. 또한 대졸 이상 중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약 2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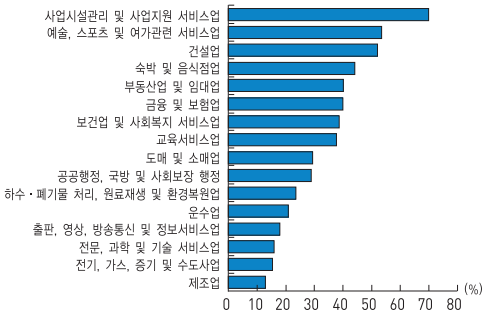
시계열로 살펴보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만 비정규직이 비율이 늘지도, 줄지도 않은 약 22%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초졸 이하와 중졸, 고졸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모두 약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비정규직

[그림Ⅴ-25]에서와 같이 2017년 현재 주요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산업 내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인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69.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53.4%), 건설업(52.0%)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은 제조업(13.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5.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17.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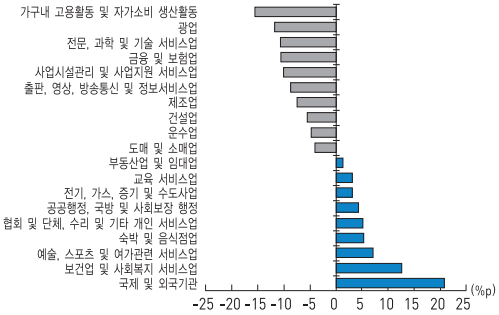
한편 [그림Ⅴ-26]은 2007년과 2017년을 비교하여 산업별로 비정규직의 증감을 살펴본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비정규직이 5%p 이상 늘어난 산업은 국제 및 외국기관(20.7%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5%p),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7.1%p), 숙박 및 음식점업(5.3%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5.2%p)

[그림Ⅴ-25] 주요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 2017



주: 1) 9차 산업분류 기준.
2) 해당 산업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7. 8.

[그림Ⅴ-26] 산업별 비정규직 증감률, 2007, 2017



주: 1) 9차 산업분류 기준.
2) 증감률은 2017년 비정규직 비율과 2007년 비정규직 비율의 차이임.
3) 증감률이 1%p 내외인 산업은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7. 8, 2017. 8.

등이었으며 반대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줄어든 산업은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15.7%p), 광업(–11.8%p),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7%p), 금융 및 보험업(–10.7%p)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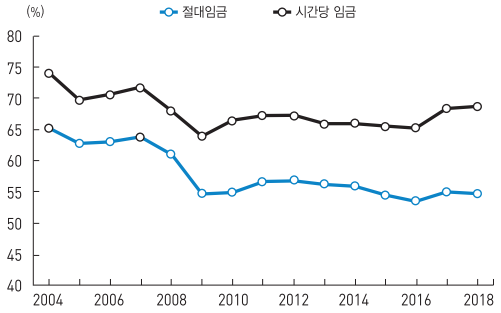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임금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2018년 54.6%로 2004년 65.2%에 비해 1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간제 노동자가 비정규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당 임금을 비교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2004년 74.1%에서 2018년 68.8%로 5.3%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Ⅴ–27).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의 확대는 사회양극화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7년 이후 약간의 반등이 있었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효과로 해석된다.

[그림 Ⅴ–28–1]은 고용형태별로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살펴본 것이다. 2018년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1만 7,473원이며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 9,141원,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 3,173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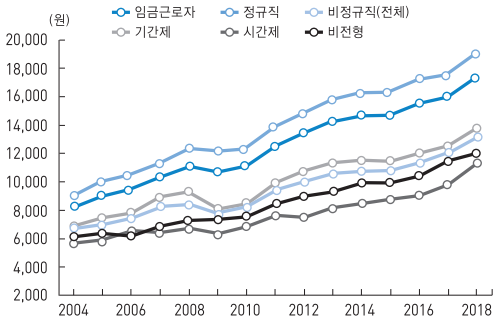
[그림 Ⅴ–27]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 200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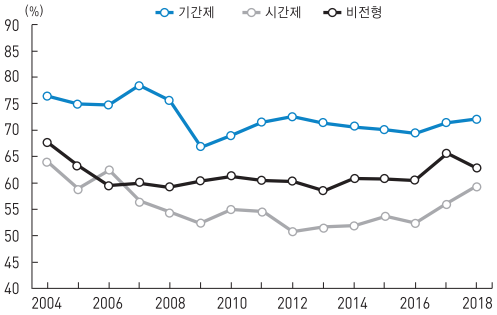
주: 1) 임금수준=(비정규직 임금÷정규직 임금)×1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Ⅴ–28]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과 비정규직 임금수준, 2004–2018

1)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2) 기간제, 시간제 및 비전형 임금수준



주: 1) 비정규직 임금수준=(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정규직 시간당 임금)×1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중에서 시간당 임금은 기간제가 13,766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비전형이 11,999원이었으며 시간제가 11,348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기간제, 시간제 및 비전형 노동의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간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75%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 66.7%까지 떨어졌고 이후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간제는 2004년 64.1%에서 2012년 50.9%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상승하여 2018년 59.3%로 올랐다. 비전형은 2006년 이후 60%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 소폭 상승해 2018년 62.7%를 보이고 있다.

〈표 Ⅴ-18〉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2004-2018

(시간)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2004	49.0	43.1	23.3	43.7
2005	45.9	42.0	22.1	42.7
2006	45.4	41.3	21.1	42.1
2007	44.0	39.8	21.8	40.9
2008	43.3	40.3	21.5	41.3
2009	45.4	40.6	21.2	40.9
2010	46.5	40.1	20.8	41.5
2011	42.9	36.9	20.0	39.4
2012	41.4	36.0	20.2	38.8
2013	40.2	35.1	20.1	38.2
2014	40.1	34.6	19.7	38.5
2015	41.3	35.7	20.2	38.0
2016	40.5	34.7	20.5	37.7
2017	40.7	34.2	20.5	37.2
2018	39.3	32.0	19.1	36.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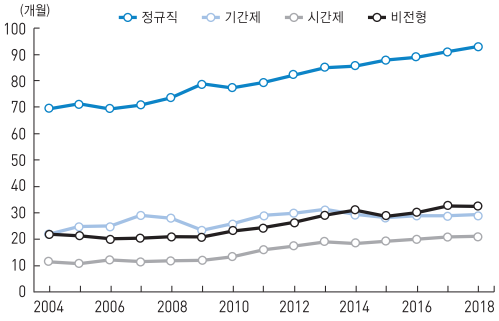
노동시간

전체 임금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8년 현재 정규직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39.3시간이며, 기간제의 노동시간은 32.0시간으로 2004년 43.1시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비전형의 노동시간은 36.4시간이며, 시간제 노동자는 주당 19.1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Ⅴ-18).

근속기간

임금노동자의 근속기간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현재 정규직의 근속기간은 93.1개월이며,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은 정규직의 1/3 수준인 30.9개월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의 근속기간은 29.2개월이었으며, 시간제의 근속기간은 20.9개월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이 2-3년을 주기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림Ⅴ-29).

[그림 Ⅴ-29] 고용형태별 근속기간, 200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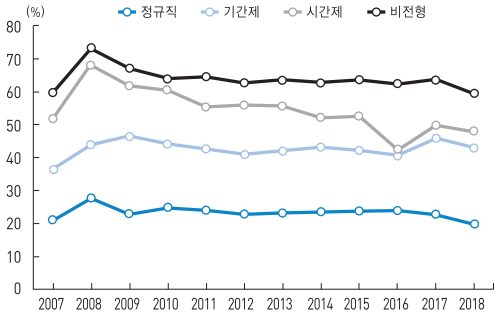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직업선택의 비자발성

2018년을 기준으로 정규직의 비자발적인 직업선택은 19.7%로 낮은 반면, 비전형 노동자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직업을 선택했다는 응답이 59.5%로 매우 높았다. 시간제의 경우도 절반 정도인 47.9%가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V-30).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V-30]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선택 비율, 200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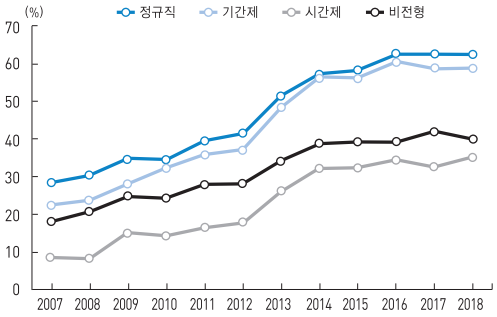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교육훈련과 노조조직률

노동자들의 교육훈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이래로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교육훈련을 경험한 비율이 늘어났다(그림 V-31). 예를 들어 정규직과 기간제의 경우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각각 62.5%, 58.8%로 나타났으며, 시간제 노동자도 교육훈련 경험이 35.3%로 나타났고, 비전형 노동자도 40.0%가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특수적 인적자원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V-31] 고용형태별 교육훈련경험 비율, 200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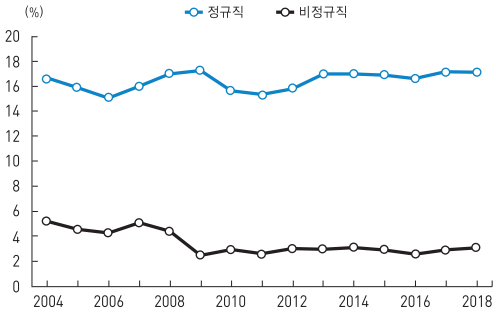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한편, 노동자의 이해대변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표인 노동조합 조직률을 살펴보면, 정규직의 노조조직률은 2004년 16.6%에서 2018년 17.1%로 16-17%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비정규직의 노조조직률은 같은 기간 5.2%에서 2.9%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32).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함의를 담고 있다. 첫째는 고용불안, 저임금 등 처우개선이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 이해를 대변하는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둘째는 비

정규직 노동조합의 경우 제도적으로 노동조합의 설립,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Ⅴ-32]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노조조직률, 2004-2018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2018 Income & Consumption

Korean Social Trends 2018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Ⅵ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 서강대학교 180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 박정수 | 서강대학교 190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송헌재 | 서울시립대학교 199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서강대학교)

- 지난 20년간 소득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은 경기에 더 민감하게 움직였다.
- 소득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 추세로 바뀌었다.
- 지난 20년간 청년층 및 고령층과 중·장년층 간 소득비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 청년층을 제외한 연령집단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비지출 비중이 감소추세에 있다.
- 저소득층의 의식주지출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 조세, 연금,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조세의 누진율이 강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20여 년에 걸친 한국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 등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진단해 본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경제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한편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험을 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가구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가구의 소득과 소비 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주로 사용하였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보완하였다. 「가계동향조사」의 대상표본이 2006년에 1인 가구로 확대되어 기간에 따라 표본범위가 차이가 있다. 1인가구의 소득과 소비의 특성이 매우 다른 이유로 2006년 이전과의 자료와 단순 비교하는데 왜곡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분석 대상은 전체 기간에 걸쳐 2인 이상 가구로 한정했다.[1] 분석 기간은 1992년부터 2016년까지로 하였으며 전체 기간을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소득과 소비의 시계열 비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과 실질소비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명목소득과 명목소비를 각각 실질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1) 「가계동향조사」는 2002년 이전에는 도시 2인 이상가구,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전국 2인 이상 가구, 2006년 이후는 전국 1인 이상 가구로 대상 표본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본 분석에서는 2002년 전후에도 대상 표본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2인 이상 가구의 소득과 소비의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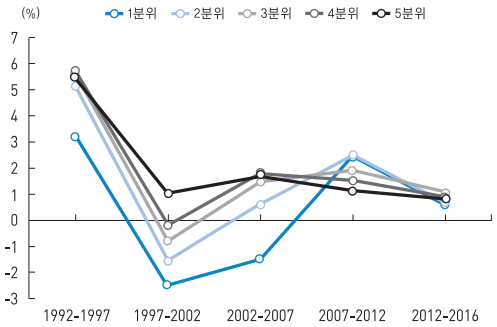
가구소득의 분포와 변화

가구원들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은 가구의 생활수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2–1997년 기간에는 평균 가구 실질소득이 연평균 5.3% 증가했으나 1997–2002년 기간에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했으며 증감률이 −0.2%를 기록했다. 2002–2007년 기간에는 실질소득 증가율이 1.3%로 회복하였고 그 후 2007–2012년 기간에는 소득증가율이 1.6%로 더 강화되었다. 하지만 최근 2012–2016년 기간에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소득증가율이 0.8%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 전 기간에 비해 소득 증가율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2].

[그림 Ⅵ–1]은 2인 이상 가구의 각 기간별 연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을 소득분위별로 보여준다.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을 1분위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을 5분위로 하는 5개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소득집단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3].

[그림 Ⅵ–1] 가구 소득분위별 실질소득 증가율, 1992–2016



주: 1) 2002년까지는 도시 2인 이상, 그 이후는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증가율은 해당 기간 연평균 성장률임(CAGR).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소득계층별 소득 변화의 추이는 경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7–2002년 기간에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증가율이 하락했고 저소득계층의 경우 실질소득 감소를 겪었다. 2002–2007년 기간에는 실질소득이 회복되었고 상대적으로 고소득계층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2007–2012년 기간에는 반대로 저소득계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최근 2012–2016년 기간에는 모든 계층에서 소득증가율이 1% 이하 낮은 수준으로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년간 소득계층별 소득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Ⅵ–1〉에는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한 각 소득분위의 소득비를 제시하였다. 소득비 산출에는 처분가능소득을 사

2)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계동향조사」는 설문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미시자료이므로 거시통계와 직접적인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자료의 한계로 동일 가구의 실질소득 변화를 살펴볼 수 없으므로 각 소득집단의 평균 실질소득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소득집단 간 소득 변화의 차이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의 소득분위는 2인 이상 가구의 표본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므로 2006년 이후의 경우 전체 가구 기준 소득분위와는 차이가 있다.

용하였는데, 여기서는 가구원 수가 달라지면 동일한 생활수준 유지에 필요한 소득도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표준화한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다. 외환위기 직후에 저소득층의 소득비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2002년 이후 정체되어 있다가 2012년 이후에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3분위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소득비가 하락하였으나 다시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4분위의 소득비는 1997년 이후 큰 변화가 없고 5분위의 소득비는 1997년 174.1에서 2002년 181.4로 상승한 후 2016년까지 180.2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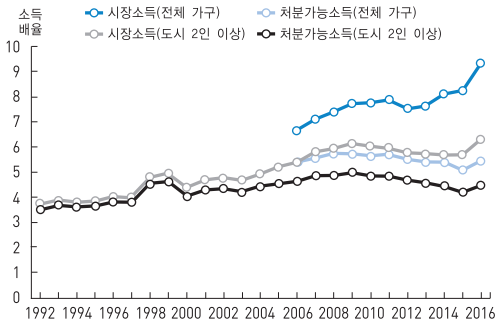
〈표 Ⅵ-1〉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1992-2016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992	48.9	73.7	91.7	113.5	172.1
1997	45.9	71.8	91.8	116.3	174.1
2002	41.8	69.8	90.0	116.4	181.8
2007	37.4	68.0	90.9	118.2	185.4
2012	38.7	69.5	91.9	118.4	181.4
2016	40.2	70.6	91.9	117.0	180.2

주: 1) 2002년까지는 도시 2인 이상, 그 이후는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소득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Ⅵ-2]는 소득불평등도를 반영하는 지표인 1분위 대비 5분위 소득 배율을 보여준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기 위해 세전소득인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과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을 함께 제시하였다.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11년까지 지

[그림 Ⅵ-2] 소득 5분위 배율, 1992-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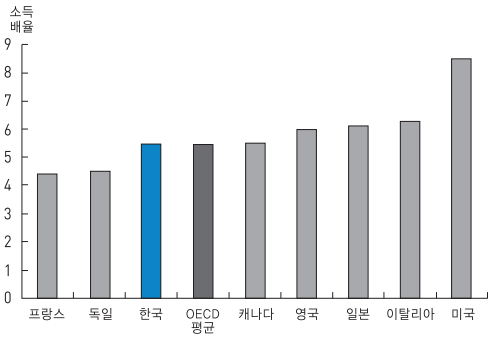
주: 1) 전체 가구는 전국 1인 가구 및 농어가를 포함한 일반가구, 도시가구는 동 지역의 2인 이상 일반가구(농어가 제외)를 대상으로 함.
2) 소득 5분위 배율은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의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속적으로 상승하다가 그 이후 하락한 후 다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다. 2인 가구로 한정한 경우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09년까지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 추이를 보였으며 2016년에 다시 상승했다.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점차 상승하여 2009년 최고 5.8배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하여 2015년에는 5.1배로 낮아지다가 2016년에 다시 5.5로 급등하였다. 시장소득 기준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의 차이가 점차 커지는 것은 한국 경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어 세후소득 기준으로는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2016년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의 부정적 효과가 상당하여 세후소득 기준으로도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처분가능소득 소득불평등도가 2인 이상 도시

가구 기준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은 이유는 1인 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Ⅵ-3]은 OECD 주요 국가들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016년 5.45로서 OECD 국가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고 미국, 일본, 영국보다는 낮고 프랑스, 독일보다는 높다.

[그림 Ⅵ-3] OECD 주요 국가의 소득 5분위 배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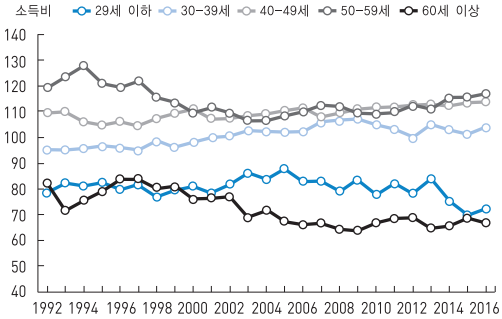


주: 1) 소득 5분위 배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임.
2) 한국과 미국, 영국은 2016년 자료, 일본은 2012년 자료이며, 그 외 국가는 2015년 자료임.
출처: 통계청, 「2016년 소득분배지표」, 보도자료, 2017. 5.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가구주 특성에 따른 소득의 변화

이번에는 가구소득의 변화가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및 가구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Ⅵ-4]는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소득격차가 어떻게 변화해

[그림 Ⅵ-4]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비, 1992-2016



주: 1) 2002년까지는 도시 2인 이상, 그 이후는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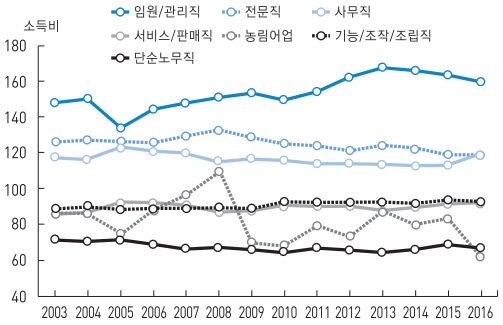
왔는지를 보여준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소득비를 보면, 1992년에는 연령집단 간 소득비의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집단 간 격차가 점차 커졌음을 볼 수 있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소득비가 나머지 그룹의 소득비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 연령집단 간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소득비는 1992년 78.5와 82.0에서 2016년 72.2와 66.7로 각각 낮아졌고, 같은 기간 30대와 40대의 소득비는 각각 95.4와 109.5에서 103.8과 113.8로 각각 높아졌다. 이처럼 청년층 및 고령층과 중·장년층 간의 소득비 격차는 점차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는 청년층 대상 신규 일자리 창출 부족과 고령층의 빈곤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력집단 간에는 소득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고졸 집단과 전문대졸 집단의 소득비는 1992년 94.4와 103.7에서 2016년 95.3과 101.8로 큰 변화가 없다. 대졸 집단의 소득비 역시 같은 기간 132.1에서 121.4로 다소 하락했고, 중졸 이하 집단의 소득비는 85.0에서 63.1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우리 경제가 기술집약적으로 변모하면서 비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금은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적 특성과 직업에 적합한 인력의 희소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구의 소득은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림 Ⅵ-5]는 전체 평균 소득 대비 직업집단별 소득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임원·관리직의 소득비는 2003년 148에서 2016년 160으로 상승한 반면 전문직의 소득비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기간 비숙련 단순노무직의 소득비는 72에서 67로 큰 폭으로 낮아져서 지식기반 직종과 나머지 직종 간 소득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Ⅵ-5] 가구주 직업별 소득비, 2003-2016



주: 1)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2) 소득비는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직업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구소득의 구성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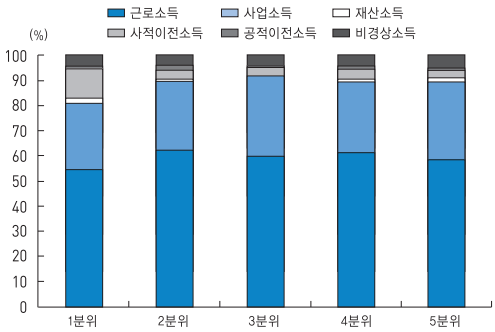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득의 원천은 다양하고 원천별 구성도 변화해 왔다.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이전소득은 가족 간 이전과 민간연금 등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된다. 1996년과 2016년 사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9.5%에서 67.0%로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은 29.6%에서 19.5%로 감소하였다. 한편 공적이전 소득은 1.1%에서 6.0%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Ⅵ-6]에 제시된 1996년과 2016년 기준 소득분위별 소득의 원천구성을 살펴보면,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 경우 근로소득 비중이 1996년 각각 61.2%와 58.5%에서 2016년 68.7%와 75.0%로 크게 높아졌다. 1996년에는 원천의 구성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6년에 와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비중이 높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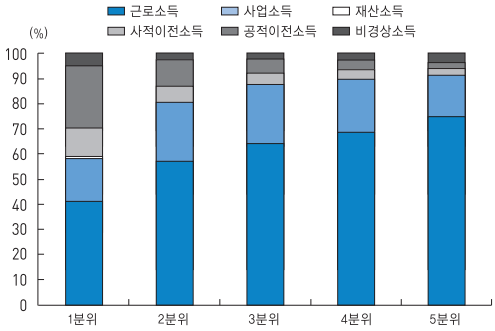
알 수 있다. 공적이전소득은 2016년에 1분위 소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1996년 1.1%와 2.1%에서 2016년 25.1%와 10.7%로 늘어나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60세 이상 공적이전소득 중 공적연금의 비중은 줄어들고 기초노령연금 및 사회수혜금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림 Ⅵ-6]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구성, 1996, 2016

1) 1996년



2) 2016년



주: 1) 1996년은 도시 2인 이상, 2016년은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1996, 2016.

가구주 연령별 소득원천 구성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비중은 낮고 사업소득 비중은 높다. 20대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의 비중, 그리고 60대 이상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1996년-2016년 기간 동안 20대의 사적이전소득은 6.6%에서 8.6%로 증가하였고 60대 이상의 공적이전소득은 사회보장체계가 정착됨에 따라 4.6%에서 22.3%로 급증하였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가구소득에서 여성 배우자의 소득이 기여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성 배우자 소득 비중은 1996년 10.5%에서 2016년 16.1%로 크게 높아졌다.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여성 배우자의 소득 기여도가 높다. 지난 20년간 모든 소득계층에서 여성 배우자의 소득 기여도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1분위의 여성 배우자 소득 기여도는 1996년 5.7%에서 2016년 6.9%로 증가하였고, 5분위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12.5%에서 20.5%로 증가하였다.

여성 배우자의 고용률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20대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50대는 1998년 18.3%에서 2016년 41.4%로 증가하였고 60대 이상은 같은 기간 4.5%에서 17.1%로 증가하였다. 취업 여성 배우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서비스·판매직 비중은 2003년 43.3%에서 2016년 30.3%로 낮아진 반면 전문·관리직 비중과 사무직 비중은 같은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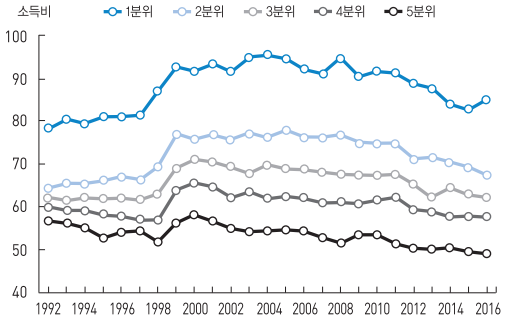
간 각각 6.1%와 11.9%에서 23.2%와 19.9%로 높아져 여성 근로자의 직종이 보다 고소득 직종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지출과 가계수지의 변화

가구소득은 가구지출의 재원이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증가하면 가구지출도 증가한다. 그러나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1992년 64.2%에서 1999년 외환위기 직후 71.2%로 급등한 후 2011년까지 68.9%로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그 이후 2016년 63.9%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4] [그림 Ⅵ-7]은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지출 비중이 낮다. 외환위기 직후 4분위 이하 계층에서 소비지출 비중이 급등한 후 2007년까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 이후에는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5분위에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소비지출 비중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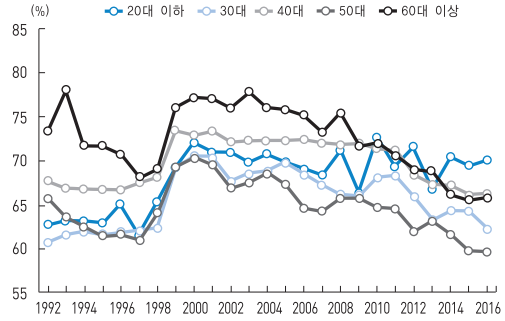
[그림 Ⅵ-8]은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을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1992년에는 60대, 40대 순으로 소비지출 성향이 높고 나머지 연령대는 유사했던 반면 2016년에는 20대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40대, 60대, 30대, 50대 가구의 순으로 높다.

[그림 Ⅵ-7]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1992-2016



주: 1) 2002년까지는 도시 2인 이상, 그 이후는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 1분위 가구 중 소비지출 비중이 200%가 넘는 가구는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Ⅵ-8]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1992-2016



주: 1) 2002년까지는 도시 2인 이상, 그 이후는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4) 평균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므로 여기에 제시된 소득 대비 지출비중과는 차이가 있다. 소득분위별 소비성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평균소비성향 대신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을 제시한 이유는 1분위의 경우 분모가 되는 가처분소득이 적어 평균소비성향 추이가 매우 불안정적으로 계산되어 소비지출비중의 변화추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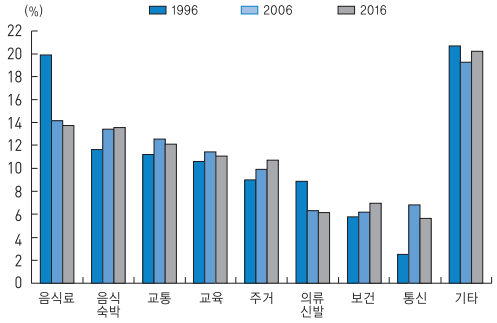
외환위기 이후 20대를 제외한 가구주들의 소비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금융위기 이후 그 하락 추이가 강해졌다. 20대 가구의 소비지출 성향은 외환위기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Ⅵ-9]는 전체 소비지출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음식료, 음식 및 숙박, 교통, 교육 지출이 각 연도에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96년과 2016년 사이 주거지출 비중이 9.0%에서 10.7%, 보건지출 비중이 5.8%에서 7.0%로, 통신지출 비중이 2.5%에서 5.6%로 각각 증가한 반면 음식료, 의류 및 신발 지출비중은 감소하였다.

의식주지출 비중은 1992-2006년 기간 동안 43.9%에서 30.4%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이후 2016년까지 30.6%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2006년 이후 2016년까지 1분위의 의식주지출 비중은 40.1%에서 42.0%로 증가하여 나머지 계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의식주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림 Ⅵ-10]에는 1996년과 2016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1996년에는 소비지출 중 의식주지출 비중에 있어서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세대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6년에는 40대가 27.8%로 가장 낮고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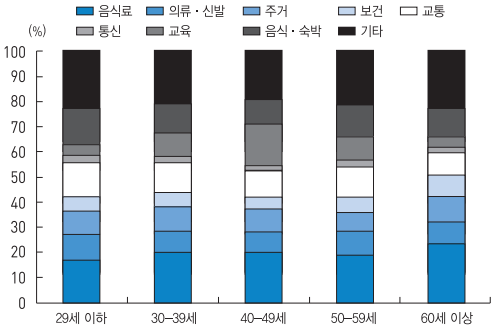
[그림 Ⅵ-9] 가구의 소비지출구성, 199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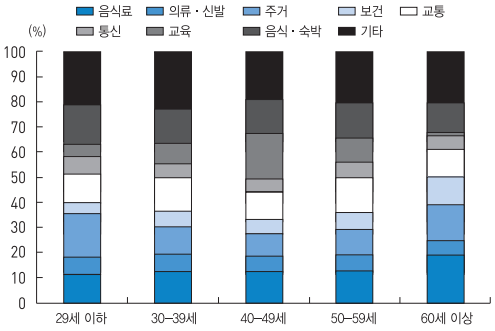
주: 1) 1996년은 도시 2인 이상, 2006년과 2016년은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Ⅵ-10]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비지출구성, 1996, 2016

1) 1996년



2) 2016년



주: 1) 1996년은 도시 2인 이상, 2016년은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1996, 2016.

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35.4%와 39.1%로 매우 높다. 보건지출 비중은 60대가 다른 연령집단의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으며 같은 기간 동안 8.6%에서 11.1%로 증가하였다. 교육지출 비중은 대체로 학령기 자녀를 둔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같은 기간 동안 16.3%에서 17.9%로 증가하였다.

가구소득의 일부는 조세, 연금, 사회보장, 이자비용, 이전지출 등과 같이 소비와 상관없는 항목에 지출되고 있는데 이를 비소비지출이라고 한다. 〈표 Ⅵ-2〉에서 보면 가구소득 대비 비소비지출의 비율은 1992년 15.2%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17.8%에 이르렀다. 가구소득 대비 경상 및 비경상 조세 지출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1992년 2.3%에서 2016년 3.1%로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연금과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0.7%와 0.9%에서 3.0%와 3.0%로 증가하였다. 소득분위별 조세부담률은 2분위가 1.2%에서 1.9%로, 3분위가 1.7%에서 2.6%, 4분위가 2.6%에서 3.1%, 5분위가 3.7%에서 5.0%로 증가하여 조세의 누진율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의 입장에서 소득이 지출보다 크면 흑자를 볼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적자를 볼 것이다. 소득과 지출의 차이를 다시 소득으로 나눈 것을 가계흑자 비율로 정의한 후 이 비율이 소득분위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Ⅵ-11]을 보면,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가구 흑자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했다가 2000년 이후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분위 소득계층은 외환위기 이후 흑자 비율이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가 상당히 해소되었으나 2016년에 다시 적자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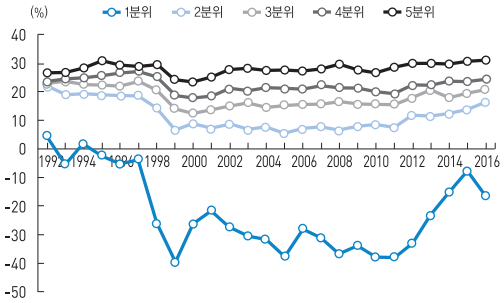
〈표 Ⅵ-2〉 가구 비소비지출 비율, 1992-2016

(%)

연도	비소비지출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
1992	15.2	1.9	0.4	0.7	0.9
1997	15.5	2.3	0.4	0.9	1.0
2002	16.2	2.0	0.5	2.1	1.8
2007	16.9	2.3	0.3	2.4	2.1
2012	18.1	2.6	0.3	2.7	2.7
2016	17.8	2.8	0.3	3.0	3.0

주: 1) 2002년까지는 도시 2인 이상, 그 이후는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Ⅵ-11] 가구 소득분위별 가계흑자비율, 1992-2016



주: 1) 2002년까지는 도시 2인이상, 그 이후는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가계흑자비율은 가구소득에서 지출을 차감한 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임. 1분위의 경우 월소득 10만 원 이하 가구는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를 이용하여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았다.[5] 2017년 현재 전체 가구의 63.2%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이 높은데, 1분위의 경우 이 비율이 30.6%에 불과하지만 5분위의 경우에는 79.2%에 이른다. 이는 경제력에 따른 금융 접근성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전체 평균 140%이며, 1분위 149%, 2분위 146% 등으로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12–2017년 기간 동안 15.9% 증가하였는데,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 순자산은 각각 32.4%와 26.9%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 순자산은 각각 16.1%, 8.5% 증가에 그쳤다. 전체 순자산에서 소득계층별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결과, 1분위는 7.5%이고 5분위는 43.8%로 두 집단 간 순자산 배율은 5.8배로 나타난다.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 156.8%에서 2017년 170.5%로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 증가가 부채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채보유 가구로 한정하고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 1분위 가구가 542.7%로 가계부채비율이 가장 높으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또한 60.5%로서 각각 217.5%와 28.9%인 5분위 가구에 비해 부채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5) 자산과 부채에 대한 분석은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

박정수 (서강대학교)

-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OECD 33개국 중 5번째로 높으며 G-7 국가 평균에 비해 두 배 정도 높다.
- 상용근로자 가구에 비해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소득은 높은 반면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소득은 낮은 편이다.
- 자영업자 가구주는 50대 이상 장년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베이비부머 가구는 자영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소비성향은 다른 군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편이다.
- 상용근로자 가구에 비해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 순자산은 높은 반면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순자산은 비슷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 자영업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소득, 소비, 자산, 부채 등의 현황을 살펴본다. 자영업자는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취업자를 의미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002년 27.9%(621만 명)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과당경쟁으로 인해 2017년 21.3%(568만 명)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생존율은 2015년 기준 37.0%에 불과하여 고용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이 국민경제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소득과 소비 측면에서 자영업자 가구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다른 직군 종사자들과 어떻게 다른지 진단해 보았다.

분석에는 자영업자의 소득, 소비, 자산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상세한 미시데이터가 수록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고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로 보완하였다. 분석 대상인 자영업자 가구란 자영업자를 가구주로 하는 가구로 정의되며 분석은 비농가 가구로 한정하였다. 분석 기간은 세부자료가 제공되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이다.[1] 가구원이 자영업자인 경우도 있으나 사용하는 자료에서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가 파악되지 않는 관계로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자영업자 가구소득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일반 법인과는 달리 사

1)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회고에 의한 조사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의 2016년 소득자료는 2017년 조사에 수록되어 있다.

업체의 성과 중에서 자영업자 개인이 기여하는 몫과 이를 제외한 사업체의 순이익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영업의 매출 중에서 비용을 제한 부분을 자영업자 가구의 경상소득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점 간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실질변수를 구해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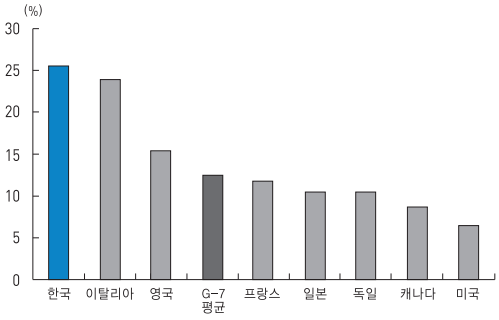
자영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영업자는 규모에 따라서 특성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원이 있는 경우를 고용주로, 그리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자영자로 각각 정의하고 두 그룹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파악된 전체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로 분류해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중 고용주는 161만 명(6.0%), 자영자는 407만 명(15.2%), 상용근로자는 1,343만 명(50.2%), 그리고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는 651만 명(24.3%)으로 추정된다.

고용주와 자영자 모두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경제적 특성은 매우 다르다. 두 분류의 자영업자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상용근로자 가구와 비교한 바는 다음과 같다. 가구주 성별로는 남자 고용주 가구는 88.0%, 자영자 가구는 84.3%로 상용근로자 가구 86.2%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구주 평균 연령을 보면 고용주 가구는 49.8세, 자영자 가구는 53.1세로 상용근로자 가구의 45.8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용주는 54.8%, 자영자는 32.8%가 대졸 이상이어서 상용근로자 6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입주형태별로는 자가 입주 비율이 고용주 가구가 71.3%, 자영자 가구 62.7%로 상용근로자 가구의 61.6%보다 높다. 평균 가구원 수를 보면, 고용주 가구는 3.4명, 자영자 가구는 3.1명으로 상용근로자 가구 3.2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6년 기준 OECD 33개 회원국 중에서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에 이어서 5번째로 높으며 [그림 Ⅵ-12]에서 보듯이 G-7 국가 평균 자영업자 비중 12.4%의 약 2배에 달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Ⅵ-12] 한국 및 G-7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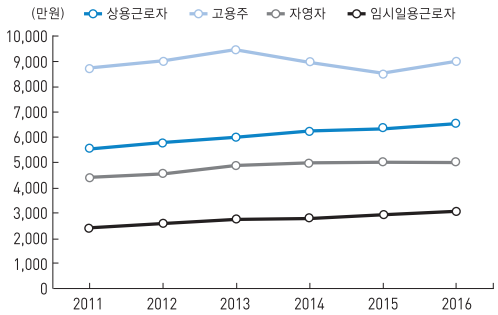


주: 1)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자영업자 가구소득의 분포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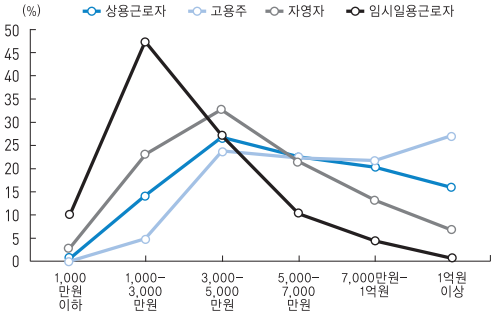
[그림 Ⅵ-13]은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연도별 가구소득을 보여준다. 비교 분석을 위하여 산업적, 직업적 특성이 매우 다른 농어가 가

[그림 Ⅵ-13]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연간 가구소득, 2011-2016



주: 1) 농어가는 제외하였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임.
2)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Ⅵ-14]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가구소득 분포, 2016



주: 1) 농어가는 제외하였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임.
2)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7.

구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고용주 가구의 평균 소득은 2016년 기준 9,004만 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6,547만 원보다 높다. 한편 자영자의 평균소득은 4,998만 원이어서 상용근로자에 비해 낮다. 상용근로자 가구에 비해 고용주가구의 소득비는 1.4배 높은 반면 자영자 가구의 소득비는 0.8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즉,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며 소득 측면에서 대비된다. 2011-2016년 기간 중 고용주 가구의 연평균 실질소득은 0.8% 감소하였고 자영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1.1% 증가하여 모두 상용근로자 가구의 소득증가율 2.1%에 못 미쳤다. 같은 기간 임시 및 일용근로자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3.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Ⅵ-14]에는 가구소득의 구간별 분포를 종사상 지위별로 제시되어 있는데 자영자 가구의 경우 1,000-3,000만 원 구간에 23.1%, 3,000-5,000만 원 구간에 32.7%가 분포되어 있는 반면 고용주 가구는 1억 원 이상에 27.1%, 7,000만 원-1억 원 구간에 21.7%가 분포되어 있다. 이처럼 자영자 가구는 대부분 저소득층에 속하는 반면 고용주 가구는 고소득구간에 상당수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원을 동원하는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규모가 작은 영세규모의 자영업자 대부분은 상용근로자보다 소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영세규모의 고용주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규모를 줄여 자영자 지위로 전환하게 된다면 소득감소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영자 가구 중 19.8%가 연 2,5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취하고 있으며 하위 30%의 평균 소득은 2,108만 원에 불과하다. 고용주 가구 중에서도 하위 10%가 평균 2,545만 원을 벌고 있어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자 소득 또는 그 이하의 소득을 취하고 있어 열악한 소득구조에 놓여 있다.

〈표 Ⅵ-3〉에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소득분위별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상용근로자 가구는 58.6%, 고용주 가구는 71.1%가 소득 4분위 이상에 속해있는 반면 자영자 가구는 58.4%가 소득 3분위 이하 그룹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소득 2분위 이하 계층에는 고용주가 8.5%, 자영자가 32.2% 분포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집중되어 있다. 취약계층 내 자영업자가 속한 산업으로는 고용주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과 제조업이 비중이 크고, 자영자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의 비중이 크다.

〈표 Ⅵ-3〉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소득분위 특성, 2016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분위별 분포(%)					
상용근로자	2.8	16.0	22.6	27.4	31.2
고용주	1.8	6.7	20.4	27.5	43.6
자영자	7.6	24.5	26.3	25.4	16.1
평균 연령(세)					
상용근로자	47.1	45.5	44.1	45.2	47.7
고용주	53.2	49.0	47.8	49.3	51.0
자영자	59.9	54.3	51.5	51.9	52.8
상위 분포 산업					
상용근로자	Q(18.0)	C(24.0)	C(35.8)	C(32.9)	C(30.6)
	C(15.5)	N(10.1)	G(9.0)	G(8.7)	K(8.9)
고용주	I(63.9)	I(29.1)	G(23.5)	G(32.2)	G(20.5)
	C(11.1)	C(15.4)	I(18.9)	I(20.9)	C(13.6)
자영자	G(39.2)	H(20.4)	H(22.9)	H(22.8)	G(21.9)
	S(14.7)	G(19.6)	G(22.5)	G(20.9)	H(19.6)

주: 1) 농어가는 제외하였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임.
2)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3) C: 제조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K: 금융 및 보험업, N: 사업서비스업,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S: 개인서비스업.
4)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산업의 분포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7.

〈표 Ⅵ-4〉에 제시된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산업별 분포를 보면 상용근로자 가구, 고용주 가구 그리고 자영자 가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가구는 제조업에 30.9%가 종사하고 있는 반면 고용주 가구의 경우 도소매업에 23.5%, 숙박 및 음식점업에 18.3%, 제조업에 15.3%가 종사하고 있고 자영자 가구는 도소매업에 22.6%, 운수 및 창고업에 20.7%, 숙박 및 음식점업에 10.1%가 종사하고 있다.

〈표 Ⅵ-4〉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산업 분포, 20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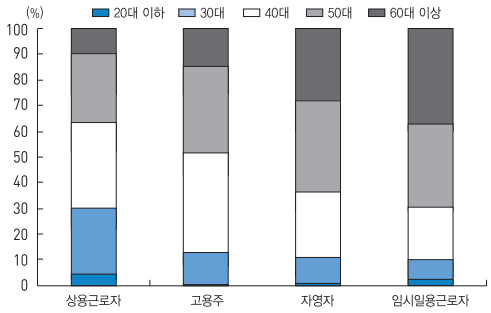
	상용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제조업	30.9	15.3	8.2
건설업	7.3	8.4	10.1
도매 및 소매업	8.6	23.5	22.6
운수 및 창고업	6.0	3.6	20.7
숙박 및 음식점업	2.3	18.3	10.1
부동산업	1.6	2.3	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1	5.4	2.6
교육 서비스업	5.6	4.1	2.9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7	5.4	0.4
개인서비스업	3.7	5.9	10.0
기타	24.0	7.8	7.7

주: 1) 농어가는 제외하였음.
2)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7.

고용주와 자영자 가구 간 산업별 평균소득에서도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고용주와 자영자 가구의 산업별 평균소득 순위에 있어서 두 그룹 간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자 가구의 경우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6,647만

원), 부동산업(6,581만 원), 사업서비스업(6,232만 원)에서 높은 소득을 얻는 반면 개인서비스업(4,162만 원), 숙박 및 음식점업(4,373만 원) 등에서 낮은 소득을 얻었다. 반면 고용주 가구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억 9,412만 원), 정보통신업(1억 1,731만 원), 건설업(1억 804만 원)에서 높은 소득을 얻는 반면 교육서비스업(6,871만 원), 운수 및 창고업(7,154만 원), 숙박 및 음식점업(7,503만 원)에서 낮은 소득을 취득한다.

[그림 Ⅵ-15]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연령 분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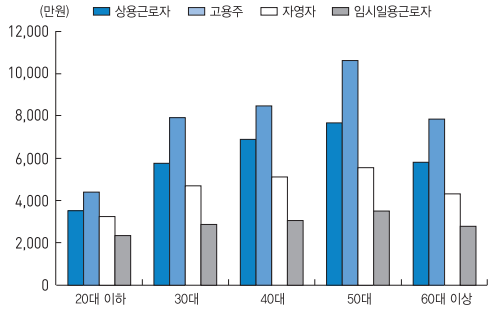
주: 1)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2) 농어가는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7.

자영업자 가구주 특성에 따른 소득

[그림 Ⅵ-15]에 제시된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 연령구조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가구주는 40대가 33.8%, 그리고 30대와 50대가 25.5%와 26.6%를 차지하는 등 청장년층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한편 고용주 가구주는 40대와 50대에 72.6% 그리고 자영자 가구주는 50대 이상에 63.6%가 분포되어 있어 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Ⅵ-16]에 제시된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연령집단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상용근로자 가구소득에 비해 고용주 가구소득은 높은 반면 자영자 가구소득은 낮은 패턴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소득 차이는 20대 이하와 30대에서는 크지 않지만 40대 이후에서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소득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자영자 가구의 경우 상용근로자

[그림 Ⅵ-16] 가구주 종사상 지위 및 연령집단별 연간 가구소득, 2016



주: 1) 농어가는 제외하였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임.
2)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7.

가구 대비 소득비는 30대 0.82에서 50대 0.73으로 떨어진다. 고용주 가구의 경우 40대 1.23에서 50대에 이르러서는 1.38로 상승한다. 이처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종사상 지위에 따른 소득차이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베이비부머 가구주는 1955년에서 1963년 사

이에 태어난 가구주로 정의한다. 고용주 가구 중 베이비부머 가구의 비중은 25.9%, 자영자 가구 중 베이비부머 가구의 비중은 31.0%다. 이는 전체 취업자 가구 중에서 베이비부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인 20.6%보다 높은 편이다. 베이비부머들은 2016년 현재 만 53세에서 61세에 이르므로 앞서 제시된 연령별 분석에서 50대 가구주의 특성으로 가늠할 수 있다.

자영업 가구주의 연령별 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주 가구주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제조업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한편 자영자 가구주의 경우 연령에 따라서 산업별 분포가 다르다.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30대와 40대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이외에 제조업도 비중이 상당한 편이어서 젊은 청장년층에서 보다 다양한 산업에 진출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연령층에서 고소득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자영업 구조 개선에 희망적인 부분이다.

〈표 Ⅵ-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 자영업 가구주의 산업별 분포는 남성 가구주 산업별 분포와 차이가 있다. 고용주 가구주의 경우 여성은 41.6%가 숙박 및 음식점업에, 그리고 15.8%가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 자영자 가구주의 경우는 도소매업(27.3%), 숙박 및 음식점업(26.0%), 개인서비스업(17.9%) 비중이 높은 편이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남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낮은 편이다. 남성 가구주 가구 대비 여성 가구주 가구 소득은 고용주의 경우 67.7%, 자영자의 경우 65.6%이고 이는 상용근로자의 61.2%와 비교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5〉 자영업 가구주의 성별 산업 분포, 2016

(%)

	고용주		자영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제조업	16.1	9.2	8.9	4.5
건설업	9.6	0.0	11.7	1.6
도매 및 소매업	24.6	15.8	21.7	27.3
운수 및 창고업	3.8	2.0	24.5	0.8
숙박 및 음식점업	15.1	41.6	7.1	26.0
부동산업	2.3	2.1	4.7	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0	1.1	2.9	0.6
사업서비스업	3.2	2.4	1.9	0.6
교육서비스업	3.7	7.4	2.2	6.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5.0	8.1	0.4	0.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리	2.2	2.5	2.3	5.7
개인서비스업	5.8	6.4	8.5	17.9
기타	2.7	1.3	3.2	2.7

주: 1) 농어가는 제외하였음.
2)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7.

자영업자 가구 지출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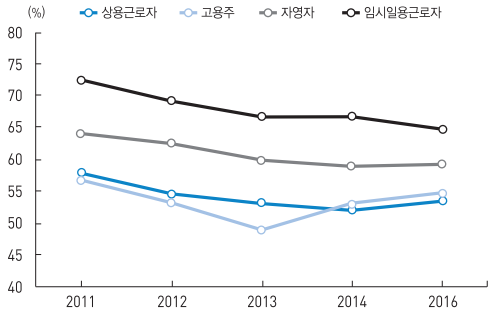
가구소득이 증가하면 가구지출도 증가한다. 하지만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다른 직군에 비해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경상소득 대비 지출 비율에 관해서는 고용주가구는 0.776, 자영

자 가구는 0.785로 상용근로자 가구 0.715에 비해 지출 성향이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있다.

[그림 Ⅵ-17]에 제시된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소비지출 비율은 2011년-2016년 기간 동안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하락했다. 고용주 가구의 경우 상용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비율과 유사하며 자영자 가구의 경우 임시 일용근로자 가구보다는 낮지만 상용근로자와 고용주 가구보다 소비지출비율이 높다. 다만 이러한 표면적 차이는 자영자 가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분위에 다수 분포되어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득분위를 감안하면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가구 간 소비성향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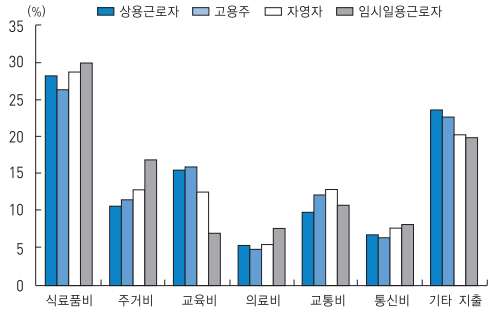
[그림 Ⅵ-18]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로 제시하였다. 자영업자 가구에서도 다른 직군과 마찬가지로 식료품의 비중이 가장 크다. 상용근로자 가구의 경우 교육비, 주거비, 교통비 순으로 중요한 반면 고용주 가구의 경우 교육비, 교통비, 주거비의 순으로, 그리고 자영자 가구의 경우 주거비, 교통비, 교육비 순으로 지출 비중의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역시 이러한 직군 간의 소비구성의 차이는 각 직군 가구의 소득분포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가구의 소득을 감안하여 소비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자영업자와 다른 직군 간의 유의미한 소비 구성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림 Ⅵ-17]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2011-2016



주: 1) 농어가는 제외하였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임.
2)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3) 소비성향이 2 이상인 가구는 제외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Ⅵ-18]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소비지출구성, 2016



주: 1) 농어가는 제외하였음.
2)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7.

〈표 Ⅵ-6〉에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 비소비지출의 구성이 제시되어 있는데 종사상 지위별로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고용주 가구의 경우 세금이 31.7%, 그리고 지급이자가 26.2%를 차지한다. 한편 자영자 가구는 세금 비중이 적은 대신

에 지급이자 비중이 24.8%로 크고, 반대로 상용근로자 가구는 세금 비중이 큰 대신 지급이자 비중은 적은 편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상 부채 규모도 상대적으로 커서 지급이자 비중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세금의 차이는 고용주가 자영자에 비해서 고소득군에 속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Ⅵ-6〉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비소비지출구성, 2016

(%)

	상용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임시일용근로자
세금	28.9	31.7	20.1	13.8
공적연금·사회보험료	37.0	26.0	34.8	37.4
가구 간 이전지출	11.7	10.4	12.3	15.8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7.1	5.7	8.0	9.5
지급이자	15.3	26.2	24.8	23.5

주: 1) 농어가는 제외하였음.
2)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7.

자영업자 가구의 자산과 부채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았다[2]. 2017년 현재 비농어가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평균 147%이다. 자영자 가구는 166%, 고용주 가구는 262%로서 상용근로자 가구 123%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자영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7,806만 원이어서 상용근로자 가구 8,076만 원보다 다소 적은 편이고 고용주 가구는 1억 9,790만 원이어서 상용근로자 가구의 부채보다 2배 이상 크다. 한편 자영자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3억 2,475만 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 3억 3,984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고용주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5억 9,842만 원으로 상용근로자 평균 순자산의 두 배 정도 된다.

〈표 Ⅵ-7〉은 가구주를 종사상 지위에 따라 소득분위별 또는 연령대별로 구분한 후 각 특성집단 가구의 평균 순자산을 해당 집단의 상용근로자 가구의 평균 순자산으로 나눈 자산비를 보여준다. 고용주 가구는 각 소득분위와 연령대에서 상용근로자 가구의 순자산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영자 가구는 각 소득분위에

〈표 Ⅵ-7〉 상용근로자 대비 종사상 지위별 순자산 비율, 2017

(상용근로자=1)

	고용주	자영자	임시일용근로자
소득분위별			
1분위	2.73	1.68	0.89
2분위	2.38	1.67	0.89
3분위	1.60	1.33	0.79
4분위	1.38	1.21	0.79
5분위	1.48	1.07	0.64
연령대별			
20대 이하	3.17	0.97	0.48
30대	1.53	0.82	0.33
40대	1.29	0.78	0.23
50대	1.81	0.79	0.31
60대 이상	1.66	0.82	0.35

주: 1) 농어가는 제외하였고,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임.
2) 순자산비율은 각 종사상 지위 가구주가 속하는 소득 및 연령집단의 평균순자산을 해당집단의 상용근로자 평균순자산으로 나눈 수치임.
3)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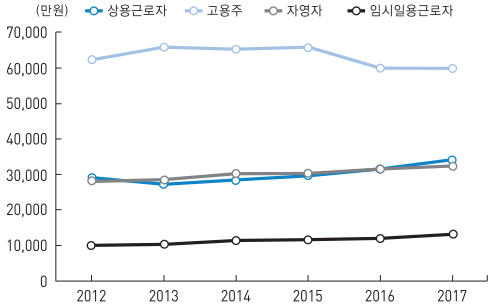
2) 자산과 부채 분석에서도 앞서 소득과 소비 분석과 마찬가지로 농어가 가구 표본은 제외하였다.

서 상용근로자 가구의 순자산보다 큰 반면 각 연령대에서는 상용근로자의 순자산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베이비부머 고용주 가구의 경우는 순자산비가 1.966이며 자영자 가구의 경우 0.804이다.

[그림 Ⅵ-19]를 보면 2012-2017년 기간 동안 자영자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증가한 반면 고용주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직군 가구의 실질소득은 증가한 반면 고용주 가구의 실질소득은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7년 고용주 가구의 경우 262.0%, 자영자 가구의 경우 166.0%로서 상용근로자 가구 122.9%를 크게 상회한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역시 고용주 가구는 40.8%, 자영자 가구는 28.7%로서 상용근로자 가구의 18.9%에 비해 높다. 하지만 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고용주 가구의 경우 26.8%, 상용근로자 가구 38.5%에 비해 낮은 반면 자영자 가구는 45.1%로서 상용근로자 가구에 비해 높다. 이와 같은 부채 및 자산 구조의 차이는 자영업 특성상 사업 관련 부채 규모가 큰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Ⅵ-19]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순자산, 2012-2017



주: 1) 농어가는 제외하였음.
2)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 우리나라 은퇴가구의 소득은 연간 1,826만 원이고 월평균 생활비는 98만 원 수준으로 예비 퇴직자들이 생각하는 은퇴 이후 최소 생계비 수준(193만 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가 소유 여부에 따라 은퇴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비교하면 자가 소유 은퇴가구의 소득이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두 배 가까이 많고, 소비 또한 월평균 40만 원 정도 많았다.
-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한 은퇴가구와 현재 경제활동 중에 있는 가구를 비교하면 경제활동 가구의 소득이 은퇴가구의 소득보다 2.8배 많고, 소비 또한 2.5배 많았다.

2016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비 퇴직자들은 은퇴 후 최소 생활비로 월 193만 원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월 288만 원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은퇴가구의 소득은 얼마나 되고 은퇴 이후 소득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을까? 실제로 생활비로 월평균 얼마나 지출하고 있으며 주로 어디에 많이 쓰고 있을까? 이들 은퇴가구의 소비수준은 한창 경제활동 중인 가구의 소비수준과 비교하여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은퇴가구 중에서도 자가 소유 가구들과 그렇지 못한 가구들 사이에 소득과 소비 수준에 차이가 있을까? 이 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들을 실제 은퇴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료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1998년에 전국에서 5,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이후 이들 가구를 매년 추적하여 가구의 경제활동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고 이들 가구의 경제상태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은퇴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1]. 분석기간은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을 기준으로 4년 이전까지로 한정하였다.

1) 2015년도에 만 50–74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은퇴하였다고 응답하였거나 혹은 매년 현재의 고용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들을 은퇴자로 간주하고 가구원이 은퇴자들로만 구성된 가구를 은퇴가구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가구 내에 소득을 창출하는 가구원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분석 기간 동안 월평균 생활비가 얼마인지 물어본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혹은 생활비가 0원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의 정의를 통해 2013–2016년 통합 자료에서 분석대상으로 포함된 은퇴가구 사례 수는 총 3,664가구(4개년 평균 1,062가구)이다.

그리고 모든 금액 자료는 2015년을 기준으로 물가를 조정하여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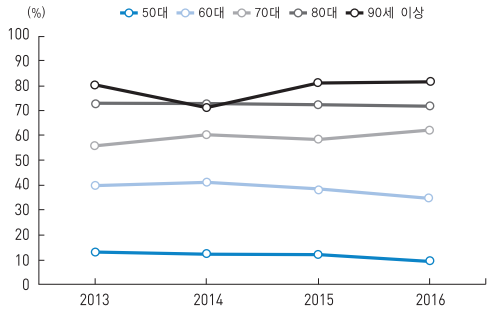
은퇴가구의 소득과 소비

[그림 Ⅵ-20]는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중고령 가구 중 은퇴가구 비율을 보여준다. 50대에 비하여 60대에서 은퇴 비율이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부분의 은퇴는 60대 이후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70대에는 은퇴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증가하며, 80대에는 70% 이상이 은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90세 이상에서도 은퇴하지 않은 가구가 있는데 고령임에도 일부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제일 먼저 은퇴가구의 소득을 살펴보면 이들의 연간 총소득은 2016년에 1,826만 원 정도 되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였음에도 2013년부터 살펴보면 매년 조금씩 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월간 소득으로 환산하면 2016년 기준 월평균 152만 원에 불과하여서 예비 퇴직자들이 기대하는 최저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8〉의 평균은 중고령 은퇴가구의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의 평균을 뜻하며, 비율은 전체 은퇴가구 중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은퇴가구의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공적이전소득은 사회보험과 정부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이

[그림 Ⅵ-20] 중고령가구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은퇴가구 비율, 2013-2016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각 연도.

〈표 Ⅵ-8〉 은퇴가구의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 2013-2016

	2013	2014	2015	2016	4개년 평균
평균(만 원)					
근로소득	168.5	188.2	263.9	116.5	184.3
공적이전소득	548.6	581.8	633.0	729.5	623.2
사적이전소득	425.7	448.4	435.7	432.3	435.5
부동산소득	381.3	281.4	352.6	470.1	371.3
금융소득	54.7	48.0	47.4	46.7	49.2
기타소득	26.4	65.7	55.9	31.2	44.8
총소득	1,605	1,613	1,788	1,826	1,708
비율(%)					
근로소득	8.8	9.0	12.3	5.3	8.9
공적이전소득	83.7	85.0	86.2	88.5	85.9
사적이전소득	81.2	83.1	78.3	82.5	81.3
부동산소득	19.5	19.3	18.0	19.1	19.0
금융소득	13.7	13.8	13.7	15.3	14.1
기타소득	1.9	2.8	3.5	2.8	2.8

주: 1) 비율은 전체 은퇴가구 중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각 연도.

며,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실업급여가 포함된다. 사적이전소득은 친지나 기관 등 정부이외의 대상으로부터 대가없이 받은 지원금을 말한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배당금, 사채 및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부동산소득은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집세를 포함하며, 기타소득은 축의금, 부의금, 증여, 상속 등 나머지 모든 소득을 포함한다.

80%가 넘는 은퇴가구에서 이전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이 약 623만 원, 주로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 사적이전소득이 436만 원으로, 두 소득의 합이 가구 소득의 대략 60%를 차지하였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가구는 약 19% 수준이며, 금융소득은 14%, 근로소득은 9% 내외이다. 부동산소득의 경우 등락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370만 원 정도 되었다. 소득원천별 평균 금액은 소득원별 소득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부동산소득이 있는 은퇴가구만을 별도로 살펴보면 이들에게 발생하는 부동산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수준에 이른다.

〈표 Ⅵ-9〉에서는 분석 대상 기간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자료를 통합하여 산출한 은퇴가구의 가구경제 상황에 대한 요약 통계량을 제시하였다. 은퇴가구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약 75세, 가구원 수는 1.6명으로 부부가구가 다수이지만 1인가구도 상당 부분 존재하였다. 현재 은퇴 상태에 있는 이들의 월평균 생활비는 98만 원 수준으로 예비 퇴직자들이 생각한 최소 생계비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평균 교육연수는 약 7.5년으로 중학교 중퇴 정도의 학력을 보인다. 광역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은 60.8%이다. 은퇴가구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1억 9,000만 원과 1,800만 원 수준을 보였다.

〈표 Ⅵ-9〉 은퇴가구의 가구경제 상황, 2013-2016

	평균
월평균 생활비(만 원)	97.7
총자산(만 원)	18,949
총부채(만 원)	1,810
가구주 연령(세)	74.6
가구주 교육연수(년)	7.5
가구원 수(명)	1.6
광역시·수도권 거주 비율(%)	60.8

주: 1) 분석 대상 기간(2013-2016년)의 전체 자료를 통합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각 연도.

〈표 Ⅵ-10〉은 은퇴가구의 소비 비목별 월간 평균 지출금액을 의미한다. 소비 지출 중 가장 많은 금액이 식비(약 25만 원)로 쓰이고 있으며, 주거비(약 15만 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의료비가 월 9만 원 수준으로, 가구의 소비 중 세 번째로 많은 지출 부문이다. 주요 지출 3비목(식비, 주거비, 의료비)이 월평균 생활비의 절반 가량(49%) 차지하였다.

은퇴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은 전체 가구 대비 4배 정도 높은 편이다(그림 Ⅵ-21). 이처럼 소득과 소비수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은퇴가구의 경제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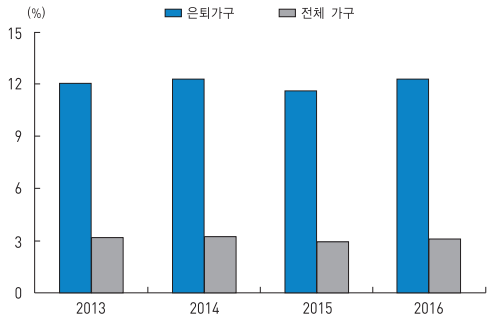
〈표 Ⅵ-10〉 은퇴가구의 주요 소비 비목별 월평균 생활비, 2013-2016

(만 원)

	2013	2014	2015	2016	4개년 평균
식비	22.9	24.4	25.3	26.2	24.7
외식비	3.2	3.6	3.6	4.4	3.7
교육비	7.5	7.5	7.6	7.6	7.6
차량유지비	4.3	4.7	4.8	4.6	4.6
주거비	13.8	14.6	14.9	14.9	14.6
경조사비	3.7	3.8	3.6	3.4	3.6
의료비	8.0	8.6	9.2	9.9	8.9
문화비	3.6	3.9	4.2	4.7	4.1
통신비	4.1	4.4	4.6	4.5	4.4
자녀용돈	1.3	1.2	1.3	1.3	1.3
피복비	2.8	2.8	3.1	3.3	3.0
기부금	2.2	2.4	2.2	2.1	2.2
대중교통비	3.0	3.1	3.5	3.6	3.3
생활비 총액	90.8	96.8	99.6	102.7	97.7

주: 1) 생활비 총액에는 주요 소비 비목 외에도 다른 비목이 포함되어 있어 주요 소비 비목별 합계와 차이가 있음.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Ⅵ-21] 은퇴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 2013-2016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각 연도.

은퇴가구의 자가 소유 여부별 소득과 소비

이번에는 중고령 은퇴가구를 자가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연간 총소득과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을 비교해보았다. 〈표 Ⅵ-11〉을 보면 자가를 소유한 은퇴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소득이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소득의 경우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해(2015년)가 있을 정도로 소득의 격차가 크며, 부동산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 또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로소득 또한 자가를 소유한 가구가 약 3배 더 많았지만 여전히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가구의 주요한 소득원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은퇴가구에서 자가 소유 은퇴가구보다 10%p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은퇴가구일수록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림 Ⅵ-22]는 자가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은퇴가구의 가구경제상황을 요약한 통계량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전체 은퇴가구의 67%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의 월평균 생활비는 자가 비소유가구보다 40만 원 정도 높았다. 자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75세로 유사하지만, 자가 소유가구의 가구원 수가 1.7명, 자가 비소유가구의 가구원수는 1.4명으로 차이를 보여 자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 중 1인가구가 더 많을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평

〈표 Ⅵ-11〉 자가 소유 및 비소유 은퇴가구의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 2013-2016

	평균(만 원)										비율(%)									
	자가 소유가구					자가 비소유가구					자가 소유가구					자가 비소유가구				
	2013	2014	2015	2016	4개년 평균	2013	2014	2015	2016	4개년 평균	2013	2014	2015	2016	4개년 평균	2013	2014	2015	2016	4개년 평균
근로소득	210.9	237.0	350.7	151.7	238.3	83.3	89.8	90.0	47.1	77.2	9.6	9.9	15.0	6.7	10.3	7.3	7.1	6.8	2.4	5.9
공적이전소득	614.6	648.3	720.4	812.3	701.5	416.1	447.8	457.9	566.3	474.1	81.8	83.2	85.0	86.9	84.3	87.5	88.6	88.5	91.6	89.1
사적이전소득	429.7	454.7	446.8	456.1	447.2	417.8	435.7	413.4	385.4	412.6	85.9	87.9	82.8	86.5	85.7	71.6	73.6	69.4	74.7	72.3
부동산소득	520.2	376.2	506.2	514.5	479.1	102.3	90.4	44.8	382.5	157.9	27.5	26.8	24.4	25.9	26.1	3.4	4.3	5.2	5.9	4.7
금융소득	75.1	59.8	58.1	67.5	64.9	13.6	24.2	26.0	5.8	17.4	18.1	18.1	18.0	20.0	18.5	4.9	5.1	5.2	6.2	5.4
기타소득	39.6	94.1	72.7	40.3	62.0	0.0	8.6	22.2	13.3	11.3	2.7	3.4	3.8	3.7	3.4	0.3	1.7	3.0	1.1	1.6
총소득	1,890	1,870	2,155	2,042	1,993	1,033	1,096	1,054	1,400	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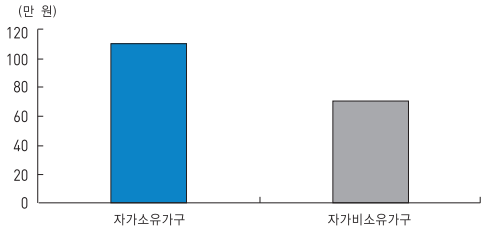
주: 1) 비율은 해당 유형 전체 은퇴가구 중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임.
2) 2016년 자가 비소유가구의 부동산소득이 예년에 비해 큰 것은 '이상치(outlier)'가 반영된 결과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각 연도.

균 교육연수는 자가 소유가구가 7.9년, 비소유가구가 6.7년으로서,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교육연수가 1.2년 더 길었다. 자가 소유가구의 경우 58%만이 광역시 및 수도권의 거주하였으나, 자가 비소유가구의 경우 67%가 광역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흥미롭다. 은퇴가구 중의 일부가 광역시 및 수도권이 아닌 곳에 주택을 구입하여 은퇴 생활을 영위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전반적으로 자가 소유가구가 소득도 높고, 월평균 생활비도 많으며, 특히 순자산의 크기에서 자가 비소유가구에 비하여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가 소유가구의 순자산은 약 2억 5,000만 원, 자가 비소유가구의 순자산은 약 900만 원이다.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이 은퇴가구의 자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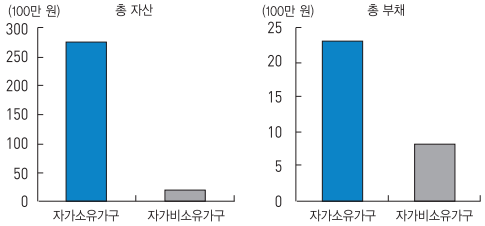
자가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소비 비목별 월평균 지출액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자가 소유가구의 경우 월평균 식비가 약 27만 원이지만, 비소유가구의 경우 약 20만 원으로 8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의료비의 경우 가구의 소비 중 세 번째로 많은 지출 부문인데 의료비지출도 자가 소유가구에서 월 3만 원 정도 더 많았다.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지출 부문은 차량유지비로, 자가 비소유가구의 경우 월평균 1만 5,000원 수준이지만, 자가 소유가구는 약 6만 원으로 4배 차이가 났다(표 Ⅵ-12). 자가 소유가구의 경우 3대 지출(식비, 주거비, 의료비)이 생활비의 약 47%를 차지하지만, 비소유가구의 경우 약 58%를 차지하여 소비 비목별 소비지출 구성에서도 자가 소유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Ⅵ-22] 자가 소유 및 비소유 은퇴가구의 가구경제 상황 비교, 2013-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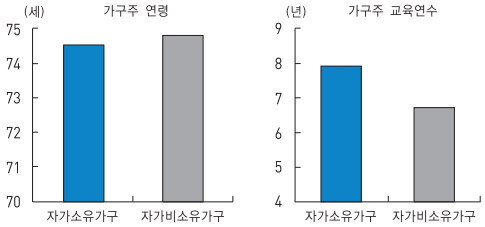
1) 월평균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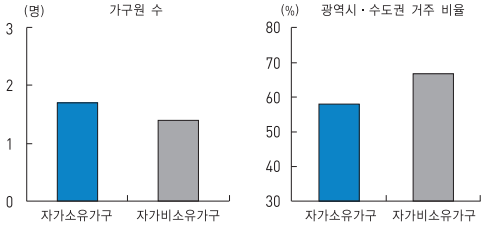
2) 자산 및 부채



3) 가구주 특성



4) 가구규모 및 거주지



주: 1) 분석 대상 기간(2013-2016년)의 전체 자료를 통합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각 연도.

〈표 Ⅵ-12〉 자가 소유 및 비소유 은퇴가구의 주요 소비 비목별 월평균 생활비, 2013-2016

(만 원)

	2013	2014	2015	2016	4개년 평균
자가 소유가구					
식비	25.4	26.8	27.8	28.9	27.2
외식비	4.1	4.3	4.4	5.4	4.6
교육비	7.9	7.9	7.9	8.0	7.9
차량유지비	5.9	6.2	6.4	6.3	6.2
주거비	13.6	14.3	14.4	14.8	14.3
경조사비	4.8	4.8	4.6	4.3	4.6
의료비	9.4	9.7	10.1	11.0	10.1
문화비	4.3	4.8	5.2	5.9	5.1
통신비	4.6	4.8	5.2	5.1	4.9
자녀용돈	1.3	1.5	1.7	1.6	1.5
피복비	3.2	3.3	3.7	3.9	3.5
기부금	2.5	2.7	2.4	2.5	2.5
대중교통비	3.2	3.3	3.6	3.9	3.5
생활비 총액	103.6	109.4	112.4	117.9	110.8
자가 비소유가구					
식비	17.8	19.5	20.1	20.8	19.6
외식비	1.4	2.1	2.0	2.4	2.0
교육비	6.7	6.7	6.8	6.7	6.7
차량유지비	1.1	1.7	1.7	1.3	1.5
주거비	14.1	15.1	16.0	15.0	15.1
경조사비	1.6	1.9	1.6	1.5	1.7
의료비	5.3	6.4	7.5	7.6	6.7
문화비	2.2	2.0	2.3	2.3	2.2
통신비	3.2	3.5	3.4	3.3	3.4
자녀용돈	1.2	0.7	0.6	0.6	0.8
피복비	1.8	1.9	2.0	2.2	2.0
기부금	1.6	1.6	1.6	1.3	1.5
대중교통비	2.5	2.7	3.2	2.9	2.8
생활비 총액	65.1	71.5	73.9	72.7	70.8

주: 1) 생활비 총액에는 주요 소비 비목 외에도 다른 비목이 포함되어 있어 주요 소비 비목별 합계와 차이가 있음.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각 연도.

은퇴가구와 비은퇴가구의 소득과 소비 비교

〈표 Ⅵ-13〉에서는 2016년 자료만을 이용하여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근로소득이 전혀

〈표 Ⅵ-13〉 완전은퇴가구와 경제활동가구의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 2016

	평균(만 원)		비율(%)	
	완전은퇴가구	경제활동가구	완전은퇴가구	경제활동가구
근로소득	0	4,259	0.0	97.3
공적이전소득	714	198	88.9	33.1
사적이전소득	447	191	83.8	48.2
부동산소득	494	179	19.4	8.8
금융소득	47	25	15.3	10.7
기타소득	17	103	2.6	7.3
총소득	1,719	4,955		

주: 1) 비율은 해당 유형 전체 가구 중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임.
2) 근로소득은 완전은퇴가구를 은퇴자 연령의 중간값인 58세 이상 중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로 정의하여 이들의 근로소득의 평균과 비율이 0으로 나타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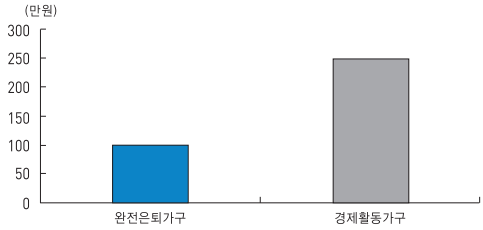
없는 완전은퇴가구와 연령과 상관없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을 비교하였다[2]. 가구 총소득은 경제활동가구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한 은퇴가구보다 2.9배 많았다. 완전은퇴가구의 경우 대부분의 가구가 공적이전소득과 사전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전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70%를 차지하였다. 부동산소득의 경우 소득이 있는 완전은퇴가구의 비율은 19%이지만 평균 부동산소득의 크기는 경제활동가구와 비교하여 약 2.8배 많았다.

완전은퇴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99만 원으로 채 100만 원이 안 되는데 경제활동가구의 생활비는 월 248만 원으로 약 2.5배 많았다. 완전은퇴가구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약 76세, 가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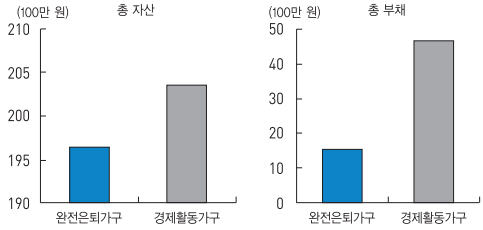
2) 완전은퇴가구란 은퇴자 연령의 중간값인 58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림 Ⅵ-23] 완전은퇴가구와 경제활동가구의 가구경제 상황 비교,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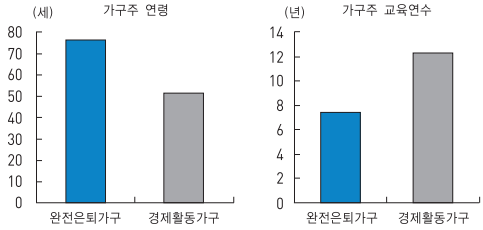
1) 월평균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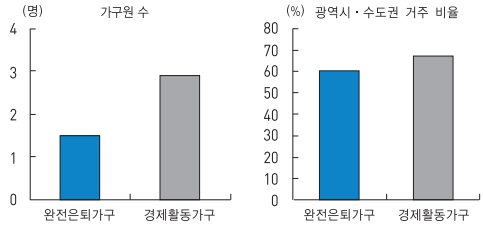
2) 자산 및 부채



3) 가구주 특성



4) 가구규모 및 거주지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2016.

수는 1.5명이고, 경제활동가구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2세, 가구원 수는 2.9명이다. 완전은퇴가구의 경우 부부가구 혹은 1인가구가 다수이며, 경제활동가구의 경우 3인 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구주의 평균 교육연수는 완전은퇴가구가 7.4년, 경제활동가구가 12.3년으로, 이는 세대가 변화함에 따라 교육수준이 향상된 결과를 반영한다. 경제활동가구의 광역시 및 수도권 거주 비율은 67%로, 완전은퇴가구의 60%보다 높은 수준이다. 완전은퇴가구와 경제활동가구의 소득 수준은 크게 차이나지만 자산은 약 2억 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완전은퇴가구의 부채가 경제활동가구의 부채보다 3,140만 원 작게 나타났다(그림 Ⅵ-23).

소비 비목별로 살펴보면 완전은퇴가구의 의료비는 10만 원이고 경제활동가구의 의료비는 6만 원으로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소비 비목에서 경제활동가구의 지출금액이 훨씬 더 많았는데 특히 차량유지비의 경우 경제활동가구의 지출이 6배 더 많았다(표 Ⅵ-14). 완전은퇴가구의 경우 3대 소비 비목이 식비, 주거비, 의료비인 것에 반해 경제활동가구의 경우 식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순으로 지출규모가 컸다. 완전은퇴가구의 생활비 중 3대 소비 비목(식비, 주거비, 의료비)의 비중은 약 51%이며 경제활동가구는 약 28% 정도 되었다.

〈표 Ⅵ-14〉 완전은퇴가구와 경제활동가구의 주요 소비 비목별 월평균 생활비, 2016

(만 원)

	완전은퇴가구	경제활동가구
식비	25.6	42.2
외식비	4.2	12.4
교육비	7.4	12.3
차량유지비	4.0	22.1
주거비	14.6	21.6
경조사비	3.3	7.2
의료비	10.0	6.0
문화비	4.5	10.0
통신비	4.1	13.6
자녀용돈	0.6	10.4
피복비	3.1	8.1
기부금	2.1	3.7
대중교통비	3.4	6.1
생활비 총액	98.6	247.9

주: 1) 생활비 총액에는 주요 소비 비목 외에도 다른 비목이 포함되어 있어 주요 소비 비목별 합계와 차이가 있음.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2016.

맺음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령 은퇴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체 은퇴가구의 소득은 예비 퇴직자들의 기대 소비수준을 충족시키기에 크게 부족하였고 이들의 현재 생활비는 예비 퇴직자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에도 미달하였다. 물론 은퇴 이후의 기간에 따라 은퇴가구의 소득 및 소비에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은퇴자들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이들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퇴가구를 지원할 수 방법과 예비 퇴직자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정부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2018 Culture & Leisure

Korean Social Trends 2018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Ⅶ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 208

해외 여행 경험의 추이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 이주현 | 서울시립대학교 216

문화서비스 지출의 주요 동향 김 진 | 동덕여자대학교 222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서 관광과 취미 개발을 선택한 비율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고,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경험률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해외여행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 문화예술관람에서는 미술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관람률이 정체되어 문화예술관람률의 증가 추세가 멈추었다.
- 여가 불만족의 비율은 2015년에 비해 별 차이가 없으나 여가 불만족 이유에서 경제적 부담이 줄고 시간 부족이 늘었다.
- 청년층은 비청년층에 비해서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문화예술관람, 취미 및 자기개발의 여가 활동에 적극적이고 여가 만족의 비율이 높으며 여가 불만족 이유로는 시간 부족이 많다.

지난 2017년은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선거, 새 정부 출범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이 진행된 한 해였다. 대외적으로는 북한 리스크 심화와 한한령으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관광이 줄면서도, 내국인의 해외관광이 확대되었다. 국민의 대표적인 문화여가 활동인 영화 관람은 전년에 이어서 연간 2억 명의 관객 동원을 달성하였으나 영화는 물론, 공연, 전시에서도 큰 흥행작은 없었다.

이 글의 목적은 문화와 여가 영역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 「사회조사」의 문화와 여가 모듈에 포함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정부기관들이 수집한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등의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문화여가의 기반을 살펴본 후 다양한 형태의 문화여가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여가 만족의 수준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문화여가의 기반

문화여가 활동의 기반이 되는 문화 인프라의 확대는 지속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는 줄어들었다. 〈표 Ⅶ-1〉을 보면 미술관은 2017년 229개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지만 2016년의 8.4%보다는 증가폭이 감소하였고, 공공도서관도 2017년 1,010개로 전년에 비해 3.3% 증가했지만 2016년의 5.2% 증가에 비해 작았다. 등록공연장은 2017년 1,024개로 전년에 비해 변화가 없었다. 반면, 박물관과 문예회관은 2017년 각각 853개와 236개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16년의 증가율에 비해 다소 높았다.

〈표 Ⅶ-1〉 문화예술시설 수, 2010–2017

연도	박물관	미술관	공공 도서관	등록 공연장	문예 회관
2010	630	141	703	637	182
2011	655	145	759	751	192
2012	694	154	786	826	209
2013	740	171	828	881	214
2014	754	190	865	992	220
2015	809	202	930	991	232
2016	826	219	978	1,024	229
2017	853	229	1,010	1,024	236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각 연도; 「등록공연장 현황」, 각 연도.

〈표 Ⅶ-2〉 문화산업 분야별 매출액, 2012–2016

(1조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매출액	87.27	91.21	94.95	100.49	105.51
출판	21.10	20.80	20.59	20.51	20.77
만화	0.76	0.80	0.85	0.92	0.98
음악	3.99	4.28	4.61	4.98	5.31
게임	9.75	9.72	9.97	10.72	10.89
영화	4.40	4.66	4.57	5.11	5.26
애니메이션	0.52	0.52	0.56	0.61	0.68
방송(영상)	14.18	14.94	15.77	16.46	17.33
광고	12.48	13.36	13.74	14.44	15.19
캐릭터	7.52	8.31	9.05	10.08	11.07
지식정보	9.53	10.39	11.34	12.34	13.46
콘텐츠솔루션	3.03	3.44	3.89	4.31	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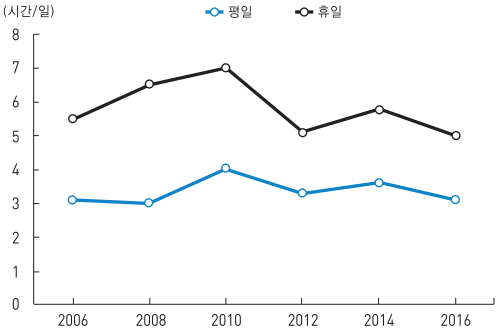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각 연도.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재화를 상품의 형태로 공급하는 문화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성장세는 감소하였다. 문화산업 매출규모는 2016년 105조 5,107억 원으로 2015년에 비해 5조 240억 원이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5.0%로 나타나서 2015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인 5.8%에 비해서 낮았고,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한 경우도 애니메이션 한 분야에 그쳤다(표 Ⅶ-2).

문화여가 활동은 여가시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가시간은 최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평일 여가시간은 3.1시간, 휴일 여가시간은 5.0시간으로 2014년에 비해 평일 0.5시간, 휴일 0.8시간 감소하였다(그림 Ⅶ-1).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서 나타난 20세 이상 성인의 여가시간을 보면, 주중에는 4시간 52분으로 1999년에 비해 22분이 줄었으나 주말에는 6시간 43분으로 1999년에 비해 13분이 늘었다.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쉬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그림 Ⅶ-1]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 200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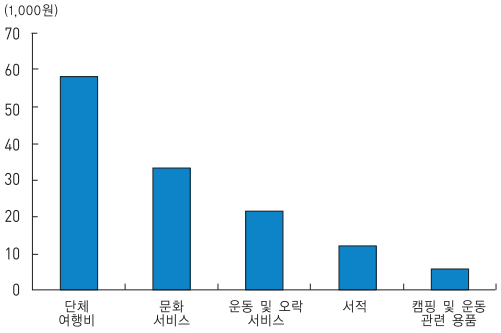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지난 1년 동안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응답한 결과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체 인구 중위 여가시간의 60% 이하 여가시간을 갖는 집단을 시간빈곤층으로 규정하여 그 규모를 파악해 보면, 주중 시간빈곤 인구는 36.1%로 1999년에 비해 3.7%p 증가한 반면 주말 시간빈곤 인구는 16.4%로 1999년에 비해 5.7%p 감소하였다(차승은,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로 파악한 국민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2016년 13만 6,000원으로 2012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희망 여가비용은 18만 8,000원으로 2014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여 실제 비용과 희망 비용 간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로 집계한 가구의 오락문화비 지출은 2017년에 17만 4,693원으로 나타났고, 주요 항목들 중에서 단체여행비가 5만 8,109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화서비스 3만 3,248원, 운동 및 오락서비스 2만 1,485원, 서적 1만 2,157원, 캠핑 및 운동 관련 용품 5,710원의 순서로 나타났다(그림 Ⅶ-2).

[그림 Ⅶ-2] 가구의 오락문화비 주요 항목별 지출액, 2017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7.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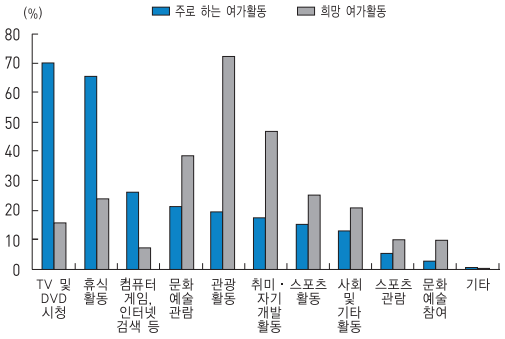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 활동(1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TV 및 비디오 시청이 37.6%로 가장 많고, 수면이나 사우나와 같은 휴식이 19.0%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8.4%), 스포츠 활동(7.2%), 관광(7.0%), 봉사·종교·사교 등 사회 및 기타 활동(7.0%), 문화예술 관람(6.1%), 취미 및 자기개발(5.6%) 등의 순이었다. TV 및 비디오 시청과 휴식이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 활동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2015년 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지만, 응답 비율을 보면 TV 및 비디오 시청은 5.3%p 감소한 반면, 휴식은 2.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순위까지 고려한 다중응답 결과도 비슷한데, TV 시청(69.7%)과 휴식(65.2%)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TV 시청은 2015년 조사결과와 별 차이 없었던 반면, 휴식은 14.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25.8%), 문화예술 관람(21.3%), 관광(19.4%), 취미 및 자기개발(17.4%), 스포츠 활동(15.3%), 봉사·종교·사교 등 사회 및 기타 활동(12.9%) 등의 순이었다.

향후 하고 싶은 여가 활동(1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관광이 47.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취미 및 자기개발(11.1%), 스포츠 활동(10.6%), 문화예술 관람(10.0%) 등이 많다.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관광의 응답 비

율이 8.2%p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 차이였다. 3순위까지 고려한 다중응답 결과에서도 관광이 72.1%로 가장 많은 가운데 그 뒤를 취미 및 자기개발(46.5%), 문화예술 관람(38.4%), 스포츠 활동(24.9%) 등이 따른다(그림 Ⅶ-3).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관광과 취미 및 자기개발이 각기 12.2%p와 12.4%p 증가하여서 비교적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그림 Ⅶ-3] 주로 하는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 2017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다중응답(1-3순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7.

3순위까지 고려한 다중응답을 바탕으로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층을 비청년층과 비교하면 TV시청이 56.0%로 비청년층의 75.4%에 비해서 낮고 사회 및 기타활동이 8.5%로 비청년층의 14.7%에 비해서 낮은 반면,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이 48.4%로 비청년층의 16.2%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높고, 문화예술관람도 33.3%로 비청년층의 16.1%에 비해서 높다. 희망하는 여가활동에서는 문화예술관람이 49.9%로 비청년층의 33.6%에 비해서 높고 취미 및 자기개발 활동이 52.9%로 비청년층의 43.8%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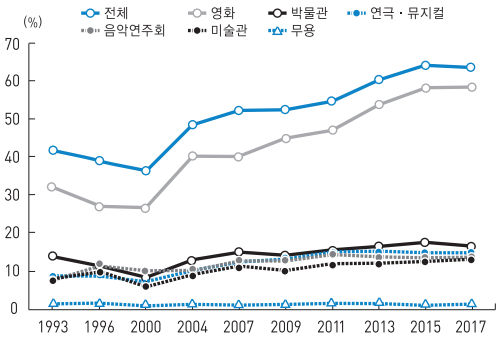
여가 활동 동반자로는 가족이 55.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 20.7%, 혼자 15.6%, 동호회 6.8%의 순이어서 2015년의 조사결과와 별 차이가 없었다. 청년층은 비청년층에 비해서 친구가 43.3%로 비청년층의 11.2%에 비해서 높은 반면, 가족은 37.1%로 비청년층의 63.3%에 비해서 낮다. 혼자인 경우는 15.2%로 비청년층의 15.8%와 비슷한 반면, 동호회는 3.5%로 비청년층의 8.2%에 비해서 낮다.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 관람에 참여하는 국민이 증가하던 추세가 일단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연, 전시, 영화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로 문화예술 관람률을 측정한 결과, 문화예술 관람률은 2011년 54.5%에서 2013년 60.1%, 2015년 63.9%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나, 2017년에는 63.5%로 감소하였다. 문화예술 장르별로 보면, 영화가 5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박물관(16.4%), 연극·뮤지컬(14.8%), 음악연주회(13.6%), 미술관(13.4%) 등이 비슷한 수준이며 무용(1.2%)이 가장 낮다(그림 Ⅶ-4). 대부분의 장르에서 관람률이 다소 정체된 가운데 미술관 관람률만 2015년에 비

해 0.8%p 증가하였다. 유럽의 27개국이 참여한 Eurobarometer의 2013년 문화 분야 연간 관람률 조사 결과를 보면 영화관 52%, 박물관, 미술관 37%, 콘서트 35%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조사 문항에 차이가 있어서 엄밀한 비교가 어려우나 대체로 유럽에 비해서 영화 관람의 비율은 다소 높은 반면 공연 전시의 관람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그림 Ⅶ-4] 문화예술 장르별 관람률, 1993–2017



주: 1) 문화예술관람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장르의 문화예술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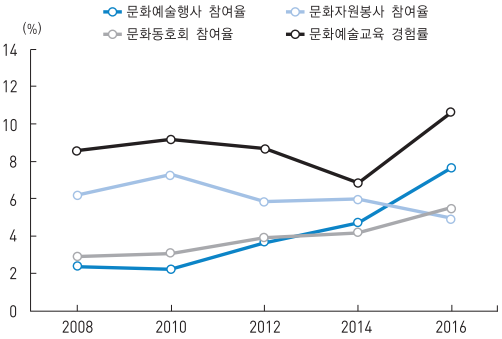
청년층은 문화예술관람률이 83.0%로 비청년층의 55.3%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청년층은 특히 영화 관람에서 78.9%로 비청년층의 49.7%에 비해서 크게 높고, 연극·뮤지컬도 22.6%로 비청년층의 11.5%에 비해서 높고 미술관도 17.9%로 비청년층의 11.5%에 비해서 높다.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문화예술관람률이 2016년 78.3%로 2014년에 비해 7.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분야별로는 특히 영화 관람률이 7.5%p로 크게 증가하였다. 문화예술 관람의향은 83.8%로 2014년보다 1.6%p 감소해 실제 관람률과의 격차가 14.1%p에서 5.5%p로 크게 줄어들었다.

교육, 창작 및 동아리 활동

「문화향수실태조사」에 의하면, 창작발표 활동을 통한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2016년 7.6%로 2014년에 비해 2.9%p 증가하였다. 앞으로 창작발표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향도 2014년보다 1.9%p 증가한 10.0%에 이른다.

[그림 Ⅶ-5] 문화예술행사, 문화자원봉사 및 문화동호회 참여율과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08–2016



주: 1)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창작, 발표활동 등을 통해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문화자원봉사 참여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문화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3) 문화동호회 참여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문화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4)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학교교육 이외에 문화예술 관련 강좌나 강습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최근 1년 동안 학교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2016년 10.6%로 2014년보다 3.7%p 증가하였고, 문화동호회 참여율도 2016년 5.5%로 2014년보다 1.3%p 증가하였다. 반면, 문화자원봉사 참여율은 2016년 5.0%로 2014년보다 1.0%p 감소하였다(그림 Ⅶ-5).

여 행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내여행자 비율은 70.4%로 2015년에 비해 3.8%p 증가하였고 해외여행자 비율은 26.6%로 2015년에 비해 6.7%p 증가하였다(그림 Ⅶ-6). 청년층은 국내여행(75.1%)과 해외여행(30.5%)에서 비청년층에 비해 경험률이 6.6%p와 5.6%p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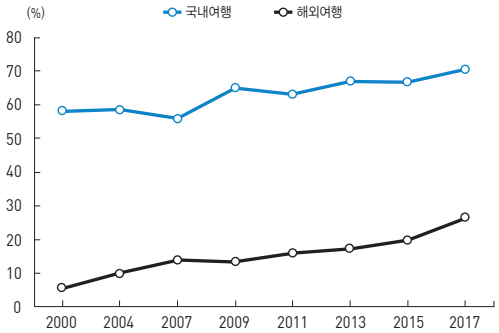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로 보면, 국내여행 경험률은 2016년 89.5%로 2015년 대비 1.6%p 증가하였고 해외여행 경험률은 2016년 17.3%로 2015년 대비 0.7%p 증가하였다. 「국민여행실태조사」의 국내여행 경험률이 「사회조사」의 국내여행자 비율보다 높은데, 이는 「국민여행실태조사」가 일상 생활권을 벗어난 모든 이동을 여행에 포함시킨 결과로 보인다.

스포츠 관람과 생활체육

스포츠와 관련된 대표적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 관람과 생활체육 참여가 있다. 스포츠 관람률은 2017년 16.6%로 2.7%p 증가하였다(그림 Ⅶ-7). 이와 같은 증가는 2년 연속 800만 관중을 넘어선 프로야구의 흥행성과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청년층의 스포츠 관람률은 22.9%로 비청년층의 13.9%에 비해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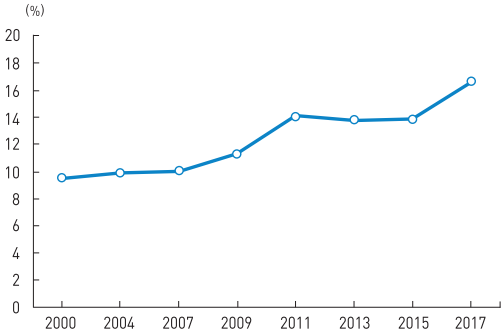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에서는 1회에 30분

[그림 Ⅶ-6] 국내 및 해외여행자 비율, 2000-2017



주: 1) 국내 및 해외여행자 비율은 각각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Ⅶ-7] 스포츠관람률, 2000-2017



주: 1) 스포츠관람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스포츠 관람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상, 일주일에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을 생활체육참여율로 조사하고 있다. 2017년 결과에 따르면, 생활체육참여율이 48.2%로 2016년에 비해서 1.1%p 감소하였다. 2016년에는 남녀의 참여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2017년에는 남자는 45.6%로 3.6%p 감소한 반면, 여자는 50.8%로 1.5%p 증가하였다.

미디어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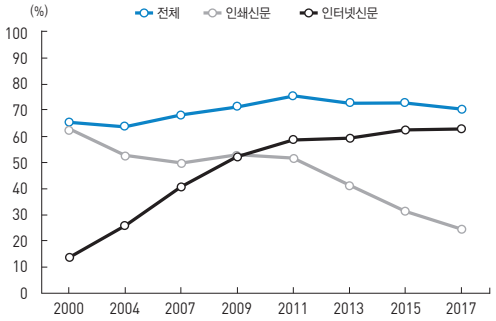
미디어 이용에서는 전년에 이어서 스마트폰 이용과 TV시청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7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매체들 중에서 스마트폰 이용률이 81.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TV 이용률이 77.2%로 높다. 2016년에 비해 스마트폰 이용률은 0.4%p 증가하였고, TV 이용률은 1.8%p 증가하였다.

매체 이용은 여전히 세대 간에 차이가 뚜렷했으나 줄어드는 추세도 보인다. 스마트폰 이용률이 20대에서 97.0%로 가장 높은 반면, 60대에서는 60.5%에 머물렀으나, 2016년에 비해 60대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2.6%p 증가해서 격차는 다소 감소하였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4%로 37개 조사대상국 중에서 가장 높다.

신문을 읽는 방법의 매체 이용에 따른 차이는 전반적으로 2015년과 같았으나 2017년에 신문 읽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인터넷신문을 읽는 비율은 2017년에 0.4%p 증가하는데 그쳤다. 인쇄신문을 읽는 비율은 감소세가 줄기는 했으나 2017년에 7.1%p 감소하였다. 그 결과 인쇄신문과 인터넷신문 중 어느 하나라도 읽는 비율, 즉 신문을 읽는 전체 비율이 70.3%로 2015년에 비해서 2.4%p 줄어들었다(그림 Ⅶ-8). 청년층은 비청년층에 비해서 인쇄신문을 읽는 비율은 15.6%로 비청년층의 28.3%에 비해서 낮은 반면, 인터넷신문을 읽는 비율은 81.7%로 비청년층의 54.8%에 비해서 크게 높다. 종합적으로 신문을 어느 하나라도 읽는 청년층의 비율은 83.0%로 비청년층의 64.9%에 비해서 높다.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는 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를 제외하고 종이책과 전자책을 포괄한 일반도서를 읽는 비율을 사용하여 연간 독서율을 산출한다. 2017년 조사 결

[그림 Ⅶ-8] 신문 읽는 비율, 200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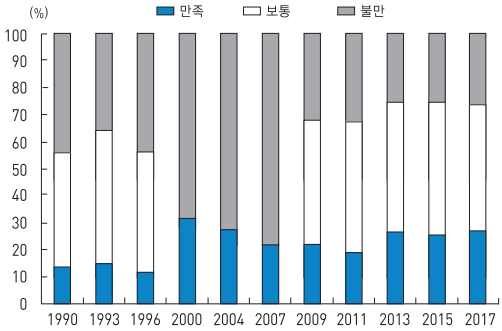
주: 1) 2000년과 2004년 통계치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이고, 2007년 이후부터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개월 동안 2주일에 1회 이상 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과 만 19세 이상 성인의 독서율은 59.9%, 초중고학생의 독서율은 91.7%로 나타나서, 2015년에 비해 각기 5.4%p와 3.2%p 감소하였다. 성인과 학생을 종합한 독서율은 2013년 기준 74.4%로 OECD 국가의 평균 독서율인 76.5%에 비해서 다소 낮다.

여가만족

여가 만족도는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지난 1990년부터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되었으나 2000년부터 '보통'이라는 응답범주 없이 4점 척도로 조사되기 시작하였고 2009년부터는 다시 5점 척도로 변경되었다.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고 '만족한다'는 응답과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각각 26.7%와 26.6%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그림 Ⅶ-9). 여가 생활에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하지 않는 인구가 절반에 조금 못 미치고, 만족하는 인구와 불만족하는 인구가 각각 4명 중 1명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다.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는 인구의 비율이 2.5%p 감소했다. 청년층의 여가 만족 비율은 33.3%로 비청년층의 23.8%에 비해서 9.5%p 높고, 여가 불만족 비율은 22.1%로 비청년층의 28.4%에 비해서 6.3%p 낮다.

[그림 Ⅶ-9] 여가만족도, 1990-2017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2000-2007년 조사의 경우 응답범주가 '만족', '불만족' 등 이분형 척도로 조사되었음.
3) 1990-1996년, 2009-2015년 자료의 경우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비율이며, 불만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가 불만족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54.5%)과 시간 부족(24.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건강 문제(10.5%)나 취미 부재(4.3%)로 조사되었다. 2015년에 비해 경제적 부담은 4.0%p 줄어든 반면, 시간 부족은 4.1%p 증가했고 건강 문제도 0.7%p 늘었다. 청년층은 여가 불만족 요인으로 비청년층에 비해서 경제적 부담과 건강 문제가 각각 9.8%p와 11.2%p 낮은 반면, 시간 부족이 16.5%p 높다.

참고문헌

차승은. 2016. "여가시간의 변화와 격차." 「한국의 사회동향 2016」.

해외 여행 경험의 추이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이주현 (서울시립대학교)

- 해외여행 경험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여행 목적별로 보면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이 가장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은 모든 인구사회집단에서 증가하였으며, 성별, 교육수준별, 가구소득수준별 차이가 확대되었다.
- 해외관광 경험은 삶의 만족도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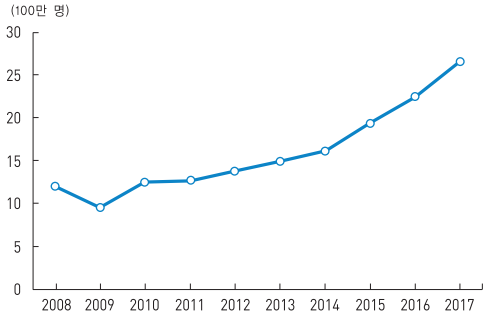
과거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외화를 낭비하는 사치성 활동이라는 인식이 압도적이었다. 현재에도 이러한 인식이 남아 있어 해외 출국자에게 관광진흥기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일부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 상당수가 해외로 여행을 나가는 상황에서 해외여행은 이제 사치성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가활동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해외여행 경험의 추이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해외여행 경험을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비교해 본 후, 해외여행 경험과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여행 경험

우선 [그림 Ⅶ-10]에서 출국자 통계 기반 국민 해외여행객 수를 보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해왔다. 2009년 해외여행객 수는 949만 명으로 2008년 1,200만 명에서 250만 여명이 감소하였으나 2010년 1,249만 명으로 다시 증가한 후 매년 증가세가 이어져 2016년에는 2,238만 명으로 2,000만 명을 넘었다. 2017년에는 해외여행 출국자가 2,650만 명으로 나타나서 해외여행을 경험한 연인원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을 넘어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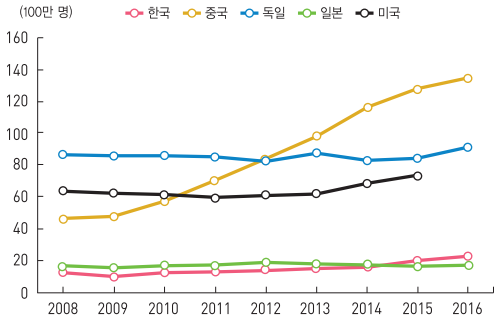
이와 같은 국민 해외여행객 수 증가는 해외여행 증가의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을 같이 한다.

[그림 Ⅶ-10] 국민 해외여행객 수, 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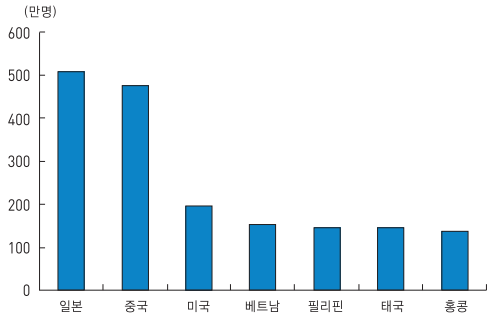
주: 1) 국민 해외여행객 수=총 내국인출국-재외국민+승무원.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 연도.

[그림 Ⅶ-11] 주요 국가의 해외여행객 수, 2008–2016



주: 1) 미국의 2016년 해외여행객 수 자료 없음.
출처: World Bank, International Tourism, number of departures.

[그림 Ⅶ-12] 주요 목적지별 해외여행객 수,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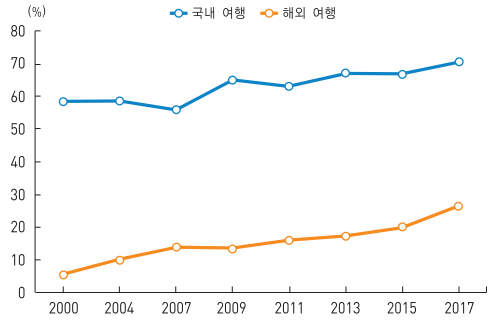
주: 1) 목적지별 해외여행객 수는 2006년 출국카드 폐지 이후에는 각 국에 입국한 한국인 여행객을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함.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2018.

World Bank의 자료에 따르면 출국자 기준 해외여행객 수는 2008년 10억 9,624만 명에서 2016년 14억 5,878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림 Ⅶ-11]은 해외 주요 국가의 해외여행객 수를 비교하였다. 인구 규모에 비해서 독일은 해외여행객 수가 많은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해외여행객 수가 적지만, 최근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해외여행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일본의 해외여행객 수는 정체되어 2015년부터는 한국의 해외여행객 수가 더 많아졌다. 한국의 해외여행객 증가 추세에 따라 한일 간 차이는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2006년 7월부터 국민출국카드가 폐지되어 해외여행객의 행선지 파악이 어려워짐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주요국 관광부나 관광공사의 집계 통계를 수집하여 국민 해외여행객 주요 행선지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2017년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한국 해외여행객의 목적지는 일본(509만 명)과 중국(476만 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197만 명), 베트남(154만 명), 필리핀(148만 명), 태국(146만 명), 홍콩(139만 명)의 순서로 많았다(그림 Ⅶ-12).

지금까지 제시한 통계에서는 동일인의 중복 여행 정도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림 Ⅶ-13]은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조사된 국내 및 해외 여행 경

[그림 Ⅶ-13] 국내 및 해외 여행 경험률, 200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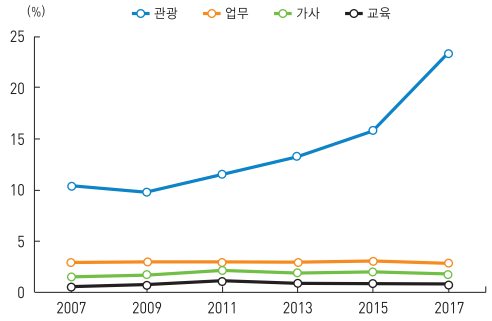


주: 1) 국내 및 해외 여행 경험률은 각각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험률을 통해서 실제 국민의 삶에서 여행이 차지하는 정도를 보여주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여행은 58.2%에서 70.4%로 증가했고, 해외여행은 5.9%에서 26.6%로 증가했다. 국내여행 경험률이 12.2%p 증가하는 동안 해외여행 경험률은 20.7%p 증가해서 해외여행 경험률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

[그림 Ⅶ-14]는 여행목적별 해외여행 경험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관광 목적의 여행이 해외여행 경험의 증가를 주도했음을 볼 수 있다. 업무, 가사, 교육 목적의 경험률은 2007년에서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 경험률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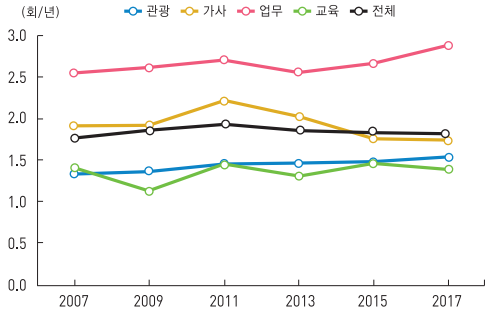
[그림 Ⅶ-14] 여행목적별 해외여행 경험률, 2007-2017



주: 1) 여행목적별 해외여행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관광, 업무, 가사, 교육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경험한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음으로 해외여행 경험자의 1년 동안 해외여행 평균 경험 횟수를 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8회 내지 1.9회로 연도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행목적별 평균 경험 횟수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림 Ⅶ-15]에서 여행목적별로 해외여행 평균 경험 횟수를 비교하였는데, 업무 목적의 여행인 경우 같은 기간 평균 2.5회에서 2.9회 정도로 나타나서 가장 빈도가 높았다. 관광 목적의 경우 2007년 1.3회에서 2017년 1.5회로 완만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빈도가 늘어난 것보다는 해외여행 참여자가 많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Ⅶ-15] 해외여행 경험자의 여행목적별 평균 경험 횟수, 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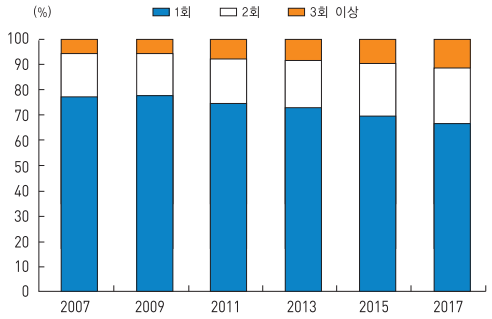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지난 1년 동안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는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음으로는 여행목적별 해외여행 경험 횟수를 구간을 나누어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여기에서는 특히 경험률이 가장 높은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을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1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 77.3%에서 2017년 66.6%로 감소한 반면, 2회는 17.3%에서 22.1%로 증가하였고, 3회 이상은 5.4%에서 11.2%로 전체 경험자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그림 Ⅶ-16). 이를 통해서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을 경험하는 국민의 범위가 넓어진 것과 함께 관광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반복해서 나가는 국민의 규모도 점차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Ⅶ-16] 해외관광 경험자의 여행경험횟수별 구성비율, 2007-2017



주: 1) 만 15세 이상 지난 1년 동안 해외관광 여행을 한 적이 있는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해외관광의 인구사회집단별 비교

다음으로 관광목적의 해외여행인 해외관광을 중심으로 인구사회집단별 비교를 제시하였다. 해외관광 경험은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높고,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50대와 40대가 높았으며, 60대 이상이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해외관광 경험률이 높았다(표 Ⅶ-3).

〈표 Ⅶ-3〉 인구사회집단별 해외관광 경험률,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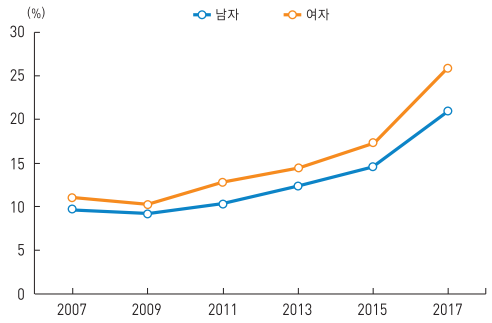
(%)

	해외관광 경험률
전체	23.4
성	
남자	20.9
여자	25.9
연령	
15-19세	16.6
20-29세	29.4
30-39세	29.4
40-49세	23.1
50-59세	25.0
60세 이상	16.1
교육수준	
초졸 이하	7.5
중졸	13.6
고졸	20.1
대졸 이상	34.7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1.7
200-500만원 미만	22.8
500만원 이상	40.6

주: 1) 해외관광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관광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경험한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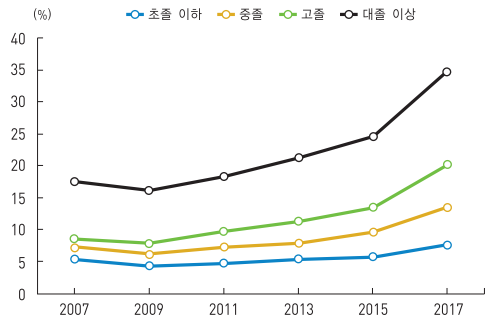
다음으로 해외관광의 경험률 추이를 인구사회집단별로 비교하였다. 먼저 남녀별로는 2007년에 비해서 성별 차이가 점차 확대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2007년에는 남자 9.7%, 여자 11.1% 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차이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지난 2015년의 2.9%p 차이가 2017년 5.0%p 차이로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그림 Ⅶ-17).

[그림 Ⅶ-17] 성별 해외관광 경험률, 2007–2017



주: 1) 해외관광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관광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경험한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Ⅶ-19] 교육수준별 해외관광 경험률, 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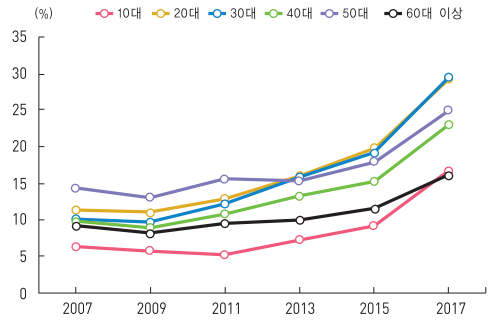
주: 1) 해외관광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관광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경험한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연령별로는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전체 연령에 걸쳐서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Ⅶ–18). 해외관광 경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11년까지는 50대 였으나 2013년 이후 20–30대로 순위가 변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관광목적 해외여행 경험률이 높아지면서 교육수준별 차이가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동시에 저학력 집단에서도 관광목적 해외여행 경험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Ⅶ–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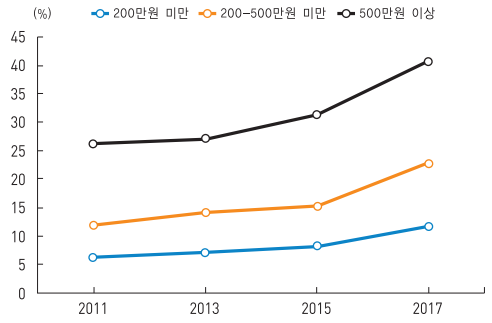
가구소득수준별로도 유사한 양상을 볼 수 있다. 가구소득수준별 차이가 확대되었으나 저소득층에서도 해외여행 경험률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그림 Ⅶ–20).

[그림 Ⅶ-18] 연령집단별 해외관광 경험률, 2007–2017



주: 1) 해외관광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관광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경험한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Ⅶ-20] 가구소득수준별 해외관광 경험률, 2011–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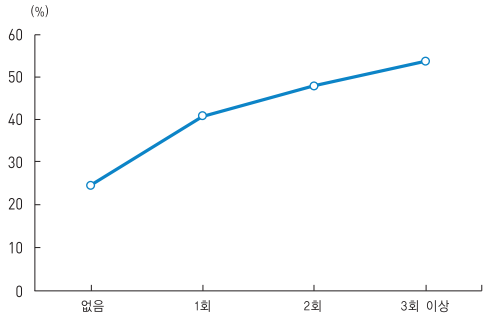
주: 1) 해외관광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관광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경험한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해외관광 경험과 삶의 질

마지막으로 해외관광 경험과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보았다. 해외관광 경험 횟수에 따른 주관적 삶의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았다. 해외관광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만족하는 비율이 24.6%였는데, 해외관광을 1회 경험한 경우 만족하는 비율이 40.7%로 높아지고, 2회인 집단에서는 47.8%로, 3회 이상에서는 53.6%로 늘었다. 해외관광 경험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큰 차이가 있으며 횟수가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도 비례하여 증가하였다(그림 Ⅶ-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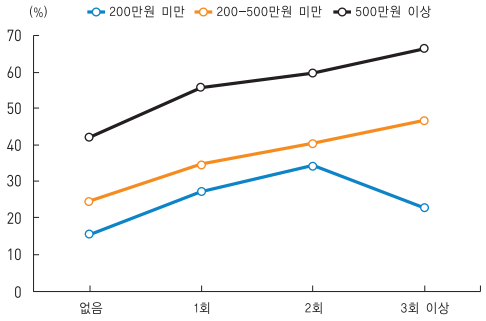
실제 해외관광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다변량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해외관광 경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인 가구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해외관광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았다. [그림 Ⅶ-22]는 해외관광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모든 소득층에서 유사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다만,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3회 이상의 해외관광을 했던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빈번한 해외관광이 오히려 삶의 만족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Ⅶ-21] 해외관광 경험 횟수별 삶의 만족도, 2017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삶의 만족도는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 또는 '약간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7.

[그림 Ⅶ-22] 가구소득수준별 해외관광 경험 횟수에 따른 삶의 만족도, 2017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삶의 만족도는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 또는 '약간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7.

문화서비스 지출의 주요 동향

김진 (동덕여자대학교)

- 한국인의 문화향유 수준을 가계 문화서비스지출을 통해 살펴보면, 2016년 기준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 지출액은 1만 1,864원으로 매월 영화 한 편 정도를 관람하는 수준이다.
-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 지출액의 증가는 연평균 10.89%에 달하여 문화서비스지출 증가율이 경상소득 증가율의 두 배 이상이다.
- 1인당 문화서비스지출액은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더 커진다.
-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문화지출의 비중은 2000년 0.54%에서 2016년 0.75%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같은 기간 1.1%대를 유지하고 있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사회가 발전하고 진보할수록 문화향유에 대한 가계지출도 증가한다. 그래서 문화향유의 규모나 구성은 사회구성원의 행복이나 복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곤 한다. 하지만 문화를 범주화하고 계측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는 오락(entertainment), 문화(culture), 예술(arts) 등의 활동을 수치화하고 정책적 수요와 필요를 포착하는 것이 체계화된 통계 인프라와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삶의 질이 과거와 비교해 개선되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문화향유의 증가와 다양화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문화정책 수립에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개인의 문화향유를 나타내는 지표로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지출을 살펴보고,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 1인당 문화서비스 지출과 정부 문화지출의 비중을 통해 한국의 문화향유의 수준을 고찰하고자 한다.

가계 문화서비스 지출

문화서비스지출에 대한 통계자료로는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계동향조사」가 있다. 이 조사에서는 가계지출을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하고 소비지출을 오락·문화 부문을 포함한 12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오락·문화 부문은 세부적으로 '영상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정보처리장치', '기록매체',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오락문화내구재', '악기기구',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화훼관련용품', '애완동물관련물품', '화훼 및 애완동물 서비스',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복권', '서적', '기타 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등을 담고 있다. 오락·문화 부문의 세부 항목 중 문화향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소비지출 항목은 '문화서비스'이다. '문화서비스' 지출은 다시 세부적으로 '공연 및 극장', '관람시설 이용', '독서실 이용', '문화강습', '콘텐츠', '방송수신료', '기타 문화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표 Ⅶ-4〉는 가계소비지출 중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지출의 10년간 추이를 보여준다. 2016년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지출액은 1만 1,864원이다. 이는 월평균 경상소득액 136만 6,073원의 0.87%, 월평균 소비지출액 82만 3,756원의 1.4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월평균 영화 1편을 관람하거나 또는 계절별로 연주회나 공연 관람을 1회 하는 정도의 수치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인당 월평균 경상소득은 94만 6,744원에서 136만 6,073원으로 연평균 4.92%로 증가하고, 1인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62만 7,386원에서 82만 3,756원으로 연평균 3.48% 증가하였다. 반면,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지출의 증가율은 연평균 10.89%에 달하여 경상소득 증가율의 두 배 이상이다.

2007년 경상소득 대비 문화서비스지출의 비중은 0.63%이고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의 비중은 0.96%임에 비해, 2016년 경상소득 대비 문화서비스지출의 비중은 0.87%이고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의 비중은 1.44%로 각각 1.4배, 1.5배 증가하였다.

〈표 Ⅶ-4〉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지출, 2007–2016

	경상소득 (원)	소비지출 (원)	문화서비스지출		
			지출액 (원)	경상소득 대비 비중 (%)	소비지출 대비 비중 (%)
2007	946,744	627,386	5,992	0.63	0.96
2008	993,965	651,173	6,426	0.65	0.99
2009	996,107	652,078	6,913	0.69	1.06
2010	1,053,507	688,327	7,434	0.71	1.08
2011	1,115,094	729,908	8,017	0.72	1.10
2012	1,185,317	753,500	8,962	0.76	1.19
2013	1,230,147	766,963	9,504	0.77	1.24
2014	1,281,522	798,415	10,693	0.83	1.34
2015	1,334,888	825,446	11,340	0.85	1.37
2016	1,366,073	823,756	11,864	0.87	1.44
연평균증가율(%)	4.92	3.48	10.89	4.23	5.56

주: 1) 경상소득, 소비지출, 문화서비스지출 금액은 명목 금액임.
2) 가계별 수치를 가구원수로 나누어 1인당 수치를 구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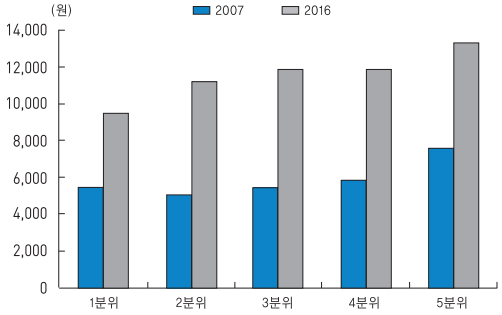
가계 문화서비스 소비지출의 특성

가계 문화서비스 소비지출의 특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별 문화서비스 소비지출의 특성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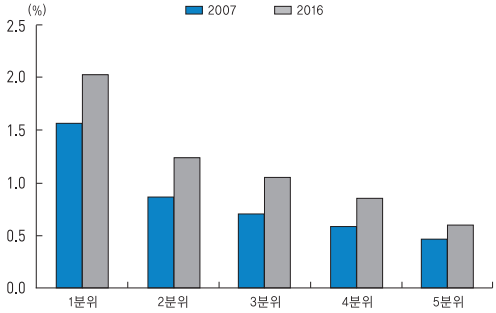
[그림 Ⅶ-23]은 소득분위별 1인당 월평균 가계 문화소비지출에 대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에 걸친 변화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문화서비스지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소득 및 소비 대비 문화서비스지출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그림 Ⅶ-23] 소득분위별 1인당 문화서비스지출, 2007,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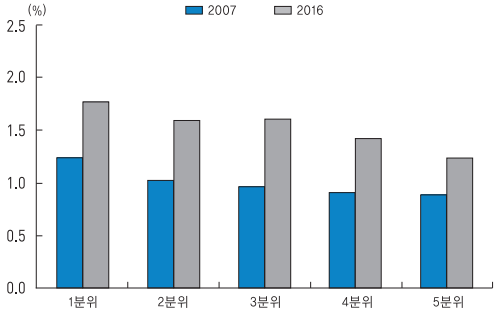
1) 1인당 문화서비스지출액



2) 경상소득 대비 비중



3) 소비지출 대비 비중



주: 1) 경상소득, 소비지출, 문화서비스지출 금액은 명목 금액임.
2) 가계별 수치를 가구원수로 나누어 1인당 수치를 구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7, 2016.

2007년 소득 1분위의 문화서비스지출액은 1인당 월평균 5,427원이었고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의 비중은 1.24%이었다. 10년 후인 2016년 소득 1분위의 문화서비스지출액은 1인당 월평균 9,494원이었고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의 비중은 1.76%이다. 소득 1분위의 소비지출 중에서 문화서비스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나마 증가하였다.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의 문화서비스지출액은 큰 차이가 난다. 즉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서비스지출의 편차가 드러난다. 물론 2007년에는 2분위에서 문화서비스지출액이 가장 적었는데, 2016년에는 1분위의 문화서비스지출액이 가장 적다. 또한 2016년에는 소득 2분위와 3분위의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 비중이 각각 1.59%, 1.60%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소득수준이 가계의 문화서비스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서비스지출의 불평등은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1994–2014년 기간 중 10분위 소득분위별 문화소비지출 수준 및 구성의 변화 그리고 문화소비지출 분석 결과를 보면 2인 이상 도시가구의 문화소비지출 지니계수는 2014년 기준 0.40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경상소득 지니계수 0.284, 소비지출 지니계수 0.250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소득 불평등, 소비 불평등에 비해서 문화소비에서의 불평등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전승훈·김진, 2016). 지니계수는 분배적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높은 지니계수를 갖는 문화소비지출이 경상소득

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문화서비스지출이 경상소득과 소비지출보다 특정 소득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집중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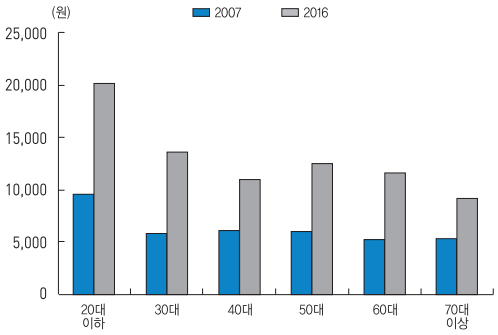
이제 가구주 연령별 가계 문화소비지출에 대해 살펴보자. 경제성장에 의한 물질적 풍요로움의 수혜,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 'X세대'의 등장 등을 고려할 때 가구주 연령에 따른 문화서비스지출의 차별성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Ⅶ-24]는 가구주 연령집단별 1인당 월평균 문화소비지출에 대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에 걸친 변화를 보여준다. 가구주가 중년층, 노년층인 가구에 비해서 가구주가 젊은 층인 가구의 1인당 문화서비스지출액이 더 많으며, 특히 20대 이하 가구주 연령층의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지출이 지출액 규모나 소비지출 대비 비중에서 다른 가구주 연령층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2007년의 경우에는 20대 이하 가구주 연령층의 경상소득이 30대와 40대 가구주 연령층보다 더 높아서 문화서비스지출액 규모가 크다고 설명할 수 있으나, 2016년의 경우에는 20대 이하 가구주 연령층의 경상소득이 30대와 40대 가구주 연령층보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서비스지출액 규모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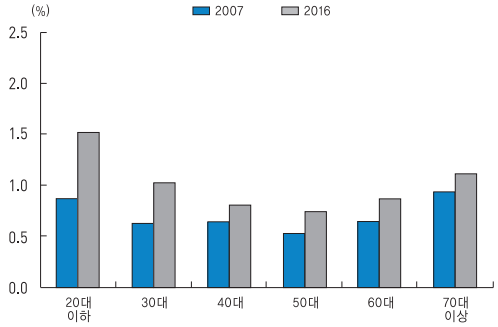
먼저 문화서비스지출액 규모를 보면, 2007년의 경우 30대 이상의 가구주 연령층 가구는 1인당 월평균 5,000원 내외에서 문화서비스지출을 하고 있으며 20대 이하의 가구주 연령층 가구는 그 두 배인 약 1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 60대 가

[그림 Ⅶ-24] 가구주 연령집단별 1인당 문화서비스지출, 2007,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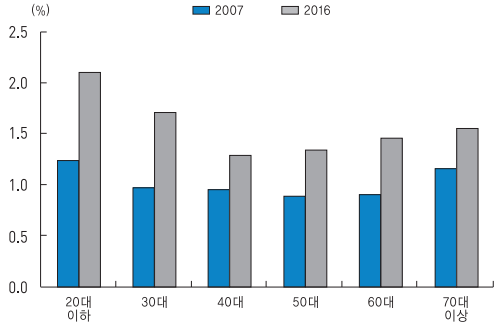
1) 1인당 문화서비스지출액



2) 경상소득 대비 비중



3) 소비지출 대비 비중



주: 1) 경상소득, 소비지출, 문화서비스지출 금액은 명목 금액임.
2) 가계별 수치를 가구원수로 나누어 1인당 수치를 구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7, 2016.

구주 연령층 가구의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지출액은 5,170원으로, 70대 이상 가구주 연령층 가구의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지출액 5,285원보다 다소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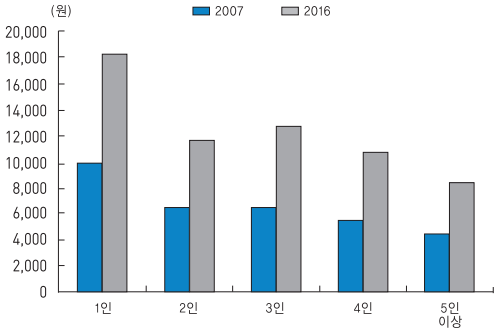
2016년에는 모든 가구주 연령층 가구에서 10년 전에 비해 문화서비스지출액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20대 이하와 30대 가구주 연령층 가구에서 문화서비스지출액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60대 가구주 연령층 가구의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지출액은 1만 1,645원으로, 70대 이상 가구주 연령층 가구의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지출액 9,126원보다 높다.

문화서비스지출의 소비지출 대비 비중으로 보면, 2007년에는 20대 이하의 젊은 층의 가구주 가구에서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의 비중이 1.23%로 가장 높다. 70대 이상 가구주 가구를 제외하면 그 외의 다른 연령층 가구주 가구의 문화서비스지출 비중은 모두 1% 미만이다. 2016년에는 모든 가구주 연령층 가구에서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 비중이 모두 1%를 넘었다. 20대 이하 젊은 가구주 연령층의 가구에서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 비중이 2.10%로 가장 높다. 30대 가구주 연령층 가구에서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 비중은 1.71%이며 40대 이상의 가구주 연령층 가구에서는 1.6% 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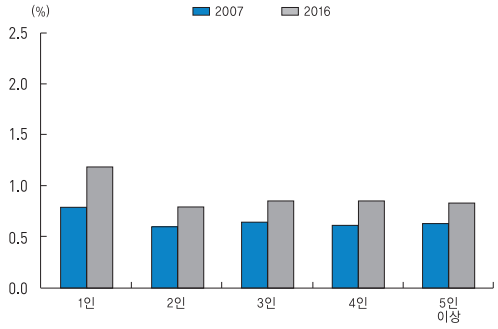
다음으로 가구원수별 특성을 살펴보자. 가구원수별 특성은 소득분위별 특성과 유사할 수도 있으나 최근 1인가구의 급증으로 가계소비지출, 특히 문화서비스지출의 특성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 Ⅶ-25] 가구원수별 1인당 문화서비스지출, 2007,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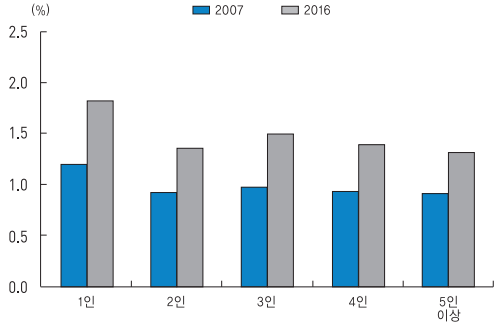
1) 1인당 문화서비스지출액



2) 경상소득 대비 비중



3) 소비지출 대비 비중



주: 1) 경상소득, 소비지출, 문화서비스지출 금액은 명목 금액임.
2) 가계별 수치를 가구원수로 나누어 1인당 수치를 구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7, 2016.

[그림 Ⅶ-25]는 가구원수별 1인당 월평균 가계문화소비지출에 대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에 걸친 변화를 보여준다. 2007년의 경우 1인가구에서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 비중이 1.2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 비중은 0.90%로 가장 낮았으며, 2-4인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 비중은 모두 0.9%대를 넘었다.

2016년에도 1인가구에서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 비중이 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1.31%로 가장 낮았으며, 2-4인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 비중은 모두 1.35%를 넘었다.

2007년보다 2016년에 모든 가구에서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지출의 소득 대비 비중과 소비 대비 비중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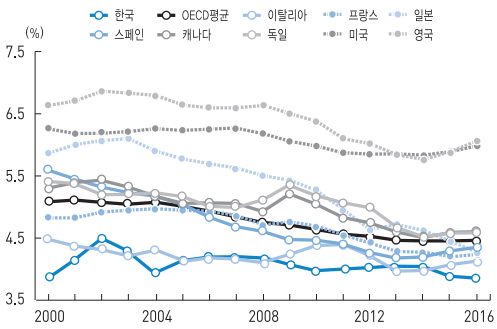
1인가구의 경우는 2007년과 2016년 모두 1인당 월평균 경상소득, 소비지출, 문화서비스지출 절대액이나 문화서비스지출의 소득 대비 또는 소비 대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최근 1인가구의 증가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1인가구의 문화서비스지출 절대액, 소득 대비 또는 소비 대비 비중이 현격하게 높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문화지출 국제비교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목적에 따라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수도·광열', '가계시설 및 운영', '의료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항목' 등 12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일반정부지출을 기능에 따라 '일반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업무', '환경',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오락·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보장 및 복지' 등 10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서 GDP 대비 가계의 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중 오락과 문화(recreation and culture)지출의 비중, 그리고 GDP 대비 일반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 중 오락·문화·종교(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분야 지출의 비중을 살펴본다.

[그림 Ⅶ-26]는 OECD 주요 국가들의 GDP를 기준으로 가계오락문화지출의 비중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OECD 평균은 2000년 5.09%, 2005년 5.00%, 2010년 4.64%, 2016년 4.46%로 지속

[그림 Ⅶ-26]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가계오락문화지출 비중, 200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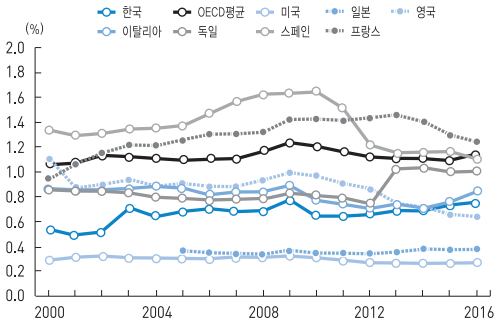


주: 1) 2008년 국민계정체계 및 명목가격 기준임.
2) OECD 평균은 단순 평균치임.
출처: OECD, OECD.Stat(https://stats.oecd.org).

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일본, 스페인, 독일, 캐나다 등은 가계오락문화지출 비중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 3.87%, 2005년 4.13%, 2010년 3.97%, 2016년 3.85%를 나타내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하지만 OECD 다른 국가들의 감소추세를 고려했을 때 향후에는 문화지출 수준이 OECD 평균에 근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림 Ⅶ-27]은 OECD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부문의 문화지출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OECD 평균은 2000년 1.07%, 2005년 1.10%, 2010년 1.21%, 2016년 1.14%로 큰 변화 없이 1.1%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정부부문 문화지출의 비중은 2000년 0.54%, 2005년 0.68%, 2010년 0.65%, 2016년 0.7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볼 때 증가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보다 낮다. 정부차원의 문화지출이 더 확대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림 Ⅶ-27]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일반정부 문화지출 비중, 2000-2016



주: 1) 2008년 국민계정체계 및 명목가격 기준임.
2) OECD 평균은 단순 평균치임.
출처: OECD, OECD.Stat(https://stats.oecd.org).

참고문헌

전승훈 · 김진. 2016. “가계 문화소비지출의 불평등 분석.” 「문화경제연구」 19(3). 한국문화경제학회.

2018 Housing & Transportation

Korean Social Trends 2018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Ⅷ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장수은 | 서울대학교 230

청년의 주거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김준형 | 명지대학교 238

수도권 지역 통근통행의 광역화와 사회 계층별 통근시간의 변화
정동재 | 서울대학교, 장수은 | 서울대학교 245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장수은 (서울대학교)

- 주택보급률은 2016년 현재 102.6%이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와 자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각각 48.6%와 57.7%이다.
- 2017년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이 31.2㎡로 나타나는 등 주거의 꾸준한 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택 만족도는 4점 만점에 보통 수준인 3점 내외에서 정체되고 있다.
- 수도권 지역 주민과 저소득층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전체 평균 보다 높아 주거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2016년 현재 약 227만 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었다.
-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현재 가구당 1.15대에 달한다. 도로망과 철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2017년 기준 도로연장은 10만 1,870㎞, 철도연장은 4,078㎞에 이른다.
- 한국인의 평균 통근시간은 2015년 기준 35.4분이며, 2016년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7점 만점에 4.84점으로 조사되어 2010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 보편적 이동권과 교통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7년 현재 저상버스는 7,579대, 특별교통수단은 2,932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민들의 생활 기반이 되는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변화를 살펴본다. 주거 영역에서는 먼저 주택보급률과 점유형태를 통해 주거의 양적 변화를 정리한다. 이어서 1인당 평균 주거면적과 주택 만족도를 통해 주거의 질적 변화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주거비 부담의 지역별, 소득계층별 불균형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살펴본다. 교통 영역에서도 먼저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양적 확충 추이를 정리한다. 이어서 평균 통근시간과 대중교통 만족도 등의 지표를 통해 교통 체계의 서비스 수준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증가에 따른 보편적 이동권과 교통복지 문제를 살펴본다.

주택보급과 점유형태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표 Ⅷ-1〉은 2005-2016년 사이 주택보급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 주택보급률은 98.3%에서 102.6%로 4.3%p 증가하였다.

주택보급은 아파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표 Ⅷ-2〉의 주택 유형 변화를 살펴보면, 2006-2017년 사이 단독주택은 10.2%p 감소한 반면, 아파트는 6.8%p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48.6%에 달한다.

〈표 Ⅷ-1〉 주택보급률, 2005-2016

연도	가구수 (1,000가구)	주택수 (1,000호)	주택보급률 (%)
2005	15,887	15,623	98.3
2010	17,656	17,739	100.5
2011	17,928	18,082	100.9
2012	18,209	18,414	101.1
2013	18,500	18,742	101.3
2014	18,800	19,161	101.9
2015	19,111	19,559	102.3
2016	19,368	19,877	102.6

주: 1) 가구수는 혈연가구, 1인 가구, 5인 이하 비혈연가구를 포함한 일반가구 기준임.
2) 주택수는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를 반영한 값임.
3)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100.
출처: 국토교통부, 「(新)주택보급률」, 각 연도.

〈표 Ⅷ-2〉 주택유형별 가구 분포, 2006-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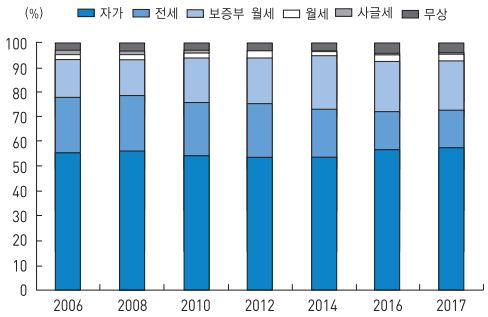
(%)

연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2006	44.5	41.8	3.3	7.4	1.8	1.3
2008	42.9	43.9	3.3	7.2	1.1	1.6
2010	40.4	47.1	4.5	5.6	1.0	1.3
2012	39.6	46.8	2.9	7.2	1.7	1.8
2014	37.5	49.6	3.4	6.2	1.0	2.2
2016	35.3	48.1	2.2	8.9	1.7	3.7
2017	34.3	48.6	2.2	9.2	1.6	4.0

주: 1) 일반가구 기준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주택보급과 함께 자가 가구의 비율도 점진적으로 높아졌다. [그림 Ⅷ-1]은 2006-2017년의 주택 점유형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2006-2017년 사이 자가 가구의 비율은 55.6%에서 57.7%로 2.1%p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세 가구의 비율은 22.4%에서 15.2%로 7.2%p 감소하였다. 반면

[그림 Ⅷ-1]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 분포, 2006-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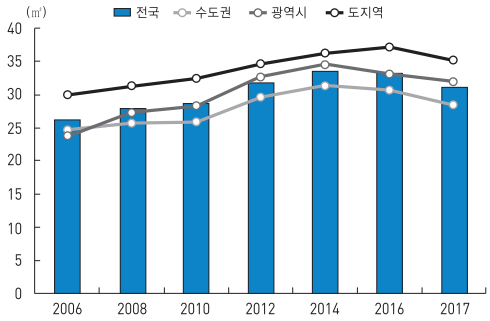
주: 1) 일반가구 기준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보증금 있는 월세 가구의 비중이 일부 등락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이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6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 상황과 이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선호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주거의 질과 만족도

주거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개선도 이루어졌다. [그림 Ⅷ-2]는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의 변화를 보여준다. 2006년의 전국 기준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6.2㎡이었으나 2017년에는 31.2㎡로 약 19%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도 각각 16%, 33%, 17%가량 증가하였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인다. 예를 들어 2017년 수도권 지역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그림 Ⅷ-2] 1인당 평균 주거면적, 2006-2017



주: 1) 일반가구 기준임.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28.3㎡으로 조사되어, 도 지역 35.1㎡의 약 81%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기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1인당 평균 주거면적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국민의 주택 만족도는 4점 만점에 보통 수준인 3점 내외에서 정체되고 있다. 〈표 Ⅷ-3〉은 우리 국민의 주택 만족도를 지역, 소득계층, 주택 점유형태, 주택유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2017년의 평균(전체) 만족도는 2.98점으로 조사되어, 2014년의 평균 만족도 2.92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지역 중에서 수도권의 만족도가 2.97점으로 평균보다 다소 낮다. 소득계층별 만족도는 저소득층 2.86점, 중소득층 3.02점, 고소득층 3.16점으로 나타난다.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만족도가 3.04점인 반면 보증금 없는 월세의 만족도는 2.61점이다. 주택유형은 아파트의 만족도가 3.12점으로 가장 높고, 연립주택의 만족도가 2.80점으로 가장 낮다.

〈표 Ⅷ-3〉 주택 만족도, 2014-2017

(점)

구분	2014	2016	2017
전체	2.92	2.99	2.98
거주지역			
수도권	2.88	3.01	2.97
광역시	2.96	2.98	3.00
도	2.96	2.98	2.99
소득계층			
저소득층	2.80	2.86	2.86
중소득층	2.95	3.04	3.02
고소득층	3.08	3.18	3.16
점유형태			
자가	2.99	3.07	3.04
전세	2.87	2.93	2.94
보증금 있는 월세	2.82	2.92	2.92
보증금 없는 월세	2.63	2.64	2.61
무상	2.85	2.90	2.95
주택유형			
단독주택	2.79	2.83	2.86
아파트	3.04	3.15	3.12
연립주택	2.78	2.81	2.80
다세대주택	2.78	2.82	2.84
비거주용건물내주택	2.87	2.76	2.84
주택이외의 거처	2.97	3.07	2.84

주: 1) 주택 만족도는 4점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량', 4에 가까울수록 '매우 양호'를 의미함.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함.
3) 일세, 사글세,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4) 주택이외의 거처는 오피스텔,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을 의미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주거비 부담과 주거복지

주거의 양적, 질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에 불균형이 나타난다.

〈표 Ⅷ-4〉와 〈표 Ⅷ-5〉는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rice to Income Ratio, PIR)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RIR은 2006년 18.7%에서 2014년 20.3%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그 이후 2017년 17.0%로 다시 낮아졌다. 그러나 수도권의 RIR은 2017년 평균보다 높은 18.4%로 도 지역 15.0%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저소득층의 RIR은 22.2%에 달한다.

〈표 Ⅷ-4〉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2006-2017

(%)

연도	전체	지역			소득계층		
		수도권	광역시	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2006	18.7	19.9	18.5	17.8	27.6	18.9	16.1
2008	17.5	22.3	19.3	15.9	25.0	17.6	17.4
2010	19.2	20.9	16.4	14.4	28.2	16.6	21.1
2012	19.8	23.3	16.8	14.5	21.8	17.3	22.6
2014	20.3	21.6	16.6	15.8	29.0	17.0	21.6
2016	18.1	17.9	15.4	14.2	23.1	14.9	19.0
2017	17.0	18.4	15.3	15.0	22.2	15.7	20.3

주: 1)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중위 월임대료÷중위 월소득×100.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Ⅷ-5〉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2006-2017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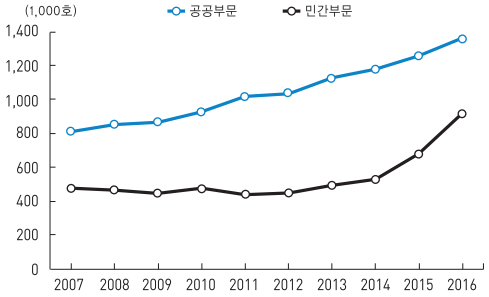
연도	전체	지역			소득계층		
		수도권	광역시	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2006	4.2	5.7	4.1	3.3	6.3	3.4	3.6
2008	4.3	6.9	3.3	3.0	6.4	4.3	4.2
2010	4.3	6.9	3.5	2.9	6.1	4.2	4.0
2012	5.1	6.7	5.0	3.6	7.5	4.3	4.4
2014	4.7	6.9	4.7	4.2	8.3	5.0	4.7
2016	5.6	6.7	5.3	4.0	9.8	5.6	5.0
2017	5.6	6.7	5.5	4.0	8.3	5.2	4.8

주: 1)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중위 주택가격÷중위 연소득.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한편 평균 PIR은 2006-2017년 사이 4.2배에서 5.6배로 증가하였다. 2017년 기준 도 지역의 PIR은 4.0인 반면 수도권의 PIR은 6.7로 평균을 웃돈다. 저소득층의 PIR은 8.3배가 넘지만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5.2배와 4.8배에 그친다. RIR과 PIR의 지역 간, 소득계층 간 차이를 볼 때, 수도권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이 보급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통해 영구, 국민, 10년, 장기 전세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복지 실현에 힘쓰고 있다. [그림 Ⅷ-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재고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6년 현재 약 227만 호가 공급되었다. 특히, 공공부문 임대주택은 2007년 약 81만 호에서 2016년 약 136만 호로 68%가량 증가하였다.

[그림 Ⅷ-3] 공공 및 민간 부문 임대주택 재고, 2007-2016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각 연도.

교통시설의 확충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Ⅷ-6〉의 자동차 등록 대수 현황을 보면, 2000년 약 1,206만 대에서 2017년 약 2,253만 대로 약 1.87배가량 증가하였다. 가구당 자동차 등록 대수와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도 계속 증가하여 각각 1.15대와 437.9대에 이른다. 이는 2000년 대비 각각 약 38.6%와 70.7% 증가한 수준이다.

자동차 대중화와 함께 도로망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었다. 〈표 Ⅷ-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도로연장은 2000년 8만 2,440㎞에서 2017년 10만 1,870㎞로 약 23.6% 증가하였다. 인구 1,000명당 도로연장과 국토 1㎢당 도로연장도 2017년 현재 각각 1.98㎞와 1.02㎞에 이른다. 이는 2000년 대비 각각 약 12.9%와 22.5% 증가한 수준이다.

〈표 Ⅷ-6〉 자동차 등록 대수, 2000-2017

연도	자동차 등록 대수 (1,000대)	가구당 자동차 등록 대수(대)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대)
2000	12,059	0.83	256.5
2005	15,397	0.96	319.5
2010	17,941	1.03	362.1
2011	18,437	1.03	369.2
2012	18,871	1.04	375.9
2013	19,401	1.06	384.7
2014	20,118	1.08	396.4
2015	20,990	1.10	411.4
2016	21,803	1.13	425.5
2017	22,528	1.15	437.9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 「장래가구추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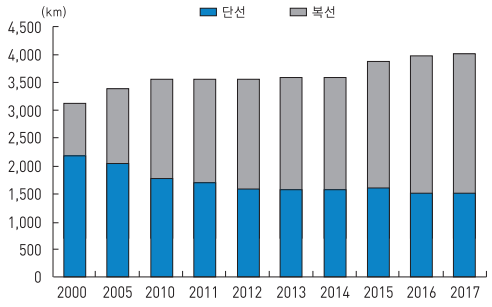
〈표 Ⅷ-7〉 도로연장, 2000-2017

연도	도로연장(㎞)	인구 1,000명당 도로연장(㎞)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2000	82,440	1.75	0.83
2005	90,817	1.89	0.91
2010	94,230	1.90	0.94
2011	94,656	1.90	0.95
2012	96,948	1.93	0.97
2013	96,418	1.91	0.96
2014	97,920	1.93	0.98
2015	99,024	1.94	0.99
2016	100,428	1.96	1.00
2017	101,870	1.98	1.02

주: 1) 개통도로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서」, 각 연도; 「지적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

자동차의 보급과 도로망의 확충으로 혼잡, 교통사고, 대기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를 경감하기 위하여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림 Ⅷ-4]와 같이 철도 연장은 2000년 3,123㎞에서 2017년 4,078㎞로 약 30.6% 증가하였다. 특히, 복선철도 연장이 같은 기간 939㎞에서 2,506㎞로 약 166.9%

[그림 Ⅷ-4] 철도연장, 2000-2017



출처: 한국철도공사, 「철도통계연보」, 각 연도.

늘어나 전체 철도 연장의 61.5%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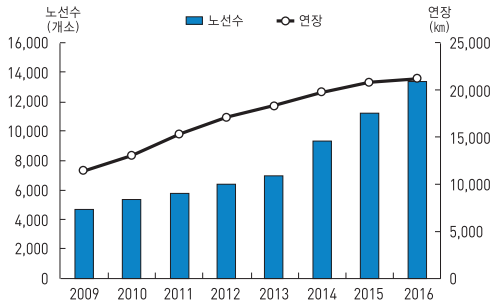
한편, 버스 등록 대수는 〈표 Ⅷ-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 4만 609대에서 2017년 4만 5,714대로 5,105대 늘었다. 같은 기간 버스업체 수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버스업체 종사자 수는 9만 2,292명에서 9만 9,508명으로 7,216명이 증가하였다.

〈표 Ⅷ-8〉 버스업체 수, 보유 대수 및 종사자 수, 2000-2017

연도	업체 수	보유 대수(대)	종사자 수(명)
2000	541	40,609	92,292
2005	538	41,119	91,042
2010	530	44,179	95,441
2011	527	43,974	95,941
2012	530	44,210	96,231
2013	528	44,607	96,509
2014	525	44,758	97,186
2015	524	45,223	97,995
2016	525	45,277	97,649
2017	532	45,714	99,508

출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버스통계편람」, 각 연도.

[그림 Ⅷ-5] 자전거도로 노선 수와 연장, 2009-2016



주: 1)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등을 포함함.
출처: 행정자치부, 「자전거도로현황」, 각 연도.

자전거도로도 크게 확충되었다. [그림 Ⅷ-5]에서 알 수 있듯이, 자전거 노선은 2009년 4,647개소에서 2016년 1만 3,356개소로 약 2.9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자전거도로 연장은 1만 1,387㎞에서 2만 1,179㎞로 약 86% 증가하였다.

교통서비스 수준과 만족도

교통시설의 꾸준한 확충에도 불구하고 교통체계의 서비스 수준은 정체 국면이다. 〈표 Ⅷ-9〉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로 파악한 통근시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2015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통근시간은 35.4분으로 2000년의 32.1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전 국민의 약 50%가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의 평균 통근시간은 2015년 기준 43.4분으로 전국 평균 통근시간 35.4분에 비해 22.6%가량 높고, 특히 서울 시민의 평균 통근시간은 45.9분에 달한다.

〈표 Ⅷ-9〉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분)

연도	전국	수도권	서울
2000	32.1	35.1	36.6
2005	31.1	34.0	35.6
2010	33.7	36.4	37.9
2015	35.4	43.4	45.9

주: 1) 평균 통근시간은 원자료에서 통근시간 변수가 일정 시간간격으로 구성된 범주형 변수로 제공됨에 따라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여기서 마지막 범주인 '120분 이상'의 경우 120분과 150분의 중간값인 135분으로 가정하였음.
2) 2010년까지는 10% 표본 자료이고,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각 연도.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도 큰 변화가 없다. 〈표 Ⅷ-10〉은 대중교통의 접근성, 환승,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자의 종합만족도(7점 만점) 추이를 보여준다. 대중교통 만족도는 2012년 4.76점에서 2016년 4.84점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다. 지역별 대중교통 만족도도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서울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Ⅷ-10〉 대중교통 만족도, 2012-2016

(점)

연도	전국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2012	4.76	5.04	4.80	4.65	4.75	4.84	4.75	4.66
2013	4.78	5.07	4.83	4.76	4.76	4.88	4.75	4.75
2014	4.84	5.05	4.80	4.76	4.79	4.79	4.71	4.60
2015	4.78	4.93	4.81	4.64	4.77	4.81	4.76	4.56
2016	4.84	5.00	4.83	4.82	4.72	4.79	4.86	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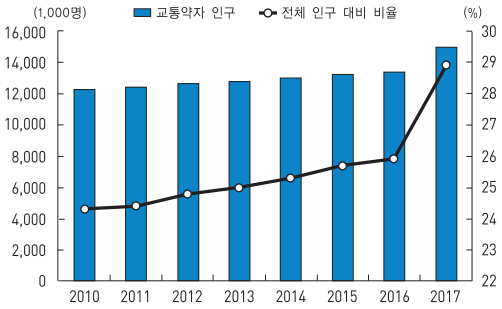
주: 1) 대중교통 만족도는 대중교통의 접근성, 환승, 서비스 등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평균 점수로서 7점 척도(최저 1점에서 최고 7점)로 측정되었음.
출처: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현황조사, 각 연도.

보편적 이동권과 교통복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인 교통약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Ⅷ-6]과 같이 2010-2017년 사이 전국의 교통약자는 약 1,229만 명에서 1,496만 명으로 267만 명가량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

[그림 Ⅷ-6] 교통약자 인구, 2010-2017



주: 1)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동반자를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각 연도.

대비 교통약자 비율도 높아져서 2017년 현재 28.9%, 즉 4명 중에서 1명 이상이 교통약자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난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표 Ⅷ-11〉과 같이, 저상버스는 2010-2017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하여 2017년 현재 7,579대가 운행 중이다. 이는 전체 시내버스의 22.4%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도 꾸준히 늘어나 2017년 현재 2,932대가 운행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은 법정 보급대수(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기준 126.0%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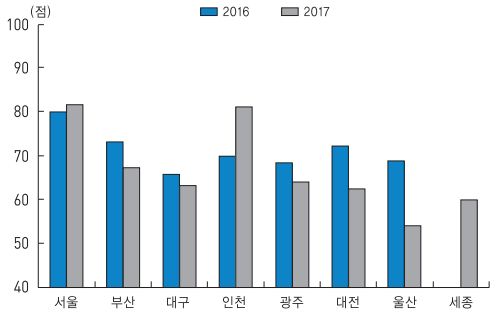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교통약자 관련 사고, 교통복지행정 수준 등 9개 교통복지지표를 토대로 8대 특별·광역시의 교통복지수준을 평가한 결과는 [그림 Ⅷ-7]과 같다. 수도권의 서

〈표 Ⅷ-11〉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0-2017

연도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대)	보급률 (%)	운행대수 (대)	보급률 (%)
2010	3,204	7.3	1,302	23.5
2011	3,899	12.6	1,476	25.5
2012	4,775	14.5	1,597	57.2
2013	5,447	16.4	1,752	63.0
2014	6,076	18.7	2,298	85.4
2015	6,737	19.9	2,601	95.4
2016	6,447	19.0	2,820	103.3
2017	7,579	22.4	2,932	126.0

주: 1) 저상버스 보급률은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운행대수의 비율임.
2)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법정대수(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대비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의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Ⅷ-7] 교통복지수준 종합 평가 점수, 2016-2017



주: 1) 교통복지수준 종합 평가 점수는 8개 항목(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안전도, 저상버스보급률, 특별교통수단보급률, 특별교통수단이용률,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 교통복지행정)의 점수를 합한 값으로 최저 40점, 최고 100점임.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2016, 2017.

울특별시, 인천광역시만 전년 대비 교통복지수준이 개선되었고, 그 밖의 지자체에서는 교통복지수준이 낮아졌다. 2017년 기준 8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교통약자의 이동이 가장 편리한 곳은 서울특별시이고, 가장 불편한 곳은 울산광역시로 조사되었다.

청년의 주거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김준형 (명지대학교)

- 부모세대의 자산이전 감소, 비정규직 증가 등에 따른 소득의 불안,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결혼 및 출산의 지연, 자산으로 주거비용을 부담하는 국내 주택임차시장의 특징 등으로 인해 국내 청년가구의 주거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가구는 약 69만 가구로 추정되며, 이 중 주거비 부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가구가 주택의 품질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가구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가구는 수도권에 약 56%가 집중되어 있으며, 20대 초반, 1인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1인가구 중에서도 남성 가구의 비중이 높으며, 부부가구의 비중은 낮다. 상대적으로 저소득, 저자산의 특징을 갖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능력을 제고하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청년 문제의 심각성 및 그 해결을 위한 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면서, 동시에 청년의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서울)'이나 '따복하우스(경기)' 등의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의 주거문제가 왜 심각한지, 그리고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가구는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청년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청년 대상의 주거정책이 설정한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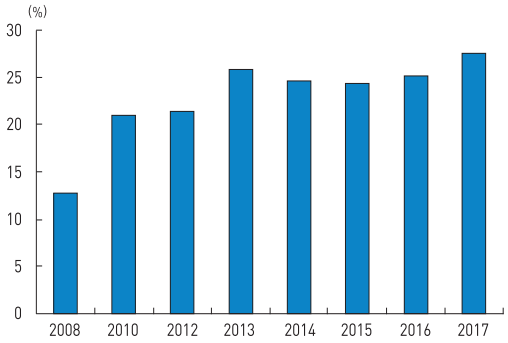
청년의 주거, 왜 문제인가?

청년의 주거문제를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오늘날 청년 주거문제가 왜 문제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뿐 아니라 과거에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청년 집단은 '저소득, 저자산'이 주요한 경제적 특성이며, 이들에게 주택은 상대적으로 고가인 재화로 접근하는데 늘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반면 청년기가 지나면 점차 소득이 늘어나고 자산이 축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왔다. 이에 굳이 오늘날 국내 청년가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구분해 지원해야 하는지 충분히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오늘날 청년 주거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부모세대의 주거지원이 예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부모세대의 입장에서 볼 때 기대수명의 증가, 은퇴 후 삶에 대한 다양한 욕구 등으로 인해 은퇴 이후 필요자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예전에 비해 자녀세대와 부모

세대가 동거를 통해 부양서비스를 주고받는 선택을 할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 결과, 부모세대는 상당 규모의 자산을 계속 보유, 자녀세대에 대한 주택자산 지원의 규모를 크게 축소하였다. [그림 Ⅷ-8]에 따르면 고령가구 중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으려는 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 기준 27.5%에 이른다. 부동산을 보유한 서울의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별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주택자산을 이전하지 않았거나 이전할 계획이 없는 가구의 비율은 42.4%로 나타난다(고진수 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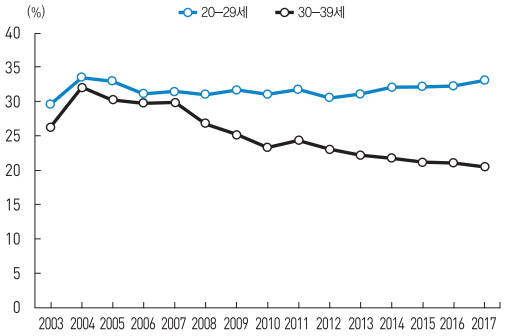
[그림 Ⅷ-8] 보유주택 비상속의향 가구의 비중, 2008-2017



주: 1) 만 60세 이상 84세 이하 일반노년가구 중에서 보유주택을 상속하지 않으려는 가구의 비중.
출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2017년도 주택연금 수요 실태조사", 「주택금융월보」, 2017. 11.

과거에 비해 '평생직장'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증가, 소득이 불안정해진 것도 오늘날 청년의 주거문제가 심각해진 원인 중 하나이다. [그림 Ⅷ-9]에 따르면 30대의 비정규직 비중은 최근 감소 추세에 있지만, 2017년 기준 20-30대

[그림 Ⅷ-9] 비정규직의 비중, 2003-2017



주: 1)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비정규직 근로자 수÷전체 임금근로자 수) ×100.
2)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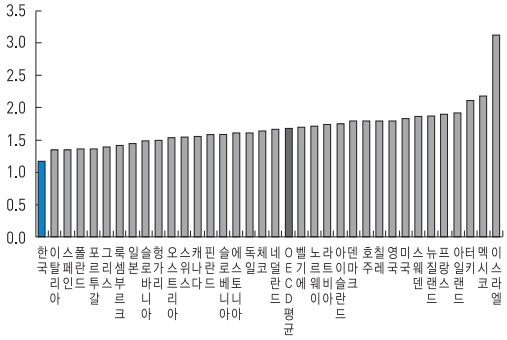
임금근로자의 25.9%가 비정규직이다.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은 곧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용 가능한 장기의 주택담보대출상품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움을 뜻한다. 평생직장 시대에 존재하였던 기업 내부의 사택 및 주택금융 지원프로그램도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이처럼 가정과 직장을 통해 제공되어온 비정부적(non-governmental)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사라지고 있는 반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위기의식 역시 청년 주거지원의 필요성으로 많이 언급된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OECD 국가들 내에서도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다(그림 Ⅷ-10).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혼외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그림 Ⅷ-11),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결혼을 적극적으로 장

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높은 주거비용은 결혼과 출산에 분명한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개인의 결혼 확률, 자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임보영 외, 2018), 또한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이 남성과 여성의 결혼연령을 모두 높일 뿐만 아니라, 임차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 시점을 지연시키거나 출산 확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도난영·최막중,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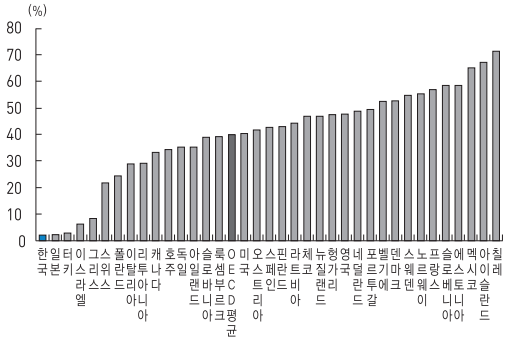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의 청년가구들이 갖는 특수한 상황 역시 청년 주거문제의 심각성으로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경력이 쌓일수록 청년의 소득도 높아진다. 주거비용을 매달 임대료로 지불하는 다른 나라 청년의 경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할 때에도 전세금, 보증금 등의 목돈이 필요하다. [그림 Ⅷ-12]와 같이 전체 임차가구 중에서 전세금, 보증금 등의 목돈을 지불하지 않는 임차가구의 비율은 2017년 기준 8.8%에 불과하다. 이처럼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확보해야 하는 국내의 상황에서, 청년가구는 주거비 부담의 이중고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Ⅷ-10]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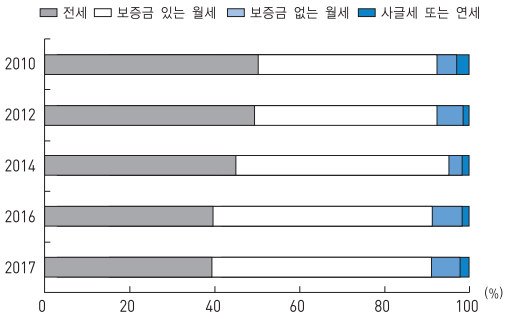
주: 1) 칠레는 2015년 자료임.
2)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임.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그림 Ⅷ-11] OECD 국가들의 혼외출산율, 2014



주: 1) 호주, 벨기에, 캐나다, 에스토니아,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등은 2012년 자료, 칠레, 노르웨이는 2013년 자료, 그 외 국가는 2014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그림 Ⅷ-12] 임차가구의 점유형태 분포, 2010-2017



주: 1) 자가 및 무상을 제외한 임차가구를 100%로 설정해 세부 점유형태별 비율을 산정한 것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청년 주거문제, 누가 경험하는가?

그렇다면 청년 중 과연 누가 주거문제를 경험하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주거문제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주거문제를 크게 주택의 품질 문제와 주거비 부담 문제로 정의한다. 품질 문제는 주택의 유형, 지하 및 옥탑방 여부, 그리고 최저주거기준의 면적 및 시설 기준 미달 여부 등으로 판별할 수 있다. 주택 유형의 경우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분류되는 유형이 아니라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품질이 열악한 것으로 구분한다. 주택 이외의 거처 중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품질이 양호하므로 주택에 포함한다. 흔히 '지옥고'로 표현되는 '지하' 및 '옥탑방'에 거주할 때에도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논의되므로 현재 건물 내 거주 위치가 지하, 반지하, 옥탑인 가구도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주택 품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 기준인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 2011)은 면적기준과 시설기준 등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가구원수별 최소면적을 적용하여 면적기준 미달가구를 구분할 수 있다. 시설기준은 구체적으로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함"을 뜻한다(제3조). 이에 상수도나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식부엌을 단독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단독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모두 시설기준 미달가구로 구분해서 분류할 수 있다.

품질이 양호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호한 주택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이는 곧 양호한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높은 주거비용의 문제, 즉 주거비 부담의 문제를 겪을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주택문제는 품질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주거비 부담 문제는 대부분 임차가구에게서 발생하며, 이를 평가하는 지표로 흔히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이 빈번히 사용된다. 그러나 RIR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RIR은 가구의 경제력을 소득만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주거비용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가구의 자산으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의 자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RIR에서 주거비용은 현재 가구의 임대료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는 적정 주택에 대한 임대료가 아닐 수 있다. 즉 적정 수준보다 주택에 적게 소비하면 주거비 부담이 없는 가구로 판정될 수 있으며, 적정 수준보다 주택에 많이 소비하면 주거비 부담이 있는 가구로 판정될 수 있다. 이에 개별 가구의 임대료 대신 각 시점별 지역 내 임차가구의 중위(median) 임대료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부담능력을 가구의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을

반영하여 주거비 부담 여부를 판별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중위 임대료를 해당 지역의 전월세 전환율로 전환한 중위 전세가격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거비 부담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만약 중위 전세가격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중위 임대료가 소득의 30% 미만이라면 역시 주거비 부담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결국 주거비 부담이 존재하는 가구는 중위 전세가에 해당하는 순자산이 없으면서 동시에 소득의 30%로 중위 임대료도 부담할 수 없는 가구를 뜻한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문제를 경험하는 가구는 약 69만 명으로 전체 청년가구의 15.2%를 차지한다. 이 중 주거비 부담 문제를 경험하는 청년가구는 약 54만 가구로 품질 문제를 경험하는 청년가구(약 31만 가구)에 비해 훨씬 많다(표 Ⅷ-12).

〈표 Ⅷ-12〉 주거문제 청년가구의 규모, 2017

	가구수 (1,000가구)	비율 (%)
전체	690.3	15.2
품질 문제만 경험하는 가구	153.2	3.4
주거비 부담 문제만 경험하는 가구	377.4	8.3
두 문제 모두 경험하는 가구	159.6	3.5

주: 1) 비율은 전체 청년가구 중 해당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가구의 비율임. 전체 청년가구의 규모는 454만 2,068가구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7.

주거문제를 경험하는 청년가구는 서울 38.2%, 경기 13.8% 등 수도권에 약 56%가 집중해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청년가구 내에서 주거문제를 경험하는 청년가구의 비중이 약 25.2%로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다. 전북(20.1%), 강원(18.4%), 세종(17.1%) 등도 주거문제를 경험하는 청년가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표 Ⅷ-13).

〈표 Ⅷ-13〉 주거문제 청년가구의 지역 분포, 2017

	가구수 (1,000가구)	구성비 (%)	지역 청년가구 대비 비율(%)
서울	264.0	38.2	25.2
부산	40.7	5.9	15.2
대구	21.7	3.1	11.2
인천	25.7	3.7	10.3
광주	21.1	3.1	14.5
대전	27.0	3.9	16.7
울산	8.3	1.2	8.2
세종	5.7	0.8	17.1
경기	95.1	13.8	8.7
강원	23.3	3.4	18.4
충북	23.2	3.4	16.5
충남	25.8	3.7	13.5
전북	29.0	4.2	20.1
전남	20.4	3.0	16.6
경북	23.1	3.3	10.8
경남	28.2	4.1	10.7
제주	7.8	1.1	16.1
합계	690.3	100.0	15.2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7.

가구주의 연령이 20대 초반과 후반, 30대 초반과 후반을 구분하고, 가구원수가 1인, 2인, 3인 이상을 구분해 주거문제를 경험하는 청년가구를 살펴보면 〈표 Ⅷ-14〉과 같다. 20대 초반 청년가구와 1인 청년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대 초반 1인 청년가구의 비중은 38.4%에 이른다.

〈표 Ⅷ-14〉 주거문제 청년가구의 연령 및 가구규모 분포, 2017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계
가구 수(1,000가구)					
1인	265.4	202.5	70.0	63.3	601.2
2인	23.9	12.6	11.3	13.1	60.9
3인 이상	1.4	2.4	8.1	16.2	28.2
합계	290.7	217.5	89.4	92.6	690.3
비율(%)					
1인	38.4	29.3	10.1	9.2	87.1
2인	3.5	1.8	1.6	1.9	8.8
3인 이상	0.2	0.4	1.2	2.4	4.1
합계	42.1	31.5	13.0	13.4	100.0

주: 1) 비율은 전체 주거문제 청년가구 중 해당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7.

〈표 Ⅷ-15〉는 주거문제를 경험하는 청년가구의 가구 구성을 보여준다. 남성 1인 가구가 약 55%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며 다음이 여성 1인 가구(32%)이다. 부부로 구성되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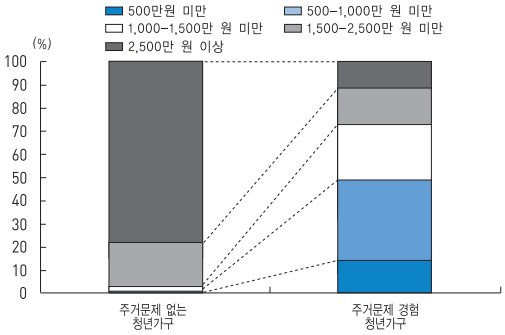
주거문제를 경험하는 청년가구는 그렇지 않은 청년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주거문제를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청년가구 내에서 가구소득이 연 2,500만 원을 넘는 가구의 비중은 약 78%이다. 반면 주거문제를 경험하는 청년가구 내에서는 가구소득이 연 2,5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89%로 나타난다. 이들의 가구소득 평균은 1,318만 원, 그리고 중위값은 1,080만 원으로 산정된다.

〈표 Ⅷ-15〉 주거문제 청년가구의 가구구성, 2017

	가구수(1,000가구)	비율(%)
1인가구(남성)	379.2	54.9
1인가구(여성)	222.0	32.2
부부가구(무자녀)	14.7	2.1
부부가구(유자녀)	19.5	2.8
기타 가구	54.9	8.0
합계	690.0	100.0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7.

[그림 Ⅷ-13] 주거문제 청년가구의 소득 분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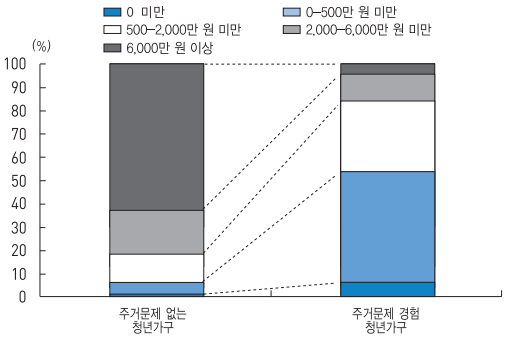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7.

순자산, 즉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값의 분포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주거문제를 경험하지 않고 있는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으며, 반면 주거문제를 경험하는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다. 예를 들어 순자산이 6,0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주거문제를 겪고 있지 않은 청년가구 내에서 63%이지만,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가구 내에서는 4%에 불과하다. 반대로 순자산이 500만 원 미만이거나 음의 순자산을 갖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주거문제를 겪고 있지 않은 가구 내에서는 6%에 불과하지만,

주거문제를 경험하는 가구 내에서는 54%에 달한다. 주거문제를 겪는 가구의 순자산은 평균이 968만 원, 중위값은 300만 원으로 산정된다.

[그림 Ⅷ-14] 주거문제 청년가구의 순자산 분포, 2017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7.

맺음말

지금까지 오늘날 국내 청년의 주거문제는 왜 특별히 주목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가구는 누구인지 살펴보았다. 부모세대로부터 자녀세대로의 주택자산의 이전이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예전보다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높은 주택 가격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확인하였으며, 소득이 아니라 자산으로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국내 임차가구만의 특별한 상황 역시 청년가구의 주거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가구는 약 69만 가구로 전체 청년가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중 주거비 부담을 경험하는 가구는 54만 가구로 주택의 품질 문제를 경험하는 가구(31만 가구)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문제를 경험하는 청년가구의 약 56%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청년가구 중 주거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 내에서도 20대 초반 및 1인 가구가 가장 주거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중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비중이 훨씬 높으며, 부부 및 유자녀 가구의 비중은 낮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자산이 크게 낮은 이들의 특성을 반영, 주거비 부담능력을 확보해주는 형태로 청년 주거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고진수·김준형·강민규. 2015. “서울 중고령가구의 주택자산 이전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6(1): 41–55.
국토해양부. 2011.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011–490호.
도난영·최막중. 2018.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 및 첫째,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26(2): 163–189.
임보영·강정구·마강래. 2018. “지역의 주택가격이 결혼과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53(1): 137–151.

수도권 지역 통근통행의 광역화와 사회 계층별 통근시간의 변화

정동재 (서울대학교)
장수은 (서울대학교)

- 인천과 경기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인구가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로 통근하는 인구의 2배를 넘는 등 통근의 광역화가 심화되었다.
- 수도권 지역의 평균 통근시간은 2000년 35.1분에서 2015년 43.4분으로 약 24% 증가하였다. 특히 서울의 평균 통근시간은 2015년 기준 45.9분으로 수도권과 전국의 평균 통근시간에 비해 각각 5.8%, 29.7%가량 높다.
- 남녀 통근자 모두 평균 통근시간이 증가하였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근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만, 그 차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 2000-2015년 사이 모든 연령대의 평균 통근시간이 증가하였다. 특히 70대 이상의 통근시간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 20분 내외 거리에서는 도보, 30분 내외 거리에서는 자전거, 40분 내외 거리에서는 택시 및 승용차, 50분 내외 거리에서는 통근· 시내버스 등, 60분 내외 거리에서는 지하철, 100분 내외 거리에서는 고속·시외버스와 기차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통근시간은 1인 가구에 비해 길다. 수도권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1인 가구의 평균 통근시간도 2인 이상 가구 수준으로 늘어났다.
- 주택유형별로 볼 때 아파트 거주자의 통근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점유형태별로 볼 때 자가와 전세 거주자가 통근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집에서 직장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통근시간은 경제활동의 생산성과 국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통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일상적인 통행활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근시간은 거주지에서 직장까지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통근지역의 교통서비스 수준, 토지이용과 지가 변화 등을 직·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통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가구 및 주거 특성에 따른 통근시간의 차이를 통해 교통 형평성의 단면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통근시간은 교통, 주거, 경제, 복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지표이다.

이 글에서는 국민의 약 50%(2018년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가 거주하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와 주택가격 변화를 정리하고 이에 따른 통근통행의 광역화 현황을 살펴 본다. 이어서 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통근시간을 분석한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주택가격의 상승

수도권의 인구와 인구밀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Ⅷ-16〉은 2000-2015년 사이 수도권의 인구와 인구밀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수도권의 인구는 2000년 약 2,135만 명에서 2015년

2,527만 명으로 18%가량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인구밀도는 약 1,824명/㎢에서 약 2,137명/㎢으로 17%가량 높아졌다. 특히 2010–2015년 사이에 가장 많은 144만 명이 증가하였다.

〈표 Ⅷ–16〉 수도권의 인구 및 인구밀도, 2000–2015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인구(만 명)				
2000	2,135	990	248	898
2005	2,277	982	253	1,042
2010	2,384	979	266	1,138
2015	2,527	990	289	1,248
인구밀도(명/㎢)				
2000	1,824	16,342	2,566	886
2005	1,941	16,221	2,546	1,028
2010	2,020	16,182	2,586	1,119
2015	2,137	16,364	2,755	1,226

주: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국토교통부, 「지적통계」, 각 연도.

인구 증가 경향은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2000–2015년 사이 인천과 경기 지역의 인구는 각각 17%와 39%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서울은 인구밀도가 2015년 기준 1만 6,364명/㎢으로 인천, 경기에 비해 높으나 2000년 이후 인구 증감이 거의 없다. 서울의 인구가 포화상태에 근접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수도권의 인구 증가는 수도권 지역 주택의 매매 및 전세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다. 〈표 Ⅷ–17〉에 정리한 바와 같이 2000–2015년 사이 수도권의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은 2배가량 상승하였다. 또한 서울과 경기의 주택가격 수준은 2015년 매매가격 기준으로 5대 광역시에 비해 각각 2.2배와 1.3배가량 높게 나타난다. 인천 지역의 주택가격은 5대 광역시 주택가격의 약 93% 수준이지만 계속 높아지고 있다.

〈표 Ⅷ–17〉 수도권의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2000–2015

	5대광역시		서울		인천		경기	
	매매	전세	매매	전세	매매	전세	매매	전세
가격(100만 원)								
2000	-	-	223	138	102	67	-	-
2005	141	90	346	165	143	81	201	105
2010	156	106	462	215	198	105	261	134
2015	209	142	468	292	195	132	269	186
지수(2015=100)								
2000	-	-	48	47	52	51	-	-
2005	67	63	74	57	73	62	75	56
2010	75	74	99	74	102	80	97	72
20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매년 12월의 종합 주택유형을 기준으로 함.
2) 주택가격 종합지수는 2015년을 100으로 함.
3) 2000–2010년의 매매 및 전세 가격은 주택가격 종합지수와 2015년의 매매 및 전세가격을 이용하여 환산한 값임.
4) 5대광역시는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를 포함함.
출처: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연도.
KB국민은행, 「KB주택가격동향」, 각 연도.

수도권의 인구 이동과 통근의 광역화

서울의 인구밀도가 포화 수준에 이르고 주택가격의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의 인구가 인천, 경기 지역으로 순이동하였다. 이는 5년 전 거주지

〈표 Ⅷ-18〉 수도권 내 거주지 이동 인구, 2000-2015

	2000	2005	2010	2015
거주지 이동 인구(1,000명)				
서울 → 인천	125	93	98	104
인천 → 서울	64	66	59	46
서울 → 경기	1,088	1,045	895	797
경기 → 서울	429	456	456	373
서울 유입 대비 유출 인구(배)				
서울-인천	2.0	1.4	1.7	2.3
서울-경기	2.5	2.3	2.0	2.1

주: 1) 거주지 이동 인구는 일반가구의 5세 이상 인구 및 5년 전 거주지 기준임.
2) 2010년까지는 10% 표본 자료이고,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표 Ⅷ-19〉 수도권 내 거주지-통근지별 통근자 수,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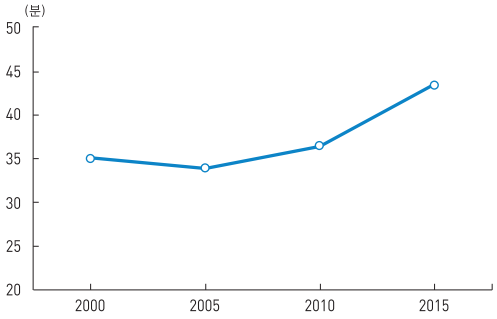
거주지-통근지	2000	2005	2010	2015
통근자 수(1,000명)				
서울-인천	42	54	65	65
인천-서울	115	112	139	167
서울-경기	349	387	413	524
경기-서울	799	881	1,054	1,144
통근자 비율(%)				
서울-인천	1.1	1.4	1.5	1.4
인천-서울	12.6	11.8	11.8	12.2
서울-경기	9.3	10.2	9.3	11.0
경기-서울	23.6	22.1	21.0	19.2

주: 1) 통근자 비율은 거주지 기준 전체 통근자 수 대비 해당 통근지역으로 통근하는 통근자수임.
2) 2010년까지는 10% 표본 자료이고,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각 연도.

와 현재 거주지를 비교한 〈표 Ⅷ-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표에서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로 유출되는 인구는 인천과 경기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2000부터 2015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인구의 인천과 경기로의 순이동은 통근통행의 광역화를 야기하였다. 〈표 Ⅷ-19〉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간 통근인구와 거주지 기준 전체 통근자수 대비 이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2015년 기준 인천과 경기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인구는 각각 해당 지역 전체 통근자 수의 12.2%와 19.2%에 달한다. 반면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로 통근하는 인구는 각각 해당 지역 전체 통근자 수의 1.4%와 11.0%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 방향별로는 인천, 경기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인구가 서울에서 인천, 경기로 통근하는 인구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지만, 직장은 여전히 서울에 있어서 〈표 Ⅷ-19〉와 같이 통근통행의 광역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000-2015년 사이 큰 변화가 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Ⅷ-15] 수도권 통근자의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주: 1) 평균 통근시간은 원자료에서 통근시간 변수가 일정 시간간격으로 구성된 범주형 변수로 제공됨에 따라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여기서 마지막 범주인 '120분 이상'의 경우 120분과 150분의 중간값인 135분으로 가정하였음.
2) 2010년까지는 10% 표본 자료이고,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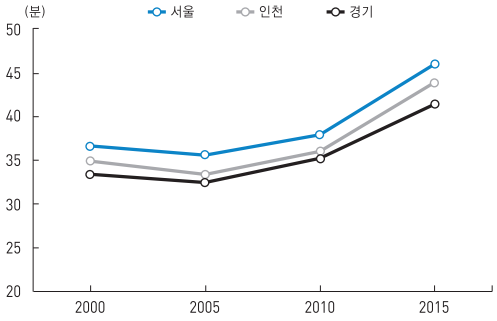
수도권의 인구 증가와 통근의 광역화로 인하여 도로가 혼잡해지고 통근거리가 늘어났으며, 결과적으로 통근자의 평균 통근시간도 증가하였다. 수도권 전체 통근자의 평균 통근시간은 [그림 Ⅷ-15]와 같이 2000-2015년 사이 35.1분에서 43.4분으로 약 24% 증가하였다.

사회 계층별 통근시간의 변화

이 절에서는 수도권 통근 통행자를 거주 지역과 사회적 특성별로 구분하여 통근시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배우자 유무(사별, 미혼, 이혼), 주택 거주기간 등에 따른 통근시간의 변화도 살펴보았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제외하였다.

먼저 [그림 Ⅷ-16]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통근자의 평균 통근시간을 집계한 것이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통근자의 평균 통근시간은 2000-2015년 사이 24% 이상(각각 약 25.3%, 25.4%, 24.0%) 증가하였다. 서울의 평균 통근시간은 2015년 기준 45.9분으로 수도권 지역의 평균 통근시간인 43.4분, 전국의 평균 통근시간인 35.4분에 비해 각각 5.8%와 29.7%가량 높게 나타난다. 인천과 경기지역의 평균 통근시간은 각각 43.9분과 41.4분이다. 서울, 인천, 경기 순으로 평균 통근시간이 높은 것은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와 관련돼 보인다. 일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교통 혼잡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광역 통근인구도 서울의 교통 혼잡을 가중하여 서울의 평균 통근시간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Ⅷ-16] 수도권 통근자의 거주지역별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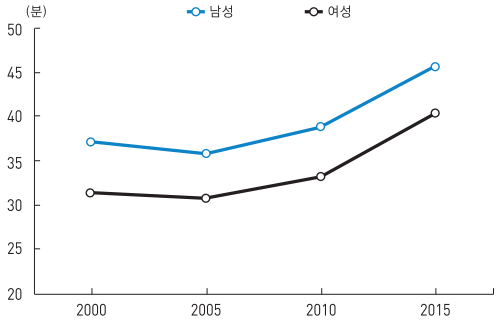


주: 1) 평균 통근시간은 원자료에서 통근시간 변수가 일정 시간간격으로 구성된 범주형 변수로 제공됨에 따라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여기서 마지막 범주인 '120분 이상'의 경우 120분과 150분의 중간값인 135분으로 가정하였음.
2) 2010년까지는 10% 표본 자료이고,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Ⅷ-17]은 전체 통근자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평균 통근시간을 집계한 것이다. 2000-2015년 사이 남성 통근자의 평균 통근시간은 37.1분에서 45.6분으로 약 23%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여성 통근자의 평균 통근시간은 31.4분에서 40.4분으로 약 29% 증가하였다. 이처럼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근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만, 그 차이는 2000년 약 18%에서 2015년 약 13% 수준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와 유관해 보인다.

연령별 평균 통근시간의 변화는 〈표 Ⅷ-20〉과 같다. 2015년 기준 20대의 평균 통근시간이 46.7

[그림 Ⅷ-17] 수도권 통근자의 성별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주: 1) 평균 통근시간은 원자료에서 통근시간 변수가 일정 시간간격으로 구성된 범주형 변수로 제공됨에 따라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여기서 마지막 범주인 '120분 이상'의 경우 120분과 150분의 중간값인 135분으로 가정하였음.
2) 2010년까지는 10% 표본 자료이고,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Ⅷ-20〉 수도권 통근자의 연령집단별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분)

	2000	2005	2010	2015
10대 이하	30.9	25.8	30.5	40.9
20대	39.1	37.4	39.7	46.7
30대	34.7	35.4	39.0	46.2
40대	33.8	32.0	35.1	43.3
50대	34.0	32.2	34.1	40.9
60대	30.1	29.5	32.3	39.2
70대 이상	21.8	22.2	27.2	33.2

주: 1) 평균 통근시간은 원자료에서 통근시간 변수가 일정 시간간격으로 구성된 범주형 변수로 제공됨에 따라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여기서 마지막 범주인 '120분 이상'의 경우 120분과 150분의 중간값인 135분으로 가정하였음.
2) 2010년까지는 10% 표본 자료이고,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분으로 가장 길고, 그 뒤를 이어 30대가 46.2분, 40대가 43.3분, 10대와 50대가 40.9분, 60대가 39.2분, 70대 이상이 33.2분으로 나타난다. 2000-2015년 사이 모든 연령대의 평균 통근시간은 증가하였다. 특히 60대와 70대 이상 연령대의 통근시간은 약 30%와 52%가 증가하였는데, 50대의 통근시간 증가율인 약 20%와 비교하여 10-32%p 높다. 이러한 경향은 60-70대 고령자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과거보다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Ⅷ-21〉은 통근자의 교육수준별로 평균 통근시간을 집계한 것이다. 이 표에서 통근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 통근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기준 미취학 통근자의 평균 통근시간은 28.5분인 반면 석·박사 과정 입학 이상 통근자의 평균 통근시간은 50.3분으로 1.8배가량 차이가 난다.

〈표 Ⅷ-21〉 수도권 통근자의 교육수준별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분)

	2000	2005	2010	2015
미취학	22.7	21.4	25.3	28.5
초등학교	27.2	25.0	28.1	34.1
중학교	29.2	27.0	29.8	35.0
고등학교	33.1	30.7	32.6	38.6
대학(4년제미만)	39.3	37.1	39.1	45.4
대학(4년제이상)	40.9	39.4	41.3	48.7
석사과정	41.7	40.0	41.8	50.3
박사과정	45.8	44.4	45.0	

주: 1) 교육수준은 입학을 기준으로 함.
2) 평균 통근시간은 원자료에서 통근시간 변수가 일정 시간간격으로 구성된 범주형 변수로 제공됨에 따라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여기서 마지막 범주인 '120분 이상'의 경우 120분과 150분의 중간값인 135분으로 가정하였음.
3) 2015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석사이상으로 집계함.
4) 2010년까지는 10% 표본 자료이고,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각 연도.

통근에 이용되는 주요 교통수단별로 평균 통근시간을 집계하면 〈표 Ⅷ-22〉와 같다. 2015년

〈표 Ⅷ-22〉 수도권 통근자의 교통수단별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분)

	2000	2005	2010	2015
도보	11.9	12.3	14.6	18.3
자전거	17.0	18.8	23.1	29.2
택시	20.0	17.2	28.3	36.9
승용차	35.0	34.7	35.6	42.0
기타 통근버스	39.4	39.4	42.5	52.3
시내 · 좌석 · 마을버스	41.7	41.3	43.0	52.8
지하철	52.7	51.7	58.1	64.7
고속 · 시외버스	82.2	79.0	81.9	94.4
기차	86.1	88.6	94.0	1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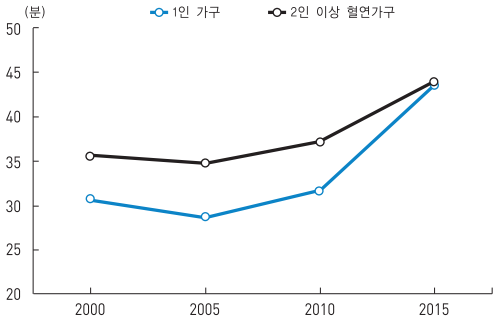
주: 1) 평균 통근시간은 원자료에서 통근시간 변수가 일정 시간간격으로 구성된 범주형 변수로 제공됨에 따라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여기서 마지막 범주인 '120분 이상'의 경우 120분과 150분의 중간값인 135분으로 가정하였음.
2) 2010년까지는 10% 표본 자료이고,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각 연도.

기준 도보가 18.3분으로 가장 짧고, 그 뒤를 이어 자전거 29.2분, 택시 36.9분, 승용차 42.0분, 기타통근버스 52.3분, 시내·좌석·마을버스 52.8분, 지하철 64.7분, 고속·시외버스 94.4분, 기차 107.0분의 순서로 나타난다. 2000-2015년 사이 각 교통수단 이용자의 평균 통근시간은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은 고속·시외버스가 약 15%로 가장 낮고, 그 뒤를 이어 승용차 20%, 지하철 23%, 기차 24%, 시내·좌석·마을버스 27%, 기타 통근버스 33%, 도보 53%, 자전거 72%, 택시 84%가량으로 나타난다.

〈표 Ⅷ-22〉를 통해 교통수단별로 주수송 통행시간(거리)대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0분 내외 거리에서는 도보, 30분 내외 거리에서는 자전거, 40분 내외 거리에서는 택시 및 승용차, 50분 내외 거리에서는 통근버스 및 시내버스 등, 60분 내외 거리에서는 지하철, 100분 내외 거리에서는 고속·시외버스와 기차의 역할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Ⅷ-18]은 일반가구를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여 평균 통근시간을 집계한 것이다. 2000-2015년에 2인 이상 혈연가구의 평균 통근시간은 1인 가구의 평균 통근시간에 비해 길다. 이는 거주지를 선정할 때 1인 가구는 2인 이상 혈연가구보다 주거환경 등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직장과의 접근성을 더 고려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0년에는 1인 가구와 2인 이상 혈연가구의 평균 통근시간이 각각 30.7분, 35.6분으로 16%가량 차이가 났으나, 2015년에는 각각 43.6분과 44.0분으로 그 차이가 많이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

[그림 Ⅷ-18] 수도권 통근자의 가구규모별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주: 1) 평균 통근시간은 원자료에서 통근시간 변수가 일정 시간간격으로 구성된 범주형 변수로 제공됨에 따라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여기서 마지막 범주인 '120분 이상'의 경우 120분과 150분의 중간값인 135분으로 가정하였음.
2) 2010년까지는 10% 표본 자료이고,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4%에서 약 26%로 12%p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통근자가 거주하는 주택유형별로 평균 통근시간을 집계하면 〈표 Ⅷ-23〉과 같다. 2000-2015년 사이 각 주택유형별 평균 통근시간은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아파트에 거주하는 통근자의 평균 통근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통근자의 평균 통근시간은 2015년 기준 46.4분이고, 그 뒤를 이어 다세대주택이 44.1분, 연립주택이 43.7분, 오피스텔이 39.4분, 단독주택이 38.7분,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이 22.8분이다.

마지막으로 〈표 Ⅷ-24〉는 통근자의 주택점유형태별로 평균 통근시간을 정리한 것이다. 2000-2015년 기간에 자가 또는 전세로 주택을 점유한 통근자의 평균 통근시간은 월세 또는 사글세 형태로 주택을 점유한 통근자의 평균 통근시간보다 길다. 2015년 기준 자가와 전세 통근자의 평균 통근시간은 각각 45.0분과 44.8분이고, 월세와 사글세를 내는 통근자의 평균 통근시간은 38-41분가량으로 두 집단 간 약 10-17% 차이가 난다.

〈표 Ⅷ-23〉과 〈표 Ⅷ-24〉로부터 아파트에서 자가와 전세로 거주하는 통행자들의 통근시간이 다른 통행자들의 통근시간에 비해 길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비 부담과 안정적 주거(자가와 전세)를 위해 서울 인구가 인천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로 이동한 경향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표 Ⅷ-23〉 수도권 통근자의 주택유형별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분)

	2000	2005	2010	2015
단독주택	32.5	30.6	32.6	38.7
다세대주택	36.9	35.0	37.4	44.1
연립주택	35.8	32.3	36.2	43.7
아파트	38.4	36.9	39.0	46.4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16.9	15.7	20.4	22.8
오피스텔	34.1	30.6	32.7	39.4

주: 1) 평균 통근시간은 원자료에서 통근시간 변수가 일정 시간간격으로 구성된 범주형 변수로 제공됨에 따라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여기서 마지막 범주인 '120분 이상'의 경우 120분과 150분의 중간값인 135분으로 가정하였음.
2) 2010년까지는 10% 표본 자료이고,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Ⅷ-24〉 수도권 통근자의 주택점유형태별 평균 통근시간, 2005-2015

(분)

	2000	2005	2010	2015
자가	36.3	35.4	37.7	45.0
전세	34.9	34.0	37.0	44.8
보증금 있는 월세	33.0	31.2	33.6	40.6
보증금 없는 월세	30.8	27.7	32.1	38.4
사글세	29.4	27.0	32.8	40.0
무상	27.3	26.7	30.9	34.6

주: 1) 평균 통근시간은 원자료에서 통근시간 변수가 일정 시간간격으로 구성된 범주형 변수로 제공됨에 따라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여기서 마지막 범주인 '120분 이상'의 경우 120분과 150분의 중간값인 135분으로 가정하였음.
2) 2010년까지는 10% 표본 자료이고,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각 연도.

맺음말

이 글에서는 거주지, 연령 등 단일특성(변수)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그 집단들 사이의 평균

통근시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분석을 통해 집단 간 통근시간의 차이를 확인했지만, 이러한 차이를 야기하는 원인이 과연 그 특성 때문만 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남성과 여성의 통근시간 차이는 오직 성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연령, 주요 교통수단, 교육수준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어느 성별 또는 연령대가 특정 교통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평균 통근시간이 길게 나타날 수도 있다. 어느 지역, 어느 주택유형의 평균 통근시간은 해당 지역, 해당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비율이 변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즉, 통근시간에 대한 다변량 심층 분석을 통해 통근지역의 교통서비스 수준, 토지이용, 교통 형평성 등에 관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다변량 분석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2018 Environment

Korean Social Trends 2018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X 환 경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254

폐플라스틱의 발생과 재활용 현황 이희선 |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263

해양환경의 특성과 현황

김성길 | 해양환경공단, 박준건 | 해양환경공단, 박미옥 | 해양환경공단 270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세먼지(PM_{10})의 경우 연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2007년 24.4%에서 2016년 71.6%로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일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10%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 우리나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기온상승에 따른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호우 일수도 늘어나고 있다.
-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하천과 호소(댐 등)의 수질이 확연히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생활폐기물은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일정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사업장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을 포함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특별 관리가 필요한 방사성폐기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2020년대부터 포화상태의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소음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환경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 주요 도시들 중 상당수가 소음환경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밤 시간대에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의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환경과 인간사회의 상호 작용은 자원채취, 오염물질 배출, 자연재해 등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삶의 질 관점에서 볼 때 환경문제가 갖는 의미도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대기, 물환경, 폐기물 등 전통적 환경이슈에 관한 통계를 이용해서 국내 환경문제의 변화 양상과 최근 현황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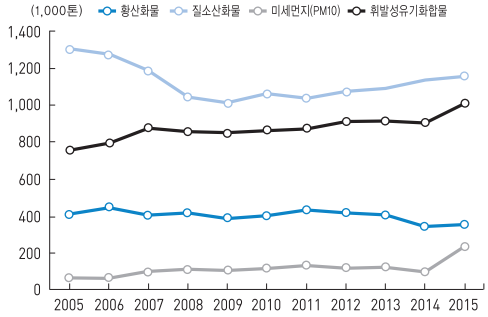
대기환경

대기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데,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오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있다.

산성비를 야기하는 황산화물은 정부의 저황유 정책에 힘입어 1990년대에 비해 배출량이 대폭 감소했다. 산성화 물질이면서 오존을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은 2000년대 후반까지 배출량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했다.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대표적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PM_{10})의 배출량은 조금씩 증가하다가 특히 2015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오존을 발생시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도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Ⅸ-1).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인 아황산가스는 저황유 공급 및 청정연료 사용

[그림 Ⅸ-1]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05–2015



주: 1)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생물성연소로 인한 배출량을 제외하였음.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각 연도.

〈표 Ⅸ-1〉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PM_{10}) 환경기준 달성률, 2007–2016

(%)

연도	이산화질소(NO_2)		미세먼지(PM_{10})	
	연평균	일평균	연평균	일평균
2007	69.0	64.6	24.4	3.1
2008	63.5	63.9	28.7	1.3
2009	70.9	63.5	40.2	2.6
2010	71.5	62.6	48.1	3.4
2011	72.8	68.2	55.6	1.7
2012	78.9	72.9	76.8	38.6
2013	73.9	66.0	62.5	7.9
2014	71.9	65.6	61.2	8.2
2015	76.9	71.8	65.6	10.7
2016	82.3	82.7	71.6	10.3

주: 1) 환경기준 달성률은 전국 유효측정소 중 환경기준을 100% 달성한 측정소의 비율임.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의무화 정책 등을 통해 이미 2000년 이후부터 전국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대기환경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반면,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PM_{10})는 아직도 대기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환경기준이 강화된 2007년의 이산화질소 연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69.0% 수준이었는데, 2016년에는 처음으로 80%대를 넘어섰다. 미세먼지(PM_{10})의 경우 연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이 2007년 24.4%에서 2016년 71.6%로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일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여전히 10% 수준에 불과하다(표 Ⅸ-1). 2015년에 전국 단위의 공식적 측정을 시작한 초미세먼지($PM_{2.5}$)의 경우 2016년 일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10.9%로 미세먼지(PM_{10})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46.7%로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권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경보제가 도입하기 시작했다.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계속 확대되고 초미세먼지($PM_{2.5}$)의 건강 피해가 부각되면서, 2015년부터는 기존의 미세먼지(PM_{10}) 외에 초미세먼지($PM_{2.5}$)를 포함해서 전국 단위의 통일된 경보기준이 마련되었다. 2016년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PM_{10}) 주의보와 경보가 각각 186회와 23회가 발령되었는데, 주의보는 경북, 강원, 경기에서, 경보는 경북, 강원, 인천에서 많이 발령되었다. 초미세먼지($PM_{2.5}$)의 경우 경보는 발령된 사례가 없으며, 주의보는 경북, 충북, 부산, 강원 등에서 많이 발령되었다(표 Ⅸ-2).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한 대표적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평균 농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는 기상여건에 따라 많이 좌우되

〈표 Ⅸ-2〉 지역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일수 및 횟수, 2016

지역	미세먼지(PM_{10})				초미세먼지($PM_{2.5}$)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일수 (일)	횟수 (회)	일수 (일)	횟수 (회)	일수 (일)	횟수 (회)	일수 (일)	횟수 (회)
전체	29	188	4	23	40	90	-	-
서울	7	6	-	-	-	-	-	-
부산	11	17	-	-	10	14	-	-
대구	4	4	1	1	-	-	-	-
인천	5	16	4	5	3	4	-	-
광주	7	5	1	1	2	2	-	-
대전	9	7	-	-	1	1	-	-
울산	6	3	-	-	-	-	-	-
경기	11	25	2	2	10	10	-	-
강원	13	26	2	5	14	13	-	-
충북	11	13	1	1	13	15	-	-
충남	6	4	1	1	6	6	-	-
전북	10	6	-	-	3	3	-	-
전남	7	8	1	1	1	2	-	-
경북	10	38	3	6	22	15	-	-
경남	4	2	-	-	-	-	-	-
제주	6	5	-	-	7	5	-	-
세종	1	1	-	-	-	-	-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6」, 2017.

〈표 Ⅸ-3〉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와 횟수, 2005-2016

연도	시행지역 (곳)	발령일수 (일)	발령횟수 (회)	시간최고농도 (ppm)
2005	57	19	84	0.199
2006	58	22	52	0.192
2007	62	30	82	0.217
2008	63	32	101	0.203
2009	64	20	60	0.169
2010	62	25	83	0.181
2011	63	19	55	0.174
2012	68	29	66	0.163
2013	69	39	160	0.179
2014	69	29	129	0.188
2015	72	33	133	0.177
2016	78	55	241	0.183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6」, 2017.

어 해마다 변동 폭이 큰데, 2016년에는 평년 대비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및 횟수가 급격히 증가했다(표 Ⅸ-3). 오존주의보 발령횟수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석유화학산업단지가 밀집한 광양만 지역(여수, 순천, 광양) 역시 오존주의보 발령이 잦은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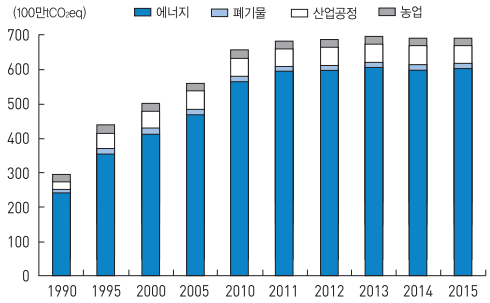
기후변화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크고 보편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환경문제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온실가스라고 하며, 그 중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효과의 80% 이상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14년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0.15%만 증가하였다. 1990년 약 3억 톤(이산화탄소 환산 기준)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약 6억 9,020만 톤으로 135.6% 증가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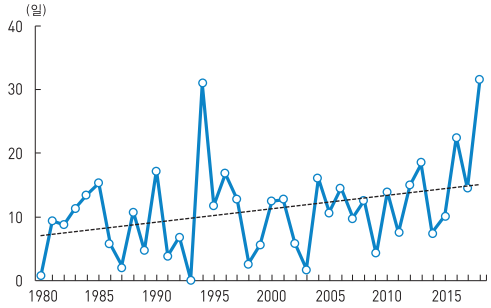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된다. 1990-2015년 동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주도한 것 역시 에너지 부문이며, 동 기간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49.0% 증가하였다(그림 Ⅸ-2).

[그림 Ⅸ-2]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15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7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7.

[그림 Ⅸ-3] 폭염 일수, 198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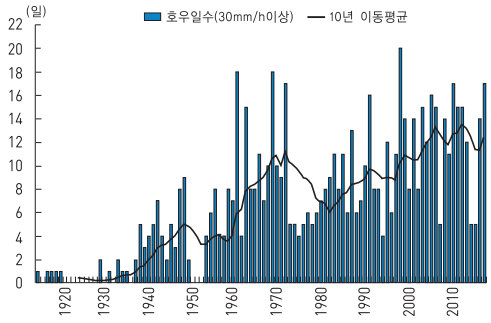
출처: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기후변화의 구체적 양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한반도에서는 폭염, 홍수, 가뭄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해수면도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생산량 감소 외에도 온열질환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건강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이상기후 현상의 예가 기온상승과 관련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연평균기온은 1℃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평균기온의 상승은 폭염(일최고기온이 33℃ 이상) 및 열대야(야간 최저기온이 25℃ 이상)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폭염 일수는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Ⅸ-3). 열대야 일수도 1981–1985년 평균 8.3일에서 2012–2016년에는 평균 16.6일로 크게 증가하였다(서울, 인천, 강릉, 대구, 부산, 목포 6개 지점 평균).

한편 근대적 기상관측을 시작한 1910년대부터 지금까지 호우(30㎜/h 이상) 일수도 해마다 변동이 크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우 일수의 경우 1960년대에 연간 7일 내외 수준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12일 수준으로 늘어났다(그림 Ⅸ-4).

[그림 Ⅸ-4] 호우 일수, 1914–2017



주: 1) 6개 지점(서울, 인천, 강릉, 대구, 부산, 목포)에 대해 강우강도가 시간당 30mm 이상인 호우일수.
2) 1922년은 일부 자료 누락, 1950~1953년은 전쟁 기간으로 자료가 누락되어 있음.

출처: 기상청 기후정보포털(http://www.climate.go.kr).

물환경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요인은 통상 생활하수, 분뇨, 산업폐수 및 축산분뇨로 분류된다. 생활하수와 분뇨 발생량은 2000년대 말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폐수의 경우 통계가 안정화되는 2007년부터는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일일 500만m³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2년에 급증한 후 일일 17만m³ 대에 머물러 있다(표 Ⅸ-4).

〈표 Ⅸ-4〉 하수, 분뇨, 폐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 2007–2015

(1,000m³/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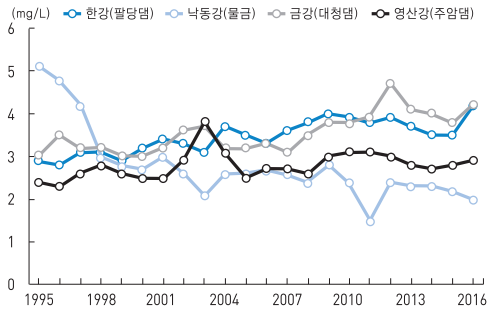
연도	하수	분뇨	산업폐수	가축분뇨
2007	16,745	45	5,352	154
2008	17,113	46	4,557	128
2009	16,681	49	4,622	136
2010	16,111	46	5,229	136
2011	18,661	42	5,269	129
2012	15,722	42	5,662	177
2013	15,148	38	5,115	173
2014	14,401	36	4,966	176
2015	14,975	38	4,951	173

출처: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2017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2017.

지난 1991년과 1994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와 유기용제 유출사고 발생으로 기존의 오염물질 사후처리 위주의 물관리 정책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유역단위 차원의 사전예방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6년에 범정부 차원의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이를 뒷받침할 '4대강 수계법'도 마련했다. 2006년에 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 하천의 85% 이상을 '좋은 물'(BOD 3mg/L 이하)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4대강 수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낙동강(물금)의 BOD는 1995년 5.1mg/L에서 2016년 2.0mg/L로 대폭 낮아졌지만, 한강(팔당댐)이나 금강(대청댐)의 COD는 1990년대 후반 3.0mg/L 내외 수준에서 2016년에는 4.2mg/L로 오히려 악화되었다(그림 Ⅸ-5). 총인 농도의 경우에는 가장 오염도가 심한 낙동강(물금)이 2010년부터 뚜렷하게 개선되어 2016년에는 0.04mg/L로 좋음 수준에 달했다.

[그림 Ⅸ-5]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오염도, 1995–2016



주: 1) 수질오염도는 호소(팔당댐, 대청댐, 주암댐)의 경우 통상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대표 지표이고, 하천(낙동강 물금)의 경우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대표 지표임.
2) '좋은 물' 기준은 하천의 경우 BOD 농도 3mg/L 이하, 호소의 경우는 COD 농도 4mg/L 이하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폐기물

폐기물은 크게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되며, 일반폐기물은 다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발생량이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생활폐기물의 변화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대 들어 1kg 내외 수준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2014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종의 유해폐기물인 지정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Ⅸ-5).

〈표 Ⅸ-5〉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200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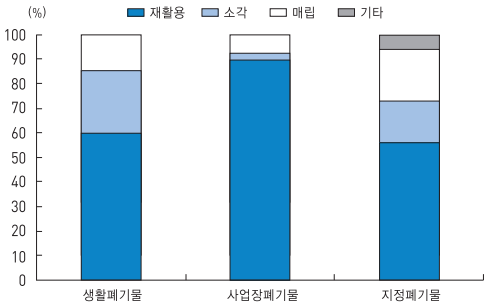
(톤/일)

연도	일반폐기물			지정 폐기물
	생활	사업장 배출시설계	건설	
2000	46,438	101,453	78,777	7,615
2005	48,398	112,419	134,906	8,634
2006	48,844	101,099	168,985	10,026
2007	50,346	114,807	172,005	9,511
2008	52,072	130,777	176,447	9,594
2009	50,906	123,604	183,351	9,060
2010	49,159	137,875	178,120	9,488
2011	48,934	137,961	186,417	10,021
2012	48,990	146,390	186,629	12,501
2013	48,728	148,443	183,538	12,417
2014	49,915	153,189	185,382	13,177
2015	51,247	155,305	198,260	13,410
2016	53,772	162,129	199,444	13,794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16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60.0%가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25.3%)되거나 매립(14.7%)되었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재활용(89.6%)되며 소각(2.9%) 또는 매립(7.5%)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지정폐기물도 재활용(55.9%) 비중이 가장 높지만 사업장폐기물에 비하면 소각(16.9%) 또는 매립(21.1%)되는 비중도 높은 편이다(그림 Ⅸ-6).

[그림 Ⅸ-6]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구성비율, 2016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6년도)」, 2017;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6년도)」, 2017.

한편 인간이 만들어내는 폐기물 중에 다른 종류의 유해폐기물과 구분해서 특별한 관리를 해야만 하는 것이 방사성폐기물이다. 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구분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2015년에 운영을 시작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처분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약 44만 다발(누적)이다(표 Ⅸ-6). 사용후핵연료

〈표 Ⅸ-6〉 사용후핵연료 저장량 및 포화도, 2011–2016

	고리	한빛	한울	월성	합계
저장 누적량(다발)					
2011	4,699	4,671	3,906	344,456	357,732
2012	4,909	4,942	4,109	363,900	377,860
2013	5,154	5,141	4,385	378,104	392,784
2014	5,322	5,413	4,652	391,936	407,323
2015	5,612	5,693	4,855	408,926	425,086
2016	5,834	5,965	5,123	423,161	440,083
저장용량(다발)	7,994	9,017	7,066	500,678	524,755
포화도(%)	73.0	66.2	72.5	84.5	8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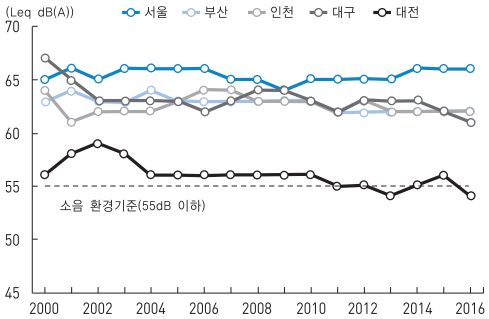
주: 1) 포화도는 2016년 연말 기준임.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16년 원자력안전연감」, 2017.

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중수로(월성)의 경우 2019년에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머지 경수로의 경우에도 2020년대 중반부터는 고리 원자로와 한빛 원자로를 시작으로 포화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소음

대기오염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대표적인 환경문제 중의 하나가 소음이다. 정부는 지역특성(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시간대(낮, 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환경기준을 설정해 놓았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 주요 도시들 중 상당수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수준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현상은 밤 시간대에 더욱 심하며,

[그림 Ⅸ-7] 주요 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밤 소음도, 2000–2016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표 Ⅸ-7〉 환경분쟁 원인별 분쟁조정건수, 1991–2017

(건)

연도	소음 및 진동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일조	기타
1991-2001	366	52	35	0	9
2002	229	26	4	0	4
2003	264	19	8	0	1
2004	206	8	3	5	1
2005	151	11	5	6	1
2006	150	8	3	1	3
2007	142	7	3	15	5
2008	173	8	3	22	3
2009	241	13	2	21	6
2010	150	3	6	12	5
2011	163	7	3	6	5
2012	214	14	6	17	4
2013	154	12	3	19	3
2014	203	5	4	18	7
2015	177	10	2	13	9
2016	122	10	2	25	3
2017	136	3	1	18	2

주: 1) 기타에는 토양오염, 추락위험, 기름유출, 생태계, 해양오염, 입지선정, 통풍방해·조망 등이 포함됨.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사건 통계자료」, 2018.

2000년대 이후 주요 광역시 대부분에서 소음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음도가 크게 개선되지도 않고 있다(그림 Ⅸ-7).

일상생활에서 소음문제가 갖는 심각성은 환경분쟁조정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된 환경분쟁사건 중 85%가 소음·진동과 관련된 것이며, 층간소음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를 기준으로 하면 소음·진동 관련 분쟁사건의 비율은 85.7%에 이른다(표 Ⅸ-7). 그리고 소음·진동 분쟁의 주된 원인은 층간소음이 아니라 공사장 소음·진동이다(전체 소음·진동 분쟁의 70~80%를 차지).

환경관리

정부 정책에서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가 환경분야 예산의 규모와 비율이다.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1995년에 환경부 예산은 6,729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9%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을 합한 환경분야 예산은 1조 7,801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2.39%를 차지했다.

정부 전체 예산 대비 환경분야 예산의 비율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2.82%까지 올라갔다가, 그 후로는 하락추세로 전환하여 2007년에는 1.86%까지 떨어졌다. 2010년에 2%대로 다시 상승한 후에는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Ⅸ-8).

〈표 Ⅸ-8〉 환경분야 예산, 1995-2016

연도	예산액(1억 원)	정부예산 대비 비율(%)
1995	17,801	2.39
1997	27,747	2.82
2000	30,581	2.44
2005	35,578	2.12
2006	33,978	1.94
2007	32,837	1.86
2008	36,568	1.87
2009	42,101	1.94
2010	46,740	2.07
2011	49,741	2.11
2012	51,496	2.07
2013	54,458	2.07
2014	56,119	2.04
2015	59,389	2.07
2016	59,695	2.02

주: 1) 환경분야 예산에는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을 환경보호지출이라고 한다. 환경보호지출은 국제표준에 따라 9개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폐수, 폐기물, 대기 영역이며 이 세 영역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한다(표 Ⅸ-9). 하수관거 설치,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이 포함된 폐수 영역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폐기물 수집과 운반 등이 포함된 폐기물 영역의 지출은 주로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포함된 대기 영역

의 지출은 기업부문이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

환경보호지출의 절대 규모는 계속 증가해왔지만,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상승하다가 2009년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표 Ⅸ-9).

환경분야 예산이나 환경보호지출은 해당 국가의 자연환경이나 산업구조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직접 비교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기대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분야 예산 비중이 정체상태에 있는 것이나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Ⅸ-9〉 환경보호지출, 2004-2015

연도	환경보호 지출액 (10억 원)	GDP 대비 비율 (%)	영역별 구성비율(%)			
			대기	폐수	폐기물	기타
2004	22,372	2.55	15.5	38.6	26.4	19.5
2005	24,017	2.61	16.1	38.5	25.2	20.2
2006	26,463	2.74	17.4	38.4	24.7	19.6
2007	28,675	2.75	18.9	37.7	23.9	19.5
2008	30,188	2.73	19.0	37.4	24.3	19.3
2009	32,629	2.83	17.2	37.9	24.6	20.3
2010	32,880	2.60	17.4	36.8	25.8	20.0
2011	33,784	2.54	17.3	36.5	26.4	19.8
2012	34,547	2.51	18.0	38.8	23.0	20.2
2013	35,246	2.47	16.6	39.2	23.3	20.8
2014	35,586	2.39	17.2	39.9	22.6	20.3
2015	37,025	2.37	17.3	40.8	22.4	19.5

주: 1) 기타에는 토양·수질, 소음·진동, 생태계·종다양성,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등 6개 영역이 포함됨.
2) 환경보호지출계정의 환경보호 국민지출(A표) 금액임.
출처: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결과보고서」,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폐플라스틱의 발생과 재활용 현황

이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폐플라스틱의 처리 방법은 재활용(물질재활용과 에너지재활용)이 증가하고 소각 및 매립은 감소할 것이다.
-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이후 수출량은 감소하고 수입량은 증가하였다.
- 폐플라스틱은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재활용이 병행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은 물질재활용이 에너지재활용에 우선하며, R&D 투자도 이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 고령인구 및 1인가구의 증가로 분리배출이 어려워져 혼합배출이 증가하면, 물질재활용이 어려워지고 에너지재활용이 증가한다.
- 에너지재활용(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의 사용 증가는 미세먼지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플라스틱은 내구성, 가벼움, 부식방지 등의 장점과 가격이 저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플라스틱류의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 해 동안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은 약 63억 톤(2015년 기준)이다. 이 중 9%만이 재활용되고 12%가 소각 처리되며, 79%는 그대로 버려진다고 롤런드 기어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 교수팀이 2017년 7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발표하였다(Roland Geyer. et al., 2017). 폐플라스틱의 매립은 장시간 분해되지 않으므로 좁은 국토를 이용할 수 없으며, 소각은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을 발생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은 약 2,200만 톤 정도이며, 이 중 폐플라스틱류는 약 690만 톤 정도가 발생하며, 2015년 기준 폐플라스틱류를 포함한 가연성 폐기물은 연간 약 821만 톤 정도가 소각되고 있어 국내 소각시설의 규모인 연간 약 830만 톤과 비슷하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주로 중국 등에 수출하였다. 그러나 중국으로의 수출은 어려워졌으며, 미세먼지 등의 문제로 고형연료(SRF)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폐플라스틱류의 수거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폐플라스틱류는 중국이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국가였으나 중국 정부는 2017년 말 폐플라스틱류를 포함한 24종의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중국의 폐플라스틱류 수입 금지 이후 국내의 폐플라스틱류는 수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 등의 주변국가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폐플라스틱류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일본, 일부 EU 국가에서는 주로 중국으로 폐플라스틱류를 수출하고 있었으나, 중국의 수입 금지조치에 따라 각 국가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 국가에서는 폐플라스틱류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다른 동남아 지역으로의 분산 수출도 진행하고 있고, EU의 경우 폐자원에 대한 순환경제를 위하여 플라스틱을 위험요인으로 판단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EU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을 채택하였다.

폐플라스틱은 일부가 강이나 배수구 등을 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3,500만 톤에 이른다. 폐플라스틱은 거친 해류와 태양 자외선(UV)에 의해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개지면서 유해 물질을 내놓는데, 대부분은 5㎜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이 된다. 우리가 먹는 천연소금과 생선, 새우, 굴 등에서도 다량의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되고 있어,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다시 식탁 위로 올라오는 형국이다(Germanov, Elitza S. et al., 2018).

폐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이나 소각처리가 되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매립이 되어 분해가 되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걸리며, 소각 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재활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재활용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의 발생 및 처리 현황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가연성 폐기물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기물은 폐플라스틱이다. 폐플라스틱은 2011년 약 506만 톤에서 2015년 약 691만 톤이 발생되었다. 폐플라스틱은 다른 가연성 폐기물에 비해 발생량 증가가 가파르다. 이는 〈표 Ⅸ-10〉에 잘 나타나 있다.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이 2011년과 비교해 2015년에 약 19% 증가한 것에 비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동일 기간 약 36% 증가하였다.

〈표 Ⅸ-10〉 가연성 폐기물 및 폐플라스틱 연간 발생량, 201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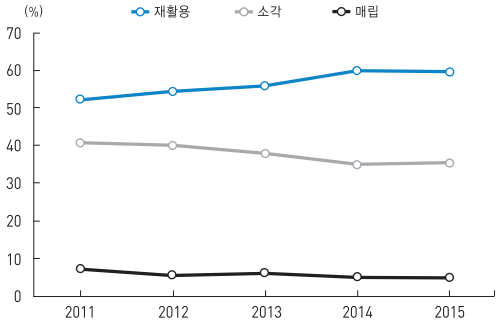
(톤/년)

연도	가연성 폐기물	폐플라스틱
2011	18,512,070	5,063,755
2012	19,090,778	6,008,630
2013	20,715,210	6,042,466
2014	20,408,975	6,395,165
2015	22,113,854	6,908,392

출처: Yong Choi, Hyeong-Jin Choi & Seung-Whee Rhee, 2018.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재활용, 소각, 매립이며 재활용 〉 소각 〉 매립 순으로 처리되고 있다. 재활용은 2011년 52%에서 2015년 60%로 증가한 반면, 소각은 2011년 41%에서 2015년 35%로 감소하였다(그림 Ⅸ-8). 이는 가연성 폐기물 소각 처리를 감소시키고 재활용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잘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Ⅸ-8] 폐플라스틱의 처리방법별 구성비율, 201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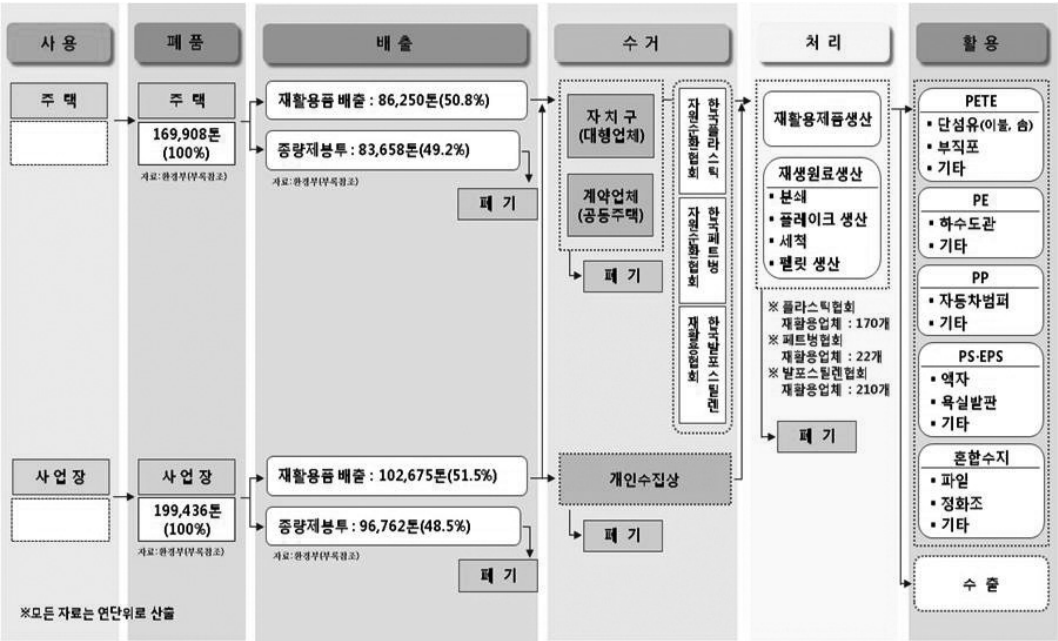


출처: Yong Choi, Hyeong–Jin Choi & Seung–Whee Rhee, 2018.

소각은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태우는 것으로, 최근에는 오염물질 배출의 방지를 위해 저감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고,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재활용 중 에너지 재활용의 한 방법인 고형연료(SRF: Solid Recovered Fuel)는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가연성 폐기물을 전처리 과정을 거쳐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일정한 열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산업체 등에서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림 Ⅸ–9]는 서울시에서의 폐플라스틱의 배출, 수거 및 처리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폐플라스틱은 재활용품으로 배출되거나 종량제봉투로 배출되고 있다.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것은 주로 매립이나 소각 처리되며, 재활용품으로 배출되는 것은 지자체나 사업자에 의해 수거된 후 여러 재활용을 거쳐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다.

[그림 Ⅸ-9] 서울시의 폐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 물질 흐름도



출처: 유기영, 2012.

폐플라스틱의 물질 흐름도를 살펴보면, 각 단계별로 감량 및 재활용 증가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소비단계에서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억제하며, 일반 소비자까지도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출단계에서는 소비자에 의한 분리배출 강화, 고품질의 분리수거를 위한 지침서 작성 및 홍보, 폐기물의 회수 및 선별효율 증진을 위한 지침서 개발 등이 요구된다. 처리단계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에서 재활용 물질과 잔재물(2차 폐기물)의 관리, 재활용 플라스틱의 품질 향상을 통한 시장 확보, 지속적인 재활용 기술의 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 저급 품질의 폐플라스틱류는 고형연료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미세먼지 등 고형연료시설 등의 오염배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물론 그림에서 나타나지 않은 사용 및 배출 전 단계인 생산단계에서도 제품의 포장에서 과대포장 규제,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이 쉬운 설계 (재질 및 형태의 개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대상 플라스틱 제품의 확대가 필요하다.

각국의 폐플라스틱 수출입 현황

전 세계에 쓰레기 대란을 야기한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영향으로 인해, 2018년 4월 각 국가에서 수입한 고체폐기물(폐플라스틱, 폐지, 폐금속)의 양은 163만 7,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6% 감소했다. 지난해 8.5% 감소에 그쳤던 고체폐기물 수입량은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50% 이상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중국이 수입하는 폐플라스틱의 4분의 1이 유럽에서 온다. 영국은 매년 폐플라스틱의 25% 이상인 약 50만 톤을 중국에 수출해 오고 있다. 미국의 재활용이 가능한 고체폐기물의 3분의 1은 중국을 향한다. 미국 폐기물회수협회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은 56억 달러어치의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중국에 수출했다.

한국은 〈표 Ⅸ-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폐플라스틱류 수입 금지 이후, 2018년 1-2월 폐플라스틱류의 수입량은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약 3배 증가한 반면, 폐플라스틱류의 수출량은 전년 동일 기간과 비교해 3분의 1로 급감하였다. 2017년 상반기 기준 중국 수출국 중 우리나라는 폐지 22위, 폐플라스틱 15위, 폐금속 17위 등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7. 7.28.).

〈표 Ⅸ-11〉 국내의 폐플라스틱 수출입, 2011-2018. 2.

(톤)

연도	수입	수출
2011	62,888	162,600
2012	87,522	232,185
2013	113,454	217,914
2014	79,547	211,574
2015	80,884	234,326
2016	66,083	231,155
2017. 1-2.	3,814	30,542
2018. 1-2.	11,930	10,625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폐플라스틱류 수입·수출 현황」, 2018. 4. 3.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환경보호부는 예고한 대로 2017년 말부터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생활 폐플라스틱, 바나듐(vanadium) 찌꺼기, 미분류 폐지, 폐방직 원료의 고체 폐기물 등 24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였다. 그간 고체 폐기물이 중국의 자원 부족을 해소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야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고 있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현황

폐플라스틱은 가연성 폐기물이므로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재활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 물질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세척, 분쇄의 과정을 거쳐 다시 플라스틱으로 재생해서 다른 제품을 만드는 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에너지재활용은 고형연료(SRF: Solid Recovered Fuel)를 만들어 연료로 사용하여 열을 회수하거나 이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물질재활용을 우선하고 에너지재활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즉 감량, 재이용, 물질재활용, 에너지재활용, 안전처분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물질재활용을 위해서는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여야 하는 데 이에 드는 비용이 재활용품으로 판매돼서 얻는 수익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표 Ⅸ-12). 재활용품 판매수입보다 재활용품 수집선별 비용이 2015년 기준 약 4배 이상 많다. 게다가 재활용품 선별 비용의 증가율이 재활용품 판매 수입 증가율보다 크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 차이는 커져서 물질재활용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표 Ⅸ-12〉 전국 재활용품 판매수입 및 선별비용, 2010-2015

(100만 원)

연도	재활용품판매 수입	재활용품 수집선별 비용
2010	41,118	194,485
2011	41,552	182,877
2012	44,190	202,334
2013	44,725	197,686
2014	50,453	196,103
2015	52,102	213,341

출처: 이희선, 『전국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균등화를 위한 연구』, 2018.

〈표 Ⅸ-13〉은 한국의 폐플라스틱 종류별 발생 및 재활용 현황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에 의해 발생되는 폐플라스틱의 종류별 발생량은 PET, EPS 및 다른 폐플라스틱(기타)으로 구분된다. PET의 출고량은 2011년 19만 5,000톤에서 2015년 24만 9,000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재활용률은 2011년 82.6%에서 2015년 78.3%로 감소하였다. EPS 출고량은 2011년 2만 7,000톤에서 2015년 3만 1,000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재활용률도 74.1%에서 80.6%로 증가하였다. 기타는 PE, PP, PS 등을 포함하는데, 출고량은 2011년 38만 8,000톤에서 2015년 55만 9,000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재활용률

은 2011년 82.0%에서 2015년 100.2%로 크게 증가하였다. 재활용률의 상승은 재활용 기술의 개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Ⅸ-13〉 EPR제도에 의한 폐플라스틱의 종류별 발생 및 재활용, 2011-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PET					
출고량(1,000톤)	195	199	208	225	249
재활용량(1,000톤)	161	168	175	186	195
재활용률(%)	82.6	84.4	84.1	82.7	78.3
EPS					
출고량(1,000톤)	27	26	26	31	31
재활용량(1,000톤)	20	19	21	23	25
재활용률(%)	74.1	73.1	80.8	74.2	80.6
기타					
출고량(1,000톤)	388	392	405	527	559
재활용량(1,000톤)	318	325	311	453	560
재활용률(%)	82.0	82.9	76.8	86.0	100.2
계					
출고량(1,000톤)	610	617	639	783	839
재활용량(1,000톤)	499	512	507	662	780
재활용률(%)	81.8	83.0	79.3	84.5	93.0

출처: 최용·최형진·이승희, 2018.

〈표 Ⅸ-14〉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위해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R&D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물질재활용이 에너지재활용보다 많은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재활용은 시설비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 연구 건당 연구비 규모가 크다.

〈표 Ⅸ-15〉는 선진국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재활용을 병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일본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유효이용률이 77%에 달할 정도로 높으며, 물질회수 비율도 23%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미국의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수거 재활용 비율은 8.2%에 머물러 있다.

〈표 Ⅸ-14〉 국내 폐플라스틱 기술개발 연구 건수 및 연구비, 2001-2018. 2.

구분	연구 수		연구비		연구 건당 연구비 (100만원/건)
	건수	구성비 (%)	금액 (100만원)	구성비 (%)	
물질재활용	80	60.6	19,310	47.3	241
폐기물에너지	35	26.5	14,271	35.0	408
기타	17	12.9	7,218	17.7	425
계	132	100.0	40,799	100.0	309

출처: Yong Choi, Hyeong-Jin Choi & Seung-Whee Rhee, 2018.

〈표 Ⅸ-15〉 선진국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안

	내용
미국	·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의 8.2% 수거 재활용 (2010년)
유럽연합	· 포장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24% 수거 물질회수 (2006-2010년) · 포장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42% 수거 에너지 회수 (2006-2010년)
일본	· 플라스틱폐기물 유효이용률 77%: 물질 회수 23%, 화학적회수 4%, 에너지 회수 50%(2010년)

출처: 유기영, 2012.

맺음말

최근에 선진국은 포장용기(폐플라스틱 포함)의 재질개선 등으로 재생품의 품질이 향상되어 재활용 원료로서 선호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은 여러 이물질과 재질이 다른 물질

이 포함되어 선별공정에 비용이 추가로 요구되므로 수입국에서 외면하고 있다. 또한 폐플라스틱의 품질에 상관없이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서 물질재활용하고자 함으로써 재활용 비용이 상승하고 좋은 품질의 재활용 원료를 생산하기 어려우므로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재활용품 분리선별은 수거, 분리 및 선별 비용이 재활용품 판매 수익에 비해 매우 큼에 따라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물질재활용 비용을 상승시키고, 폐기물의 처리 흐름상에 매립 제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물질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에너지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고형연료의 사용 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 초래 및 규제 강화로 공급 대비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고형연료의 대부분이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시멘트시설 등의 처분시설에서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1인 가구 및 노령인구의 증가와 쓰레기 분리배출의 피로감으로 인해 양질의 재활용품을 얻기 위한 분리배출의 어려움은 증가할 것이므로, 이를 인식하여 폐플라스틱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플라스틱의 물질 흐름도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감량 및 재활용 증가를 위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7. 7. 28. “中 올 연말부터 24가지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KOTRA 홈페이지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0098).

유기영. 2012. “국내외 재활용 및 재활용률 관련 현황.” 국립환경과학원 세미나 자료집: 실질 재활용률 산정기법 및 활용방안에 관한 세미나. 2012. 9. 4.

최용 · 최형진 · 이승희. 2018. “국내 폐플라스틱의 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 「자원리싸이클링」, 27(4): 3–15.“[데이터로 읽는 중국] 4월 통계에 비친 미중 무역마찰과 친환경 쇼크.” 조선일보. 2018. 5. 9. 보도(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9/2018050901069.html).

Germanov, Elitza S., Andrea D. Marshall, Lars Bejder, Maria Cristina Fossi, and Neil R. Loneragan. 2018. “Microplastics: No Small Problem for Filter–Feeding Megafauna.” *Trends in Ecology & Evolution* 33 (4):227–232. doi: 10.1016/j.tree.2018.01.005.

Roland Geyer, Jenna R. Jambeck & Kara Lavender Law. 2017. “Production, use, and fate of all plastics ever made.” *Science Advances, Vol. 3, no. 7.*

Yong Choi, Hyeong–Jin Choi & Seung–Whee Rhee, 2018. 3. “Perspective on Recycling of Plastic Waste in Korea(Republic of).”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ste Management and Technology, Beijing: Tsinghua University.

해양환경의 특성과 현황

김성길 (해양환경공단)
박준건 (해양환경공단)
박미옥 (해양환경공단)

- 우리나라는 동해에 비해 서해 및 남해의 경우 육상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 유기물 오염을 대표하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농도는 서해에서 가장 높았고 남해와 동해가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 15년간 총질소(TN)와 총인(TP)의 농도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 한편 서남해 일부 폐쇄된 만에서는 용존산소가 3mg/L 이하인 빈산소 상태가 여름철 발생하고 있어 생태계와 어장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오염이 심했던 마산만에는 2008년 국내 최초로 연안오염총량제도를 도입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관리하여 수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환경과 해양오염

해양환경이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가 넓게 펼쳐진 해변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해양환경의 법률적 정의는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 해양지(海洋地), 해양대기(海洋大氣)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로서 상당히 광범위 하다. 이러한 바다는 지구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표면에 존재하는 물의 약 97%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바다는 지구의 물순환과 기후를 조절하여 생물의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모든 물질의 최종 종착역이자 온갖 찌꺼기를 처리하여 지구생태계 내에 다시 순환시키는 재생공장 역할을 한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 바다를 살펴보면 드넓은 대양은 비교적 깨끗한 상태로 있다. 그러나 육지와 인접한 연안해역은 인간의 영향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다가 육지와 접한 연안환경은 지구상에서 생물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이면서 인간이 가장 밀집하여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인구 2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3분의 2가 연안에 집중되어 있다. 인구 증가와 도시집중, 산업화 등은 연안개발을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 결과 항만과 임해공단개발, 인공 양식장, 관광시설, 각종 간척사업 등 인간의 개발활동에 의해 연안은 지속적으로 잠식되고 자연 생태계는 파괴되어 가고 있다.

해양오염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유엔의 해양환경보호 과학전문가 자문그룹(GESAMP, The Joint Group of Experts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에서는 "인간 활동에 의해 여러 종류의 물질 혹은

에너지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에 유입되어 해양생물에 해를 끼치고 어업 등 해양활동을 저해하며 해수의 질적 가치 및 쾌적감을 저하시키고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해양오염물질의 3분의 2 이상은 육상 활동에서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GESAMP, 1990).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해양환경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특히 다양한 오염지표(COD, TN, TP, WQI)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해양환경의 변화를 추적해볼 것이다. 이에 덧붙여 1990년대 이후로 한국 연안의 오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산소 수괴'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 현상은 수중 용존산소 농도가 3mg/L 이하로 낮아지는 것인데 인간 활동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수중의 부영양화가 진행되고 여기에 수온과 폐쇄적인 해역 특성이 더해지면서 심각한 해양오염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보전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지 살펴볼 것이다.

해양환경 특성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영해·내수 등의 광활한 관리해역(44만 3,000㎢)과 국토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대륙붕(34만 5,000㎢)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장이 잘 발달되어 있고, 다양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5대 갯벌의 하나가 서해안과 남해안 일원에 총 2,487.2㎢의 면적으로 펼쳐져 있어 어류의 산란장, 서식지 및 생산지, 오염의 정화기능, 홍수·태풍의 조절기능 및 심미적 기능 등을 담당하는 매우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해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동해는 평균 수심이 1,684m로 깊고, 해안선이 단조로워 해류의 흐름이 비교적 원활할 뿐만 아니라 오염에 대한 취약도가 다른 해역에 비해 가장 낮으며 한·난류의 교차로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해역이다.

남해는 평균 수심이 101m이고 서해와 같이 대륙붕이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가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생산성이 높은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반폐쇄성 해역으로 임해산업단지의 조성, 배후도시 발달, 양식어장 밀집 등에 의한 해양오염에 취약하고, 적조발생이나 유류오염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역이다.

서해는 평균 수심이 44m의 얕은 바다로서 대륙붕과 갯벌이 잘 발달되어 생산성이 높은 어장으로 활용되는 반면에 한반도와 중국대륙으로 둘러싸인 반폐쇄성 해역으로 오염부하량 증가에 따라 해양오염에 취약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양환경 변동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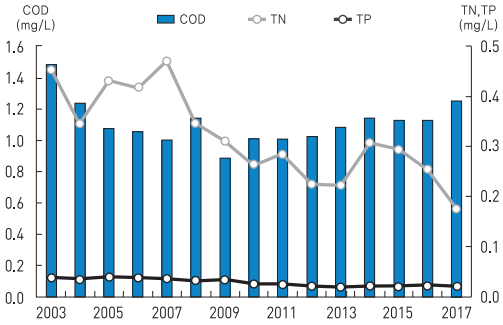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으로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서로 다른 해양환경의 특성을 보인다. 동해안은 북한한류와 대

마난류가 만나는 해역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하며, 남해안은 대마난류의 영향을 받고 있어 연중 수온이 따뜻한 편이며, 많은 섬들이 산재되어 있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만 내측에는 해수 유통이 활발하지 못하다. 서해안은 평균 수심이 낮고, 조석에 의한 조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안은 동, 남, 서해의 해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해양환경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10년간 오염지표로 사용되었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해수 내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양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준다. 2003년부터 2017년 까지 15년간 연평균 농도는 약 1.11mg/L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그림 Ⅸ-10, COD 기준 2등급: 2mg/L 이하). 동, 남, 서해안의 수질상태를 살펴보면, 동해안에서 수질의 상태가 가장 좋았다(COD 기준 1등급: 1mg/L 이하). 이는 동해안의 해류 흐름이 비교적 원활하며, 동해안 주변에 공업단지 및 대도시가 발달하지 않아서 다른 해역에 비해 육상으로부터 해양으로 유기물질 유입이 적기 때문이다. 남해안은 2010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 이후로 연평균 농도가 약간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서해안은 한국 연안의 전체 평균 화학적 산소요구량 농도보다 높았는데, 이 해역은 탁도와 조차가 커서 해류가 위아래로 혼합되면서 바닥에 있던 유기물질들이 해수 표면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해양환경의 부영양화에 영향을 미치는 총질소

[그림 Ⅸ-10] 한국 연안의 연평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및 총인(TP) 농도, 2003–2017



출처: 해양수산부, 「해수수질실태보고」, 각 연도.

(TN)와 총인(TP)의 농도 변화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질소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현재는 수질 Ⅰ등급(0.3 mg/L 이하)이고, 총인 농도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현재는 수질 Ⅰ등급(0.03 mg/L 이하)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Ⅸ-10).

2011년 정부는 단순한 오염지표로(COD, TN, TP) 해양환경 상태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해양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한 생태계 기반의 새로운 지표 및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부영양화 원인물질(표층 용존무기질소 농도, 표층 용존무기인 농도), 일차반응(표층 식물플랑크톤 농도(chl *a*), 투명도)과 이차반응(저층 산소포화도) 요소들을 선정하여, 생태구별로 각각 기준값을 적용하여 종합적인 수질평가지수(Water Quality Index, WQI)를 개발하여 해수 수질을 5등급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표 Ⅸ-16〉 한국 연안의 수질등급별 조사정점수 분포, 2013–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조사정점수(개)					
Ⅰ (매우 좋음)	114	175	204	205	199
Ⅱ (좋음)	154	123	123	146	163
Ⅲ (보통)	84	74	74	58	59
Ⅳ (나쁨)	22	37	14	8	4
Ⅴ (아주 나쁨)	3	8	2	0	0
계	377	417	417	417	425
Ⅰ, Ⅱ 등급 비율(%)	71	71	78	84	85

주: 1) 해수수질 평가 등급은 수질평가지수(Water Quality Index, WQI) 기준으로 지수값이 23 이하면 'Ⅰ등급(매우 좋음)', 24–33이면 'Ⅱ등급(좋음)', 34–46이면 'Ⅲ등급(보통)', 47–59이면 'Ⅳ등급(나쁨)', 60 이상이면 'Ⅴ등급(아주 나쁨)'임.

출처: 해양수산부, 「2017 한국해양환경 조사연보」, 2018.

최근 5년간(2013~2017년) 한국 연안의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등급은 Ⅰ,Ⅱ등급 비율이 약 70% 이상, Ⅳ,Ⅴ등급은 약 11% 이내로 수질의 상태는 점차 좋아지고 있다(표 Ⅸ-16). 하지만 시기별로 오염부하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관리해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남해안에서 수질 Ⅳ등급 이하인 곳이 많았다. 이에 따라 오염해역에 대한 오염원인 분석 및 필요시에는 추가 정밀조사를 수행하여 해역별 수질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 연안의 빈산소 수괴

부영양화된 폐쇄성 및 반폐쇄성 내만해역에서 표층수온이 상승하여 강한 수온약층이 형성되고, 강우 등에 의한 육수 유입의 증가로 밀도성층이 강하게 발달하는 하계에 저층의 용존산소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수중 용존산소 농도가 3㎎/L이하의 물덩어리를 '빈산소 수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빈산소 수괴는 해수의 유동이 원활하지 못한 온대 내만 해역에서 여름철에 육지로부터 담수가 유입되고 표층수의 수온상승으로 해수의 성층화가 이루어져 표층으로부터의 저층으로의 산소공급이 적다. 또한, 해적에 퇴적된 많은 양의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해수 중의 용존산소를 많이 소비하게 됨에 따라 저층수는 빈산소 또는 무산소 상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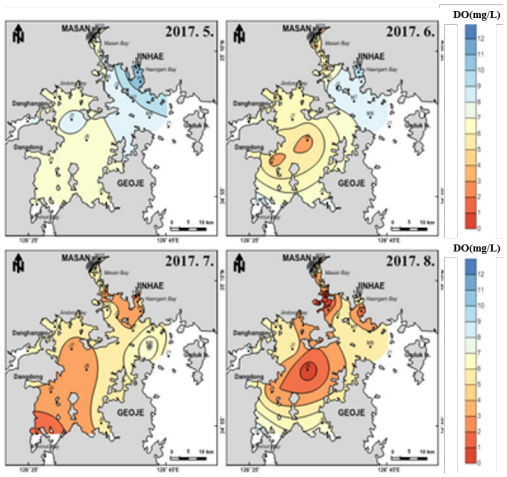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빈산소 수괴가 주로 발생하는 해역은 진해만, 마산만, 가막만 내측 등이며, 천수만이나 자란만 등의 반폐쇄성 해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 해역 중 대표적인 해역으로 진해만 주변 해역은 양식장이 많아 해양생물의 생산량이 높은 지역이었으나, 인근 육지로부터의 생활하수, 산업폐수 및 양식장의 자가오염 등으로 인한 자체 오염부하의 증가로 인하여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빈산소 수괴를 비롯한 부영양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해만은 우리나라 남해안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덕수도와 견내량 해협을 통해 외해와 연결되는 폐쇄성이 강하고, 진해만의 서부해역과 북부해역은 해수유동이 약하기 때문에 여름에 성층이 발달되어 빈산소 수괴가 잘 형성되는 지역이다.

2017년의 경우 여름철에 빈산소 수괴가 마산

만 내측 및 진해만 중앙부에서 발생하였다. 6월에 진해만 중앙부에서 관찰되면서 8월에 마산만 내측 및 진해만 전 해역으로 넓게 형성되었다(그림 Ⅸ-11). 진해만은 지형적 폐쇄성과 함께 8월 강수량의 증가로 인한 표층수의 저염화 및 수온 상승으로 표층과 저층 사이에 성층이 형성되어 표층수로부터 저층수로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서 빈산소 수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빈산소 수괴로 인한 용존산소 결핍은 어패류의 호흡이나 생리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저서군집의 출현종과 개체수에도 민감하게 작용하는 등 생물의 생존에 큰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혐기상태에서 유기물 분해에 의한 황화수소 가스나 암모니아 같은 유독성물질에 의해 만성적 독성현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그림 Ⅸ-11] 하계 진해만 저층 용존산소 농도, 2017년 5–8월



주: 1) 빈산소 수괴는 저층 용존산소 농도 3 mg/L 이하의 물덩어리 (주황색 색깔부터 용존산소 농도 3 mg/L 이하로 표현).
출처: 해양수산부, 「2017 한국해양환경 조사연보」, 2018.

환원 환경 하에서 저층 퇴적물로부터 질소, 인과 철, 망간 등 금속원소의 용출을 촉진시켜서, 저층에서 형성된 빈산소층이 생물이 서식하는 상층으로 용승할 경우 직접적인 생물폐사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면 수중생물은 호흡장애를 일으켜서 사멸하게 되고, 더 나아가 무산소상태가 되면 혐기성 박테리아에 의한 유기물 분해가 일어나서 메탄, 암모니아, 황화수소와 같은 악취가스가 발생하여 생물이 살수 없는 환경으로 변한다.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

환경관리해역은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특별관리해역과 환경보전해역으로 구성된다. 특별관리해역은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이며, 환경보존해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이나 해양환경상태가 양호한 해역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이다.

위와 같이, 오염 우려 해역인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인 육상 기인 오염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관리시스템으로 대상해역의 환경용량과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그 범

〈표 Ⅸ-17〉 환경관리해역 지정현황

구분	연안명	전체 면적 (km²)	관리기본계획 수립연도
특별 관리 해역	부산연안	741.50	2009
	울산연안	200.85	2008
	광양만	465.93	2005
	마산만	300.65	2004
	시화-인천연안	1181.88	2001
환경 보전 해역	가막만	255.30	2006
	득량만	550.25	2007
	완도-도암만	769.98	2005
	함평만	306.60	2009

출처: 국토교통부, 「환경관리해역 지정현황」, 2012.

〈표 Ⅸ-18〉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현황

구분	대상지역	도입시기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수영만	2015년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울산연안	2017년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광양만	2019년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마산만	2008년
시화-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	시화호	2013년

출처: 해양수산부, 「울산연안, 광양만에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추진」, 보도자료, 2016. 4.18.

위 내에서 관리대상물질(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이다.

2008년 국내 최초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한 마산만의 경우 〈표 Ⅸ-19〉와 같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용존무기질소(DIN), 용존무기인(DIP) 평균 농도는 각각 20%, 55%, 55%, 77%, 81% 감소하여 수질개선은 물론이며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 생태계의 건강성 역시 회복되었다. 또한, 2018년에는 해양수질 개선의 효과로 2002년 문을 닫은 경남 창원의 광암해수욕장이 16년 만에 재개장하였다.

〈표 Ⅸ-19〉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전후 해양환경 변화, 1997–2016

항목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감소율(%)
	시행 전 (1997-2006)	시행 후 (2007-2016)	
COD (mg/L)	2.77	2.21	20
TN (μM)	60.98	27.74	55
TP (μM)	3.02	1.37	55
DIN (μM)	26.73	6.23	77
DIP (μM)	2.14	0.40	81

출처: 박미옥·이용우·박준건·김성길·김성수·이석모. 2018.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마산만 해양환경의 변화."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1(2), 139–148.

위와 같이 해양환경 관리정책의 수립 및 해양환경기준에 따른 평가를 위해서는 해양환경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해양환경 모니터링은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원을 찾고 해양환경 변화를 감시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양환경 모니터링은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 조사자료의 시기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연구 중심의 정기적인 해양환경 모니터링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구분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양환경 모니터링은 목적 및 주기, 조사항목, 조사대상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인 해양환경 모니터링의 종류와 운영주체는 〈표 Ⅸ-20〉과 같다. 해양환경 모니터링의 측정 및 분석결과들은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www.meis.go.kr)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표 Ⅸ-20〉 해양환경 모니터링 현황 및 운영주체

구분	종 류	운영주체
정기적 해양환경 모니터링	해양환경측정망	해양환경공단
	해양생태계종합조사	해양환경공단
	연안습지 기초조사	해양환경공단
	정선해양관측	국립수산과학원
	유해적조 모니터링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 모니터링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 모니터링	국립수산과학원
	패류생산지역 위생조사	국립수산과학원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	해양수질자동측정망	해양환경공단
	정기운항선박 측정소	해양환경공단
	어장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국립수산과학원
	위성 해양정보시스템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종합과학기지	국립수산과학원

출처: 대한민국 해양연맹, 「해양환경모니터링 현황과 방향」

맺음말

해양에서 유기물과 영양염은 생물의 생장과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인간 활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다량이 유입되면 해양을 오염시키게 된다. 영양분이 과다하게 존재하여 부영양화가 발생하면 식물플랑크톤이 과다하게 번식하여 적조를 유발시켜 해양의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한국 연안에서 오염지표 및 유기물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농도는 최근 5년간 연평균이 약 1.14mg/L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고, 총질소, 총인 농도는 현재까지 감소 또는 현상유지 된 상태였다. 하지만 시기별로 오염부하량이 증가하고, 수온이 급증하는 하계에는 상대적으로 수질이 일시적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해만(마산만)의 저층 빈산소 수괴 발생으로 인해 하계에 수질이 나빠졌지만, 수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빈산소 수괴도 소강상태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마산만에 국내 최초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해역의 특성에 맞게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관리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마산만은 수질개선은 물론이고 멸종위기 종들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

정부, 지자체, 전문연구기관에서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특별관리해역 오염저감 사업,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해양환경모니터링 사업 수행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바다는 건강하고 깨끗하게 후손들에게 대물림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미옥 · 이용우 · 박준건 · 김성길 · 김성수 · 이석모. 2018.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마산만 해양환경의 변화.” 「한국해양환경 · 에너지학회」 21(2), 139–148.

GESAMP. 1990. “Report of the 20th Session.” *Rep. Stud. GESAMP, No. 41.*

2018 Safety

Korean Social Trends 2018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X 안 전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두용 | 안전보건공단 278

한국인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특성 탁양주 | 한국교통대학교 289

젠더폭력의 실태와 변화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8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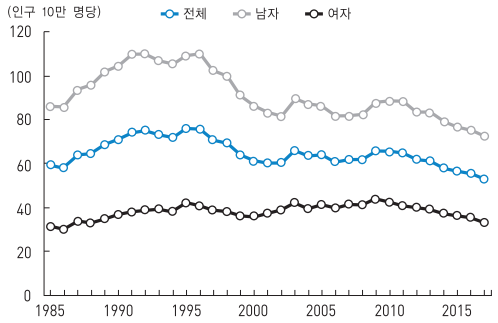
- 사고, 자살, 타살과 같은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외인 사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고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 자연재해는 대부분 태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태풍의 영향이 크다.
- 화재 발생은 최근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사망률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 자동차와 철도 사고 사망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해양 사고 사망자는 늘어나고 있다.
- 최근 형법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법범죄는 감소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력범죄와 재산범죄는 증가하는 반면, 교통범죄는 감소하고 있고, 폭력범죄는 큰 변동이 없다. 강력범죄 중에서는 성폭력범죄 증가와 강도범죄 감소가 두드러진다.
- 피해조사결과 일반 국민들의 범죄피해 경험률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OECD 평균과 비교하여도 범죄피해율은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안전은 크게 자연재난, 인적 사고 그리고 사회적 안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물적 또는 인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말한다. 지진, 산사태, 황사, 태풍, 호우 및 폭설 등의 자연현상이나 메르스, 조류독감과 같은 감염병이 여기에 속한다. 인적 사고는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결과로 나타난다. 시설물, 설비, 기계·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인간이 오작동을 일으켜 발생하는 사고, 화학물질이나 에너지에 의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고 등이 여기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이 있다. 사회적 안전은 집단 내 규범이나 인간관계, 사회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범죄, 테러, 자살 등이 있다.

사고로 인한 사망(외인사망)

사고, 자살, 타살과 같은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이후부터는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1년 이후 다시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인 사망률은 모든 사고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는 남성이 경제활동과 사고위험이 높은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X-1).

[그림 X-1] 성별 외인 사망률, 1985–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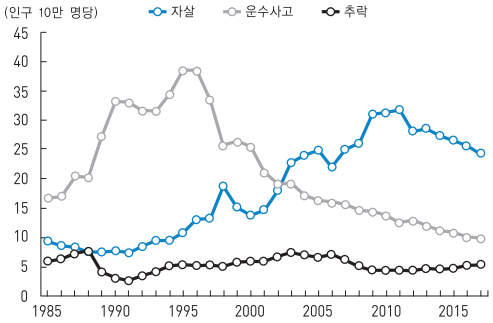


주: 1) 외인 사망률=인체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지난 20년간 외인 사망의 주요 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그리고 추락이었다. 자살률은 1992년부터 매년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인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운수사고 사망률은 1995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199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추락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6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3년 이후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X-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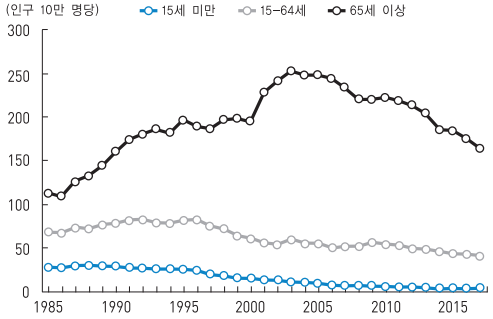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15세 미만의 외인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선진국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5명 이하로 떨어졌다.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의 외인 사망률도 1996년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층의 외인 사망률은 2003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했지만 2017년 현재도 인구 10만 명당 164.3명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그림 X-3).

[그림 X-2] 주요 외인별 사망률, 1985–2017



주: 1) 사망률=해당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그림 X-3] 연령집단별 외인 사망률, 1985–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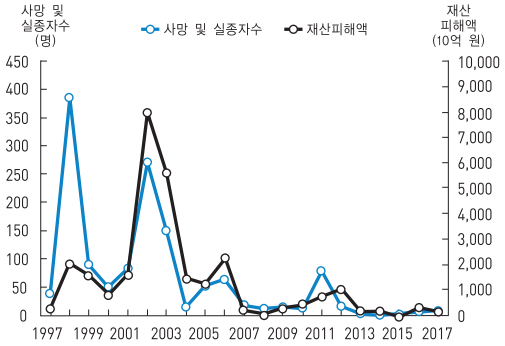
주: 1) 외인 사망률=해당 연령집단의 인체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해당 연령집단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자연재난

지난 20년간 자연재해는 주로 태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했다. 대규모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모두 한반도 내륙에 초대형 태풍

이 지나갔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그리고 2006년 에위니아 등의 초대형 태풍은 수조 원의 재산피해와 대규모 인명손실을 초래하였다. 2006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나 인명손실은 크게 줄었으며, 최근 3년간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X-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저류지 확대, 배수로 확보 및 산사태 방지 등 자연재해 대비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림 X-4]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1997–2017



주: 1) 재산피해액은 2017년 가격 기준임.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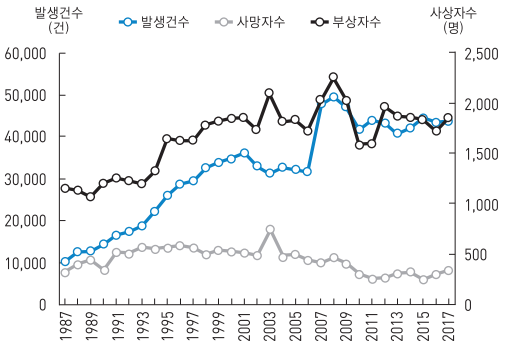
인적 사고

화재

화재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적 재난이며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화재 발생 건수는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2007년에 화재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새로운 국가화재분류체계의 도입으로 임야 및 가스폭발 화재가 화재 통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화재 발생 건수는 매년 약 4만여 건으로 여전히 많은 편이다(그림 X-5).

화재 발생 건수는 2008년까지 크게 증가했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과거에 비해 화재 초기 진압률이 높고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와 이송 및 치료 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꾸준히 감소하던 화재 사망자 수는 2010년 이후 약 3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사망자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의 체계로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체계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그림 X-5] 화재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198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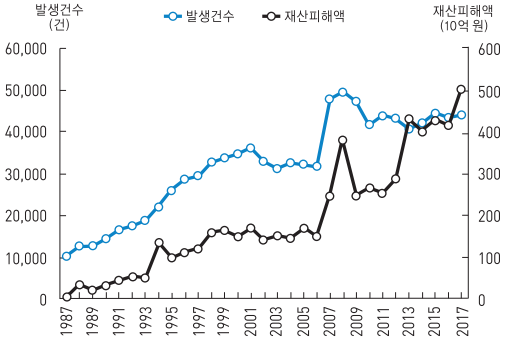


출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http://nfds.go.kr/index.jsf).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최근 들어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는 1,800명 내외를 보이고 있다(그림 X-5).

건축물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지난 20년간 화재 발생 건수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화재 발생 건수에 비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 증가가 더 큰 것은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되고 건축물의 재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X-6).

[그림 X-6] 화재 발생 건수와 재산 피해액, 198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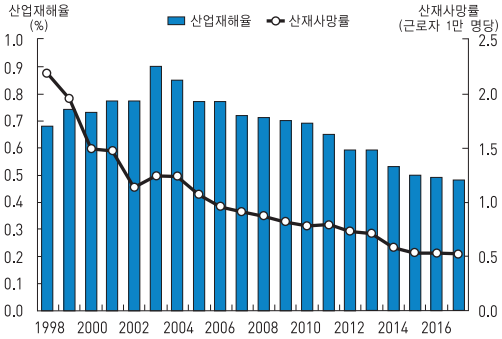
출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http://nfds.go.kr/index.jsf).

산업재해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은 최근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그림 X-7). 산업재해율이나 산재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은 여전히 산재사망률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한다.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림 X-7]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199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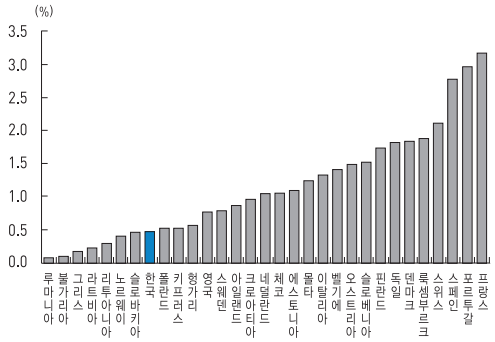


주: 1) 산업재해율=(재해자 수÷근로자 수)×100.
2) 산재사망률=(업무상사고 사망자 수÷근로자 수)×10,00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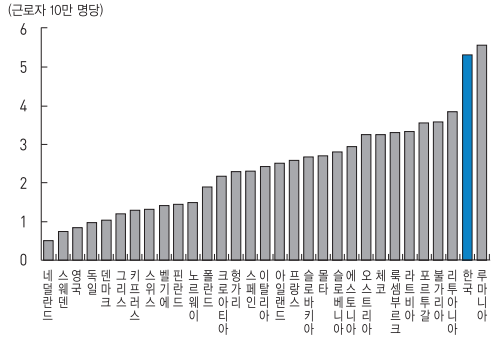
유럽 국가들은 산재사망률이 한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반면, 산업재해율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그림 X-8). 이는 산업재해 통계가 실제 산재사고 통계라기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통계이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통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집계하므로 산업재해율은 근로자 중에서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재해는 제외하게 된다. 산업재해율은 산업안전이 발달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개 2%가 넘는 높은 수준을 보인다. 산업안전이나 산재보상 수준이 높은 나라는 산재사망률은 낮고 산업재해율은 높다. 산업안전이나 산재보상 수준이 낮은 나라는 그 반대이다. 따라서 한국도 산재사고 자체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산재보상 수준을 높이고 산재사망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림 X-8]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2015

1) 산업재해율



2) 산재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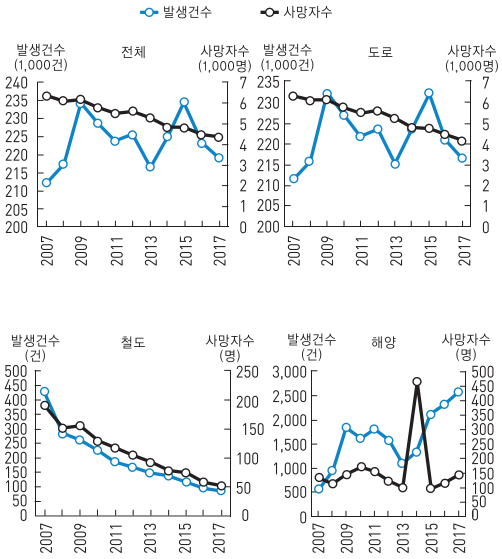
주: 1) 한국의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은 유럽과 비교하기 위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재해자만으로 산출하였음.
출처: 고용노동부, 「2015 산업재해 현황분석」, 2016.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Statistical Explained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

교통사고

지난 10여 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미미하지만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사고 부상자 수도 소폭의 증감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그림 X-9).

도로사고 발생 건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부상자 수도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로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철도사고는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양사고는 2007년 이후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07년부터 약간 증가하다가 2011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5년 이후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X-9). 해양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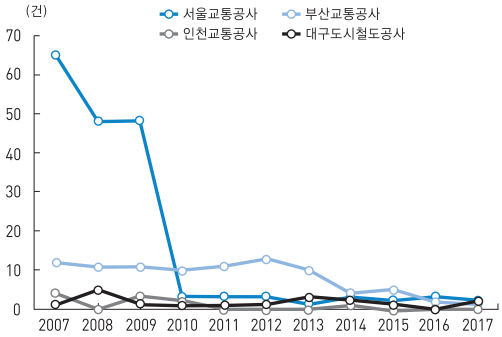
[그림 X-9]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2007-2017



주: 1) 전체 교통사고 통계의 경우 항공사고 통계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각 연도.

한편, 지하철이나 도시철도 사고는 부산을 제외하고는 사상사고가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모두 설치된 2010년부터 사상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스크린도어가 지하철 승강장에서의 자살이나 안전사고를 막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X-10).

[그림 X-10] 도시철도 사상사고 건수, 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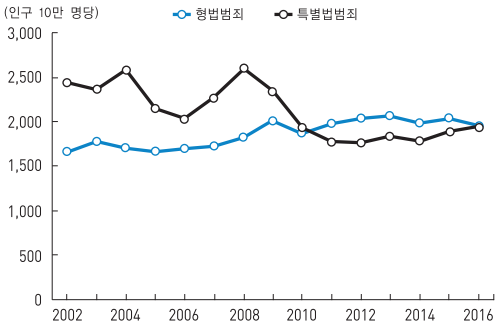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각 연도.

사회적 안전

범죄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 건수로 나타내는데,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포함하는 전체 범죄율은 2008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 15년 동안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방화, 절도, 사기, 배임, 위조 등의 형법범죄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범죄 발생률은 감소하다가 최근 소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폭이 컸는데, 그 결과 2010년 이후에는 형법범죄 발생률이 특별법범죄 발생률보다 다소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그림 X-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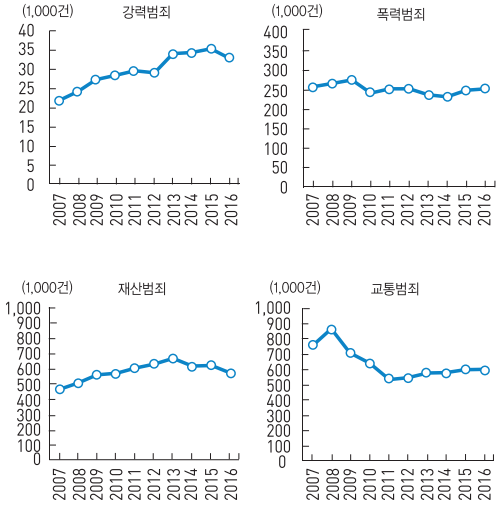
[그림 X-11]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02-2016



주: 1) 범죄율=해당 범죄 발생 건수÷인구×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범죄유형별로 지난 10년간 발생추이가 상이하다. 강력범죄는 2007년 2만 1,636건에서 2016년 3만 2,963건으로 52.4% 증가하였고, 재산범죄는 46만 9,744건에서 57만 3,445건으로 22.1% 증가하였다. 반면, 교통범죄는 같은 기간 동안 75만 9,622건에서 60만 970건으로 20.9% 감소하였다. 폭력범죄는 25만 8,010건에서 25만 1,889건으로 큰 변동은 없었다(그림 X-12). [그림 X-11]에서 형법범죄가 증가한 이유는 재산범죄가 늘었기 때문이고, 특별법범죄가 감소한 주된 이유는 교통범죄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림 X-12]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건수, 2007–2016



주: 1) 강력범죄는 형법범죄 중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범죄 등을 포함함.
2) 폭력범죄는 형법범죄 중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범죄 등을 포함함.
3) 재산범죄는 형법범죄 중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죄 등을 포함함.
4)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 위반범죄와 교통방해죄를 포함함.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주요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 유형인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범죄의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살인범죄는 2008년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강도범죄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성폭력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화범죄는 지난 10년간 완만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폭행·상해 범죄는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최근 다소 증가하였다(표 X-1).

한국의 살인범죄율은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1건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6건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영국(0.2건), 일본(0.3건), 오스트리아(0.4건), 독일(0.4건), 스위스(0.5건), 프랑스(0.6건)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멕시코(17.9건), 라트비아(6.6건), 미국(4.9건), 칠레(4.5건) 등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그림 X-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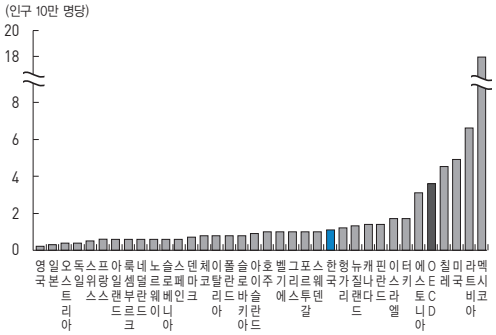
〈표 X-1〉 주요 강력 및 폭력 범죄별 발생건수, 2007–2016

(건)

연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
2007	1,124	4,474	14,344	1,694	243,218
2008	1,120	4,828	16,129	1,946	247,641
2009	1,390	6,381	17,377	1,866	250,537
2010	1,262	4,402	20,584	1,886	224,300
2011	1,221	4,021	22,168	1,972	232,229
2012	1,022	2,626	23,365	1,882	230,635
2013	959	2,001	29,090	1,730	219,805
2014	938	1,618	29,863	1,707	214,605
2015	958	1,472	31,063	1,646	226,543
2016	948	1,181	29,357	1,477	228,71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그림 X-13] OECD 국가의 살인범죄율,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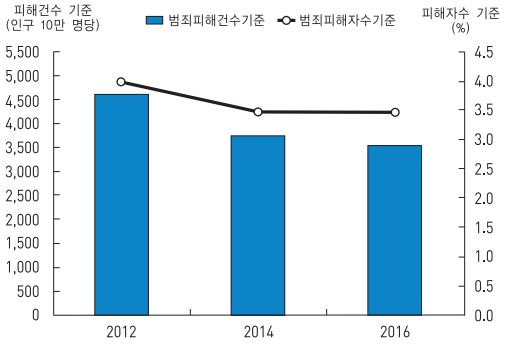


주: 1) 살인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발생 건수임.
2)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은 2015년 자료, 프랑스, 아일랜드, 한국, 스위스, 터키, 영국은 2013년 자료, 캐나다, 이탈리아, 뉴질랜드는 2012년 자료, 그 외 국가는 2014년 자료임.
출처: OECD,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2017.

범죄피해

일반적으로 범죄분석에 사용되는 공식범죄통계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을 통해 집계되는 통계로, 신고 되지 않은 범죄는 숨은 범죄(hidden crimes)로 남게 되며, 성폭력범죄 등 신고율이 낮은 범죄는 공식범죄통계만으로 발생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공식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까지를 포함하는 범죄피해 통계는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2년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건수는 2012년 4,600건이었다가, 2014년 3,743건, 2016년 3,556건으로 감소하였다. 범죄피해자 수로 보면 2012년 3.98%에서 2014년과 2016년에는 3.46%로 감소하였다(그림 X-14).

[그림 X-14] 범죄피해 경험률, 2012-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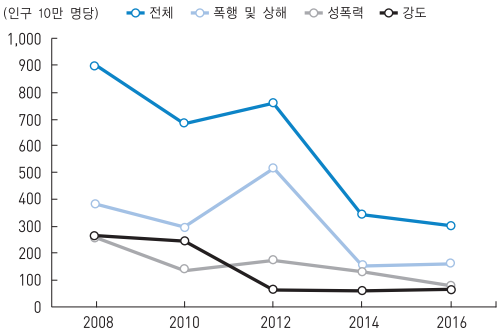
주: 1) 범죄피해 건수 기준 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행,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 대상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총 피해 건수임.
2) 범죄피해자 수 기준 경험률은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행,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 대상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이 중 폭력범죄로 인한 피해 건수 규모를 보면, 가장 빈번한 폭행 및 상해(협박, 괴롭힘 포함) 피해는 2012년 515건에서 2014년 155건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6년 161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성폭력 피해는 2012년 174건에서 2014년 129건, 2016년 76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강도 피해는 2012년 66건, 2014년 61건에서, 2016년 66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그림 X-15).

형사사법기관에 신고 혹은 인지된 성폭력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표 X-1), 범죄피해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피해 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그림 X-15), 성폭력범죄가 실제 증가한다기보다는 신고율의 증가로 숨은 범죄가 감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범죄피해 경험률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범죄피해 경험률은 2.1%로 OECD 국가 평균 3.9%보다 낮다. 한국은 캐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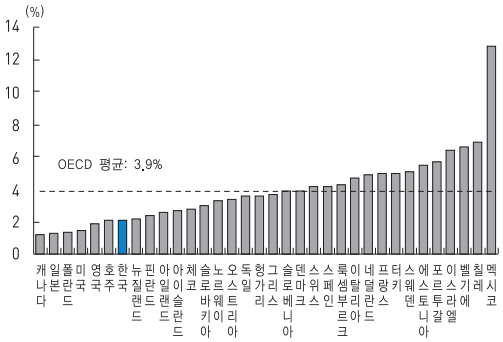
[그림 X-15]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률, 2008-2016



주: 1) 폭력범죄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폭행(협박포함) 및 상해, 성폭력, 강도 등 개인 대상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총 피해 건수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다(1.3%), 일본(1.4%), 폴란드(1.4%), 미국(1.5%)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고 멕시코(12.8%), 벨기에(6.6%), 이스라엘(6.4%), 포르투갈(5.7%) 등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그림 X-16).

[그림 X-16] OECD 국가의 범죄피해 경험률, 2010



주: 1) 범죄피해 경험률은 각국 조사대상자(만 15세 이상) 중 지난 1년 동안 범죄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멕시코는 2013년 자료, 칠레는 2012년 자료, 에스토니아, 스위스 2009년 자료,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2008년 자료. 그 외 국가는 모두 2010년 자료임.
출처: OECD,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2015.

경찰 및 소방력

경찰관 수는 2001년 9만 819명에서 2016년 11만 4,658명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522명에서 447명으로 감소하였다. 전국의 경찰서는 1998년 225개소에서 2016년 252개소로 늘어났고, 치안예산은 1998년부터 2016년 사이에 3조 4,833억 원에서 9조 8,09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소방관수는 2001년 2만 4,223명에서 2016년 4만 4,121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는 1,956명에서 1,161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표 X-2).

〈표 X-2〉 경찰관 및 소방관 수, 2001-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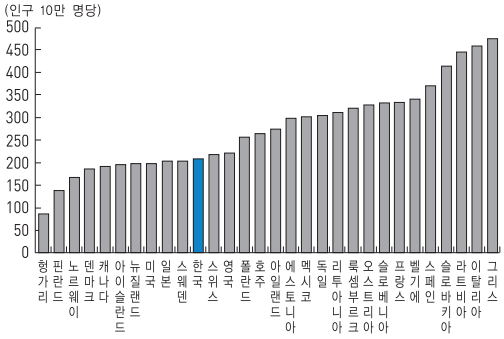
(명)

연도	경찰관		소방관	
	정원수	1인당 담당인구	정원수	1인당 담당인구
2001	90,819	522	24,223	1,956
2002	91,592	520	25,104	1,898
2003	92,165	520	26,518	1,806
2004	93,271	516	27,604	1,742
2005	95,336	505	29,362	1,641
2006	95,613	507	30,199	1,604
2007	96,324	505	30,630	1,589
2008	97,732	502	31,918	1,537
2009	99,554	495	33,992	1,451
2010	101,108	490	36,711	1,350
2011	101,239	493	37,826	1,320
2012	102,386	490	38,557	1,302
2013	105,357	479	39,519	1,276
2014	109,364	464	40,406	1,256
2015	113,077	451	42,634	1,197
2016	114,658	447	44,121	1,161

주: 1)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추계인구÷경찰관 정원수.
2)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추계인구÷소방관 정원수.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연도.
소방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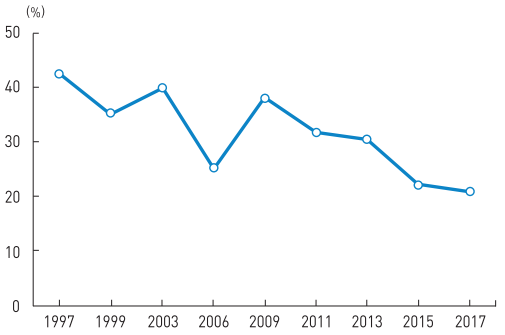
국가별 경찰관 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 수가 207.7명으로 30개국 평균 274.3명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한국은 헝가리(87.4명), 핀란드(139.8명), 노르웨이(167.1명), 덴마크(185.8명), 캐나다(191.4명) 등에 비하여는 높은 수준이나, 그리스(473.7명), 이탈리아(457.1명), 라트비아(444.5명), 슬로바키아(412.8명), 스

[그림 X-17] OECD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 수, 2015



주: 1)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수치임.
2) 한국, 독일, 뉴질랜드는 2013년 자료, 일본, 헝가리, 영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아일랜드는 2014년 자료, 그 외 국가는 2015년 자료임.
출처: UNODC, *UNODC Total Police Personnel*(https://data.unodc.org), 2018. 8.

[그림 X-18] 범죄에 대한 두려움, 1997–2017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4세 이상) 중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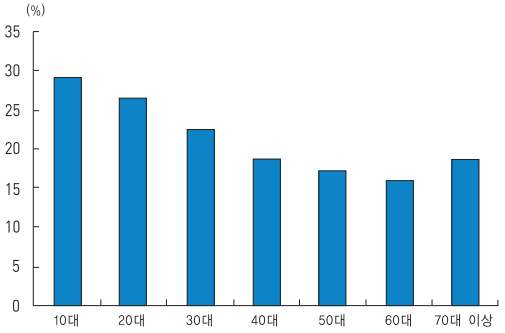
페인(368.2명) 등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그림 X-17).

안전에 대한 인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를 보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199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2009년 37.8%에서 2011년 31.6%, 2013년 30.3%, 2015년 22.1%, 2017년 20.7%로 특히 최근에 크게 낮아지고 있다(그림 X-18).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주로 두려움을 느끼는가이다.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보다는 여성, 중·장년층보다는 청소년층에서 더 크다. 특히, 10–30대 여성들은 약 70%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젊은 여성

[그림 X-19] 연령집단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2017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4세 이상) 중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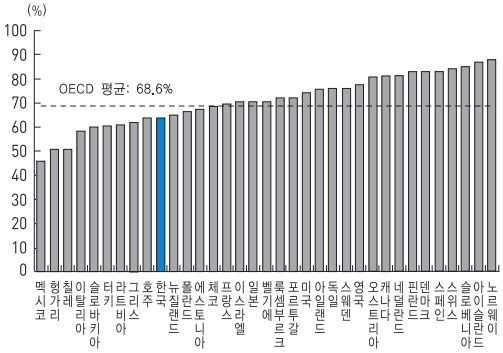
들을 범죄로부터 안심시키는 사회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2016년 조사 결과 야간보행 시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대(29.2%), 20대(26.5%), 30대(22.5%), 40대(18.7%), 50대(17.2%), 60대(15.9%)로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

하다가, 70대 이상(18.7%)의 연령층은 다소 증가한다(그림 X-19).

야간보행안전도에 대한 인식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은 응답자의 63.9%가 야간에 길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OECD 국가 평균 68.6%와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은 노르웨이(87.7%), 아이슬란드(87.0%), 슬로베니아(84.7%), 스위스(84.0%) 등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고 멕시코(45.9%), 헝가리(50.7%), 칠레(51.1%), 이탈리아(58.3%) 등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그림 X-20).

[그림 X-20] OECD 국가의 야간보행안전도, 2014-2016 평균



주: 1) 야간보행안전도는 각국 조사대상자(15세 이상) 중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OECD,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2017.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8년 8.2%에서 2012년 13.5%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 9.2%로 감소하였고 2016년에 12.9%로 다시 증가하였다. 2014년에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진 것은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짐작되며, 이후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및 범죄위험까지 전 영역에 걸쳐 안전하다는 인식이 다소 늘어났다(표 X-3).

〈표 X-3〉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08-2016

(%)

	2008	2010	2012	2014	2016
전반적인 사회안전	8.2	11.3	13.5	9.2	12.9
자연재해	17.2	18.7	22.9	14.7	20.4
교통사고	5.7	8.0	9.2	7.1	10.0
화재	9.9	16.6	17.5	13.9	18.8
범죄위험(치안)	-	8.2	9.0	8.8	9.1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5세 이상) 중 해당 분야의 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08년에는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이 조사되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한국인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특성

탁양주 (한국교통대학교)

- 한국 사회에서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7년부터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07년 인구 10만 명당 15.6명에서 2017년 9.8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 자살은 한국인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자살은 2007년 인구 10만 명당 24.9명에서 2017년 24.3명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 남자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손상의 2/3를 차지한다. 손상 사망자의 남녀 간 구성비 차이는 해가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다.
- 지난 10여 년간 모든 연령대에서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하였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감소폭이 컸으며, 30–50대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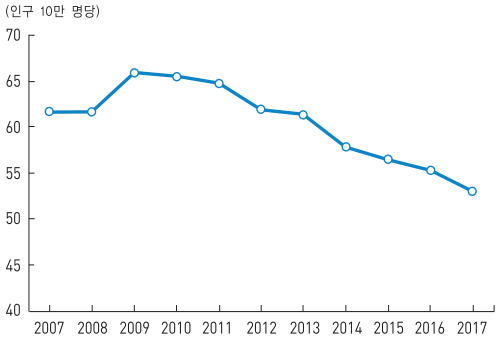
안전과 안전증진은 국제적인 관심사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98년부터 안전과 안전증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손상예방은 안전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안전증진의 많은 활동이 손상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암, 심뇌혈관질환 다음으로 사망의 3번째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망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높아 이들에 대한 국가적 손상예방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손상이란 사고에 의해 신체에 물리적 상해를 입음으로써 나타나는 질환 또는 기능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하며, 크게 의도적 손상(자살, 타살, 폭력 등)과 불의의 안전사고로 인한 비의도적 손상(교통사고, 추락, 화재, 익사, 중독, 자연 재해 등)으로 분류된다. 이 글에서는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성별, 연령, 지역, 원인 등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비교를 통해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한국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변화 추세

2007년부터 지난 10여 년간 손상 등 외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손상 사망률은 2007년 인구 10만 명당 61.7명이었고 2009년 65.8명으로 최고의 사망률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17년에는 53.0명이 손상으로 사망하였다(그림 X–21).

주요 사망원인별로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7년 인구 10만 명당 15.6명에서 2017년 9.8명으로 줄어 전체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 수 감소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반면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2007년 24.9명에서 2011년에는 31.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X-21] 손상 사망률, 2007–2017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이는 OECD 국가 중 1, 2위를 다투는 높은 수준으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노력으로 이후 줄어들고는 있으나 2017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0만 명당 24.3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 번째 주요 사망원인인 낙상 역시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발생 시 대규모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사망은 2017년 인구 10만 명당 0.6명으로 2007년과 동일한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망의 다른 원인인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도 눈에 보이는 감소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익사로 인한 사망자도 약간의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큰 변동은 없었다. 폭행 등 타살로 인한 사망자는 2007년 1.4명에서 2017년 0.8명으로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약물 등 유독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은 2017년 인구 10만 명당 0.6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표 X-4, 그림 X-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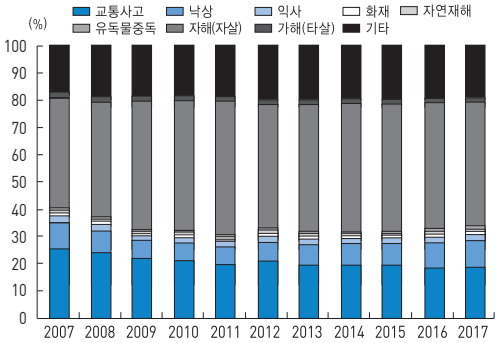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표 X-4〉 손상사망 원인별 사망률, 2007–2017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교통사고	15.6	14.4	12.6	11.9	10.9	9.8
낙상	6.1	4.3	4.3	4.6	4.6	5.2
익사	1.5	1.2	1.3	1.2	1.2	1.1
화재	0.6	0.5	0.5	0.6	0.5	0.6
자연재해	0.6	0.6	0.7	0.6	0.4	0.4
유독물중독	0.5	0.4	0.4	0.5	0.4	0.6
자해(자살)	24.9	31.0	31.7	28.5	26.5	24.3
가해(타살)	1.4	1.4	1.1	1.1	1.0	0.8
기타	10.5	12.1	12.1	12.2	11.0	10.1
합계	61.7	65.8	64.7	61.3	56.5	53.0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해당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그림 X-22] 손상사망 원인별 구성비율, 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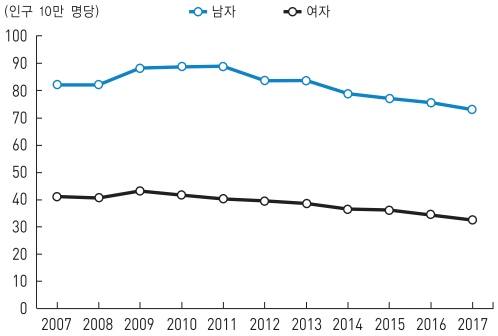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전체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의 2/3는 남자이고 1/3은 여자로 남자는 여자의 2배 정도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2007년 남자는 남성 인구 10만 명당 82.0명이 손상으로 사망했으며 2017년에는 73.1명이 사망하여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여자는 2007년 여성 인구 10만 명당 41.4명이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했으나 2017년에는 33.0명이 사망하여 남자보다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X-23). 이를 전체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로 살펴보면 더 눈에 띄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07년 66.6%이던 남자의 비율은 2017년에는 68.8%로 증가하였고, 여자는 33.4%에서 31.2%로 감소해 남녀 간 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

[그림 X-23] 성별 손상 사망률, 2007–2017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지역별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도시지역에서 적고 농촌지역에서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2007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103.2명으로 이는 전국 손상 사망률(61.7명)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이 지역은 2017년에도 80.5명으로 OECD 국가 중 손상 사망률이 두 번째로 높은 라트비아(2015년 88.7명)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2007년 44.3명을 기록하였고 최근 10여 년간 큰 변동이 없이 2017년에도 인구 10만 명당 42.4명이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 손상 사망률 하위 10위권인 아이슬란드(2015년 41.1명)나 네덜란드(2015년 42.7명)와 비슷한 수준이다(표 X-5, 그림 X-26). 전국적으로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07년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라남도 다음으로 높았던 강원도(95.0명), 충남(92.9명), 경북(87.8명) 등 농촌지역에서는 10여 년간 사망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충북과 전북은 손상 사망률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들은 농촌지역보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으며 감소폭도 적어서 조금 줄어들거나 사망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도시지역 중에서는 대전이 사망률이 제일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07년 56.0명

〈표 X-5〉 시도별 손상 사망률, 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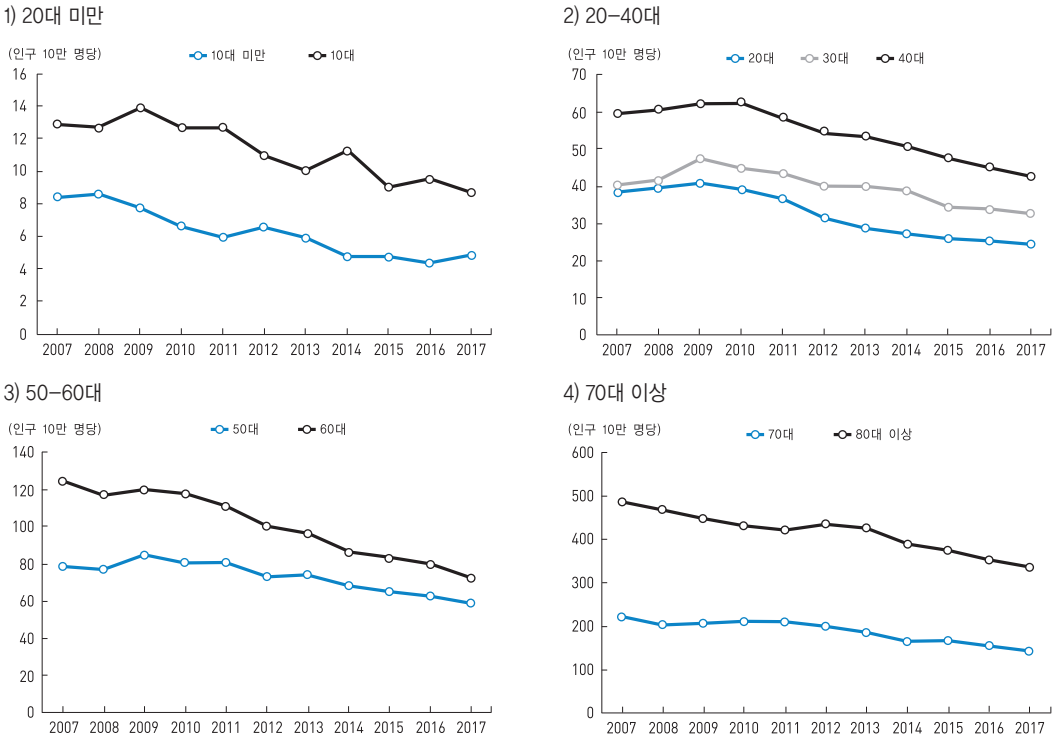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전국	61.7	65.8	64.7	61.3	56.5	53.0
서울	44.3	48.4	47.8	44.7	42.9	42.4
부산	58.9	63.0	60.7	61.2	56.1	50.5
대구	53.1	59.3	57.7	54.7	50.8	47.8
인천	52.7	59.6	56.5	55.0	51.0	45.1
광주	55.9	61.8	55.1	54.4	49.8	49.0
대전	56.0	60.0	56.4	52.9	52.0	46.2
울산	49.4	52.4	55.6	53.5	47.3	43.9
세종	-	-	-	72.8	53.1	37.2
경기	50.7	54.6	55.7	53.8	49.1	45.4
강원	95.0	94.3	94.2	85.4	78.4	74.1
충북	76.8	87.9	80.5	79.0	71.4	70.3
충남	92.9	101.2	97.2	85.6	80.3	77.7
전북	84.9	90.5	92.5	88.0	72.6	77.9
전남	103.2	103.6	103.9	101.1	94.0	80.5
경북	87.8	93.6	91.1	81.9	75.0	70.1
경남	76.1	75.2	74.0	67.6	63.7	56.6
제주	80.0	73.9	74.1	77.0	64.0	63.8

주: 1) 손상 사망률은 해당 시도 인구 10만 명당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 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이던 사망률이 2017년에는 46.2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차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손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손상을 예방하는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사망자 감소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표 X-5).

연령대별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추세를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상이한 양상이 나타난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2017년 기준으로 10대 미만은 인구 10만 명당 4.8명, 10대는 8.7명의 사망률을 보이나 20대부터는 급격히 사망률이 증가하여 20대 24.4명, 30대 33.1명, 40대 42.6명, 50대 59.1명, 60대 73.3명이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70대부터는 손상 사망률이 다시 한 번 급격히 증가하여 70대는 전체 인구의 손상 사망률 53.0명의 3배에 가까운 141.4명, 80대 이상에서는 6.3배인 336.4명이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한편 2007-2017년 기간 동안 모든 연령대에서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하였다. 연령대마다 감소폭이 상이한 데,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감소폭이 컸으며 특히 10대 미만과 60대의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30-50대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는데 특히 30대의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그림 X-24).

[그림 X-24] 연령집단별 손상 사망률, 2007-2017



주: 1) 손상 사망률은 해당 연령집단 인구 10만 명당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 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사회적 특성

통계청의 2017년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손상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은 자살이나 자해로 인구 10만 명당 24.3명이 사망하였다.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2011년 31.7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10여 년 전인 2007년 24.9명에 비해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자살은 대부분 주택(43.0%)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의료기관(17.8%)으로 이송된 후 사망하였고 공공장소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표 X-6).

자살이 많이 발생한 계절은 봄이고 겨울에 자살이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손상으로 사망한 기혼자의 43.6%가 자살로 사망한 반면 미혼인 경우는 61.7%, 이혼인 경우 57.5%가 자살로 사망하여 결혼 상태에 따라 자살자 비중에 차이가 난다. 교육정도별로 자살자 비율을 살펴보면 무학인 경우 자살자의 비중이 22.2%인 반면 고등학교 55.3%, 대학교 이상 60.6%로 학력이 높을수록 자살자의 비중이 높았다. 자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30대에서 전체 손상 사망자의 74.0%가 자살로 사망하여 자살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비슷한 사회적 경향을 보이는 20대(67.2%)와 40대(65.4%)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사회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10대(54.0%)와 50대(52.2%)는 절반 정도가 자살로 사망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자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었다(표 X-7). 2017년 남자는 인구 10만 명당 34.9명이 자살로

〈표 X-6〉 손상사망 원인별 사망장소 분포, 2017

(%)

	전체	교통사고	낙상	익사	화재	유독물 중독	자해 (자살)	가해 (타살)	자연재해	기타
주택 내	24.0	0.6	10.0	4.4	35.1	45.4	43.0	41.0	19.3	7.3
의료기관	44.7	63.5	74.8	27.2	38.2	28.2	17.8	35.4	33.0	80.3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0.6	0.0	0.4	0.0	0.0	0.0	0.2	0.5	0.5	2.5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0.5	0.1	0.2	0.2	0.0	0.0	1.0	0.5	0.0	0.1
도로	6.1	25.4	0.6	0.5	1.2	2.1	2.3	4.1	4.7	0.5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2.6	0.1	0.7	4.3	11.8	4.6	4.4	4.8	1.9	0.5
산업장	1.2	0.6	2.5	1.4	1.9	1.8	0.8	0.7	1.4	2.2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1.2	1.3	0.9	3.4	4.3	1.4	1.0	0.5	11.8	0.8
병원 이송 중 사망	1.9	3.4	1.2	1.5	0.6	1.4	1.8	1.4	0.5	1.3
기타	17.1	4.9	8.6	56.9	6.8	14.4	27.6	10.6	26.9	4.4
미상	0.1	0.1	0.1	0.2	0.0	0.7	0.1	0.5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원자료, 2017.

사망하였으나 여자는 그 절반인 13.8명만이 자살로 사망하여 남자의 자살 위험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표 X-8).

교통사고는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서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인데 2017년에는 9.8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전체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9년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감소가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25.4%는 도로에서 사망하였고 나머지 사망자는 의료기관(63.5%)으로 이송된 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X-6).

세 번째로 많은 원인을 차지한 낙상은 2017년 인구 10만 명당 5.2명이 발생하였으며 70%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X-6). 이는 낙상이 실제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였다기보다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할 것은 10.0%의 사망자가 주택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하여 상당수의 사람이 현장에서 사망한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주택에서의 낙상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낙상으로 인한 사망은 주로 50대 이상 장년층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10대 미만에서도 10.6%가 낙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어 어린이들의 낙상이 사망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표 X-7).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을 장소와 관련해서 분석해보면 유독물 중독이나 타살로 인한 사망자의 상당수가 발생 장소인 주택에서 사망한 것이다. 이는 낙상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표 X-7〉 연령집단별 손상사망원인 분포, 2017

(%)

	교통사고	낙상	익사	화재	유독물 중독	자해(자살)	가해(타살)	자연재해	기타	계
전체	18.5	9.8	2.2	1.2	1.0	45.9	1.5	0.8	19.1	100.0
10대 미만	26.7	10.6	8.8	1.8	0.5	0.5	25.3	0.0	25.8	100.0
10대	31.1	3.2	4.3	1.9	0.9	54.0	1.1	0.0	3.6	100.0
20대	21.1	2.2	1.8	0.8	0.9	67.2	1.6	0.2	4.2	100.0
30대	13.6	2.9	1.3	0.6	1.1	74.0	1.6	0.3	4.6	100.0
40대	14.0	6.8	2.0	1.3	1.4	65.4	1.9	0.5	6.8	100.0
50대	18.6	10.1	2.3	1.4	1.7	52.2	2.0	0.9	10.7	100.0
60대	22.5	13.3	2.7	1.2	1.0	41.2	1.4	0.8	15.9	100.0
70대	24.9	11.9	2.6	1.3	0.8	34.5	1.0	1.0	22.2	100.0
80대 이상	12.9	13.6	1.2	1.1	0.5	20.8	0.4	1.2	48.1	100.0
연령 미상	0.0	0.0	0.0	0.0	0.0	40.0	0.0	0.0	60.0	100.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원자료, 2017.

한 사람들이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것과 달리 유독물 중독 및 타살에 의한 사망자의 대다수는 발생 현장인 주택에서 즉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X-6).

연령대별로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50대에서는 절반이 자살로 사망하였고 교통사고(18.6%)와 낙상(10.1%)이 나머지 원인을 차지하였다. 40대는 50대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자살(65.4%)의 비율이 50대보다 높고 교통사고(14.0%)와 낙상(6.8%)의 비율이 조금 낮다. 신체적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10대에서 30대까지는 자살과 교통사고가 대부분의 사망원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30대는 자살의 비중이 74.0%로 매우 높고 교통사고는 13.6%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나이가 어려질수록 자살의 비중은 줄고(20대 67.2%, 10대 54.0%) 교통사고의 비중은 커지는(20대 21.1%, 10대 31.1%) 특이한 경향을 보였다. 10대 미만의 어린이들은 자살은 거의 없으나 다른 연령대에서 1-2%를 보이는 타살로 인한 사망이 25.3%나 발생하였으며 제일 많은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26.7%)였다. 60대부터는 자살의 비중은 줄고 낙상이나 합병증 등의 기타 원인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특히 80대 이상에서는 전체 사망의 약 50%가 합병증 등의 기타가 원인이었다(표 X-7).

성별에 따른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2배 이상 많았으며 특히 교통사고와 낙상은 남자가 여자보다 3배가량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고 자살로 인한 사망도 2.5배 많았다. 그러나 타살에 의한 사망은 남녀 간 차이가 없었다(표 X-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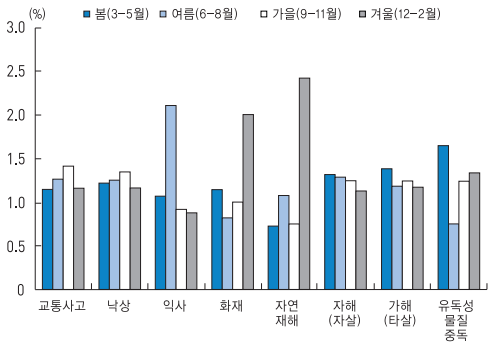
〈표 X-8〉 성 및 손상사망 원인별 사망률, 2017

	전체	남자	여자
전체	53.0	73.1	33.0
교통사고	9.8	14.6	5.1
낙상	5.2	7.5	2.9
익사	1.1	1.8	0.5
화재	0.6	0.8	0.5
유독물 중독	0.6	0.8	0.3
자해(자살)	24.3	34.9	13.8
가해(타살)	0.8	0.8	0.8
기타	10.5	11.9	9.1

주: 1) 사망률은 해당 인구집단 인구 10만 명당 해당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7.

월별로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비슷했으나 원인별로 분석하면 조금씩 다른 발생 양상을 보였다. 교통사고나 낙상은 월별로 특이한 양상이 없이 고루 분포하는 편이었으나 익사는 주로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집중되었고 화재는 겨울철인

[그림 X-25] 손상사망 원인별 발생 시기(계절), 2017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원자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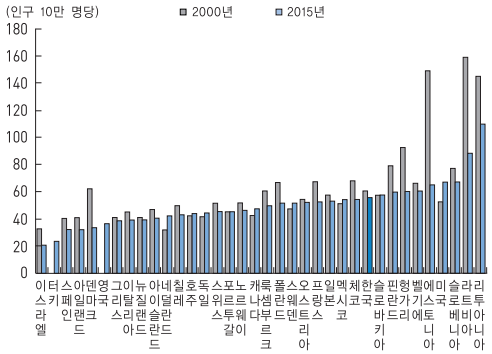
12월에 집중되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도 겨울철에 많이 발생해 계절별 발생 양상이 달랐다. 자살은 봄철에 약간 많이 발생하였고 겨울에는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범죄 등으로 인한 타살과 유독물 중독은 상대적으로 봄철에 많이 발생하였다(그림 X-25).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특성 국제비교

OECD 국가들의 사망원인을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국가별로 이 경향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은 2000년 61.3명에서 2009년 66.2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2000년 58.1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5년 53.4명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2000년 53.6명이었던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점점 증가하여 2015년에는 한국보다 많은 67.5명이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영국(2015년 37.3명)과 네덜란드(2015년 42.7명)도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은 한국보다 현저히 낮지만 2000년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21.3명)이며 가장 높은 국가는 리투아니아(110.4명)이고 한국(56.4명)은 일본(53.4명), 멕시코(54.8명), 헝가리(60.7명)와 비슷한 중간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그림 X-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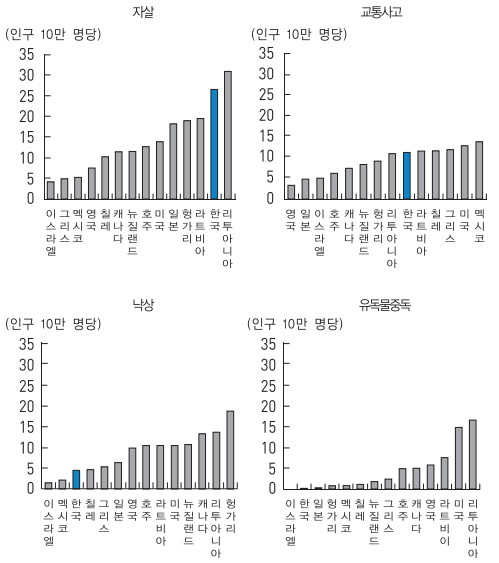
[그림 X-26] OECD 국가의 손상 사망률, 2000, 2015



주: 1) 2015년 자료의 경우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2013년 자료이고, 아일랜드, 포르투갈, 프랑스, 슬로바키아 등은 2014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Stat(https://stats.oecd.org/).

원인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자살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낙상이나 중독 등으로 인한 사망률은 낮은 편이다. 한국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2015년 26.5명으로 리투아니아(30.8명) 다음으로 높았으며 제일 낮은 이스라엘(4.1명)보다 6.5배나 높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2015년 10.9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높은 멕시코(13.5명), 미국(12.6명), 그리스(11.6명), 칠레(11.3명), 라트비아(11.2명)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추락이나 낙상으로 인한 사망은 4.5명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으로 이스라엘(1.6명), 멕시코(2.2명) 다음으로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약물 등 중독으로 인한 사망 역시 매우 낮은 편으로 가장 낮은 국가인 이스라엘(0.0명) 다음으로 낮은 사망률(0.4명)을 보였다(그림 X-27).

[그림 X-27] OECD 주요 국가의 주요 손상사망원인별 사망률, 2015



주: 1)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2013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Stat(https://stats.oecd.org/).

맺음말

과거에 사고로 인한 손상은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식하였으나 최근에는 다른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예방 가능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안전 과학 전문 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y Inc.)은 각 국가의 비의도적 손상 발생 위험과 이를 예방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계량화하여 국가별 안전지수(UL safety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 기준으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21위를 차지했다. 국내에서도 범죄, 자살, 이혼 등 사회적 안전과 재난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 식품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계량화한 국민안전지수를 지역별로 매년 발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예방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이런 국가적 노력에 힘입어 국내 손상사고 발생률과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원인별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안전벨트 의무화와 음주운전 단속 등 강력한 국가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줄고 있으나 낙상으로 인한 사망은 오히려 약간 증가하고 있고, 화재로 인한 사망도 줄지 않고 있으며 대형화재로 인한 사망사고도 간간이 발생하여 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손상의 원인별로 손상이 발생하는 연령이나 장소 등 특성이 매우 다르므로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원인별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예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가미래연구원. 2018.「국민안전지수 2018년 1분기」. 국가미래연구원.
질병관리본부. 2017.「2015 퇴원손상통계」. 질병관리본부.
WHO. 1998. *Safety and Safety Promotion: Conceptual and Operational Aspects.* WHO.
Underwriters Laboratory Inc. 2017. *The UL Safety Index Quantifying the Global State of Safety 2017 edition.* Underwriters Laboratory Inc.

젠더폭력의 실태와 변화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 살해는 2009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379건, 일평균 1.04건의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국의 살인(기수)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은 51%로 OECD 26개국 평균치인 36.1%보다 훨씬 높다.
- 전통적인 유형의 젠더폭력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는데, 성폭력범죄는 2016년 2만 9,357건, 인구 10만 명당 56.8건, 일평균 80.4건이 발생하였다. 가정폭력 범죄자 검거인원은 2017년 4만 5,206명, 성매매 검거인원은 2016년 4만 5,041명까지 증가하였다. 2017년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성희롱 접수사건은 29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상대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스토킹은 2016년 555건, 디지털 성범죄는 6,364건까지 증가하였고, 데이트폭력 검거인원은 2017년 1만 303명에 이른다.
- 이러한 증가는 젠더폭력 발생 자체가 증가한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율이 증가하고, 정부의 대응체계가 강화되어 피해사례가 이전보다 쉽게 드러나는 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젠더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여성들의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 피해 경험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1993년 12월 12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에 의하면, 여성폭력이란 "공적 혹은 사적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혹은 심리적 해악이나 고통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성별(젠더)에 기반한 폭력행위(gender-based violence),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압 또는 자유의 박탈"을 의미한다. 이 선언은 국제협약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정의한 최초의 국제문서로 1990년대 국제사회에서 여성폭력 문제를 의제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젠더폭력'이란 생물학적 '성(sex)'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의미의 성인 '젠더(gender)', 즉 성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을 통칭하며, 성폭력·가정폭력 등 전통적인 폭력범죄 이외에도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폭력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강간 등 각종 폭력과 스토킹, 불법카메라 촬영, 데이트폭력 등 신종 폭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젠더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관한 국제기준은 각 국가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성별에 기초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행위특성별로 규정된 개별입법별로 처벌 및 피해

자보호 등이 포함되어있어, 포괄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젠더폭력의 발생 실태와 특성을 폭력 유형별로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젠더폭력인 여성 살인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과 같은 전통적인 젠더폭력,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젠더폭력 유형인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특성을 논의한다.

여성 살해(femicide)

여성 살해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여성폭력이다. 특히 살인범죄 발생률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형사사법통계 중 가장 정확한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젠더폭력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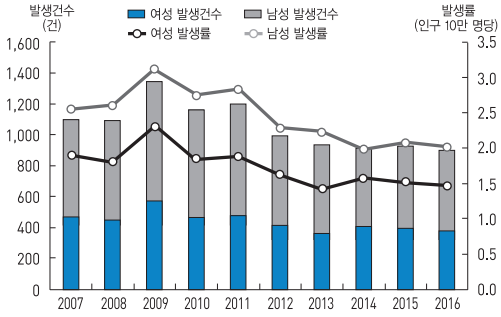
'여성 살해(femicide)'는 젠더 중립적인 용어인 '살인(homicide)'이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사회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19세기에 등장한 용어이다. 여성 살해는 마녀사냥, 명예살인, 무력 분쟁에 따른 살인 등 직접적인 살해 뿐 아니라 낙태수술, 여성 성기절단, 인신매매 등과 같은 유해한 사회적 관행이나 학대로 인한 죽음 등 간접적인 살해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여성에 대한 살해라는 개념을 넘어 모든 형태의 성차별적인 살해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다.

여성 대상 살인범죄(살인, 미수, 예비, 음모, 방조죄 포함) 발생건수는 2007년 467건에서 2009년 570건까지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감소추세로 2016년 현재 379건이다. 발생률로 보면 2007년 여성인구 10만 명당 1.9건에서, 2009년 2.3건, 2016년 현재 1.5건이다.

남성 대상 살인범죄는 발생건수가 여성보다 조금 많은데, 증감 추이는 유사하여, 2007년 631건(남성 인구 10만 명당 2.6건)에서 2009년 777건(남성 인구 10만 명당 3.1건)으로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감소하여 2016년 521건(남성 인구 10만 명당 2.0건)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여성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있는 범죄사건은 379건 발생하였고, 하루에 1.04건의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남성 살해 사건은 하루에 1.43건 발생하였다(그림 X-28).

[그림 X-28] 살해 발생건수 및 발생률, 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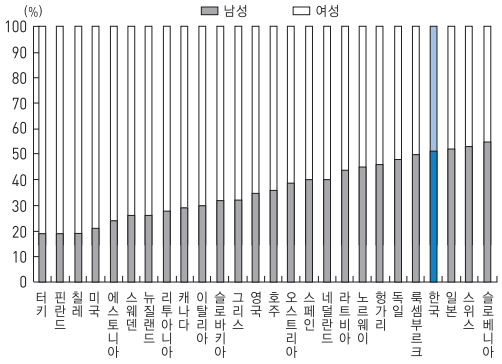


주: 1) 살인범죄는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이외에도 미수, 예비, 음모, 방조를 포함함.
2) 여성살해 발생률=(여성살해 발생건수÷여성 주민등록인구수)×100,000.
3) 남성살해 발생률=(남성살해 발생건수÷남성 주민등록인구수)×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지난 10년간 살인범죄 피해자의 성별 구성비 평균값은 남성 58.6%, 여성 41.4%로 남성비율이 여성보다 17.2%p 높다(그림X-28).

그러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의 자료를 토대로 국가별로 살인범죄 피해자의 성별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여성 살인피해자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26개국을 대상으로 미수범죄 등을 제외하고,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사건의 여성 피해자 비율을 분석하면, 한국은 51%로 26개국 평균치인 36.1%보다 훨씬 높다. 한국은 슬로베니아(55%), 스위스(53%), 일본(52%)의 3개국에 비하여 조금 낮지만, 터키(19%), 핀란드(19%), 칠레(19%), 미국(21%), 에스토니아(24%) 등 22개국에 비하여 높다(그림X-29).

[그림X-29] OECD 국가의 살인범죄 피해자 성별 구성비, 2015



주: 1) 국가별 살인율은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만 해당됨.
2) 터키는 2012년 자료, 뉴질랜드는 2013년 자료, 칠레, 일본, 한국, 헝가리, 노르웨이, 영국, 룩셈부르크는 2014년 자료, 그 외 국가는 2015년 자료임.
출처: UNODC, UNODC Statistics(https://data.unodc.org).

전통적 젠더폭력 발생 현황과 변화

우리 사회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형사사법기관에 신고 혹은 인지된 성폭력범죄는 2만 9,357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56.8건에 달하며, 하루에 80.4건, 시간당 3.4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의 1만 4,344건에서 2015년에 3만 건을 넘어서서, 인구 10만 명당 60.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2016년 소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성폭력범죄 발생 자체가 증가한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성폭력에 대한 사

〈표 X-9〉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 2007-2016

연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건)	전년 대비 증감률 (%)	
2007	14,344	-	29.1
2008	16,129	112.4	32.6
2009	17,377	107.7	34.9
2010	20,584	118.5	40.7
2011	22,168	107.7	43.7
2012	23,365	105.4	45.9
2013	29,090	124.5	56.9
2014	29,863	102.7	58.2
2015	31,063	104.0	60.3
2016	29,357	94.5	56.8

주: 1) 관련 유형: 강간(간음포함), 강제추행, 강간 등(강간과 강제추행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강도 강간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의 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 장소 추행.
2) 발생률=(발생건수÷전체 주민등록인구수)×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율이 증가하고, 정부의 성폭력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체계가 강화되어 피해사례가 이전보다 쉽게 드러나는 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표 X-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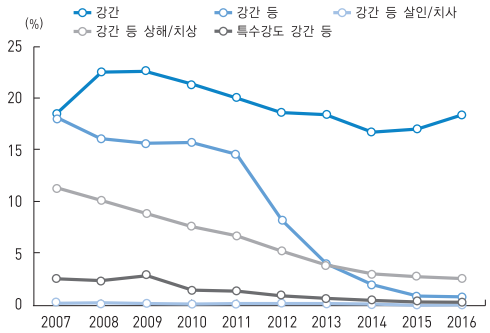
성폭력범죄를 10개의 하위유형으로 세분하여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강간', '강간 등',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강간 등 살인/치사'와 '공중밀집장소추행' 비율은 뚜렷한 변동이 없는 반면, '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비율은 증가 추세이다. 따라서 최근 성폭력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강간이나 강간 등 상해/치상 등과 같은 심각한 유형의 범죄보다는 강제추행이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X-30).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이 증가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폭력범죄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강제추행범죄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결과, 성폭력범죄의 기소인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수인원에 대비한 기소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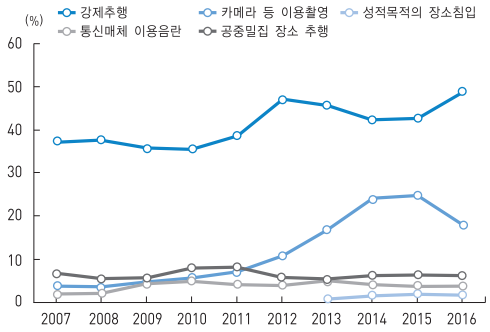
2012년 성폭력범죄 기소율은 43.5%(접수인원 2만 3,119명, 기소인원 1만 68명)이나, 2017년에는 35.1%까지 감소하였다(접수인원 4만 918명, 기소인원 1만 4,362명)(그림 X-31).

[그림 X-30] 성폭력범죄 유형별 구성비, 2007-2016

1) 강간 등 성폭력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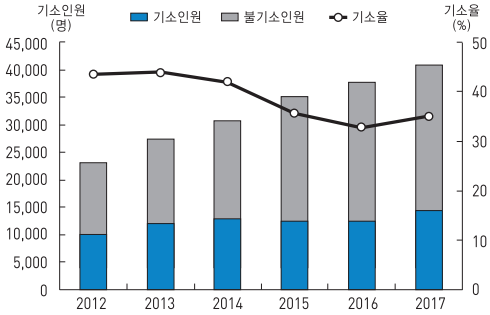


2) 강간 외 성폭력범죄



주: 1) '강간 등'은 강간과 강제추행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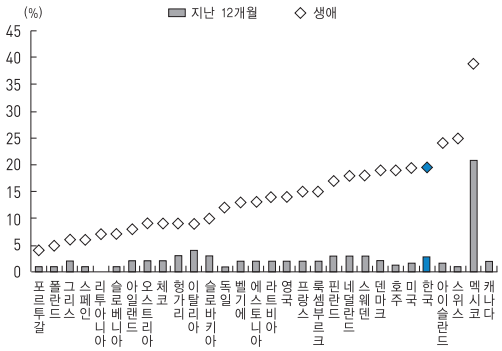
[그림 X-31] 성폭력범죄 기소율, 2012-2017



주: 1) 기소율=[기소인원÷(기소인원+불기소인원)]×100.
2) 관련 죄명: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강간, 특수강간).
출처: 대검찰청, 내부자료.

UN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생애 혹은 지난 1년간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비율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한국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생애동안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여성비율의 경우, 한국은 2013년 현재 19.5%로 29개국 평균 13.9%보다 높으며, 멕시코, 스위스, 아이슬란드에 이어 4번째로 높다. 지난 1년간의 성폭력 피해경험비율의 경우 한국은 30개국 평균 2.6%와 유사한 2.7%로, 멕시코, 이탈리아, 헝가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슬로바키아에 이어 8번째로 높다(그림Ⅹ-32).

[그림Ⅹ-32] OECD 국가의 여성 성폭력 피해 경험률,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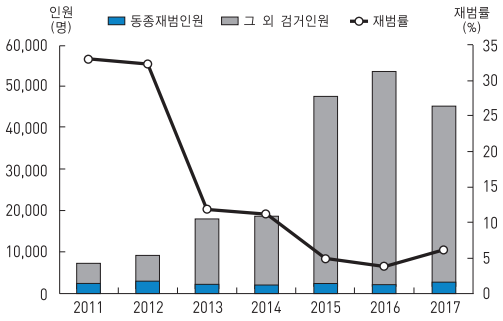


주: 1) 자료는 한국의 경우 2013년, 아이슬란드 2008년, 스위스 2003년, 멕시코와 미국 2011년, 호주 2012년, 캐나다 2009년, 그 외 국가는 2014년임.
2) 조사대상은 각국 18-74세 여성임. 단, 한국은 19-65세 기혼, 아이슬란드는 18-80세, 포르투갈은 18-74세 현재 또는 이전에 파트너가 있는 여성, 스위스는 18-69세, 영국은 18-74세 잉글랜드 및 웨일즈 거주 여성(생애 기준은 16세 이후), 멕시코는 15세 이상 현재 결혼 또는 파트너가 있는 여성, 캐나다는 15세 이상, 미국과 호주는 18세 이상임.
출처: UN, *The World's Women 2015: Trends and Statistics*, 2015.

가정폭력범죄자 검거인원은 지난 7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7,272명에서, 2016년 5만 3,51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전년보다 조금 감소한 4만 5,20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같이 가정폭력범죄의 발생이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은, 가정폭력범죄가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신고율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수준에 따라 발생률이 크게 좌우되는 범죄이며,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처리의 적극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검거인원 중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동종재범자 비율은 2011-2012년에는 32%대로 매우 높았으나, 2013-2014년에는 11%대, 2015-2017년에는 약 5%대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7년 동안 검거인원은 약 6배 넘게 크게 증가한 반면, 동종재범자 수는 2,000명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증가된 검거인원의 많은 수가 가정폭력범죄를 처음 저지른 초범임을 알 수 있다(그림Ⅹ-33).

[그림Ⅹ-33] 가정폭력사범 검거인원과 동종재범률, 2011-2017



주: 1) 검거인원=동종재범인원+그 외 검거인원.
2) 동종재범률=(동종재범인원÷검거인원)×100.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연도.

국내 성매매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통계는 대검찰청 혹은 경찰청 내부자료이다. 다만 성매매범죄는 수사기관의 단속노력과 처벌의지에 영향을 크게 받는 범죄유

〈표 X-10〉 성매매 검거인원 및 발생률, 2012–2017

연도	성매매 검거인원		발생률 (%)
	인원수 (명)	전년 대비 증감률 (%)	
2012	19,035	-	0.04
2013	18,306	96.2	0.04
2014	24,251	132.5	0.05
2015	20,966	86.5	0.04
2016	45,041	214.8	0.09
2017	25,491	56.6	0.05

주: 1) 관련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성매매강요등, 성매매알선등, 성매매광고, 성매매),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2) 증감률=(검거인원÷전년도 검거인원)×100.
3) 발생률=(검거인원÷전체 주민등록인구수)×100.
출처: 대검찰청, 내부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표 X-11〉 성희롱 접수건수 및 발생률, 2013–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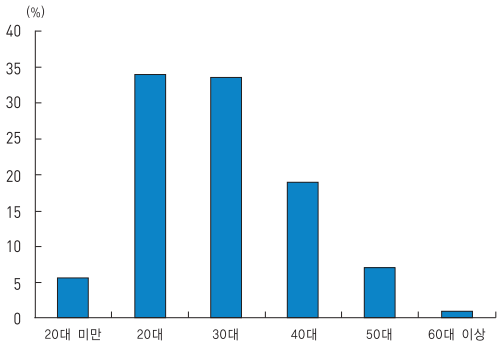
연도	성희롱 접수건수		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건수 (건)	전년 대비 증감률 (%)	
2013	240	-	0.5
2014	235	97.9	0.5
2015	203	86.4	0.4
2016	205	101.0	0.4
2017	294	143.4	0.6

주: 1) 관련 죄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2) 접수건수는 검찰, 경찰, 구금시설, 군대,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교육기관, 공공기관, 사법인, 개인회사, 단체, 사인(개인), 요양시설, 기타 등 기관별 성희롱 진정 접수 건을 모두 합한 수치임.
3) 발생률=(접수건수÷전체 주민등록인구수)×100,000.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7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2018.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형이므로, 검거인원의 증감이 발생건수의 증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대검찰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검거인원은 2012년 1만 9,035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4만 5,041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17년 크게 감소하여 2만 5,491명으로 감소한 상태이다. 전체 인구 중 성매매 관련 죄명으로 검거된 사람의 비율은 2012년 0.04%에서 2016년 0.09%까지 증가하였다가, 2017년 0.05%로 감소하였다(표 X-10).

[그림 X-34] 성희롱 피해자 연령, 2017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7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2018.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 접수된 성희롱 접수건수를 합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성희롱 접수건수는 2013년 240건에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203건과 205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7년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294건으로 증가하였다. '미투운동'이 본격화된 2018년에는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표 X-11).

2017년 접수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86.1%이고 남성은 13.9%이다. 피해자 연령은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아서 각각 34.0%와 33.5%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40대(19.0%), 50대(7.0%), 20대 미만(5.5%), 60대 이상(1.0%)의 순이다(그림 X-34).

새로운 젠더폭력 발생 현황과 변화

상대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이라 할 수 있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는 단일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식통계가 아닌 경찰청의 내부자료에 근거하여 발생규모를 파악하거나, 일부 죄명에 국한하여 발생통계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야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발생추이를 장기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이러한 통계집계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 유형의 젠더폭력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토킹은 단일법으로 처벌되지 않아, 형사사법기관에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스토킹 관련행위 위반으로 검거된 사례만으로 발생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스토킹 발생건수는 2013년 312건, 2014년 297건이었다가, 2015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555건이 발생하였다. 전체 인구 10만 명당 스토킹 발생건수는 2013년 0.61건, 2014년 0.58건, 2015년 0.70건이었다가 2016년에 1.07건으로 증가하였다(표 X-12).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하위유형으로 포함하여 발생건수를 집계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통신매체 이용음란' 위반건수를 중심으로 발생실태를 살펴보면, 2011년 2,476건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8,869건으로 늘어났고, 2016년에는 6,364건으로 감소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역시 2011년 4.9건, 2012년 6.6건, 2013년 12.4건, 2014년 15.6건, 2015년 17.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협의체가 구축되고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X-13).

〈표 X-12〉 스토킹 발생건수 및 발생률, 2013-2016

연도	스토킹 발생건수		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건수 (건)	전년 대비 증감률 (%)	
2013	312	-	0.61
2014	297	95.2	0.58
2015	363	122.2	0.70
2016	555	152.9	1.07

주: 1) 관련 죄명: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2) 발생률=(발생건수÷전체 주민등록인구수)×100,000.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표 X-13〉 디지털성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 2011-2016

연도	디지털성범죄 발생건수		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건수 (건)	전년 대비 증감률 (%)	
2011	2,476	-	4.9
2012	3,379	136.5	6.6
2013	6,319	187.0	12.4
2014	7,989	126.4	15.6
2015	8,869	111.0	17.2
2016	6,364	71.8	12.3

주: 1) 발생건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매체 이용음란 발생건수를 각각 합한 수치임.
2) 발생률=(발생건수÷전체 주민등록인구수)×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최근 들어 연인 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이 커지자, 2016년 2월 전국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 팀'을 구성하고 '연인 간 폭력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형사사법 기관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검거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7,584명이었다가 2014년 6,67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이후 전년 대비 10% 이상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검거인원이 1만 303명에 이른다(표 X-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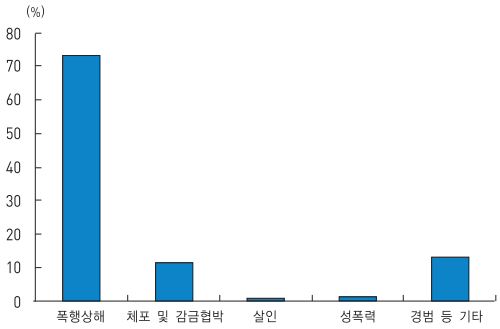
〈표 X-14〉 데이트폭력 검거인원 및 발생률, 2012-2017

연도	데이트폭력 검거인원		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인원수 (명)	전년 대비 증감률 (%)	
2012	7,584	-	14.9
2013	7,237	95.4	14.2
2014	6,675	92.2	13.0
2015	7,692	115.2	14.9
2016	8,367	108.8	16.2
2017	10,303	123.1	19.9

주: 1) 증감률=(검거인원÷전년도 검거인원)×100.
2) 발생률=(검거인원÷전체 주민등록인구수)×100,000.
3) 검거인원은 경찰청 내부자료 이용(전국 자료).
출처: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데이트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2018.

데이트폭력의 유형은 살인에서부터 성폭력, 폭행 상해, 경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017년 검거된 사건 중에서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폭행·상해(73.3%)가 가장 많고, 체포·감금·협박(11.5%), 성폭력(1.3%), 살인(0.7%)의 순이다(그림 X-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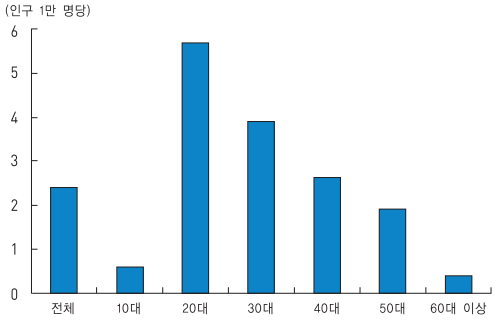
[그림 X-35] 데이트폭력 범죄유형별 구성비, 2017



주: 1) 경찰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임(전국 자료).
출처: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데이트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2018.

2017년 검거된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연령을 토대로 1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연령대별로 인구 1만 명당 데이트폭력 가해자수를 분석하면, 10대 0.59명, 20대 5.69명, 30대 3.89명, 40대 2.62명, 50대 1.91명, 60대 이상 0.40명으로 나타나 20대와 30대에서 가해자 발생률이 높았다. 전체 인구 1만 명당 가해자 수는 2.40명이다(그림 X-36).

[그림 X-36] 연령별 인구 1만 명당 데이트폭력 가해자 수,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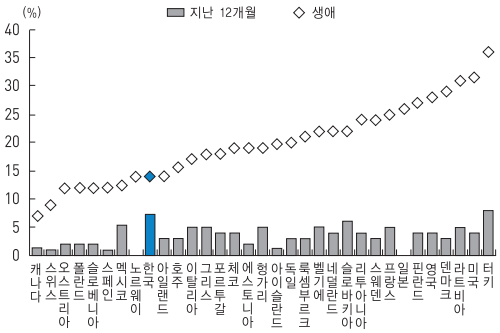
주: 1) 경찰청 내부자료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임(전국 자료).
출처: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데이트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2018.

여성의 친밀한 관계의 사람으로부터 당한 신체적 폭력 피해

UN에서는 젠더폭력 유형별로 통계를 집계하기도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intimate partners)으로부터 당하는 신체적 폭력 경험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국가마다 자료시점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 평생 피해율의 경우 한국은 2007년 현재 14.0%로 OECD 31개국 중 하위 9번째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피해율의 경우 한국은 2013년 현재 7.2%로 31개국 평균 3.7%보다 훨씬 높은 피해율을 보였고, 터키(8%)를 제외한 나머지 29개국보다 피해율이 높다. 이 같은 비교결과는 최근 10여 년간 국내 성폭력 등 젠더폭력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이다(그림X-37).

[그림 X-37] OECD 국가의 친밀한 파트너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여성 비율, 2014



주: 1) 생애 동안 신체적 폭력을 당한 여성 비율 자료는 일본의 경우 2010년, 한국 2007년,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2008년, 스위스 2003년, 멕시코와 미국 2011년, 캐나다 2004년, 호주 2012년, 그 외 국가는 2014년임.

2) 지난 12개월 이내 신체적 폭력을 당한 여성 비율 자료는 한국 2013년, 아이슬란드 2008년, 스위스 2003년, 멕시코 2011년, 캐나다 2009년, 호주 2002-03년, 그 외 국가는 2014년임.

3) 조사대상은 각 국 18-79세 여성임. 단, 일본은 전연령, 한국은 2007년 20-65세, 2013년 19-65세 기혼, 터키는 15-59세 기혼, 아이슬란드는 18-80세, 노르웨이는 20-55세 파트너가 있는 여성, 포르투갈은 18-74세 현재 또는 이전에 파트너가 있는 여성, 스위스는 18-69세, 영국은 16-74세 잉글랜드 및 웨일즈 거주 여성, 멕시코는 15세 이상 현재 결혼 및 파트너가 있는 여성, 캐나다는 15세 이상, 미국은 18세 이상, 호주는 2012년 18세 이상, 2002-03년 18-69세임.

출처: UN, *The World's Women 2015: Trends and Statistics*, 2015.

2018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8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XI 사회통합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 연세대학교 308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의 관계 한 준 | 연세대학교 318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26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연세대학교)

- 2000년대 들어 선거 투표율은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가장 높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선거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 사회단체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높아졌지만 실제 참여율은 소폭 하락했다. 동호회 참여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단체 참여율이 하락했다.
- 자원봉사 및 기부 활동 참여도 모두 하락했는데, 특히 기부활동 참여의 하락이 두드러진다.
- 가족이나 친척과 접촉하는 빈도가 줄어든 반면 그 외 사람들과 접촉하는 빈도는 늘어나고 있다.
- 어려울 때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대의 사회적 고립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 삶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20대의 하락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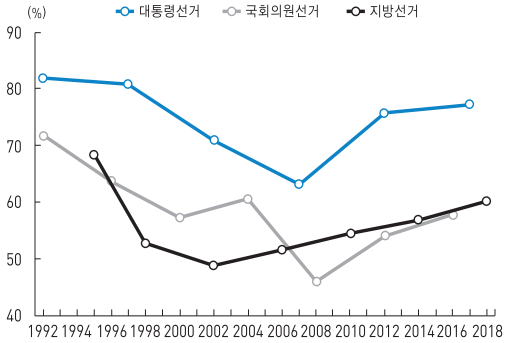
사회통합은 사회와 개인 간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며, 사회 성원들 간에도 조화롭고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은 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개인들은 사회에 참여하기를 꺼리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 성원들 간의 관계가 조화롭지 못하거나 친밀한 관계가 줄어들면 협력과 지지가 줄어들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심하고 포용적이지 못하면 사회 성원들 간의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국 사회는 다양성이 높아지고 불평등 수준 또한 높아져서 사회통합에 대한 도전이 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요구는 사회통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사회통합의 여러 측면에 걸쳐 최근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정치·사회적 참여

사회에 대한 참여의 대표적인 경우가 정치적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림 XI-1]은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주요 선거별 투표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 선거의 투표율은 모두 2000년대 중반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반전을 보여 최근까지 상승하고 있다. 투표율의 상승세는 완만하기는 하지만 최근의 2016년 국회의원 선거(58.0%), 2017년 대통령 선거(77.2%), 2018년 지방자치 선거(60.2%)까지 모두 일관되게 나타났다. 선거들을 비교하면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가장 높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그림 XI-1]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투표율, 199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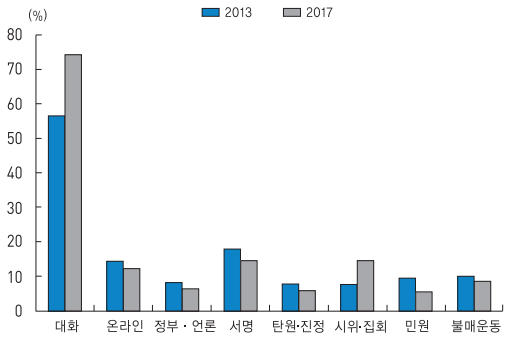
주: 1) 투표율=(투표자 수÷등록선거인 수)×1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선거 참여는 정치적 참여의 기본이지만 그밖에도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참여의 유형은 다양하다. [그림 XI-2]는 다양한 정치적 참여의 유형별로 참여 정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사회통합실태조사」 분석 결과의 비교를 보여준다.

2013년에 비해 2017년에 가장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은 정치, 사회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경험이다. 2013년 56.4%에서 2017년에는 74.1%로 늘었다. 시위나 집회 참여 경험도 2013년 7.5%에서 2017년 14.4%로 두 배가 조금 못되게 증가했다. 하지만 그 밖의 경험들은 2013년에 비해 2017년에 감소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시위 및 집회 참여의 증가를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20대는 7.5%에서 18.0%로, 40대는 8.4%에서 15.1%로, 60대는 5.5%에서 10.4%로 대부분 연령대에서 증가했지만, 특히 두드러진 증가는 20대에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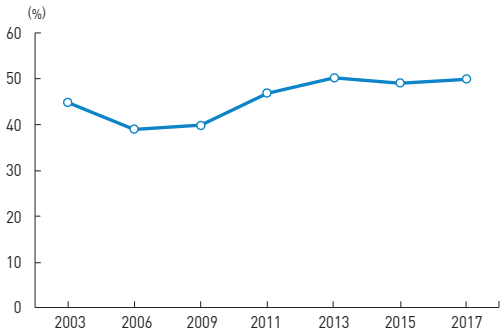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투표나 그 밖의 정치행위 외에도 사회적 참여는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림 XI-3]은 「사회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2003년에서 2017년에 이르기까지 하나 이상의 사회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한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XI-2]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 2013, 2017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참여율은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2017.

[그림 XI-3] 사회단체 참여율, 2003-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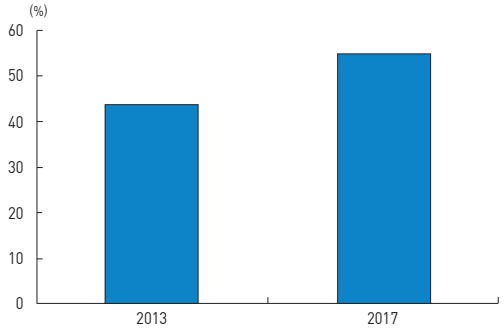
주: 1) 전국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2003-2009년은 15세 이상 인구임).
2) 참여율은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사회단체 참여율은 2003년에서 2006년 사이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2013년까지 38.8%에서 50.1%까지 꾸준히 증가하지만 이후 정체되어 2015년 48.9%, 2017년 49.7%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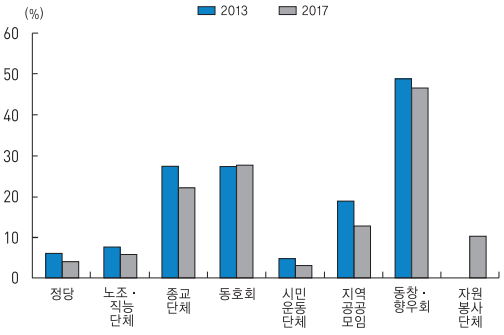
사회단체 참여율은 단체 종류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며, 최근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림 XI-4]는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사회단체별 참여율이 2013년과 2017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준다. 사회나 정치단체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3.4%에서 54.5%로 높아졌다. 하지만 단체들에 실제로 참여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감소의 폭이 큰 것은 지역사회 공공모임 참여로 19.0%에서 12.6%로 줄었다. 정당, 노조나 이익단체, 자원봉사 및 기부단체뿐 아니라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인 동창회나 향우회도 최근 참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참여가 늘어난 단체는 개인의 취미를 위주로 한 동호회로 27.3%에서 27.7%로 참여가 늘었다.

[그림 XI-4] 사회·정치 단체 활동의 중요성 인식과 단체 유형별 참여율, 2013, 2017

1) 사회·정치 단체 활동의 중요성 인식



2) 사회·정치 단체 유형별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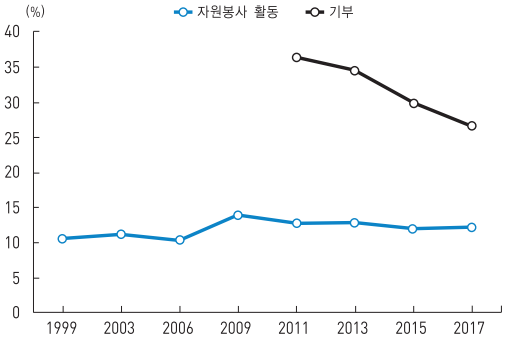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중요성 인식은 조사대상자 중 사회정치단체 활동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단체 유형별 참여율은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4) 자원봉사단체 참여율의 경우 2013년에는 조사되지 않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2017.

사회참여 중에서 특히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기부 및 자원봉사이다. 기부 및 자원봉사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물론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래 [그림 XI-5]는 「사회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지난 1년간 기부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변화를 2011년에서 2017년까지, 그리고 지난 1년간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변화를 1999년에서 2017년까지 보여준다. 자원봉사의 경우 10대 학생들은 대부분 입시와 관련하여 봉사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20대 이상에 한정해서 측정하였다. 먼저 자원봉사에 참여한 비율의 변화를 보면 1999년 10.5%에서 2009년 13.8%까지 증가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7년에는 12.1%인 것으로 나타

났다. 기부의 경우 2011년 처음 조사했을 때 36.4%가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2017년에는 2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4%p 넘게 기부율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XI-5] 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율, 1999-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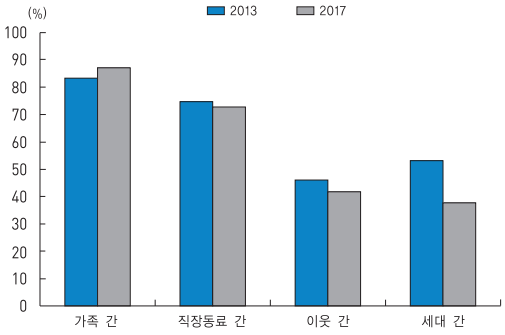
주: 1) 자원봉사 참여율은 만 20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기부 참여율은 만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물은 결과 2015년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63.5%이고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15.2%였던 반면, 2017년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57.3%로 감소했고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의 비율은 23.2%로 증가했다. 특히 세대별로 기부하지 않는 이유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2017년 조사 결과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 20대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54.2%, 기부에 대한 무관심이 24.4%인 반면, 60대 이상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68.2%이고 기부에 대한 무관심이 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와 지지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게 작동하려면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공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집단별로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조사한 결과 [그림 X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과 직장에서는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각각 80%와 70%를 넘어서 높은 반면, 이웃 간이나 세대 간에는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대체로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2017년을 비교해보면 직장에서의 소통에 대한 평가는 큰 변화가 없고, 가족 간에는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

[그림 XI-6] 사회적 관계별 소통 수준, 2013, 2017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소통 수준은 조사대상자 중 해당 사회적 관계 간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또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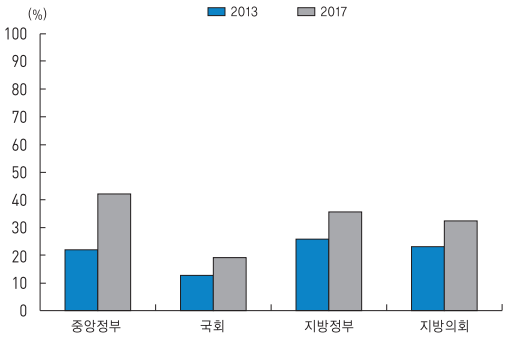
타난 반면, 이웃 간 소통에 대해서는 잘 된다는 응답이 46.1%에서 41.8%로 4.3%p, 세대 간 소통에 대해서는 잘된다는 응답이 53.0%에서 37.6%로 15.4%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간 소통과 세대 간 소통에 대해서는 세대 간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웃 간 소통의 경우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소통이 잘 된다는 응답 비율이 20대는 28.9%에서 28.1%로 큰 변화가 없이 낮은 반면, 50대는 59.1%에서 48.1%로, 60대는 63.9%에서 54.6%로 크게 낮아졌다. 세대 간 소통에서도 같은 기간 소통이 잘 된다는 응답의 비율은 20대에서는 43.7%에서 32.8%로 10.9%p 낮아진 반면, 50대는 60.2%에서 37.3%로, 60대는 55.3%에서 38.7%로, 각각 22.9%p, 16.6%p 낮아져 20대에 비해 더 크게 낮아졌다. 최근 들어 50대와 60대에서 이웃 간, 세대 간 소통의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원활한 민주주의 운영의 기초가 되는 공권력과 국민 간의 소통에 대한 평가도 질문하였다. [그림 XI-7]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와 국민 간의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한 응답을 2013년과 2017년을 비교해서 보여준다. 그림을 보면 중앙정부와 국민 간 소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2013년 22.1%에서 2017년에 42.5%로 크게 높아졌다.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국민 간의 소통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일관되게 높아졌다.

중앙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대가 20.5%에서 46.8%로, 50대는 25.4%에서 41.9%로, 60대는 27.0%에서 35.4%로 모든 연령대에서 높아졌으며, 증가폭은 20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2013년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 평가비율이 높지만, 2017년에는 이 관계가 역전되어 연령대가 낮을수록 긍정 평가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림 XI-7] 주요 공공기관별 국민과의 소통 수준, 2013,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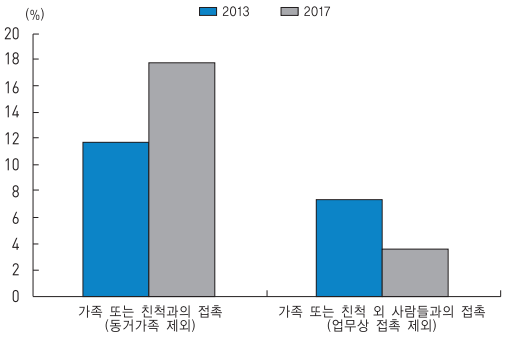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소통 수준은 조사대상자 중 해당 공공기관과 국민 간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또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2017.

사회적 관계와 지지에서의 변화를 알기 위해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하루 중 연락한 가족이나 가족 외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경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비율을 비교한 결과가 [그림 XI-8]과 [그림 XI-9]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비해 2017년에는 하루 동안 가족이나 친척과 접촉이 없는 비율은 11.7%에서 17.8%로 증가하지만, 가

족 외 사람과 접촉이 없는 비율은 7.4%에서 3.6%로 감소하였다. 결국 가족이나 친척과의 연락은 줄어든 대신 가족 이외의 사람과의 연락이나 접촉은 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XI-8). 특히 가족 또는 친척과 연락이나 접촉이 없는 비율의 증가는 60대(17.0%→17.9%)보다 20대(14.3%→27.5%)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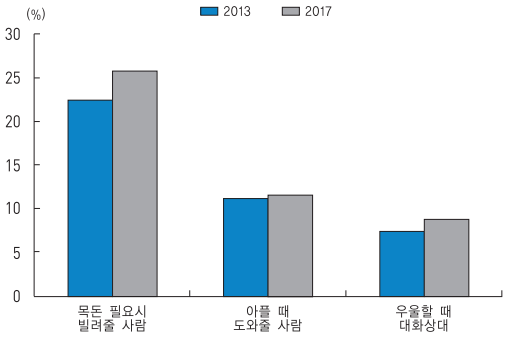
[그림 XI-8] 가족·친척이나 그 외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 2013, 2017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조사대상자 중 평일 하루에 가족 및 친척 혹은 그 이외 사람들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접촉은 전화, 우편, 인터넷, 대면 등의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인사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2017.

한편 사회적 지지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 빌릴 사람,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 우울할 때 대화할 사람이 없는 비율이 모두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완만하게 늘어났다(그림 XI-9). 세대별로 비교하면 특히 20대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고립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목돈이 필요할 때 빌릴 사람이 없는 비율은 16.0%에서 28.1%로,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9%에서 11.3%로, 우울할 때 대화할 사람이 없는 비율은 3.3%에서 7.9%로 크게 늘었다. 반면 60대에서는 목돈을 빌릴 사람이 없는 비율이 40.3%에서 31.1%로,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18.1%에서 15.8%로, 우울할 때 대화할 사람이 없는 비율이 14.0%에서 12.0%로 줄어들었다.

[그림 XI-9] 어려울 때 도움 요청 상대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 2013, 2017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조사대상자 중 해당 상황 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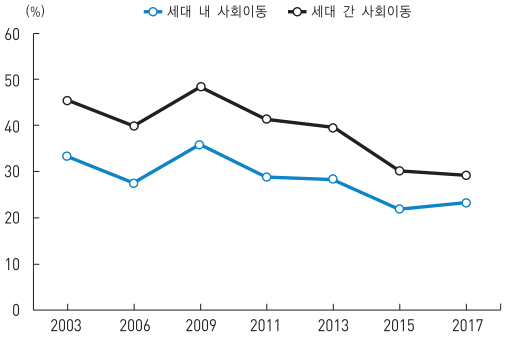
사회적 이동가능성 인식

사회적 이동가능성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의미한다. 사회적 이동가능성을 높게 볼수록 사람들은 그 사회의 기회구조를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포용성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사

회에서 사회적 이동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그림 XI-10]은 「사회조사」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적 이동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사회적 이동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 지위를 바꾸는 세대 내 이동과 부모-자녀 간에 지위가 변화하는 세대 간 이동으로 구분된다. [그림 XI-10]은 세대 내와 세대 간 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나누어 보여준다.

「사회조사」에 나타난 이동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세대 간 이동의 가능성을 세대 내 이동의 가능성보다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계열적 변화에서는 세대 내이건 세대 간이건

[그림 XI-10] 세대 내 및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2003-2017



주: 1) 2003-2009년은 전국 만 15세 이상, 2011-2015 전국 만 13세 이상, 2017년 전국 만 19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2)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일생 동안 노력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높다' 또는 '비교적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높다' 또는 '비교적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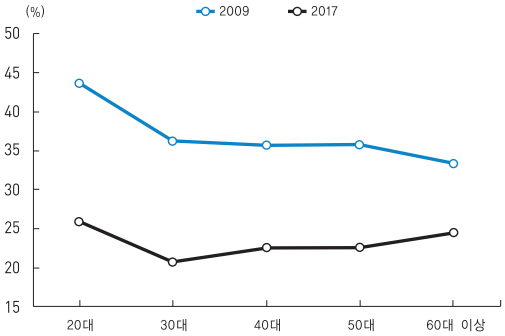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긍정적 인식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2009년에 세대 간 이동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8.3%이고, 세대 내 이동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5.7%였던 반면, 2017년에는 세대 간 이동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29.5%로 18.8%p가 낮아졌으며 세대 내 이동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23.1%로 12.6%p가 낮아졌다. 세대 내 및 세대 간 이동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XI-11]은 세대 내 및 세대 간 이동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 그래프를 보면 모든 세대에 걸쳐 세대 내 및 세대 간 이동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2009년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20대, 30대, 40대의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또한 주목할 점은 2009년에는 세대 내 및 세대 간 이동가능성에 대한 인식에서 20대를 제외하면 연령대 간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2017년에는 연령대 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2009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이동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부정적 인식의 확대가 두드러진 연령대가 젊은 세대라는 것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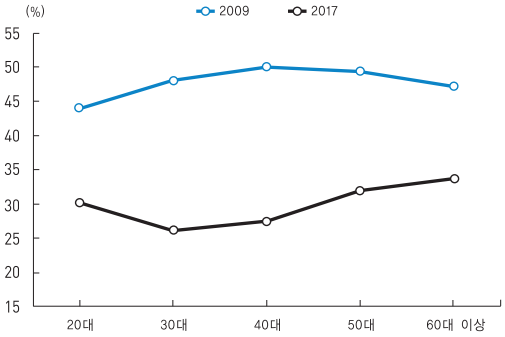
[그림 XI-12]는 OECD에서 국가별로 최저 소득 계층에 속한 가구에서 출발하여 노력을 통해 중간 소득 계층에 도달하는데 몇 세대가 걸리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그림 XI-11] 연령대별 세대 내 및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2009, 2017

1)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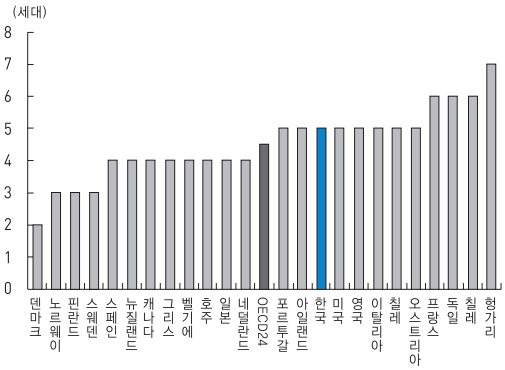
2)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



주: 1) 2009년은 전국 만 15세 이상 가구주, 2017년 전국 만 19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2)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일생 동안 노력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높다' 또는 '비교적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높다' 또는 '비교적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9, 2017.

OECD 평균은 4.5세대이며, 한국은 OECD 평균과 비슷한 5.0세대인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계층의 이동 속도가 가장 빠른 사회는 덴마크로 2세대에 불과하며, 북유럽 국가(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들이 3세대, 일본과 캐나다, 벨기에, 스페인 등이 4세대, 그리고 미국, 영국, 이탈리아, 칠레, 오스트리아 등이 한국과 같은 5세대, 그리고 프랑스, 독일 등이 6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국의 이동가능성의 국제적 수준은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XI-12] OECD 국가의 저소득가구 평균소득가구로의 이동 소요기간, 2017



주: 1) 통계치는 현재 최저 소득계층(하위 10%)에 속한 가구가 중간 소득계층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세대수임. 부자 간 소득 지속률(또는 변동률)에 기반해 추정한 결과임.
출처: OECD,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2018.

〈표 XI-1〉은 소득이동, 직업이동, 교육이동, 건강이동 등 불평등의 다양한 차원에 걸쳐 OECD 국가들의 이동가능성을 불평등 수준과 함께 평가한 결과이다. 이 표의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은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교육이동이 높고 직업이동이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소득불평등 수준이나, 소득이동, 건강이동 수준은 대체로 OECD의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 앞서 [그림 XI-12]에서 본 바와 같이 북유럽 국가들의 이동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인데 비해 남유럽과 영미권 국가들에서 이동이 대체로

부진한 편이다. 또한 직업이동의 경우에는 다른 이동과 달리 노동시장이 개방적인 편에 속하는 영국과 미국에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XI-1〉 OECD 주요 국가의 소득불평등 수준과 사회이동 가능성 평가 결과, 2017

국가	소득 불평등	분야별 사회이동 가능성			
		소득	직업	교육	건강
덴마크	낮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핀란드	낮음	높음	낮음	중간	-
스웨덴	낮음	높음	중간	높음	높음
독일	중간	낮음	중간	낮음	중간
프랑스	중간	낮음	낮음	중간	중간
한국	중간	중간	낮음	높음	낮음/중간
네덜란드	중간	중간	높음	중간	높음
캐나다	중간	높음	-	높음	높음
이탈리아	중간	중간	낮음	낮음	중간
일본	중간	중간	-	높음	-
호주	높음	중간	낮음	높음	중간
스페인	높음	높음	낮음	낮음	중간
영국	높음	낮음	높음	낮음	중간
미국	높음	중간	높음	높음	낮음/중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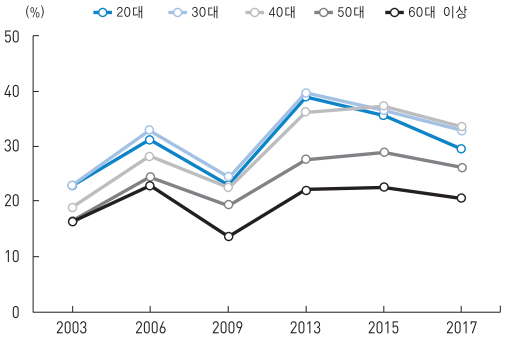
출처: OECD,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2018.

삶의 질

삶의 질 혹은 웰빙은 크게 삶의 전반적 만족도와 정서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XI-13]은 연령대별로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준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삶의 만족을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 삶의 만족은 2009년 세계경제위기 시기에 일시적으로 낮아지며, 2013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가장 삶의 만족이 낮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이며, 20대에서 40대가 가장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변화의 정도를 비교해보면 60대 이상의 경우 큰 변화가 없는 반면 20대에서 40대가 변화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2013년 이후 삶의 만족이 가장 크게 하락한 연령대는 20대인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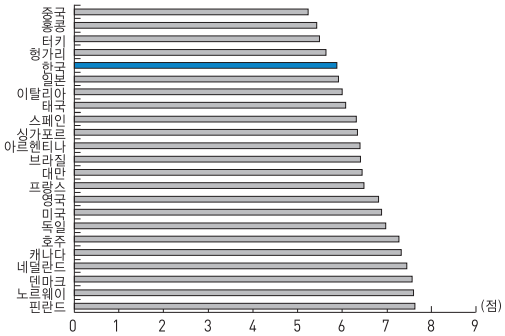
[그림 XI-13] 연령대별 삶에 대한 만족도, 2003-2017



주: 1) 전국 2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만족도는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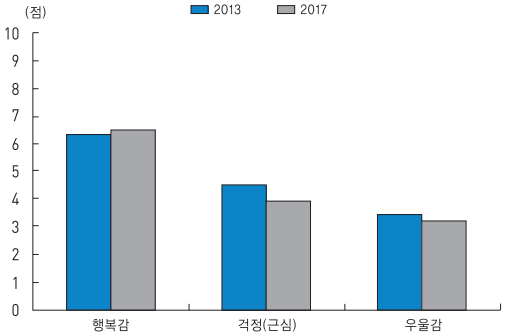
[그림 XI-14]는 갤럽세계조사의 자료를 분석해서 세계 국가들의 주관적 웰빙 수준을 비교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내용이다. 한국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2008-2010년에 비해 2015-2017년 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경제적 소득이나 생활수준에 비해 한국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의 삶의 만족 수준은 북유럽과 서유럽은 물론 남미나 남유

[그림 XI-14] 주요 국가의 행복지수, 2015-2017 평균



주: 1) 행복지수는 각 국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들이 자신의 현재 삶의 질에 대해 0-10점으로 평가한 만족도 평균 점수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18*, 2018.

[그림 XI-15] 정서 경험, 2013, 2017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해당 정서를 어제 얼마나 경험했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 점수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2017.

럽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경제수준에 비해 삶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에 공통된 현상인데 이로부터 예외적인 것은 대만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XI-15]는 웰빙의 또 다른 측면인 긍정적, 부정적 정서경험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2013년과 2017년 조사결과를 통해 비교한 것이다. 0점에서 10점 사이의 11점 척도로 정서경험을 측정한 결과 긍정적 정서인 행복감은 2017년 6.5점, 부정적 정서인 걱정과 우울감은 각각 3.9점과 3.2점이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이 중간 값인 5점보다 높고, 걱정과 우울감은 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 비해 2017년에 큰 변화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의 관계

한 준 (연세대학교)

-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과 재산의 분배에 대한 공정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한국 사회의 공정성 수준은 낮은 편에 속한다.
-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세대가 한국 사회의 공정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청년세대 남성보다 여성이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으며,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 또한 변화가 없거나 다소 낮아졌다.
- 사회 전반에 대한 공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사회 분야별 공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분야 기관들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았다.

공정성과 신뢰: 개념적 소개

공정성은 학문적으로 철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쟁점이 되어왔다. 현실에서도 공정성은 사회경제적 교환이나, 집단이나 조직, 사회에 참여하면서 성취 및 분배의 과정 및 결과를 둘러싼 평가와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되어왔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는 공정성을 둘러싼 불만과 비판이 자주 제기된다. 공정성에 대한 불만과 비판, 논란은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고 또한 공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만족도 저하, 협력이나 협동의 거부, 사회적 신뢰의 철회와 냉소적 태도, 권위에 대한 복종의 거부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공정성 수준 평가가 어떻게 변해왔고,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며, 그 결과로서 사회적 신뢰 수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경험적 현실을 살펴보기에 앞서 공정성 개념을 간략하게 논의해보자. 공정성은 정의(justice), 형평(equity), 공평(fairness) 등 다양한 용어와 혼용된다. 공정하다는 의미는 평등하다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예컨대 집단이나 사회의 공동 노력에 참여한 사람들이 성과를 모두 고르게 나눈다면 그것은 평등하겠지만 누구는 더 기여하고 누구는 덜 기여한 경우 그것이 공정하다고는 볼 수 없다. 공정성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사람들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공정성 규칙이나 규범에 비추어 공정한지 아닌지 판단한다. 예컨대 개인별 능력과 노력의 차이를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따라 같은 분배 결과를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공정성 평가의 대상도 분배에서 나의 몫(share)이 얼마인가에 대한 분배 공정성, 성취나 결과의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절차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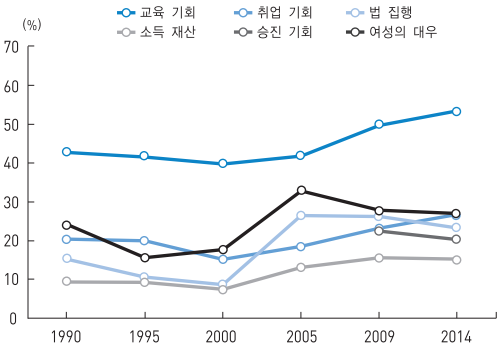
정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는가에 대한 대우(treatment)의 공정성, 경쟁과 선발에서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가의 공정성 등 다양하다.

사람들의 사회적 공정성 평가는 사회적 신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신뢰는 불확실성이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타인, 특정 제도, 혹은 사회 전반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거나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만약 집단이나 조직, 사회에서 특권과 차별이 심각하다면 공정한 기회나 절차,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사람들은 타인이나 제도, 사회에 대해 냉소적 태도와 불신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이나 제도, 사회 현실이 차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정해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며, 사람들이 기대하는 규범에 따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사람과 제도, 사회를 신뢰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

공정성 인식의 변화와 국제비교

공정성에 대한 평가나 인식은 그동안 좋아졌는가 아니면 나빠졌는가?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는 [그림 XI-16]은 199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사회과학협의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1990, 1995, 2000) 및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5, 2009, 2014)에서 기회(교육, 취업, 승진), 절차(법 집행), 분배(소득과 재산), 대우(여성과 남성) 등 공정성의 여러 측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그림 XI-16] 주요 분야별 사회 공정성 인식, 1990-2014



주: 1)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공정성 인식은 해당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약간 평등' 또는 '매우 평등'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3) 여성의 대우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1990, 1995, 2009, 2014년에는 '여성의 대우'에 대한 평등한 정도에 대한 응답이며, 2000, 2005년에는 '남녀 간' 평등한 정도에 대한 응답임.

출처: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 1990, 1995, 2000.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05, 2009,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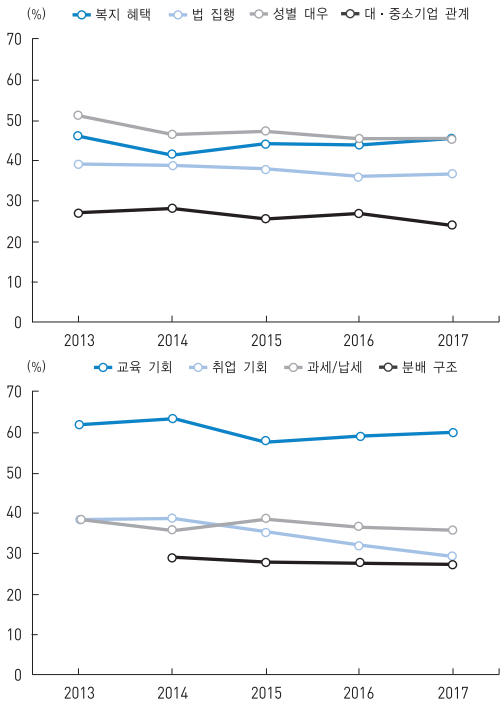
1990년 이후 공정성 평가와 인식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공정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50% 미만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야나 영역들을 비교하면 교육 기회의 공정성 인식이 가장 높은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4년에는 50%를 넘었다. 반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소득과 재산의 분배 공정성으로 10% 부근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법 집행과 젠더에서의 공정성 평가와 인식은 2000-2005년에는 개선되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인다. 취업 기회의 공정성 인식은 1990년

대 후반에 하락하지만 2000–2014년에는 완만히 개선되고 있다.

보다 최근의 추세를 보기 위해서 2013년 이후 매년 여러 측면에서의 공정성 인식을 조사한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그림 XI–17]에 제시되어 있다. 「불평등 및 공정성 조사」와 「한국종합사회조사」가 5점 척도로 질문한 반면, 「사회통합실태조사」는 4점 척도로 질문했기 때문에 측정치는 차이를 보인다. 앞의 결과와 유사하게 교육 기회의 공정성 인식이 다른 측면들에 비해 높다. 또한 분배 구조,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등 경제적 공정성 인식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복지 혜택에서의 공정성 인식은 2014년 이후 완만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며, 법 집행에서의 공정성 인식과 과세/납세의 공정성 인식은 40% 부근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성별 대우 및 취업 기회 등 최근 논란이 되어온 분야에서의 공정성 인식이 2014년 이후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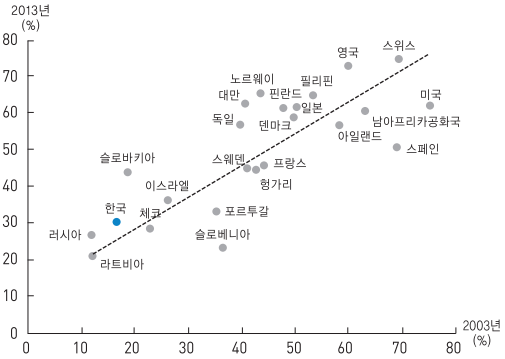
공정성 인식의 국제 비교를 위해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에서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를 2003년과 2013년을 교차하여 [그림 XI–18]에서 살펴보았다. 이 그림에 표시된 수치는 "내가 사는 사회가 공정하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는 진술에 동의한 비율이다. 그림의 오른편 위에 위치한 서부 및 북부 유럽 사회의 공정성 인식이

[그림 XI–17] 주요 분야별 사회 공정성 인식, 2013–2017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공정성 인식은 해당 항목에 대해 '약간 공정하다' 또는 '매우 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3) '분배 구조' 공정성은 2013년에는 조사되지 않았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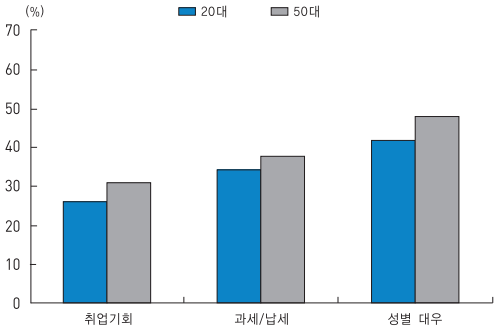
[그림 XI–18] 주요 국가의 사회 공정성 인식, 2003, 2013



주: 1) 공정성 인식은 각국 조사대상자(만 18세 이상) 중 "내가 사는 사회가 공정하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의견에 대해 '매우 동의' 또는 '다소 동의'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3: National Identity II*, Data Version 2.1, 2012; *ISSP 2013: National Identity III*, Data Version 2.0, 2015.

높은 편에 속하며, 반대로 왼편 아래에 위치한 동부 및 남부 유럽의 공정성 인식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시아 사회들 중에서는 일본, 대만이 높은 편이고 한국은 낮은 편에 속한다. 2003년과 2013년의 결과를 비교하면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경제위기를 경험한 미국과 남유럽 사회가 공정성 인식이 대체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아시아 사회들은 전반적으로 공정성 인식이 개선된 편에 속한다.

[그림 XI-19] 20대와 50대의 주요 분야별 사회 공정성 인식, 2017



주: 1) 20대에는 만 19세 인구가 포함되었음.
2) 공정성 인식은 해당 항목에 대해 '약간 공정하다' 또는 '매우 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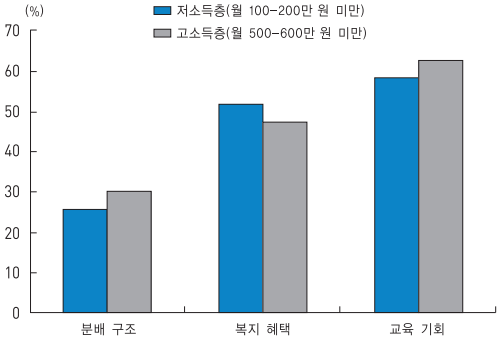
공정성 인식의 집단간 비교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인구통계 집단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살펴보자. 대체로 공정성의 기준이 높은 편에 속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분배나 절차, 기회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수록 공정성 인식과 평가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공정성 인식과 평가의 집단별 비교를 위해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림 XI-19]는 연령대 특히 20대와 50대의 분야별 공정성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취업 기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의 비율이 낮지만 20대가 50대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과세와 납세 면에서도 20대가 50대에 비해 공정성 인식이 낮아서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세대 간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성별 대우에 대해서도 20대가 50대에 비해 공정성 인식이 낮아서 가부장제 영향의 약화를 보여준다.

[그림 XI-20]은 가구소득 하위집단(월 100-200만 원 미만)과 상위집단(월 500-6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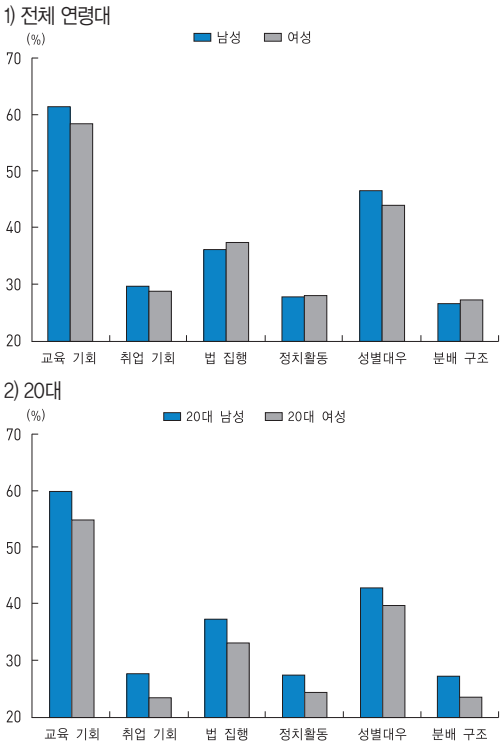
[그림 XI-20]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주요 분야별 사회 공정성 인식, 2017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공정성 인식은 해당 항목에 대해 '약간 공정하다' 또는 '매우 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17.

미만)의 분야별 공정성 인식과 평가를 비교한다. 대체로 분배 구조, 복지 혜택, 교육 기회 등 사회 경제적 성취 및 분배와 관련된 쟁점에서 소득집단 간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배 구조 및 교육 기회에 대해서는 저소득 집단이 고소득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공정성을 낮게 평가하는 반면, 반대로 복지 혜택과 관련해서는 고소득 집단이 저소득 집단에 비해 공정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XI-21] 전체 연령대와 20대의 성별 사회 공정성 인식,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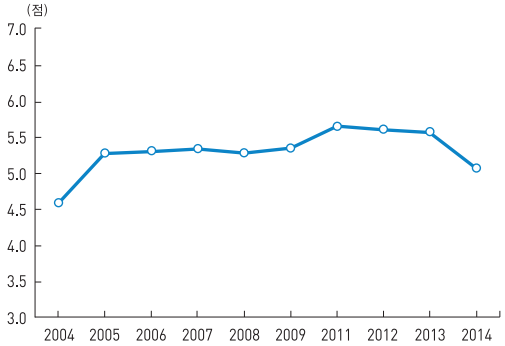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대에는 만 19세 인구가 포함되었음.
3) 공정성 인식은 해당 항목에 대해 '약간 공정하다' 또는 '매우 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17.

분야별 공정성 평가와 인식을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성별로 비교하면 [그림 XI-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20대에 한정시켜 성별로 비교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그림 XI-21-2). 20대 여성은 20대 남성에 비해 교육 기회 및 취업 기회, 법 집행, 정치활동, 성별 대우, 분배 구조 등 전반적으로 공정성 인식이 유의하게 낮다. 또한 20대 여성은 전체 연령대 여성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공정성 인식을 보인다. 이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성 기준이 높거나 불리한 현실적 위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신뢰 수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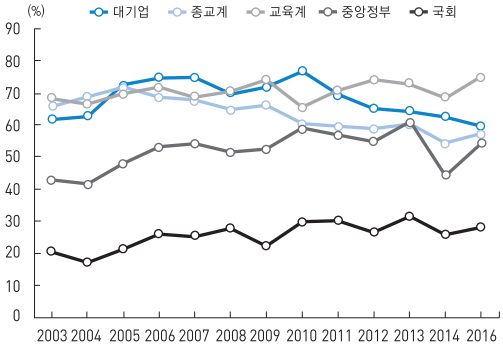
사회적 신뢰 수준은 사회의 타인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 특정 제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공정성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분야별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그림 XI-22]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 수준의 변화를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조사에서 신뢰의 정도는 0점에서 10점에 이르는 11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추세를 보면 2004년 4.59점으로 척도

[그림 XI-22] 사회에 대한 신뢰도, 2004-2014



주: 1)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믿을 수 없다'부터 '매우 믿을 수 있다'까지 0-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그림 XI-23]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 2003-2016



주: 1)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만 18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해당 기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신뢰' 또는 '다소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누적데이터」, 원자료, 2017.

의 중간값인 5점에도 못 미치던 신뢰는 2011년 5.65점에 이르기까지 계속 높아졌으며 이후 하락을 계속해서 2014년 5.07점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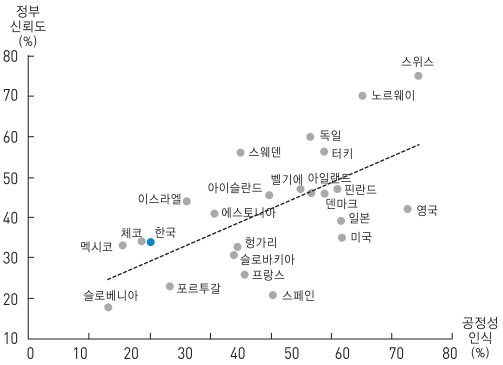
제도들에 대한 신뢰의 추세를 보여주는 [그림 XI-23]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제도에 대해 신뢰하는 응답의 비율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다가 2014년에 일시적 역전을 겪은 후 다시 2016년에 상승세를 보인다. 국회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대체로 높은 편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한 신뢰는 2010년까지 높아지다가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민간분야 제도들 중에서 종교계에 대한 신뢰는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하며, 교육계에 대한 신뢰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공정성과 신뢰의 관계

공정성이 신뢰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알고자 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공정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사회가 신뢰 수준도 높은지를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비교와 시계열 비교의 방법이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사회의 공정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회에 대한 신뢰도 높은지 보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의 관계를 살펴보자.

[그림 XI-24]는 국제 비교를 통해 공정성이 높다고 평가된 사회가 신뢰 수준도 높은지 본 것이다. 이 그래프에서 공정성은 앞서 살펴본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의 2013년 조사 결과이고, 신뢰는 「갤럽세계조사」(Gallup world poll)의 2014년 정부 신뢰 조사 결과이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그림 XI-24] OECD 주요 국가의 사회 공정성 인식과 정부 신뢰 간 관계, 2013



주: 1) 공정성 인식은 각국 조사대상자(만 18세 이상) 중 "내가 사는 사회가 공정하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의견에 대해 '매우 동의' 또는 '다소 동의'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정부 신뢰도는 각 국 조사대상자(만 15세 이상) 중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13: National Identity II*, Data Version 2, 2015.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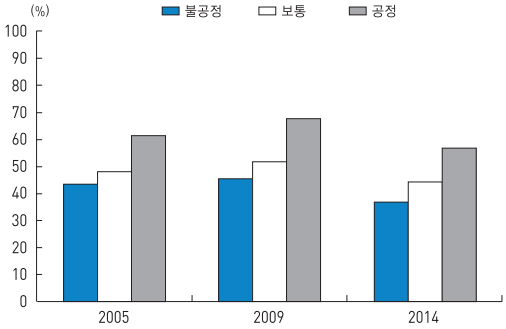
있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가 정의 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공정성 수준에 비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사회로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있으며, 스위스,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 등은 경험적 자료에서 얻은 적합선 위에 위치해서 공정성 수준에 비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회에 속한다. 동유럽과 남유럽 사회들은 공정성 평가 및 정부에 대한 신뢰가 모두 낮은 사회들로서 왼쪽 하단에 위치하며, 한국은 하위권과 중위권의 중간 정도에 속하는 편이다.

개인 수준에서 공정성과 신뢰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 2005, 2009, 2014년 조사 자료에서 공정성 인식을 여러 분야별 공정성 평가의 평균을 구하고 이 값을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수준을 11점 척도로 측정한 값과 상관관계를 연도별로 구하였다. 개인별 수준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의 상관관계는 2005년이 0.303, 2009년이 0.239, 2014년이 0.270으로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전반적 사회의 공정성과 사회 전반의 신뢰 못지않게 각 분야별 공정성 평가와 관련 제도들에 대한 신뢰의 관계 또한 중요하다. [그림 XI-25], [그림 XI-26], [그림 XI-27]은 각각 취업 기회 공정성에 대한 개인별 평가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법 집행 공정성에 대한 개인별 평가와 대법원에 대한 신뢰, 그리고 소득과 재산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별 평가와 대기업에 대한 신뢰의 관계를 교차분석하여 공정성 평가 응답 범주별로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XI-25]를 보면 취업 기회가 공정하다고

[그림 XI-25] 취업 기회의 공정성 인식별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2005, 2009,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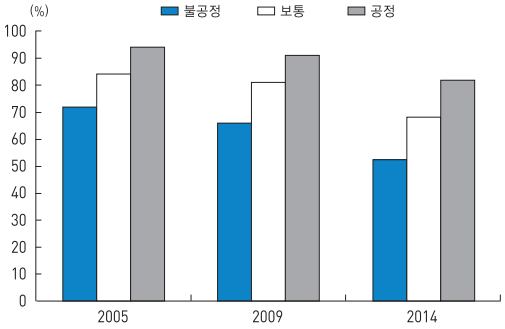
주: 1)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취업 기회의 공정성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취업 기회가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되었고, '매우 평등'과 '약간 평등'을 합쳐 '공정'으로, '그저 그렇다'를 '보통'으로, '약간 불평등'과 '매우 불평등'을 '불공정'으로 재정의 하였음.
3)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해당 기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신뢰' 또는 '다소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04, 2009, 2014.

평가할수록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역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정성 평가에 따른 신뢰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2009년의 경우 불공정하다고 평가한 사람들 중에서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45.3%)은 공정하다고 평가한 사람들 중에서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67.2%)에 비해 크게 낮다.

[그림 XI-26]은 법 집행에서의 공정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대법원을 신뢰하는 비율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준다. 법 집행의 공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사법계의 대표 기관인 대법원을 신뢰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며 특히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법원 신뢰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의 경우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대법원을 신뢰하는 비율(52.3%)은 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대법원을 신뢰하는 비율(81.4%)에 비해 크게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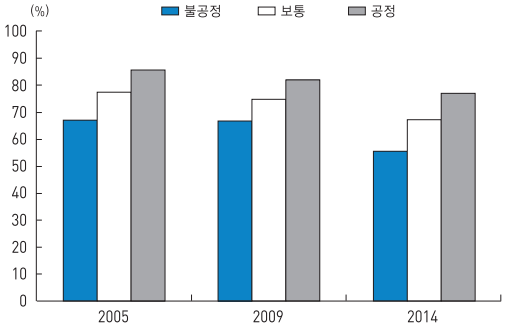
[그림 XI-27]은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분배 측면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경제 영역의 대표적 기관인 대기업에 대한 신뢰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소득과 분배의 공정성 수준에 따른 신뢰도의 격차도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2014년의 경우 소득 및 재산 분배가 공정치 못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대기업을 신뢰한다는 비율(55.3%)은 소득 및 재산 분배가 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대기업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76.9%)에 비해 크게 낮다.

[그림 XI-26] 법 집행의 공정성 인식별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 2005, 2009, 2014



주: 1)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법 집행의 공정성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법 집행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되었고, '매우 평등'과 '약간 평등'을 합쳐 '공정'으로, '그저 그렇다'를 '보통'으로, '약간 불평등'과 '매우 불평등'을 '불공정'으로 재정의 하였음.
3)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해당 기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신뢰' 또는 '다소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04, 2009, 2014.

[그림 XI-27] 소득과 재산 분배의 공정성 인식별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 2005, 2009, 2014



주: 1)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과 재산 분배의 공정성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소득과 재산 분배가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되었고, '매우 평등'과 '약간 평등'을 합쳐 '공정'으로, '그저 그렇다'를 '보통'으로, '약간 불평등'과 '매우 불평등'을 '불공정'으로 재정의 하였음.
3)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해당 기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신뢰' 또는 '다소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04, 2009, 2014.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지표의 작성목적이나 구성 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인간 삶의 기본적 조건에 초점을 둔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에서는 189개국 중 10위를 차지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남녀 간 임금격차를 다루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지수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매우 낮은 편으로,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에서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144개국 중 118위로 하위권이며, 여성 국회의원 비율과 여성 장관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 여성의 정규직 취업기회는 남성과 비교해 낮으며, 취업한 후에도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적 및 제도적 지원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부족한 편이며, 이로 인해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이용률이 매우 낮다.
-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의 성별 분업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격차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성평등 수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는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사회"를 의미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1항). 지표의 작성 목적이나 구성 지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대체로 하위권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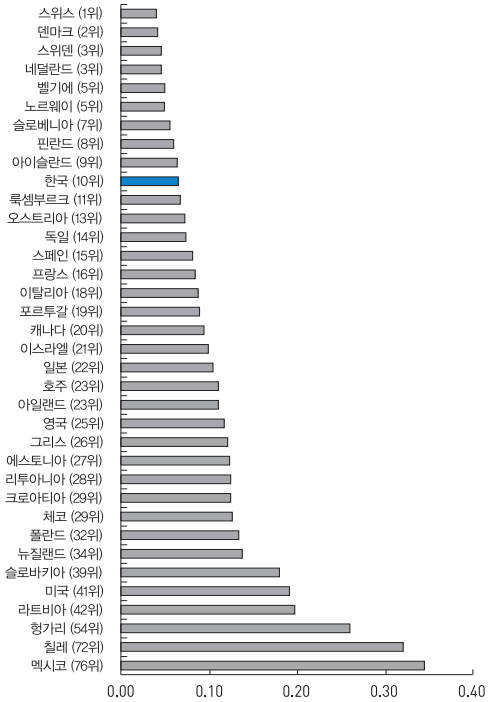
유엔개발계획(UNDP)이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s)」를 통해 발표한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2017년 기준 전체 189개국 중 10위(0.063)를 차지했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그림 XI-28).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여성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이다(그림 XI-29). OECD 29개 회원국을 조사한 결과, 스웨덴이 1위를,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으며, 핀란드와 프랑스가 각각 4위와 5위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의 순위는 이슬람 국가인 터키보다도 낮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활동참여율 격차'는 한국이 20.5%p로 터키(41.4%p)를 제외하고 최하위이다. 남녀 임금격차도 36.7%로 최하위이다.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이 점유한 비율도 2.1%로 아이슬란드(43.0%)와 OECD 전체 평균(21.8%)에 한참 못 미친다.

다른 지표인 2017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서도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144개국 중 118위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낮다. 특히 여성의 정치적 권리와 대표성과 관련된 지표들의 순위가 낮은 점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낮추는 이유가 되고 있다(그림 XI-30). 가령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한국이 17.0%로 남녀 동수내각을 향해가는 EU 국가와 비교해 매우 낮다.

[그림 XI-28] OECD 국가의 성불평등지수(GII),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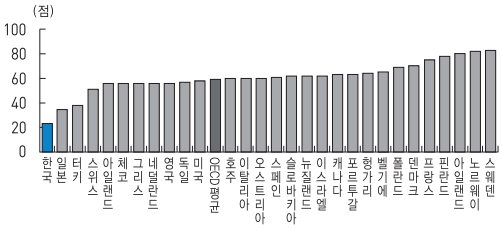


주: 1) 성 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는 UNDP가 2010년부터 각 국의 성불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한 지수로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 '여성 권한(Empowerment)', '노동 참여(Labour market)'등 3개 부문에서 '모성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 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등 5개 지표를 통해 측정함. 지수값이 0이면 '완전 평등'을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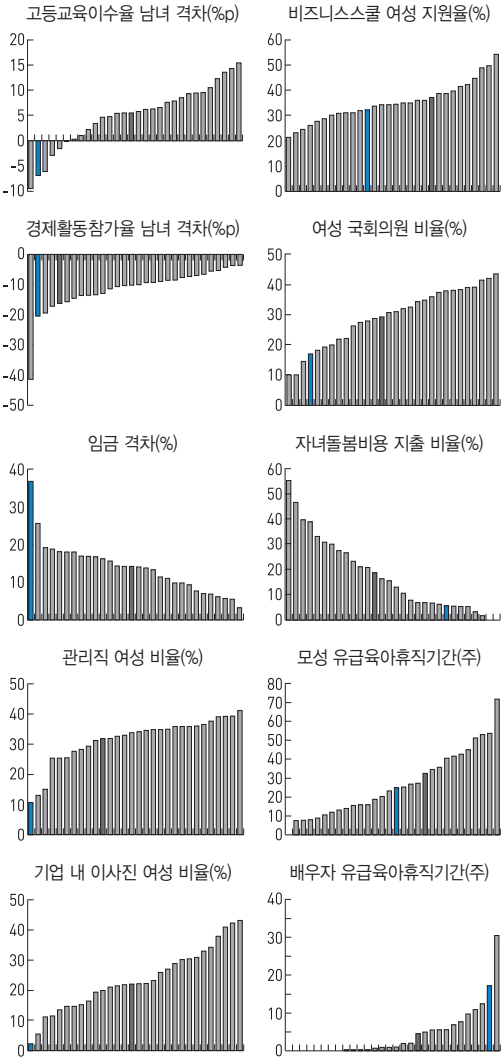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http://hdr.undp.org/en).

[그림 XI-29] 유리천장지수(GCI), 2017

1) 종합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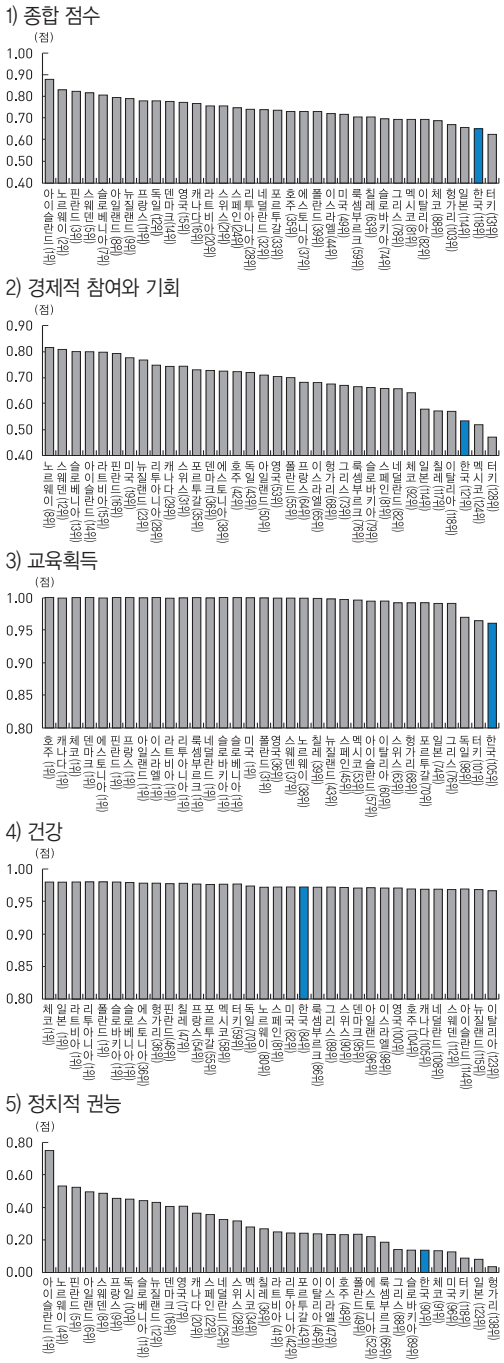


2) 부문별



출처: The Economist, *The Glass-Ceiling Index*, 2018.

[그림 XI-30] OECD 국가의 성격차지수(GGI), 2017



출처: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s 2017*, 2017.

한국의 여성 장관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9.1%로 15.8%인 일본보다도 낮다(표 XI-2). 여성의 낮은 정치적 권한은 여성의 이익이나 권리를 정치영역에 실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성차별과 같은 사회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를 현실 정치에서 해결하기 힘들게 한다. 즉 여성의 정치적 권리가 과소 대표되고 제도 정치에서 효과적인 해결책 모색이 어려운 현실은 여성 문제가 시위나 집회를 통해서 의견이 표출되는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어떤 지표냐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삶의 기본적 조

〈표 XI-2〉 OECD 주요 국가의 여성 국회의원 및 장관 비율, 2017

(%)

국가	여성 국회의원 비율	여성 장관 비율
한국	17.0	9.1
일본	9.3	15.8
미국	19.1	16.7
프랑스	25.8	52.9
캐나다	26.3	51.7
호주	28.7	24.1
영국	30.0	30.8
오스트리아	30.6	23.1
뉴질랜드	34.2	37.0
독일	37.0	33.3
덴마크	37.4	42.9
벨기에	38.0	23.1
스페인	39.1	38.5
스웨덴	43.6	52.2

주: 1) 의원제도가 양원제인 국가는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합으로 산출했음.
출처: OECD, OECD DATA(https://data.oecd.org).

건은 충족되어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낮은 편이며, 남성과의 임금 격차도 상당하다. 게다가 정치, 사회, 기업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여성의 비율은 매우 낮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나 여성 장관 비율도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경제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가 전반적으로 취약하고 소위 '독박 육아와 가사'의 부담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제 영역으로 진출해 자신의 능력을 배양하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미혼은 미혼대로 기혼은 기혼대로 제한적이다. 아래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얼마나 기회의 불공정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의 불공정한 분담으로 인해 경력단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국내외 자료의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의 젠더불평등의 근본적인 요인이 여성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기회와 육아와 가사노동의 부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제한된 취업기회, 높은 경력단절

먼저 한국 여성에게 취업기회가 얼마나 제한적으로 주어져 있고,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가사와 육아의 부담으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기혼 여성이 일자리를 갖는 것은 젠더 평등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기혼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 한국 여성의 교육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지만, 이들이 생애 전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 취업을 해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기혼 여성은 경력단절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불평등한 취업 기회, 불공정한 육아 분담, 경력 단절, 불안정한 일자리에 재취업의 순서로 이루어진 악순환은 한국 사회 젠더불평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로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 49–53%로 거의 변화가 없다. 이러한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시기 한국 남성의 73–74%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다. 여성에게 주어진 좋은 일자리도 상대적으로 적다. 전체 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17년 기준 38.6%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여성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상용근로자의 63.9% 수준이다. 여성의 임금수준이 2009년 남성의 63.5% 수준으로 지난 9년 동안 거의 향상되지 않았다.

〈표 XI–3〉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분석한 결과로 기혼 여성의 취업과 경력단절 실태를 보여준다. 표는 많은 여성이 취업에 성공한 뒤에도 출산과 육아의 부담 때문에 중도에 하차

하는 비중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이란 15-54세의 기혼 여성 중 현재 비취업(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인 여성으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교),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말한다. 이들의 비율은 2012년 20.3%에서 2017년 20.0%로 두 시기 간 차이가 거의 없다. 특히 2012년과 2017년에 30-39세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비중이 각각 35.7%와 33.8%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여성들이 취업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30대에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있으며 7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력단절 경험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40대에서도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2012년과 2017년에 각각 12.8%와 15.4%로 나타나 40대의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은 오히려 상황이 늘어난 셈이다.

〈표 XI-3〉 경력단절 여성 규모, 2012, 2017

	기혼 여성수 (1,000명)	비취업 여성수 (1,000명)	경력단절 여성수 (1,000명)	구성비 (%)	기혼 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비율(%)	비취업 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비율(%)
2012						
전체	9,747	4,049	1,978	100.0	20.3	48.9
15-29세	609	336	221	11.2	36.4	65.9
30-39세	3,120	1,579	1,115	56.4	35.7	70.6
40-49세	3,989	1,377	511	25.8	12.8	37.1
50-54세	2,029	757	131	6.6	6.4	17.3
2017						
전체	9,053	3,535	1,812	100.0	20.0	51.3
15-29세	464	239	147	8.1	31.6	61.5
30-39세	2,746	1,288	928	51.2	33.8	72.1
40-49세	3,836	1,344	590	32.6	15.4	43.9
50-54세	2,007	665	147	8.1	7.3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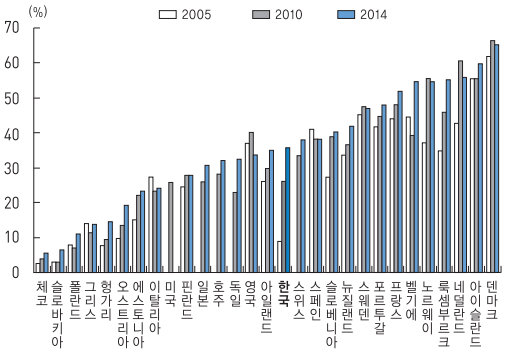
주: 1)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https://gsis.kwdi.re.kr/gsis/).

낮은 보육투자와 과중한 돌봄노동

그렇다면 한국 여성의 높은 경력단절의 원인으로 알려진 돌봄노동의 실태는 어떠한가? 아이돌봄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보육시설 이용률과 국가의 육아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현황을 통해 그 실태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 XI-31]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OECD 국가의 3세 미만 아동 보육시설 이용률을 보여준다. 한국의 3세 미만 아동 보육시설 이용률은 2005년 8.9%에서 2014년 35.7%로 비약

[그림 XI-31] OECD 국가의 3세 미만 아동 보육시설 이용률, 2005-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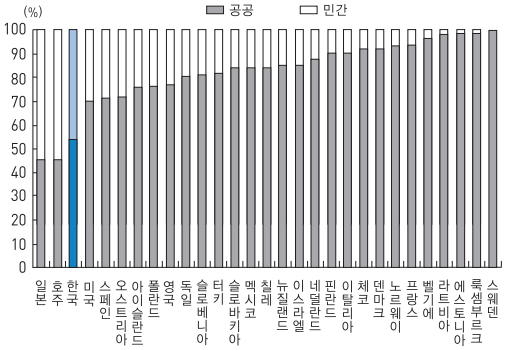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적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여전히 전체 3세 미만 아동의 2/3 가량이 공적인 영역에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엄마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돌봄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덴마크의 3세 미만 어린이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65.2%, 네덜란드는 55.9%, 프랑스는 51.9%로 한국보다 높다.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어 확산 중이지만,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13.4%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은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공적인 영역이 제공하는 아동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투자가 미진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XI-32]는 OECD 국가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보육투자 비율을 나타낸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공공재원 투자비율은 53.8%로, 프랑스 93.7%, 독일 80.4%과 같은 유럽 국가는 물론 84.1%인 멕시코와 81.7%인 터키와 비교해 그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일본과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공공재원 투자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공공재원 투자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것은 서구에서 복지국가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다(그림 XI-31).

한국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남성과 여성의 불공정한 성별 분업을 들 수 있다. 돌봄노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가족 내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표 XI-4〉는 통계청 「사회조사」에 나타난 성별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을 보여 준다. 남편과 부인

[그림 XI-32] OECD 국가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 비율, 2011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표 XI-4〉 성별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 2002, 2016

(%)

	부인 전담	주로 부인	공평하게 분담	주로 남편	남편 전담
2002					
여성	5.1	56.2	35.9	2.4	0.4
남성	9.5	61.4	25.2	3.3	0.7
2016					
여성	2.8	36.2	58.8	1.7	0.5
남성	5.8	43.0	48.1	2.4	0.7

주: 1) 2002년은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2016년은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2, 2016.

이 공평하게 분담해야한다는 의견은 2002년 남성 25.2%, 여성 35.9%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남성 48.1%, 여성 58.8%로 변했다. 남성의 경우 공평 분담에 대한 인식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의 48.8%는 부인이 전담하거나 주로 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39.0%로 상대적으로 낮다. 여전히 돌봄의 책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 격차가 크다. 이러한 인식의 격차는 실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분담에서 성별 불평등으로 이어지는데, 기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5.2배에 달한다.

맺음말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경력단절은 국가적인 손실인 동시에 여성 개인의 성취감을 떨어뜨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시켜 젠더갈등을 심화시킨다. 현재 일부 남성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여성혐오 정서를 줄이고 남녀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의 남녀 간 공평한 분담에 필요한 정책적 및 제도적 지원과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남녀 모두가 집중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성 육아휴직 수당의 상한액 증대, 배우자 출산휴가제와 같은 다양한 일·가정양립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돌봄의 사회와 국가적 책임성을 인식하고 어린 아이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여성 고용 비율과 비정규직 여성 비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체의 여성 관리자 및 임원 비율 등을 높일 필요도 있다.

2018 Glossary

Korean Social Trends 2018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부록 용어해설

Ⅰ 인구

결혼이민자: 체류외국인 중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자.

국제이동자: 국경을 넘어 거주지를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국 하여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한 내 · 외국인 장기이동자.

기대수명: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등록 외국인: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사망력: 건강, 경제사정, 보건의료혜택 등을 고려한 사람들의 사망수준을 의미함.

인구절벽: 특정 순간을 기점으로 한 국가나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분포가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 분포가 되는 현상.

외국인 근로자: 한국 국적을 지니지 않고 지자체 관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조사망률: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사망자의 수.

$$\text{조사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사망자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text{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재외동포: 외국에 사는 한국 국적자를 의미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 국적자를 뜻하는 재외 교포에 비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해외에 사는 한국인과 한국계 외국인을 일컫는 표현.

조혼인율: 연간 혼인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text{조혼인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혼인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초저출산: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현상.

체류외국인: 주로 관광 기타의 사유로 입국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비교적 단기간(90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출산력: 결혼, 피임, 건강,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들이 아이를 실제로 출산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들이 가진 생물학적인 임신능력, 즉 가임력(fecundity 또는 natality)과는 다름.

합계출산율: 여자 1인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산출함.

$$\text{합계출산율}(TFR) = \frac{\sum_{i=15}^{49}(ASFR)_i}{1{,}000}$$

혼인력: 남녀 간에 맺어지는 결혼이나 결합의 빈도뿐만 아니라, 결혼 또는 결합된 당사자들의 제반 특성 및 맺어진 결혼의 해소, 즉 이혼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총칭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관습이나 전통에 따른 특성이 많이 반영됨.

활동적 노화: 단순히 신체적으로 활동적이거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인 개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노화.

Ⅱ 가족과 가구

1세대가구: 가구주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② 형제자매, ③ 부부+기타 친척).

2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 2세대가 함께 사는 가구(① 부부+자녀, ② 부+자녀, ③ 모+자녀, ④ 부부+부모, ⑤ 조부모+손자녀 등)

3세대 이상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 이상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자녀+양친(또는 한부모), ② 양친(또는 한부모)+부부+자녀 등).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됨.

가구주: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비혈연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중 한 사람(대표자)이 가구주가 됨.

가족주의: 개인보다는 가족 전체에 가치의 중심을 두는 사고방식.

교대 근무: 근로시간이 길거나 또는 24시간 유지되는 업무체계에서 근로자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근무하는 형태.

노인가구: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일반가구.

만혼: 나이가 들어 늦게 결혼하는 것. 결혼적령기가 지난 나이에 하는 결혼.

부계혈통주의: 출생에 의한 국적의 부여에 관한 혈통주의 중 아버지가 자국민인 것을 조건으로 자식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

비전형적 가족: 전통적인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 외에 1인 가구, 노인단독가구, 한부모가족과 같은 비전형적인 형태의 가족을 의미함.

비혼: 미혼이라는 어휘가 '혼인은 원래 해야 하는 것이나 아직 하지 않은 것'의 의미를 일컫는 경향이 크다고 하여 '혼인 상태가 아님'이라는 보다 주체적인 의미로 여성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

비혼 출산: 혼인관계가 아닌 상황(동거커플이나 미혼모 등)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

사회적 지원망: 개인이 정서 · 정보 ·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공식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의 사회관계 및 공식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 또는 공적인 기관들의 관계망

세대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시간빈곤: 하루 24시간 가운데 개인 관리, 가사, 보육 등 가계 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뺀 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적어 여가시간 혹은 재충전 시간 양이 결여된 상태.

평균가구원수: 가구형태를 가구원수 기준으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고 평균가구원수는 총가구원수를 총일반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함.

Ⅲ 건강

간병: 아픈 사람, 부상당해 몸을 스스로 못 가꾸는 사람의 곁에서 돌보고 시중을 보는 것.

간호: 환자 또는 아프지 않은 대상자에게 질병으로부터 회복할 때까지 돌보거나 건강증진을 위해 돕는 것.

간호조무사: 의사 및 간호사의 진료업무,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직업.

건강수명: 생물학적 관점의 수명에 건강의 개념을 더한 것으로, 특정 나이대의 사람이 장애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남아있는 햇수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장애가 없는 기대수명을 가리킴.

경상의료비: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소비를 위하여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총액으로 개인의료비와 집합보건의료비의 합계액.

고위험음주: 1회 음주량이 7잔(소주 1병 분량) 이상이고 주 2회 이상인 음주.

고혈압 유병률: 만 30세 이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는 경우의 백분율.

기대여명: 특정 연령의 인구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노인인구: 노인의 범위는 법규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당뇨병 유병률: 만 30세 이상으로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경우의 백분율.

만성퇴행성 질환: 질병자체가 영구적이며 불가역적 병적 병화를 가지는 질병, 후유증으로 불구 · 무능력 상태를 가지는 질환 또는 재활을 위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질환 등을 의미함.

베이비부머 세대: 출산율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로 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출생한 세대,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직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함.

비만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가 25kg/㎡ 이상인 인구의 비율.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

스트레스 인지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

요양병원: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일반 병원과는 달리 의사 및 간호사의 법정 배치기준이 완화되며,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를 추가 배치토록 함.

요양보호사: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직종.

우울장애 유병률: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인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의 비율.

유병률: 전체 인구 중 특정 시점에 조사된 이환자의 비율. 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2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었던 인구의 비율.

음주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술을 1회 이상 마신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

인구고령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사회현상.

일상생활수행능력: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에 의해 사망한 사망자의 수.

재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도움을 받는 서비스.

치매 유병률: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인구 중에서 치매환자가 차지하는 비율.

활동제한율: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은 백분율.

흡연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현재 흡연자의 비율. 현재 흡연자란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말함.

Ⅳ 교육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함.

고졸채용할당제: 신규 채용시 일정 비율 이상을 고졸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하여 고졸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빠른 사회진출을 유도하는 제도.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급별 총 학생수를 총 교원수로 나눈 값. 학생수는 재적학생수(휴학자 포함) 기준임. 교원수는 초 · 중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장, 교감, 교사, 전문상담, 사서, 실기, 보건교사, 기간제 교원 등을 포함하고,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총(학)장,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을 포함하는데, 대학부설 대학원의 교원은 대학원 소속 교원만 해당함. 수치가 낮을수록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음.

대학설립준칙주의: 기존의 대학설립인가제를 폐지하고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조치로 1995년에 도입되어 1996년부터 시행됨. 이 제도의 도입으로 대학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됨.

마이스터고: 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인을 양성하는 직업교육기관.

사교육: 공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

수학 · 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 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 Science Study, TIMSS):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EA)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비교 연구들 중의 하나로서, 참여국의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성취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교육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지표.

자유학기제: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 ·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

자율고: 자율고등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장 임용, 교육 과정, 학생 선발 등에서 자율성을 가지는 고등학교로, 자율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로 구분됨.

졸업정원제: 정부가 1980년에 도입한 대학입시제도로서 신입생을 정원보다 30% 늘려서 뽑았다가 이후 원래의 정원대로 졸업시킨 제도.

진로활동: 청소년이 자신의 특기, 흥미와 적성, 능력 등을 이해하고 미래의 꿈, 희망,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진학률: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의 비율.

$$\text{진학률}(\%) = \frac{\text{상급학교 진학자수}}{\text{졸업자수}} \times 100$$

취학률: 취학적령인구(추계연앙인구) 중 취학자의 비율. 취학적령은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임.

특성화고: 농업, 제조, 디자인, 컴퓨터 및 정보처리, 요리, 제과, 관광, 만화, 영상, 애니메이션, 의상, 미용, 전통문화 등의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자치, 봉사, 동아리, 진로활동), 독서, 수상실적, 교과세부 능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입전형의 한 종류.

학력주의: 개인을 평가 · 처우하는 기준으로, 개인의 실력 · 능력 · 노력보다는 형식적인 학력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제도나 관행.

학벌주의: 출신 학교의 사회적 지위, 등급이나 명성을 가리키는 학벌을 중시하는 입장이나 태도.

V 노동

간접고용: 기업의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

경력단절: 학교를 졸업한 직후나 전 직업에서 퇴사 또는 퇴직한 뒤부터 새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의 공백 기간. 여성의 경력단절은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음.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임.

고용률: 생산가능연령인구(만 15세 이상) 중 취업자의 비율.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수}}{\text{만 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 OECD의 경우 생산가능연령인구를 만 15–64세로 정의하고 있음.

교육훈련: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종업원의 지식과 기능을 변화시켜 그들이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계획된 조직적 활동.

낙인효과: 사회 혹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으로 낙인찍히면 실제로 그 대상이 점점 더 나쁜 행태를 보이고, 그에 따라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는 현상.

노동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 보통 15–34세 사이의 취업인구 가운데 미혼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가사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며, 취업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 일할 의지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와는 다름.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출산과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임. 3일 내지 5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휴가임.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됨.

비시장소득: 가사노동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소유 내구재의 사용가치,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비임금 근로자: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됨.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포함함.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고용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다른 근로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은 없으나 한국에서는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근로제공 방식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함.

생산가능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 생산가능인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루어지며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리됨.

성역할: 성별이나 젠더에 따라 사회적으로 그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행동규범을 의미하며, 이는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시간제 근로자: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시장소득: 사적 계약과 관계를 통해 얻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됨.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율.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육아휴직제도: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휴직함으로써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임금 근로자: 취업자 중 임금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됨.

저임금 근로자: 중위임금의 2/3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종속적 자영자: 사업 운영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만 소득이나 근로조건 결정의 자율성이 없는 자영자로서, 경제적 종속성과 근로관계 종속성을 동시에 포함함. 이들은 도급계약에 의해 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적 위험은 감수하면서도 소득은 계약에 의해 종속되고 업무량을 통제받으며, 노동력이나 상품을 독립적으로 생산 판매할 수 없음.

직장보육지원: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 또는 촉진하기 위하여 수유 ·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

촉탁직: 일용직, 임시직 등과 함께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의 일종으로, 보통 정년 이후 사업장에 기간제로 재고용된 근로자를 지칭함.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최저임금은 노사 및 공익 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함.

출산전후휴가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 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출산 전후를 기해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근로형태, 직종이나 근속기간 등에 관계없이 부여함.

특수고용 근로자: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 생활하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로서, 일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노동을 제공함.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거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가 있음.

Ⅵ 소득과 소비

가계부채비율: 가계의 총 소득에서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 금액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총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나눈 값.

가계흑자비율: 가계의 총 소득에서 소비지출액과 비소비지출액을 뺀 금액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총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나눈 값.

균등화소득: 소득분배지표의 하나로서, 가구소득을 각 가구원의 소득으로 전환한 균등화된 개인소득. 우리나라는 균등화처리를 위해 전체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OECD의 제곱근지수 방법을 사용함.

경상소득: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상소득은 일정한 소득을 말하고 비경상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을 말함.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됨.

근로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특정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로서 봉급, 상여금과 제수당을 포함하며,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말함.

명목소득: 측정 당시 화폐액으로 나타낸 소득으로 화폐소득이라고도 함. 명목소득은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계열비교나 국제비교에 적합하지 않음.

명목소비: 측정 당시 화폐액으로 나타낸 소비지출로 명목소득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짐.

보훈연금: 정부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대상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

비경상소득: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상소득은 일정한 소득을 말하고 비경상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을 말함. 비경상소득에는 경조소득, 폐품매각대금, 퇴직금, 유산, 장학금 등이 포함됨.

비소비지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가구 간 이전 등과 같이 소비지출이나 자산 구입이 아닌 지출.

사업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자영자나 고용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재료비,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익 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

상용근로자: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자.

소득 5분위 배율: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 즉, 도시근로자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임. 소득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함.

소득분위: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다음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까지 특정 구간으로 등분한 것.

소비자물가지수: 도시가계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소비지출: 생계나 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

실질소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소득으로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화폐소득, 즉 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소득개념으로,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은 줄어들게 됨.

실질소비: 실질소득과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소비지출로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비는 줄어들게 됨.

이전소득: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경상적 수입으로 공적 보조금(공적 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과 사적 보조금(가족 간 이전, 민간연금 등)을 합한 소득.

자영업자: 비임금 근로자 중에서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취업자.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원이 있는 경우를 고용주로, 그리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자영자로 각각 정의함.

재산소득: 가구 소유의 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서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료 등이 포함됨.

처분가능소득: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타가구로의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지출할 수 있는 금액.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정 직업 또는 자격요건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으로서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 속함.

G-7: 서방 선진 7개국(Group of Seven, G7)을 의미하며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이 포함됨. 이 국가들은 국제 통화 기금이 보고하는 7대 주요 선진 경제국들임.

Ⅶ 문화와 여가

관광진흥기금: 관광진흥을 위해 정부가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정부출연금, 카지노 사업자 및 국외 여행자의 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충당되어 각종 관광시설·교통수단·관광사업 관련 기반시설의 건설 및 개수,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활용됨.

문화 바우처 제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공연 및 전시회 입장권, 책 등을 구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부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제도.

문화서비스지출: 공연 및 극장, 관람시설 이용, 독서실 이용, 문화강습, 콘텐츠, 방송수신료, 기타 문화서비스 등 문화향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소비지출 항목.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예술 관련 행사 및 전시회를 1년에 1번 이상 관람한 인구의 비율.

문화예술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시설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관, 야외음악당),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 복지시설(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기타 문화시설로 구분됨.

생활체육: 직업이 아닌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체육 및 스포츠 활동.

생활체육참여율: 전체 조사대상 인구 중 생활체육에 한 회 30분 이상 할애하고 이를 일주일에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비율.

스포츠 관람률: 각종 스포츠를 1년에 1군데 이상 관람한 인구의 비율.

여가 만족도: 여가활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 있는 여가활용에 대해 종합적인 주관적 만족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함.

여가시간: 하루 24시간 가운데 의무시간(유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및 노동 관련 이동시간) 과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시간(수면, 섭식, 위생 및 치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여가활동: 교제활동, 종교활동, 각종 문화생활과 운동 스포츠 및 야외활동, 컴퓨터와 인터넷활용시간, 취미(취미를 위한 학습시간, 교양강좌시간), 독서와 음악감상, 그밖에 다양한 유희적 활동(음주, 가무, 흡연 등).

오락문화비: 신문구독료, 영화관람료, 도서구입비, 휴가비 등의 문화여가생활 관련 지출.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됨.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냄.

Ⅷ 주거와 교통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따복하우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

사글세: 세입자가 1년 또는 10개월 등 일정기간의 집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풍부한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민관협력을 통해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주택공급사업.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rice to Income Ratio, PIR): 자가가구의 중위 주택가격을 중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의 주택 구입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

임차가구의 중위 월임대료를 중위 월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의 주택임대료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임대주택: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 10년-50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이 보장되며, 입주자격으로 무주택 조건 및 소득 기준 등이 요구됨.

장기주택담보대출: 주택을 담보로 장기간 대출해 주는 제도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수십 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목돈 없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저상버스: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주택보급률: 보통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

$$\text{주택보급률} = \frac{\text{주택수}}{\text{보통가구수}} \times 100$$

* 보통가구수: 일반가구수에서 비친족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
* 주택수: 다가구주택을 1호로 간주함.

최저주거기준: 주택의 면적이나 방의 개수, 채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놓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

특별교통수단: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주로 장애인의 요청에 의해 콜택시처럼 운영됨.

평균통근시간: 통근인구가 매일 집에서 직장까지 통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통행시간.

* 통근인구: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집에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자.

행복주택: 국토교통부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청년층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Ⅸ 환경

경수로: 대표적인 발전용 원자로로서, 핵분열 에너지로 뜨거워진 핵연료를 냉각시키면서 열에너지를 증기발생기로 이동시키는 매체로 경수(물, H_2O)를 이용하는 원자로.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SRF): 폐기물 중에서 탈 수 있는 것들을 선별 및 가공하여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만든 것으로, 폐기물 고형연료의 주원료가 되는 가연성폐기물은 폐합성수지와 폐목재임.

기후변화: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하는 기후현상. 기후변화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변화 등 지구 외적인 요인 또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조성의 변화나 지구 표면상태의 변화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함.

다이옥신: 제초제 · 살균제 또는 다른 시료를 생산하거나 쓰레기를 소각할 때 생겨나는 화합물. 독성이 매우 큰 물질로서 인간에게 발암이나 질병을 야기할 수 있음.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지름 10㎛ 이하의 먼지. 사람의 폐로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됨.

미세플라스틱: 지구상에 존재하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미세한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은 ① 공업용 연마재, 각질제거의 세안료, 화장품 또는 샌드 블라스트용 연마재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 생산되거나, ② 해양쓰레기 등의 큰 플라스틱 재료가 깨져 분해되면서 생성되거나, ③ 가정에서 의류의 세탁에 의한 천으로부터 합성섬유가 분리되어 생성될 수 있으며, 바다 속과 해수면을 떠다니며 해양환경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바나듐(V): 다양한 종류의 광석과 화석연료가 매장된 지역에서 존재하는 금속 원소. 일부 바나듐 화합물은 약한 독성을 나타내며, 어떤 생명체에서는 다량의 바나듐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독소로 추정됨.

방사성폐기물: 원전연료로 사용된 후의 핵연료를 비롯해 원전 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기기교체 부품 등과 병원,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동위원소(RI) 폐기물.

부영양화: 화학 비료나 오수의 유입 등으로 물에 인(P)과 질소(N) 등의 영양분이 과잉 공급되어 식물의 급속한 성장 또는 소멸을 유발하고, 조류가 과도하게 번식하게 하여 하천이나 호소 심층수의 산소를 빼앗아 용존산소량(DO)를 감소시켜 생물을 죽게 하는 현상.

빈산소수괴: 해수 중에 녹아있는 산소농도가 통상 3㎎/L 이하로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의 물덩어리. 빈산소수괴가 형성되면 용존산소 결핍으로 인해 어패류의 호흡이나 생리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폐사를 일으킴.

산소포화도: 측정한 물의 산소량이 해당 수온과 염분에서 포화량의 몇 %인가를 나타내는 값. 즉 측정할 때의 수온, 염분 또는 기압 조건 하에서 산소가 녹아 있는 비율을 나타냄.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제도: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소음환경기준: 주거환경과 작업능률 및 기타 사회활동에서 가장 적합한 소음권고기준을 근거하여 규정한 소음환경 기준에 관한 내용.

수질오염: 인간의 활동이 호수, 강, 해양, 지하수 등의 수질에 끼치는 악영향을 의미함. 수질오염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용존산소량(DO) 등이 있음. BOD 기준에 따라 수질오염도는 1-5급수와 급수 외로 나누어짐.

수질평가지수(Water Quality Index, WQI): 국내 수질 악화 및 오염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저층 용존산소 포화도(DO), 식물 플랑크톤 농도, 투명도, 용존무기인(DIP) 및 용존무기질소(DIN)의 항목별 점수를 이용하여 산출됨.

아황산가스(SO_2): 석탄과 석유 등에 포함되어 있는 황분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기체로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물질.

암모니아(NH_3):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생명체가 단백질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노폐물로 생성되는데, 육상생물은 암모니아를 독성이 약한 다른 질소 노폐물로 전환시켜 배출하는 반면, 수생생물은 암모니아를 직접 배출한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해양오염의 주요원인인 육상기인 오염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서, 오염이 심하여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역에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오염물질 허용배출총량을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

영양염: 식물플랑크톤이나 해조류의 골격물질을 구성하고 그것들의 유기물질 합성에 제약용인이 되는 규산염, 인산염, 질산염, 아질산염 등을 총칭하는 용어. 해양에서 영양염의 수직분포는 표층 쪽이 적고 저층 쪽이 많은데, 표층에서는 식물플랑크톤에 의해 소비되지만 저층에서는 표층의 생물 또는 그 사체가 침강해서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어 영양염이 풍부해지기 때문임.

오존(O_3): 산화력과 살균력이 강하고 특히 표백 살균력이 강한 특이한 냄새를 지닌 푸른 기체. 성층권에서 태양 자외선의 광화학 작용에 의해 생성되며, 지상 20㎞ 지점에 가장 많음. 최근 냉매제로 사용되어 온 CFC가 오존층의 오존을 급격히 파괴시켜 남극과 북극 상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의 자외선 양이 증가하여 피부암 발생 증가, 피부 노화 촉진, 농작물 생산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됨.

온실가스: 지구의 대기 속에 존재하며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일부 흡수하여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 이산화탄소(CO_2), 메탄(CH_4), 아산화질소(N_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_6)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대 온실가스에 해당됨.

유기물 오염: 유기물이란 탄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소로 구성된 물질로, 유기물은 물속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용존산소를 소모시키며 메탄(CH_4), 황화수소(H_2S) 등의 가스를 발생시켜 수질을 오염시킴.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찌꺼기, 분뇨, 쓰레기와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그 대표적인 예임.

저서군집: 담수 또는 바다 속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부유생물), 물속을 헤엄치는 넥톤(유영동물) 및 다양한 크기의 동식물이 포함되는 저서생물이 이루고 있는 군집. 저서생물은 계절변화, 퇴적상의 변화, 연안과의 거리 등에 따라 다양한 군집을 형성함.

저황유: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유황의 함유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강화한 중유 등의 연료.

중수로: 중수(D_2O)를 냉각재 및 감속재로 사용하고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로. 냉각 및 감속재로 보통의 물(경수)을 사용하는 경수로에 비해 구조가 비교적 간단해서 건설비와 연료비가 저렴한 실용적인 동력로로 평가됨.

지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로서 폐유, 폐산, 폐알칼리, 중금속 및 유기용제를 용출시키는 폐기물 등이 해당됨.

질소산화물(NOx):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산화물 중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는 대류권에 있는 오존의 형성과 파괴에 중요한 역할을 함.

초미세먼지: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의 1/4크기인 지름 2.5㎛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 자동차나 화석연료에서 발생되며, 미세먼지보다도 훨씬 작기 때문에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하여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킴.

탁도: 수중의 부유물질 등에 의하여 물이 혼탁한 정도. 물로 통과하는 빛이 비용해성 부유물질에 의해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흐리게 보여지는데, 수질 지표로서의 탁도는 보통 빛을 입사시켜 부유물질에 의해 산란된 정도를 광학적으로 측정하여 나타냄.

해수 성층화: 물이 밀도차로 인해 여러 층으로 분리되는 현상. 성층화된 해수의 표면은 대기로부터의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만, 산소가 차단된 해저에는 빈산소수괴가 발생하여 해저의 어패류가 약해지거나 사멸할 수 있음.

혐기상태: 공기가 불충분하거나 공기를 싫어하여 배척하는 상태.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은 산소가 없는 상태인 혐기상태에서 생육이 양호함.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 물의 오염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의미함. COD가 높을수록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환경보호지출: 정부, 기업, 가계가 환경악화를 예방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 지출한 금액.

환경분쟁조정제도: 국민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 조정대상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 재산, 정신에 관한 분쟁 등이 포함됨.

황산화물(SOx): 황(S)과 산소의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산화황, 황산, 황산염 등이 이에 해당됨.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로서 식물의 엽록소를 파괴하여 말라죽게 함.

황화수소(H2S): 황(S)과 수소의 화합물로서 악취를 가진 무색의 맹독성 기체. 고농도의 황화수소는 중추신경의 마비, 호흡정지, 질식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음.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이에 해당됨.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임.

정유 · 도료 · 도장 공장의 제조와 저장 과정, 자동차 배기가스, 페인트나 접착제와 같은 건축자재, 주유소의 저장탱크 등에서 주로 발생함.

X 안전

강력범죄: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살인, 강도, 강간 등이 포함됨.

낙상: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현상, 혹은 그로 인한 상처. 노인, 건설 근로자, 전기기사, 광부, 도장공 등이 낙상의 위험이 높음.

데이트폭력: 현재 사귀고 있거나 예전에 사귀었던 상대를 강압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폭력이나 억압. 데이트 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 · 언어적 ·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디지털 성범죄: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 하에 사귈 당시에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상대방의 허락 없이 유포하는 것 또는 그 유포한 영상물.

미투 운동: 미국에서 시작된 해시태그 운동으로,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을 폭로하고 비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해시태그(#MeToo)를 다는 행동에서 출발함.

산업재해: 직장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을 말함.

성폭력: 심리적 · 물리적 ·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성폭행(강간), 성추행, 성희롱을 포괄함.

성희롱: 업무 · 고용 등의 관계에서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손상사망: 외상 또는 내상으로 인하여 출혈이 심하거나, 주요 장기를 다치거나, 손상 이후의 감염으로 사망하는 것.

스토킹: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가 될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것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행위의 일종임.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행위와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함.

여성살해: 젠더 중립적인 용어인 '살인'이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사회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등장한 용어로, 단순히 여성에 대한 살해라는 개념을 넘어 모든 형태의 성차별적인 살해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

외인사망: 사고, 자살, 타살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사망. 외인사망의 3대 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추락임.

재산범죄: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는 범죄로, 사기 · 공갈, 횡령 · 배임, 장물 및 손괴죄 등이 포함됨.

젠더폭력: 생물학적 성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의미의 성인 젠더, 즉 성차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 정서적 폭력을 통칭하며, 성폭력 · 가정폭력 등의 전통적인 폭력범죄 이외에도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신종 폭력까지 포괄함.

특별법 범죄: 형법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형사사건 또는 특별히 엄하게 다스려야할 사건에 적용되는 법에 의해 규정된 범죄.

폭력범죄: 협박 · 폭행 · 상해, 성폭력, 강도(노상강도, 주거침입강도) 등을 포함함.

형법범죄: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서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폭행, 강간 등이 포함됨.

UL 글로벌 안전지수(UL Safety Index): 국가별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소 및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 세계 187개국 중 각 국가별 안전성의 수준을 순위로 나타냄.

XI 사회통합

가사노동: 집안을 꾸리고 관리하기 위한 업무로서 음식 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 등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등이 포함됨.

돌봄노동: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환자, 노인, 어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 육아 및 양육 등의 노동으로, 사회구성원의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

모성건강: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 의미하며,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모성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념.

사회적 이동가능성: 불평등한 사회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개인이 가족, 친구, 동료, 지인, 이웃 등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정서적, 신체적, 금전적)의 도움을 의미함.

상대적 박탈감: 자신보다 상위 계층 혹은 상위 집단의 말과 행동, 혹은 상위 집단의 평균치와 자신의 처지를 보고 박탈감 및 소외감을 느끼는 현상.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각 국가의 성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제, 정치, 교육, 보건의 네 가지 분야의 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함.

유리천장: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 성 차별이나 인종 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용어.

주관적 웰빙: 객관적, 물질적 삶의 풍요나 안정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이 풍요로운 정도를 가리킴. OECD는 주관적 웰빙을 전반적 삶의 만족,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 경험,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 등 세 가지 차원에 걸쳐 측정함.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의 영역별 논문 주제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인 구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경숙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김두섭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김두섭
	출산력의 급격한 하락	2008	전광희
	국제이주인구의 증가 :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2008	윤인진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2009	이상림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 간 차이	2009	김두섭
	혼인 양상의 변화	2010	김정석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	2010	김두섭
	지역별 인구분포와 수도권 인구집중	2012	최슬기
	가족의 분산과 가구구성의 변화	2012	이민아
	체류 외국인의 증가	2012	정기선
	인구고령화의 지역별 차이	2013	김현식
	이상적인 결혼연령과 이상자녀수	2013	송유진
	이혼의 확산과 이혼자들의 삶	2013	김정석
	경제위기와 출산율의 변화: 국내동향과 국제비교	2014	계봉오/김두섭
	국내 인구이동의 특성과 유형	2014	이희연
	남한과 북한의 인구성장 및 인구구조의 비교	2014	전광희
	무자녀 가정의 추이와 특성	2015	계봉오/김두섭
	고령화와 노인 삶의 변화	2015	김주현
	베이비붐 세대와 인구절벽	2016	변미리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및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2016	최율/김두섭
	저출산과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인구의 변화	2017	김근태
	외국인 거주자의 다양성과 변화 추이	2017	유정균/김두섭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경숙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한경혜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한경혜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한경혜
	초혼연령과 미혼율의 상승	2008	이선이
	가구 구성의 변화와 노인가구의 급증	2008	이성용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2009	정기선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2009	한경혜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2009	홍승아
	아동 돌봄 실태와 지원망	2010	진미정
	국제결혼 부부와 가족의 특성	2010	이혜경
	1인가구의 추세와 특색	2012	이윤석
	한국의 연령과 부부관계만족도	2012	이윤석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	2012	송유진
	맞벌이 부부는 무엇이 다른가	2012	송유진
	세대관계의 변화	2013	한경혜
	자녀돌봄 시간의 변화	2013	차승은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장애요인	2014	한경혜
	여성의 일-가족 양립 경험과 사회적 지원	2014	한경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2014	홍승아
	미혼율 증가의 사회적 의미	2015	한경혜
	기능 저하 노인의 돌봄과 지원	2015	정경희
	가족가치관의 변화	2016	한경혜
	분거가족의 실태와 특성	2016	성미애
	가족 내 세대관계의 변화: 멀어지는 시가, 가까워지는 처가?	2017	한경혜
	어머니의 취업상태별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양상	2017	진미정
건 강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조병희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조병희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조병희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건 강	나아지지 않는 주관적 건강상태	2008	정진주
	과다한 의료비 부담	2008	권순만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2009	조병희
	자살의 급증과 원인	2009	김명희
	만성질환 추세와 관리	2010	김홍수
	건강불평등	2010	조병희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분포	2012	김중백
	의료기관별 만족도 격차	2012	김중백
	우리시대의 병 아토피 질환	2012	권호장
	서구형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2012	박재현
	건강검진의 추이와 실천요인	2013	조성일
	음주수준과 건강과의 관계	2013	김광기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2013	장세진
	흡연율 추세와 담배규제정책의 효과	2014	조홍준
	의약품 사용양상	2014	변진옥
	사회자본과 건강	2014	조병희
	한국인의 정신건강	2015	조병희
	대사증후군의 유병 실태와 사회적 비용	2015	조영태
	증가하는 신종감염병	2016	조병희
	간호인력과 간호서비스의 변화	2016	조성현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2017	신동천
	청소년의 체격과 건강상태	2017	조병희
교 육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와 특성	2011	김태헌
	교육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김경근
	교육수준의 비약적 상승	2008	김경근
	최근 학교교육 성취도의 변화	2008	강상진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2009	김경근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2009	김경근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교 육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 간의 전공 불일치	2009	채창균
	교육의 경제적 성과	2009	강상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2010	김경근
	학교급별 학습시간 실태와 문제점	2010	강상진
	교육격차의 실태와 추이	2010	김경근
	취학전 아동 보육 및 교육	2011	서문희
	학교급별 학업중단의 실태와 추이	2011	김경근
	대학 등록금 추이와 장학금 수혜학생의 비율	2011	김경근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향	2011	김한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실태	2013	김경근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2013	황여정
	학생들의 스트레스	2013	황여정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정서적 특성	2014	김경근
	청소년의 가정배경과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	2014	황여정
	가구 교육비 지출 실태	2015	김성식
	대졸 취업자의 과잉교육 실태	2015	채창균
	학생들의 일상생활 차별 경험	2015	황여정
	교육수준과 삶에 대한 만족도	2016	김경근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실태	2016	황여정
	대학교육의 성과	2017	김경근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실태	2017	황여정
노 동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장지연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장지연
	노동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장지연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장지연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권현지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권현지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권현지
	고용의 안정성과 비정규직	2008	장지연
	중고령자 노동시장과 근로생애	2008	장지연
	청년층 노동시장	2009	방하남
	노사관계의 변화	2009	방하남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2009	방하남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조건	2010	박시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2010	이규용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노 동	직업선택 기준의 변화와 계층 간 차이	2010	방하남
	여성의 취업변화와 근로환경	2011	홍승아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노동시장 은퇴	2011	박시내
	근로자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임근수준 비교	2011	박영실/한승훈
	근로빈곤과 저소득층 소득지원	2013	장지연
	최저임금의 준수와 상대적 수준	2013	전병유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위험	2014	김영옥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실태와 시사점	2014	권혜자
	노동시장의 질과 고용보호제도	2015	권현지
	경제위기와 이직자의 취업이행	2015	권혜자
	기업규모 및 원하청에 따른 노동 일터의 격차와 불평등	2016	전병유
	일자리 변화의 최근 동향	2016	권현지
	취약노동자는 누구인가: 최저임금과 실업보험을 기준으로	2017	장지연
	외환위기 후 20년,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했나?	2017	권현지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찬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현송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이현송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박정수
	교육비 지출수준과 구성의 실태와 변화 추이	2008	박찬임
	소득분배와 빈곤율의 추이	2008	박찬임
	자산의 분포와 구성	2009	강석훈
	소득원천별 구성	2009	강석훈
	생애 소득의 구조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2009	이현송
	한국 국민의 구매력 국제비교	2010	정규승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2010	이현송
	가계부채와 부채원인	2010	유경원
	지난 20년간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추이 및 구조변화	2011	김신호
	가계 저축률 감소와 그 원인	2011	김순미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소비 변화	2011	강석훈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	2013	김진영
	소득분배의 지역적 양상	2013	이정민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소득과 소비	인구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 불평등	2013	홍석철
	가계부채의 변화와 분포	2014	홍기석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지출의 변화	2014	홍석철
	소득분위별 자산의 분포와 구성	2015	유경원
	출생 코호트를 통해 본 소비지출의 변화	2015	이정민
	계층별 가계부채와 상환부담의 변화	2016	유경원
	1인 청년가구의 소득과 소비	2016	문성만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	2017	김기호/박정수
	주택연금의 도입과 사회적 영향	2017	유승동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최샛별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서우석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서우석
	문화예술 향유실태	2008	최샛별
	관광산업의 성장과 입출국 여행객수의 증가	2008	최석호
	여가생활과 만족도	2009	서우석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2009	이호영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변화	2010	심수진
	인터넷 중독 실태	2010	전종수
	소득수준에 따른 여가활동의 변화	2011	윤소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의 부상과 확산	2011	최항섭
	문화산업의 정체와 성장	2011	서우석
	청소년 여가	2013	서우석
	생활체육 참여실태	2013	황선환
	노년층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과 특성	2013	조현성
	여행과 삶의 질: 소득분위별 관광경험 차이	2014	이훈/박정숙
	스마트미디어 이용과 삶의 만족도	2014	심미선
	청년층 1인가구원의 여가활동	2015	서우석
	여가활동의 동반자	2015	윤소영
	여가시간의 변화와 격차	2016	차승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실태와 문제	2016	배 영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문화와 여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과몰입	2017	전인식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2017	서우석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최진호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최진호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최진호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손경환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손경환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장수은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장수은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장수은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2008	김재익
	대도시권 통근통학의 광역화	2008	최진호
	주거 빈곤 가구 실태	2009	최진호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2009	김호정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변화 추이	2010	이창무
	주거이동과 거주지 선택요인	2010	최진호
	수도권 거주자의 출근전쟁	2012	이재훈
	주거안정성	2012	신인철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빈곤가구의 실태	2012	장세훈
	도로의 지역간 불균형	2012	양광식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 실태	2013	손경환
	가구특성과 주거소비	2013	정의철
	교통복지실태	2013	이상민
	전월세 시장의 변화	2014	정의철
	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	2014	박천규
	승용차의 대형화와 녹색교통정책의 실태	2014	김회경
	아파트 주거 확산의 실태와 전망	2015	전상인
	지역 간 교통수단의 고속화와 국민생활의 변화	2015	장수은/정동재
	1인가구의 증가와 주택시장 및 주거형태의 변화	2016	이영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사회적 영향	2016	장수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태와 거주자 특성	2017	이영성/유현지
	빅데이터로 읽는 교통과 사회	2017	장수은/한상진
환 경	환경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김선희
	환경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김종호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환 경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김종호
	대기오염 수준의 변화	2008	공성용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	2008	공성용
	친환경 소비성향	2009	윤순진
	친환경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2010	강성진
	기후변화 문제와 대응 추이	2011	김해동
	개선된 체감환경, 정체된 친환경 행동	2011	박희제
	에너지 소비를 통해 본 한국사회	2011	박진희
	기후변화 대응행태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	2013	조영탁
	화학물질 노출실태	2013	신용승
	미세먼지와 건강	2014	권호장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2014	박창석
	환경 불평등과 환경 복지	2015	김종호/추장민
	생활쓰레기 처리와 쓰레기 종량제의 실태	2015	신상철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	2016	이미숙
	미세먼지의 대기농도 현황과 특성	2016	공성용
	생활화학제품 피해 및 관리 실태	2017	신용승
	전력소비와 전원구성의 추이 및 특징	2017	조영탁
안 전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이재열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재열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변화	2012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박두용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박두용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박두용
	자연재난, 어떻게 변했나	2008	이재열
	증가하는 '흉악범죄'	2008	윤옥경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2009	박순진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2009	민수홍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안 전	산업재해의 변화	2010	이경용
	아동학대의 실태와 변화	2010	민수홍
	청소년 범죄의 발생과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2012	민수홍
	사이버 세계의 그림자	2012	민수홍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2012	박순진
	높아지는 재난재해 위험과 응급안전시스템	2012	박순진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유해요인노출	2012	이경용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추세	2013	민수홍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과 특성	2013	김지선
	범죄피해의 실태와 변화	2014	김지선
	한국의 대형 인적재난	2014	정지범
	살인, 강도, 강간의 지역 간 발생률 비교와 변화	2015	민수홍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015	설재훈
	산업재해의 발생 추이	2016	박두용
	노인 범죄의 실태와 변화	2016	민수홍
	한반도의 지진 발생 현황과 특성	2017	이희일
	아동학대의 발생 추이와 특성	2017	강은영
사회통합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이재열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재열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장덕진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한 준
	가치관과 일상생활에서의 세대격차	2008	배 영
	투표참여의 감소와 세대 간 차이	2008	김 욱
	가치와 이념 갈등	2009	강원택
	공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2009	장지원
	정치와 사회 참여	2009	장덕진
	사회적 신뢰의 수준	2010	장덕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사회통합 정도	2010	김병로
	이타적 행위: 기부와 자원봉사	2010	이희길
	한국의 노인자살	2012	이민아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2012	김석호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사회통합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2012	김석호
	1인가구의 사회적 지원	2012	정재기
	한국의 공정성	2012	정재기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 격차	2013	한 준
	투표와 정치참여	2013	김석호
	노년층의 사회통합	2014	김지범
	자살의 지역별 분포와 변화	2014	박형민
	세대 간 격차의 수준	2015	한 준
	사회적 관용의 수준과 변화	2015	가상준
	한국인의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2016	김희삼
	정치 태도와 행위의 세대 간 차이	2016	김석호
	한국인의 정치참여와 사회갈등 인식	2017	박원호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	2017	박 준
(복 지)	복지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조병희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문제	2008	정무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빈곤문제	2008	정무권
	빈곤층의 분포와 특성	2011	강신욱
	노후준비 방법의 변화	2011	정순둘
	사회복지 인력 및 시설의 동향	2011	고경환

한국의 사회동향 2018 연구진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책임자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영역담당 공동연구자	김두섭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경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경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권현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장수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편집담당 공동연구자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주희 (통계개발원 사무관) 김성규 (통계개발원 주무관) 정병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최문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교육연구실장) 이상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개발실장)
편집담당 연구보조원	고지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김혜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한아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허혜옥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연구간사	장지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홍리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박상영 (통계개발원) 안솔비 (통계개발원)